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실행방안

제 출 문

국가물관리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실행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국토연구원

원 장 강 현 수

참 여 연 구 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현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문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동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석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김수빈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조만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상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창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태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강건국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나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정상윤	국토연구원 연구원
	조혜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 요약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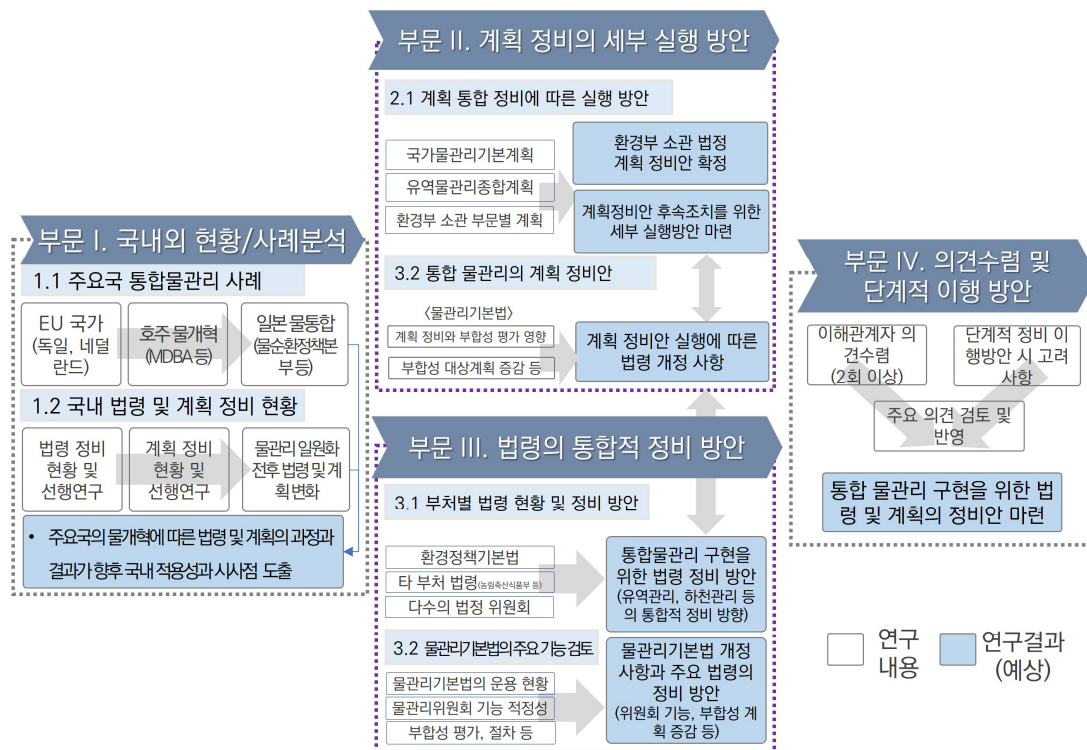
- 물관리일원화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나라 통합물관리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국내 물순환 건전성 확보, 유역 기반의 과학적 물관리 의사결정, 온전한 수생태계 회복 등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역량 강화로, 물관리일원화가 중앙부처 간의 조직 개편에 멈추지 않고 물관리일원화의 기대효과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 관련 법령과 계획의 정비가 매우 절실함
- 물관리일원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서 나아가 하천 및 물이용 관리의 지속성을 위한 유역 물관리 기반 구축,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물관리로의 전환,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물 거버넌스의 조화, 그리고 물관리 정책 전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발전 필요함
- 물관리일원화 후 국내 물관리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류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 필요함
- 상시적 통합물관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물 관련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부처별 물 관련 법령들과 충분한 부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급한 검토와 계획 정비 방안을 함께 마련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 등과 함께 추진·확정한 물관리 관련 계획들에 대한 정비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물관리 중앙부처의 물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따른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는 물관리일원화 후 개선되고 있거나 정제되어있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물관리기본법(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과 물관리 주무부처(환경

부)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2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 본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체계는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됨

- 첫째, 통합물관리 관련 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 둘째, 물관리 중앙부처 6개 및 소관·산하기관의 법령 현황 파악과 문제점 조사 및 통합 정비 방안 제시
- 셋째,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계획 정비 추진의 세부 실행방안 제시
- 넷째, 물관리 법령 및 계획 정비 방안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단계적 추진 로드맵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연구 추진체계의 구성과 과정〉

2. 해외 사례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통합물관리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유럽(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일본의 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보고서 본문에 국별 상세한 내용을 기술함)
- 먼저, 주요국들은 물순환 개념에 기초하여 지표수-지하수 통합, 행정기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한 기본법 성격의 물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특히 독일·네덜란드 사례의 경우 물이용·물환경 등에 대해서는 통합 물법을 우선 마련하고 토지이용 및 재난관리가 연계되는 홍수 등 물재해를 최후 통합하였음.
- 프랑스 역시 물 관련 법을 고도화해 나가며 물재해, 물이용, 물환경을 통합하고 물에 대한 기본권을 확장하였는데, 물관리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물관리기본법에서 물관리의 범위·목표·대상에 대한 지향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특히 물재해 등 타 분야·부서와 필히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물관리 차원에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다수의 물관리 조직을 운영하는 선진국에서도 별도 조직(국가단위: 네덜란드의 물관리청, 일본의 물순환정책본부, 유역단위: 프랑스 유역물관리청, 호주의 머레이-달링유역관리청)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물순환정책본부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서구권은 대체로 지역·유역별 조직 구성 및 시민참여형 관리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민·관협력형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충적 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조직 성격은 민관 정책거버넌스에 가까우므로 오히려 일본의 형태에서 통합 조직의 권한만 모호화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일본의 물순환정책본부처럼 강력한 정책 조정은 오히려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호주와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양국 모두 정책 의사결정은 관(官) 주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의사결정자(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의 ‘책임성’은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특히 호주의 경우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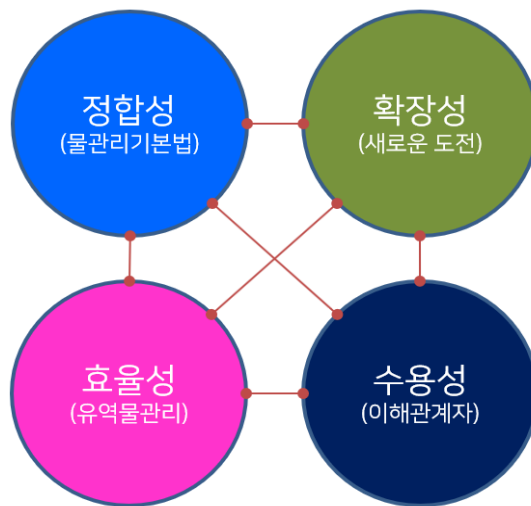
통해 유역계획이행위원회의 기능을 유역 국장 위원회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참여성’이 한층 더 강화된 시사점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물관리위원회, 환경부,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행안부, 농림부, 기상청, 산림청 등)를 기반으로 물재해, 물이용, 물환경, 하천복원, 수변구역, 수계기금, 오염총량 등 유역관리/하천관리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책과 조직을 전환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3.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현황과 통합적 정비 방향

3.1 통합적 정비 방향

○ 통합적 법령과 계획 정비의 기본 원칙과 정비 방향

- 통합적인 정비에 대한 기본원칙은 정합성, 확장성, 효율성, 수용성의 4가지를 준용함



자료: 저자 작성

〈물 관련 계획 정비의 기본원칙〉

- 4개 기본원칙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제시된 3대 혁신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 중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제도·조직 등 정비’에 부합됨
- 본 연구에서 다룬 계획 정비(안) 도출을 위해 채택된 기본원칙 및 방향은 다음과 같았음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 기본원칙 및 방향〉

기본원칙	정비방향
① 물관리기본법 체계에 부합	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심 국가전략계획 통폐합
②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원칙 고려	②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심 1유역-1계획 체계 확립
③ 법령 개정, 예산확보 등 실행가능성 확보	③ 수립시기·절차, 계획명칭, 수행체계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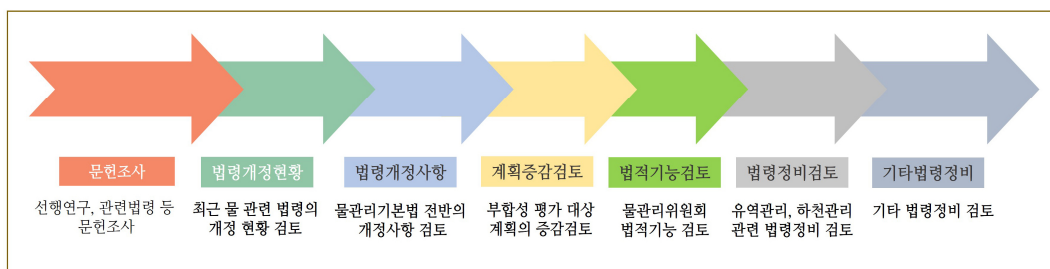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보고 자료(2021.3.),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

○ 이상 기본원칙과 정비방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개선 방향을 도출함

- 국가·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과 기존 계획 간 위상 정립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유사 계획 통·폐합
-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계획 신설
- 상·하위 계획 간 연계 강화
-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반영

○ 법령 정비의 체계적 검토를 위한 연구 분석 체계는 다음과 같음

〈법령 정비안 연구 분석 체계〉



자료: 저자 작성

- 이상의 연구 분석 체계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함

- (1) 물관리일원화 후 물관리(물순환)체계가 확립되었는가
- (2) 하천관리 일원화 시행에 따라 유역관리와 하천관리가 개선될 것인가
- (3) 물관리·하천관리 일원화에 관한 물관리기본법의 법적 기능은 충분한가

3.2 주요 법령의 현황

- 현재 물 관련 법령은 헌법 제35조, 제120조를 근간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별로 물관리 사무에 대한 직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물관리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부처별 업무가 개편 및 수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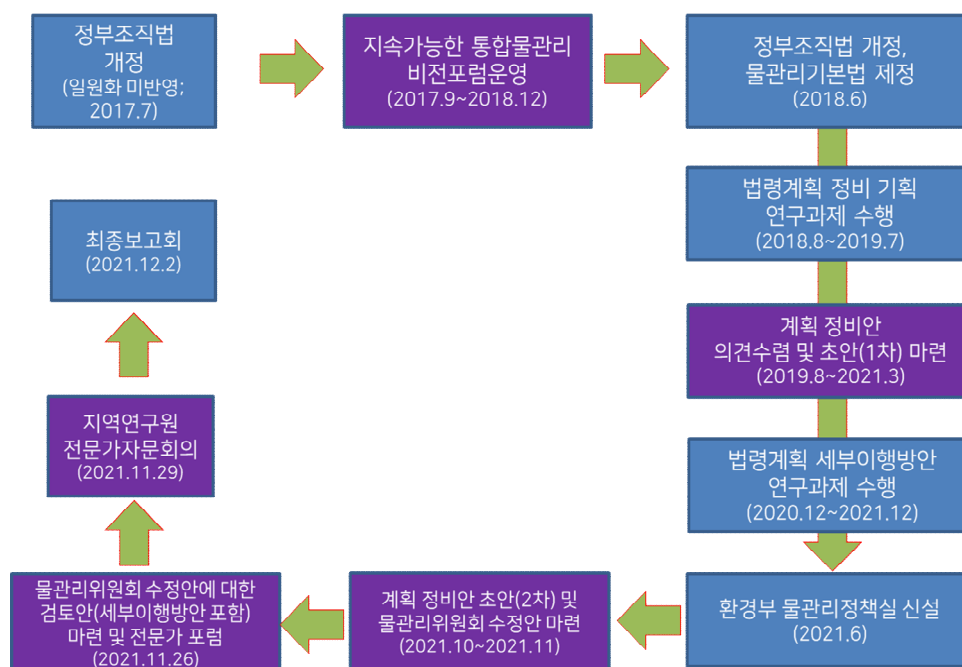
〈부처별 주요 물 관련 법령 현황〉



자료: 저자 작성

3.3 계획 정비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 본 과제에서 제시하는 계획 정비안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설치 전후 2021년 3월,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비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검토하여 마련됨



〈 계획 정비안 마련의 주요 경과 〉

- 본 연구의 계획정비안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62개 물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함
- 환경부로 이관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국가) 등 5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부 외 타 부처 소관 계획(국토종합계획 등 35개 계획)은 제외됨
 - 물 분야 포함 종합계획과 물 분야 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물 분야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 단위 부문(수도, 하수도, 댐 등) 계획, 특정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성격의 시행계획으로 구분
 - 공간 범위는 국가 단위, 유역 단위, 지자체 단위로 구분함

〈정비 대상 물 관련 계획의 구분과 성격〉

구 분 (62개)		국가 단위 (20개)	유역 단위 (10개)	지자체 단위 (32개)
물 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3개)		3개	-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
물 분야 계획 (59개)	(상위) 종합 계획 (9개)	3개	4개	2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하위) 부문 계획 (21개)	11개	1개	9개
		전국수도종합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 수생태계복원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물환경측정망설치계획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물기술산업육성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국가계획이 없는 경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국가계획이 있는 경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생태계복원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물기술산업육성시행계획
		3개	5개	21개
	(하위) 시행 계획 (29개)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하천기본계획(국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지하수관측망설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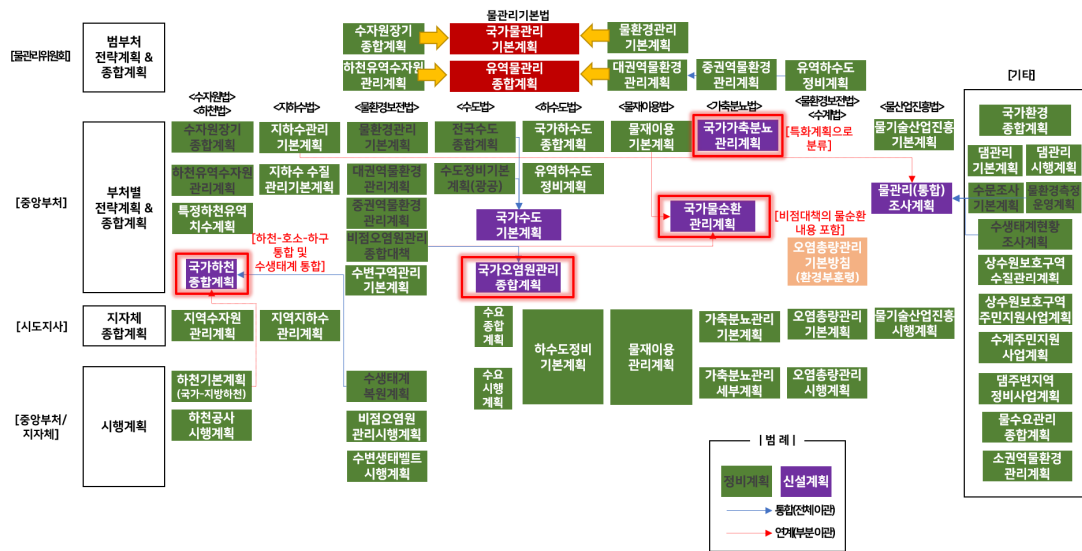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보고 자료(2021.10.),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

- 이상의 계획 정비 대상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안(2021.10)과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확정안(2021.11)이 각각 다음과 같이 도출됨

〈환경부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 정비안(요약)〉

구분	현재(20개)	환경부안(13개)	위원회안(12개)
종합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좌동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좌동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문 계획 등	물재이용기본계획	국가물순환관리계획	좌동
	- ※ 물수요 및 물순환 국가부문계획 없음		
	- ※ 하천 국가부문계획 없음	하천수자원관리계획	국가하천종합계획 ※ 하천-호소-하구의 연속성이 고려된 이수·치수·수질·수생태의 통합물관리 차원의 계획
	수생태계복원계획*	※ 수생태를 포함하여 하천부문계획 신설	
	※ 수질·수생태(총괄)국가 부문계획 없음	하천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 물환경의 점·비점 오염원 관리를 포괄하는 계획
		총괄, 호소/하구	
	수질·수생태계개선계획	※ 수질을 포함한 계획 신설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좌동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좌동 ※ 관측망 설치계획 제외	좌동
	댐건설장기계획	댐관리기본계획	좌동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좌동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좌동	좌동
	- ※ 조사정보 부문 통합 관리 필요	물관리(통합)조사계획	좌동 ※ 기존 조사체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10년)		
	물환경측정망설치계획(1년)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1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관측망)(10년)		
	물기술산업육성기본계획	좌동	좌동
특화 계획	- ※ 가축분뇨 국가부문계획 없음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	좌동 ※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특화 계획으로 필요

주)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생태계복원계획은 현행 유지
 자료: 환경부 보고 자료(2021.10.)를 기반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마련



자료: 환경부 보고 자료(2021.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물 관련 법정 계획 정비안(국가물관리위원회)〉

○ 환경부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 정비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 수행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내용-전문가 포럼〉

통합물관리 전문가 포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관리기본계획에 탄소중립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② 물관리용어(개념)의 일치와 통일이 필요함 ③ 우리나라 재난의 90%를 차지하는 수재해에 관하여 환경부와 행안부의 역할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며, 기상법과의 관계 정립(호우특보 등)도 필요함 ④ 계획 정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본 경험이 있는 산업계 의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할 것임. 물순환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⑤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과 비점오염관리계획을 묶어서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유역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 필요함. 단기 정비와 장기 정비의 제안이 유효할 것임 ⑥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던 유역하수정비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할 때, 자료조사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재 체제는 유지하고,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한 투자를 먼저 고려해 주길 바람 ⑦ 물환경보전법에 있는 수생태를 통합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⑧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2개의 법률(계획)의 대한 역할이 구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⑨ 물관리(통합)조사계획은 시급하고 적절한 정비 방안임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내용-지역연구원 자문회의〉

지역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 ① 국가-유역 체계, 1개 유역-1개 종합 계획, 전략-종합-실행 계획 등으로 조금 더 체계화 되는 것에는 공감하나, 여전히 정확한 계획 간 위상 및 체계 등에 혼란이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
-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종합계획으로 통합하면 효율성은 제고되겠지만, 반대로 신설 계획도 너무 많아 부합성평가 절차도 가중되고 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이 우려스러움
- ③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물환경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양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편중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④ 상위 계획 위주의 통합안으로 이해되는데 실제 현장과 지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계획 단위로, 이에 대한 통합과 정비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 Bottom-up 관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⑤ 국가물순환관리계획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명칭 상 유사성이 크므로 이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중요할 것임
- ⑥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은 불필요하거나, 타 계획(유역종합 또는 물순환계획 등)과 통합할 수 있으며, 검토한다면 총량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
- ⑦ 통합조사계획 신설에는 대체로 동의하며 물관리기본법 소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고, 정보의 공유와 소통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4. 물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 물관리기본법은 각 부처 소관 물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 총칙,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분쟁 조정,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총 6장, 4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운용 결과 등에 기반하여 향후 물관리기본법 개정 시 개정되거나 검토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장별로 조항별로 분석·정리함
- 제3장 ‘물관리위원회’ 관련 개정 사항은 별도의 절로 정리·제시하고, 제4장의 계획 관련 내용은 계획정비에서 상세내용을 다루며,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서 발주한 타 연구에서 중점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검토 범위에서는 제외됨

〈물관리기본법 개정 검토안 주요 내용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 물재해와 관련된 내용의 개념 재정립 및 용어 정비
	- 주요한 물관련 용어 추가 및 조항별 법적 내용 규정(물분쟁, 물재해, 물이용, 물환경, 수생태, 유역관리, 사업자 등)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물관리위원회(지원단)와 협의하는 근거를 두고 ‘다른 법률’이 어떤 것인지 규정
제2장 기본원칙	- 수생태에 대한 용어 및 원칙 재검토(제10조)
	- 유역물관리에 대한 원칙 재검토(제11조)
	- 통합물관리에 대한 개념 재정립(제12조)
	- 유역 간 협력에 대한 ‘연계’와 상하류 개념 보완(제13조)
	- 물 배분에 수리권 관련 개념 상세화(제14조, 제16조)
	- 물수요 관리에서 범위 확대 및 조정 등(제15조)
	- 물 비용부담 대상 및 범위 검토(제17조)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등 고려(제18조)
	-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국가, 지자체, 물관리위 역할 강조(제19조)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 하천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추가 검토
	- 이행상황 평가에 따라 국가차원의 물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명시 검토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위상과 조항 위치 등 조정
	- 공청회 및 공지 주체 등에 대한 정비 필요
	- 탄소중립 관련 계획 내용 추가 검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 국가위·유역위 차원 내용 추가 지정 가능 조항 검토
	- 물문화 육성에 대한 범위 확장 검토
	- 타 국가,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보완 필요
	- 물관리 정보화에 대한 의무 사항 승격 검토 필요
	- 공유하천 조사·연구 등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 필요
	- 물문화 육성 등에 대한 물관리위원회 역할 추가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정비안 역시 1안(소규모 개정), 2안(중규모 개정), 3안(대규모 개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안을 도출함

〈물관리기본법(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 검토안〉

구 분	현 행	정비 3개 안 비교
주요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규〉	1. 물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조정(1·2·3안)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유역 범위의 지정, 변경, 해제(1안, 2안, 3안)
	4.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이동	5. 댐·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정 물 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이동(1·2·3안)
	5. 관계부처 물관리 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6. 관계부처 물관리 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6. 물분쟁의 조정	7. 물분쟁의 조정(수자원법, 하천법 정비)(2안)
	7.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7. 물분쟁의 조정, 중재, 재정(환경분쟁법 정비)(3안)
	〈신규〉	8.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1·2·3안)
	〈신규〉	9. 물관리 조사와 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2안, 3안)
	〈신규〉	10. 물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3안)
	〈신규〉	11. 물관리 관련 재정 및 기금에 관한 사항(3안)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자료: 저자 작성

〈물관리기본법(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 검토안〉

구 분	현 행	정비 3개 안 비교
주요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 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 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3. 댐·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정 물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이동(1·2·3안)
	4.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4.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수자원법 등)(2안)
	〈신규〉	4.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중재, 재정(3안)
	〈신규〉	5. 유역 내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지정, 변경, 해제(1·2·3안)
	〈신규〉	6.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신규〉	7. 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관리지역, 수변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2안)
	〈신규〉	7. 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관리지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농업용수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3안)
	〈신규〉	8. 유역 내 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3안)
	〈신규〉	9. 유역의 물관리 기금에 관한 사항(3안)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자료: 저자 작성

○ 그 외 환경정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

5. 물 관련 계획 정비안의 세부 실행방안

○ 환경부의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2021.10)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수정안(2021. 11)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의 세부 실행방안 검토(안)을 제시함

- 통합 및 신설되는 9개 주요 쟁점 계획을 위주로 정리

〈물 관련 계획 정비안의 세부 실행방안 요약〉

대상 계획	주요 내용	법령 정비 대상*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수자원관리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통합	- 물관리기본법(27) - 수자원법(17, 21, 22) 및 시행령(15, 21, 23) 등 - 물환경보전법(22, 23의2) 및 시행령(29의5) - 댐건설법 시행령(6), 하천법 시행령(24의2)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합	- 물관리기본법(28) - 수자원법(18, 20, 21) 및 시행령(16, 21, 23) - 물환경보전법(24, 25) - 하수도법(4의2)
3.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을 통합하여 신설	- 수도법(4, 5)
4. 국가하천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수생태계복원계획을 포함하도록 신설	- 하천법(25) - 물환경보전법(27의2)
5. 국가물순환관리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을 기초로 물수요·물순환을 포함하는 계획 신설	- (가칭)도시물순환법 등 유관 법 신설 필요 - 물재이용법(5, 6)
6.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을 포함하여 점오염원/기타오염원을 포괄하도록 신설	- 물환경보전법(23의2) 및 시행령(29의5)
7. 물관리(통합)조사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물환경측정망설치계획,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상조사부문 등을 포괄하여 신설	- 물관리기본법(41) ※ 관련 별도 연구용역 진행 중
8.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	지자체 가축분뇨관리계획의 상위·특화계획으로 국가계획 신설	- 가축분뇨법에 해당 내용 반영 필요
9.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장기계획을 관리 중심의 댐건설기본계획으로 전환	- 댐건설법(2, 4) ※ '21.6.16. 개정, '22.6.16. 시행예정으로 이미 반영됨

주: 법령 정비 대상의 괄호 안은 조항 번호

자료: 저자 작성

○ 계획 정비안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환경부/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 정비안은 기존 국토부의 수자원/하천 분야와 환경부의 물환경 분야의 핵심 중 핵심 계획의 정비(통합 및 신설)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음
- 계획 정비안 추진에 따라 계획의 수립은 물론, 이행모니터링에 대한 더욱 큰 정책적 수요가 전망되며, 통합/이관된 계획의 경우 수립 및 부합성 검토와 관련한 행정 및 경제적 비용 소요 감소가 예상됨
- 아직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정비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통합 및 신설되는 계획 정비 전/후 과정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될 것임

6. 국가기본계획·유역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부합성 심의

- 부합성 개념 검토, 목적, 유사 사례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부합성 심의·의결 절차에 대하여 2가지 방안을 제시함
 - 유사 사례로 국토계획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참고하였음
 - 2가지 안은 부합성 심의·의결 결과가 ‘가결-조건부 가결-부결’ 또는 ‘조정 필요-조정 불필요’로 구분되며, 두 가지 안의 경우 심의·의결 절차는 동일하며 통보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금회 계획 정비안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 심의 대상 계획 증감의 현황도 검토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부합성 심의 절차 A안〉



자료: 저자 작성

〈부합성 심의 절차 B안〉

〈부합성 심의 절차(안): A안과 B안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A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권자는 심의·의결에 대한 파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역계획에 최대한 부합한 대상 계획 수립 가능 ✓ 심의·의결 결과통지에 대한 조정요청 가능 ✓ 조정 협의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의결에 관한 현행 법적 근거 부족 ✓ 협의절차, 행정처리 시간소요, 복잡성 증가 ✓ 부결 결과를 불수용하고, 대상 계획을 수립 완료할 경우 분쟁 발생 가능
B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을 준용하는 절차(안) ✓ 비교적 간소한 행정력과 소요시간 적음 ✓ 조정 협의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계획수립권자는 조정요청 불가능 ✓ 심의·의결 결과에 ‘부결’이 없으므로 대상계획(안)의 보완·수정에 대한 재심의가 어려움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증감 〉

소관주체	대상 계획(현행)	대상 계획(증감안)
유역물관리위원회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좌동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삭제)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삭제)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삭제) · 대권역물환경관리기본계획(삭제) · 수도정비기본계획(삭제)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삭제)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삭제) · 4대강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수생태계복원계획(삭제) · 물재이용기본계획 · 댐건설기본계획 · 친수구역조성사업에관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신설)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명칭변경)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신설) ·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신설) · 물관리(통합)조사계획(신설) · 국가하천종합계획(신설) · 4대강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물재이용기본계획 · 댐관리기본계획(명칭변경) · 친수구역조성사업에관한계획
농림부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 좌동
산림청	· 사방사업기본계획	·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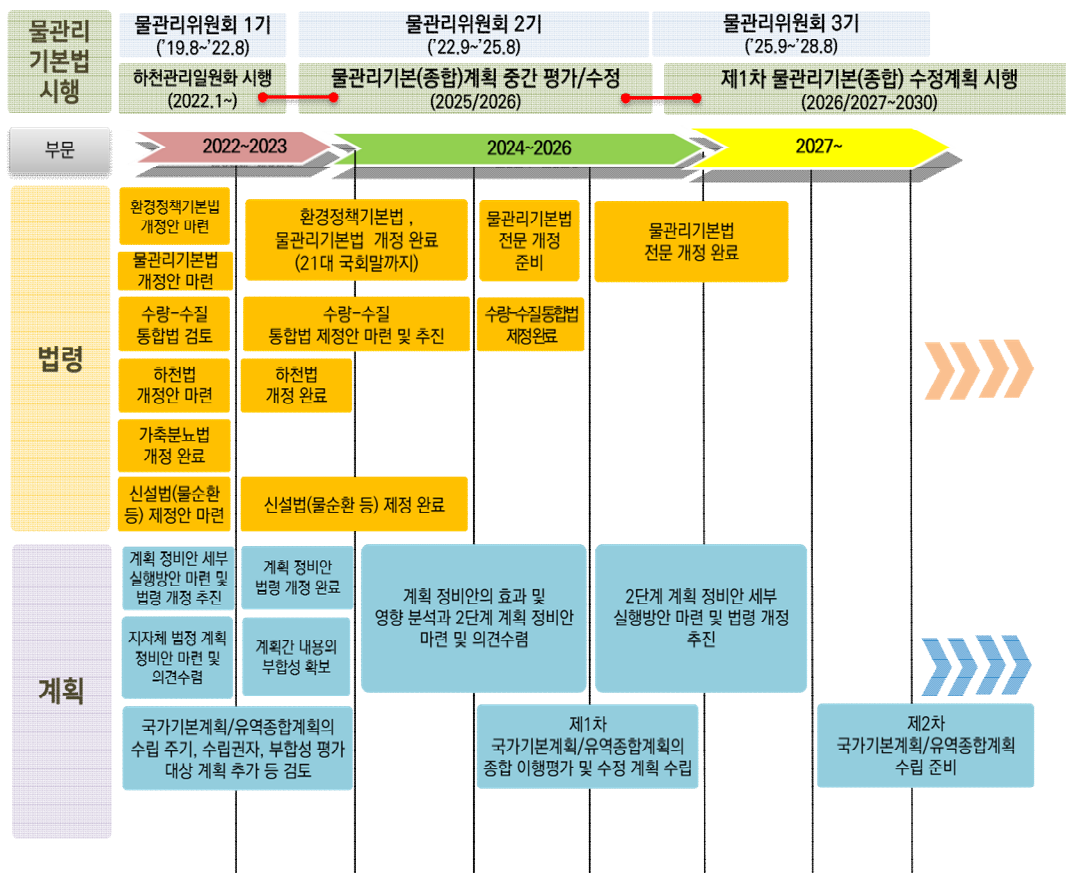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7. 법령 및 계획 정비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부분의 법령 정비는 2022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함

- 최장 2026년까지 긴 호흡으로 법령 정비를 제시하였지만, 2022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조직·예산(재정) 체계가 개편된다면, 일부 혹은 전체 법령 정비의 속도는물관리일원화 직후보다 매우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임

○ 계획 정비안은 환경부 소관 계획 중심의 정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기타 계획들과 타 부처의 물 관련 계획들의 정비를 위해서는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의 추진 로드맵(안)〉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6
1. 주요 연구내용	6
2. 연구 추진 체계	9
제2장 해외 사례	15
제1절 EU 국가	15
1. 독일	15
2. 네덜란드	24
3. 프랑스	30
제2절 일본	33
1. 일본의 정부 조직 및 소관 업무	33
2. 일본 물순환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목적	34
3. 일본 물순환기본계획	37
4. 물순환 시책의 추진체계	41
5. 일본 사례 주요 내용 및 특징	43
제3절 호주	44
1. 호주 물관리정책 변화 연혁	44
2. Murray-Darling Basin Plan(MDBP)의 관련 법 및 체계	47
3. Murray-Darling Basin Plan(MDBP)의 배경 및 목표	50
4. Murray-Darling Basin Plan(MDBP)의 구성요소	52
5. 유역계획 이행에 대한 현황	55
6. 기후변화 대응 호주 물관리 사례	57
7. Murray-Darling 유역의 거버넌스	59
8. 호주 사례 주요 내용 및 특징	65

제4절 시사점	67
제3장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현황과 통합적 정비 방향	73
제1절 통합적 정비 방향	73
1. 대상과 범위	73
2.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	73
제2절 주요 법령의 현황	78
1. 물관리기본법	79
2. 환경정책기본법	80
3. 수도법	80
4. 하수도법	81
5. 하천법	82
6. 물환경보전법	82
7. 4대강 수계법	83
8. 지하수법	84
9. 환경분쟁조정법	84
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85
11. 정부조직법	86
제3절 계획 정비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90
1. 계획 정비안 마련의 경과	90
2. 계획 정비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91
3. 계획 정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97
제4장 물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103
제1절 법령 정비 관련 문헌 조사	103
1. 물관리기본법 개정과 정비에 대한 문헌 조사	103
2. 물 관련 법령 정비 관련 문헌 조사	107

제2절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 검토	111
1.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운용 결과	111
2. 물관리기본법 전반의 개정 검토	120
3. 물관리위원회 기능의 개선 검토	125
제3절 부처별 주요 법령의 정비 방향	169
1. 환경부	169
2. 농림축산식품부	171
3. 향후 과제	173
제5장 물 관련 계획 정비안의 세부 실행방안	179
제1절 계획 정비안의 주요 내용	179
제2절 계획 정비안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182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의 통합 정비	182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의 통합 정비	190
3.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의 통합 정비	201
4. 국가하천종합계획의 신설	205
5.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의 신설	209
6.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신설	212
7. 물관리 (통합)조사계획의 신설	215
8.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의 신설	218
9. 댐건설장기계획의 정비	219
제3절 시사점	221
제6장 국가기본계획·유역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부합성 심의	225
제1절 부합성 심의: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	225
1. 법적 근거	225
2. 유사 사례	228
3. 소결 및 시사점	232

제2절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현황 및 정비	234
1. 대상 계획의 현황	234
2. 계획 정비안에 따른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증감 변화	236
제3절 부합성 심의 절차	239
1. 부합성 심의 절차 A안: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239
2. 부합성 심의 절차 B안: ‘조정 불필요’, ‘조정 필요’	241
3. 소결 및 시사점	242
 제7장 법령 및 계획 정비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	 247
제1절 법령 정비 추진 로드맵	247
제2절 계획 정비 추진 로드맵	248
제3절 향후 과제	250
 참고문헌	 253
 부 록	 257
부록 1. 물관리일원화 후 부처별 법령 정비 세부 현황	259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23
부록 3. 물 관련 법정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349

표 / 차 / 례 /

〈표 1-1〉 물 관련 법령 개선 의견조사 일정 및 참가 학회	10
〈표 1-2〉 물 관련 법령 개선 의견조사 문항	10
〈표 1-3〉 물 관련 계획 정비 관련 의견조사 일정	12
〈표 2-1〉 EU 및 독일의 수자원 관리 법령	16
〈표 2-2〉 독일 연방수자원관리법의 홍수방어 관련 주요 내용	21
〈표 2-3〉 독일의 국가표준상의 배후지역에 따른 홍수방어목표 참조값	22
〈표 2-4〉 네덜란드 수법(Water Act) 체계	26
〈표 2-5〉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안전기준	27
〈표 2-6〉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안전기준	28
〈표 2-7〉 일본 물순환기본법의 주요내용	36
〈표 2-8〉 일본 물순환 정책본부 간사회 구성	42
〈표 2-9〉 한국과 호주의 물관리 정책의 비교	48
〈표 2-10〉 Murray-Darling Basin Plan의 경과	51
〈표 2-11〉 Murray-Darling 유역의 거버넌스 구성 및 기능	63
〈표 3-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3대 혁신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76
〈표 3-2〉 물 관련 법령 개정 현황	88
〈표 3-3〉 정비 대상 물 관련 계획의 구분과 성격	91
〈표 3-4〉 환경부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 정비안(요약)	95
〈표 3-5〉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내용-전문가 포럼	97
〈표 3-6〉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내용-지역연구원 자문회의	97
〈표 4-1〉 물관리기본법 개정/정비 관련 문헌 조사	104
〈표 4-2〉 주제별 법령 정비: 주요 주제 및 관련 법령	107
〈표 4-3〉 물관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108
〈표 4-4〉 (가칭)유역물관리법/유역물환경보전법의 구성요소 (예시)	109
〈표 4-5〉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구성	112
〈표 4-6〉 지하수법 개정 내용	114
〈표 4-7〉 물관리기본법의 물분쟁 관련 조항과 하천법의 하천수 분쟁 관련 조항	119
〈표 4-8〉 물관리 관련 위원회 법적 근거	125
〈표 4-9〉 위원회 특성에 따른 법률상 기능	127

〈표 4-10〉 물관리 관련 위원회 기능 (법률상 기능)	127
〈표 4-11〉 각 법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기능	129
〈표 4-12〉 물관리 관련 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	138
〈표 4-13〉 행정기관위원회 성격별 구분	141
〈표 4-14〉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등 비교	142
〈표 4-15〉 물관리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비교	147
〈표 4-16〉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비교	149
〈표 4-1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종류 및 업무 관할	150
〈표 4-18〉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비교	151
〈표 4-19〉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 기능	152
〈표 4-20〉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위원회(한강)의 비교	153
〈표 4-21〉 수계 기금의 운용과 관리	155
〈표 4-22〉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 관련 내용	156
〈표 4-23〉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리의 주요 쟁점	159
〈표 4-24〉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20~'24) 운용계획 수립	160
〈표 4-25〉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 검토안	165
〈표 4-26〉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 검토안	168
〈표 4-27〉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선안	169
〈표 4-28〉 물재이용법의 개선안	170
〈표 4-29〉 농어촌정비법의 개선안	171
〈표 4-30〉 농어촌공사법의 개선안	172
〈표 5-1〉 국가물관리기본계획(통합)	182
〈표 5-2〉 계획 수립의 법적 내용 비교	183
〈표 5-3〉 국가물관리기본계획(통합) 관련 법령 정비 세부 내용	184
〈표 5-4〉 유역물관리종합계획(통합)	190
〈표 5-5〉 하천유역수자원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	193
〈표 5-6〉 유역물관리종합계획(통합) 관련 법령 정비 세부 내용	194
〈표 5-7〉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내용 (단기안과 중장기안)	200
〈표 5-8〉 국가수도기본계획(통합)	201
〈표 5-9〉 국가수도기본계획 개정(안)	201
〈표 5-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9. 가결)	202
〈표 5-11〉 국가하천종합계획(신설)	205
〈표 5-12〉 국가하천종합계획 관련 개정(안)	207

〈표 5-13〉 국가물순환관리계획(신설)	209
〈표 5-14〉 국가물순환관리계획 관련 개정(안)	210
〈표 5-15〉 국가물순환관리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안)	212
〈표 5-16〉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관련 개정(안)	213
〈표 5-17〉 현행 물관리 관련 조사·정보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	215
〈표 5-18〉 조사·정보 부문 계획 통합	216
〈표 5-19〉 물관리 통합조사계획 신설 관련 개정(안)	217
〈표 5-20〉 물관리 조사·정보 부문 현황	217
〈표 5-21〉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 신설 관련 개정(안)	218
〈표 5-22〉 댐 부문 계획 체계 전환	220
〈표 5-23〉 댐건설장기계획 관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비 내용	220
〈표 6-1〉 물관리기본법 부합성 심의 관련 법 조항 및 내용	227
〈표 6-2〉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현황	228
〈표 6-3〉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세부 평가항목	231
〈표 6-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234
〈표 6-5〉 2021~2030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법정계획 연도별 현황	235
〈표 6-6〉 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236
〈표 6-7〉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증감 변화	238
〈표 6-8〉 부합성 심의 절차안(A안, B안)의 장·단점	242

□ 그림 / 차 / 례 /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흐름	8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9
〈그림 2-1〉 독일 연방정부 내 수자원 관리 주요 네트워크 구성	17
〈그림 2-2〉 독일 수자원 관리 3계층 행정구조	17
〈그림 2-3〉 독일 연방정부의 통합홍수관리의 기본개념	20
〈그림 2-4〉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25
〈그림 2-5〉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위치	27
〈그림 2-6〉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위치	28
〈그림 2-7〉 1964년 물법 제정으로 인한 프랑스 본토 6대 유역 지정	30
〈그림 2-8〉 프랑스 물관리 의사결정 체계 모식도	31
〈그림 2-9〉 일본의 물 관련 정부 조직 및 소관 업무	33
〈그림 2-10〉 일본 물순환기본법 제정 과정	35
〈그림 2-11〉 일본 물순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 연혁	39
〈그림 2-12〉 일본의 제1차, 제2차 물순환기본계획	40
〈그림 2-13〉 일본 물순환 정책본부 구성도	41
〈그림 2-14〉 일본 물순환 정책본부 사무국 발행 정책 발간물	42
〈그림 2-15〉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 개황	44
〈그림 2-16〉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 물관리 정책 연혁	47
〈그림 2-17〉 SDL 조정 메커니즘 구현의 주요 단계	56
〈그림 2-18〉 개편된 유역 국장 위원회	60
〈그림 2-19〉 유역 개선 포럼의 구성과 기능	61
〈그림 2-20〉 머레이-달링 유역의 거버넌스 (2019년 기준)	61
〈그림 2-21〉 머레이-달링 유역의 거버넌스 (현재)	62
〈그림 3-1〉 물 관련 계획 정비의 기본원칙	74
〈그림 3-2〉 법령 정비안 연구 분석 체계	77
〈그림 3-3〉 부처별 주요 물 관련 법령 현황	78
〈그림 3-4〉 계획 정비안 마련의 주요 경과	90
〈그림 3-5〉 물 관련 법정 계획 정비안(환경부)	94
〈그림 3-6〉 물 관련 법정 계획 정비안(국가물관리위원회)	96

〈그림 4-1〉 위원회 간 기능 연계성 검토	144
〈그림 4-2〉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절차	158
〈그림 4-3〉 수자원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구조와 정비	174
〈그림 4-4〉 수자원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법정 계획과 정비안	175
〈그림 4-5〉 수량-수질 통합법 및 하천관리 일원화를 고려한 하천법 개정의 주요 방향	176
〈그림 5-1〉 물 관련 법정 계획의 현황	181
〈그림 6-1〉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	230
〈그림 6-2〉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대상) 절차	232
〈그림 6-3〉 물 관련 법정 계획 정비안	238
〈그림 6-4〉 부합성 검토 절차 A안	240
〈그림 6-5〉 부합성 검토 절차 B안	241
〈그림 7-1〉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의 추진 로드맵(안)	249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사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사무는 ‘의사결정(decision-making)’으로 통칭할 수 있으며 단기적 현안과 중장기적 정책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사무 혹은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정력 집행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 기준과 근거는 바로 법령이다. 그리고 정책적 수단과 추진 방향으로서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법정 계획이며, 이는 정부의 연도별 업무 계획 수립과 공공재정 투입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2018.6)을 통한물관리일원화의 기본적 취지는 수량-수질 통합관리, 즉 해당 물관리 사무에 관한 정부 조직 일부를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물관리일원화를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천 및 물이용 관리의 지속성을 위한 유역 물관리 기반 구축,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물관리로의 전환,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물 거버넌스의 조화, 그리고 물관리 정책 전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물관리일원화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나라 통합물관리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국내 물순환 건전성 확보, 유역 기반의 과학적 물관리 의사결정, 온전한 수생태계 회복 등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물관리의 정책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 개정 후 물관리일원화의 취지 후 통합물관리 정책 기반 구축과 그 개선의 모멘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물 관련 법령과 계획의 통합적 정비가 필연적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물 관련 법령의 최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기본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물분쟁,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과 같은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시행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협력, 조정, 참여라는 통합물관리의 정책적 관점에서 물관리일원화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견인차이며 미래 국가 물관리 발전을 위한 핵심 법령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관련 법령은 총 84개로 파악되며, 그 중 환경부 소관 법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된 5개 법령을 포함하여 28개로 보고되었다. 사실 물 관련 법령 개정 혹은 정비의 시급성

과 흠어져있는 계획 정비보다 더 중요하지만, 법령 정비는 정부의 사무는 물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정당 합의에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므로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령 정비는 초기 단계로 파악된다.

한편, 현행 물관리기본법 상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9개 조항(사무)이며, 이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2개, 계획수립의 부합성 심사에 대한 2개, 유역관리(유역 범위, 유역 간 물 이동)에 대한 2개, 물분쟁에 대한 1개, 기타 2개의 사무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이 계획 관련 사무가 4개로 편중되어 있고, 부합성 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절차, 기준 등)이 부재하며, 기타 2개의 사무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관리기본법 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총 6개 사무이며, 이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1개, 계획 수립의 부합성 심사에 대한 1개, 유역관리(유역 내 물 이동)에 대한 1개, 유역 물분쟁에 대한 1개, 기타 2개의 사무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물 관련 계획의 사무와 기타 사무가 각각 2개이다. 따라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능 및 사무 대비 향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의 조정과 강화, 부합성 대상 계획의 적절성, 부합성 심의 기준, 타 법령의 위원회 기능과의 정합성, 중복성, 정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7개 물관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 중인 물 관련 계획은 약 97개 종류로 보고되었으며(환경부, 2021.3), 환경부로 이관된 국토교통부 소관의 계획은 8개 종류이다. 2021년 현재 환경부 소관 물 관련 계획은 약 60개 종류에 이른다. 물 관련 계획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세분화되거나 전문적으로 수립된다는 효과와 장점이 있겠으나, 그동안 부처별, 분야별, 법령별 계획의 정합성과 연계성의 부재와 유사 중복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의 절차적 과정도 위원회 심의 유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유무, 수립된 계획의 고시 의무 등도 서로 상이하며, 계획 수립 후 이행평가 절차는 없거나, 있더라도 대부분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하천계획인데, 하나의 하천을 두고 소하천법과 하천법에 근거하여 소하천정비계획과 하천기본계획으로 각기 수립되었고, 동일 하천 공간의 수생태계를 대상으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하천계획과 수생태계복원계획이 구분되어 수립된다. 비슷하게 수자원법에 근거한 수자원 분야 계획의 수립 절차는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심의 체계가 있으나, 물환경 분야의 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장관 승인 등의 체계가 있는 것과 같이 심의 절차의 일

관성은 부족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 또는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종합계획 또는 유역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수립되며 국가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재해, 비용, 물분쟁 등에 관한 정책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유역종합계획은 유역단위의 물환경, 홍수예방, 유역 물관리의 비용,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간의 참여 등이 포함되는 유역 물관리의 현안을 해소하는 유역계획이다. 두 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그러나 유역종합계획의 성격(전략계획, 실행계획, 전략·실행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1994년 후 24년 동안 물관리 중앙부처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맞이한 이번 물관리일원화가 중앙부처 간의 조직 개편에 멈추지 않고 물관리일원화의 기대효과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 관련 법령과 계획의 정비에 매우 절실하다. 또한 물관리일원화 후 국내 물관리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뚜렷한 성과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 통합물관리 정책의 토대가 되고 물 관련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부처별 물 관련 법령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그 위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물관리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물 관련 법령과 계획 정비 방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검토와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행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과 이 목적 달성의 수단 혹은 과정은 물관리(물환경의 보전, 관리, 가뭄, 홍수 등)로부터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조정 기능이나 재판상 효력있는 물분쟁 조정 기능은 없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 등과 함께 그동안 중복 및 비효율적 물관리 관련 계획들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정비안 마련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물관리 중앙부처의 물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따른 통합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 정비안의 세부 실행과 법령 정비 방안의 도출 과정에서 물관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물관리일원화 후 개선되고 있거나 정제되어있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물관리기본법(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과 물관리 주무부처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기여이다.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1. 주요 연구내용

본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합물관리 관련 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둘째 물관리 중앙부처 6개 및 소관·산하기관의 법령 현황 파악과 문제점 조사 및 통합 정비 방안 제시, 셋째,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계획 정비 추진의 세부 실행방안 제시, 끝으로 물관리 법령 및 계획 정비 방안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단계적 추진 로드맵안 도출이다. 그리고 법령과 계획 정비는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증감 분석 등과 같이 상호간 교차·연계되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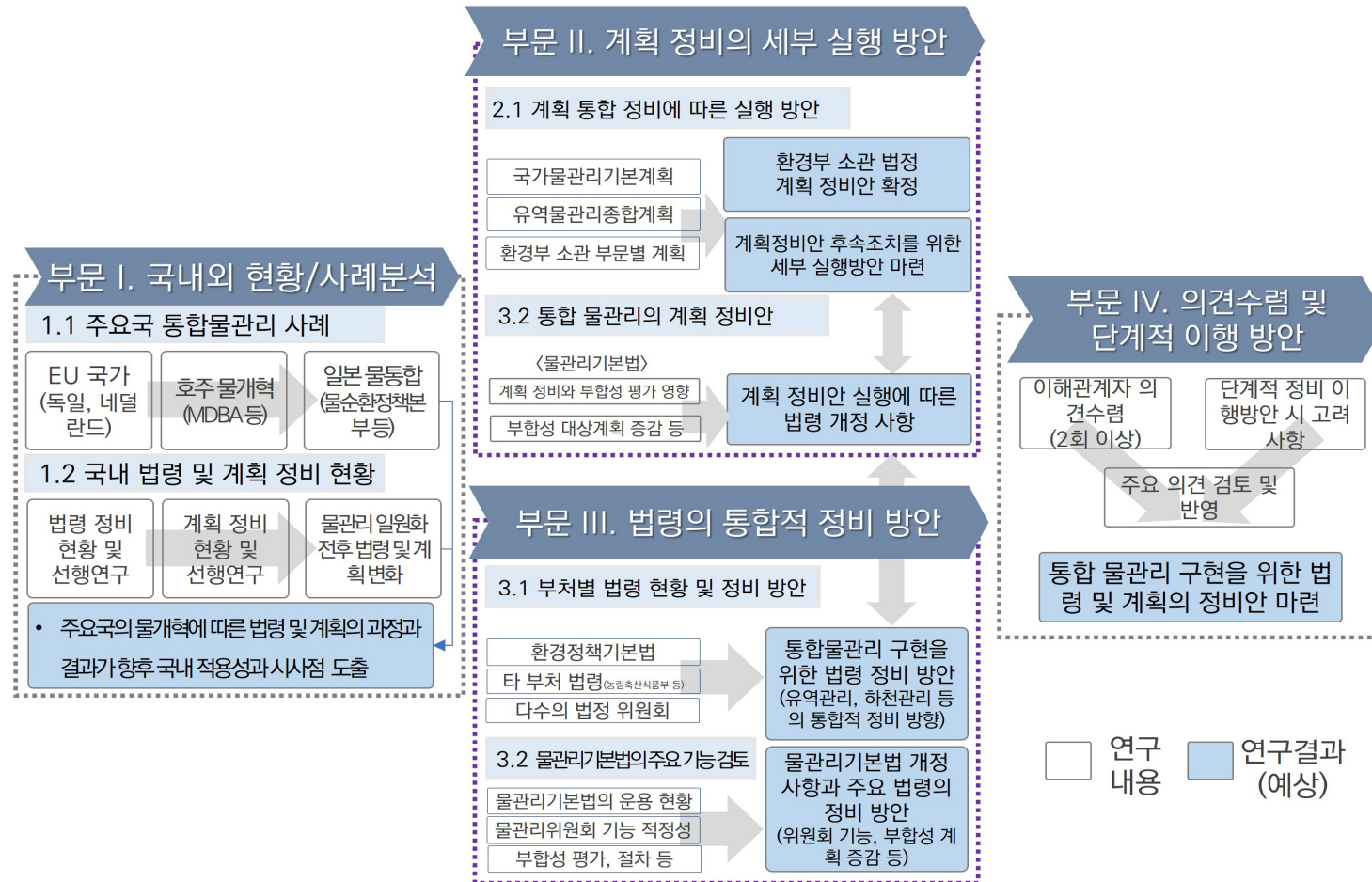
각 부문의 연구 내용을 추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사례는 대륙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변곡점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European Union(EU)의 물관리 정책인 Water Framework Directive(WFD) 시행에 따라 국가 물관리를 개혁한 독일, 네덜란드 및 프랑스 등 유럽 사례를 분석하고, 2007년 수법(Water Act)을 제정하고 유역청을 신설한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Murray-Darling Basin) 사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2001년에 단행된 국토교통성 중심의 정부 조직 및 물관리 행정 개혁과 이로부터 약 13년 후 또 하나의 변곡점인 2014년 물순환기본법 제정 후 동향을 분석하였다.

법령 정비 부문은 물관리일원화 후 최근까지 물 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을 조사한 후 물관리 기본법 전반의 개정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물관리위원회의 현재 기능 대비 향후 개선안을 소폭, 중폭, 대폭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상위법령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과업의 핵심인 계획 정비안의 세부 실행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계획 정비안에 근거하여 법령 개정, 추가 검토 및 고려사항, 향후 과제 등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될 경우, 각각의 관련 법령(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그리고 각 하위법령) 정비가 동시·병렬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제외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획 정비의 세부 실행방안과 법령 정비방안의 세부 내용을 충실히 평가·검토하여 정비방안의 부합성과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물관리기본법 시행(2019.6)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최초 실시되어야 할 부합 여부 심의(부합성 심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합성 심의 대상의 현황, 부합성 심의 절차, 위원회 의결에 대한 법적 처분력 등에 관한 상세한 연구내용이 수행되었다.

끝으로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그리고 물 분야 학회와 지역연구원 및 시민사회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경청하여 연구 최종 결과물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흐름

2.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는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의 발주로 수행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았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국토연구원(KRIHS)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환경연구원이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였다. 연구총괄 기관은 물관리 계획 및 법령의 정비 방안 중 물환경, 물이용 관련 계획 및 법령을 분석하고,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개선점, 이해관계자 참여 및 단계적 정비 이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연구기관은 물안전 관련 계획 및 법령을 집중 분석하고, 부합성 심의 관련 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단, 본 연구가 물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고 민감할 수 있는 법령 및 계획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행 기간 관 엄격한 분리 수행보다는 매월 1회 이상의 연구진 미팅과 자료 공유를 통해 협업 및 공동 수행 형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수행 조직의 직접적인 연구 활동 이외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활동 역시 주요 연구 추진체계로 하고 있다. 법령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는 주요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검토안이 마련되기 전 후 전문가 포럼(학회, 시민단체 등), 지역연구원 자문회의 등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법령 개선 관련 의견조사는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관련 학회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용역개요, 의견조사 취지 등을 설명한 뒤 사전에 제공한 의견조사서를 이용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의견조사 주요내용은 ① 물관리기본법 ② 하천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 ③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분야 ④ 유역-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수자원법 등 관련 정비방향 ⑤ 연구범위 또는 추진방향에 대한 기타의견 ⑥ 면담 대상 추천인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의견조사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농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를 대상으로¹⁾ 다음 <표1-1>과 같은 조사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학회별 의견조사 문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 1-1> 물 관련 법령 개선 의견조사 일정 및 참가 학회

의견 조사 일시	학 회
2021.04.27.(화) 13:30	한국수자원학회
2021.04.28.(수) 10:00	한국방재학회
2021.05.11.(수) 14:00	대한상하수도학회
2021.05.12.(수) 15:00	한국물환경학회
2021.05.28.(금) 10:00	한국농공학회

자료: 저자 작성

<표 1-2> 물 관련 법령 개선 의견조사 문항

구분	의견조사 문항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방재학회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조항, 용어, 개념 등)에 대한 의견 -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의견
	하천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 종합적 하천관리(수질, 수생태, 취수, 수도, 재해, 토지, 시설물 등)를 위한 법령 정비/연계 방안 - 하천관리일원화에 따른 주요 기대 사항 또는 우려 사항
	물재해 분야 관련 의견	- 물재해 관리와 관련한 물관리 측면의 법적·제도적 역할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 향후 바람직한 물재해 관리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
	유역-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수자원법 등 관련 정비방향에 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과 하천법, 수자원법의 관계를 고려한 수자원법 정비방향에 대한 종합 의견

1) 학회의 학회장과 부회장 추천을 통해 각 학회 전문가 2인이 의견 조사에 참여하였다.

구분	의견조사 문항	
한국농공학회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조항, 용어, 개념 등)에 대한 의견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 농업용수(물재이용, 지하수 포함) 관리를 위한 법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에 관한 의견 -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의견 - 현행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에 농업용수 부문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의견
	하천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주요 기대 사항 또는 우려 사항 - 종합적 하천관리(수질, 수생태, 취수, 수도, 재해, 토지, 시설물 등)를 위한 법령 정비/연계 방안 - 유역물관리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신설(예: 유역관리법) 혹은 기존 법령의 통합·정비하는 방안
	농업용수 분야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관련 법령과 타 분야 법령(물재해, 물환경 등)과의 정비에 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통합물관리 측면의 농업용수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기타 향후 바람직한 농업용수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
대한상하수도 학회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조항, 용어, 개념 등)에 대한 의견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 상하수도(물재이용, 지하수 포함) 관리를 위한 법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에 관한 의견 -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의견 - 현행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에 상하수도 부문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의견
	하천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주요 기대 사항 또는 우려 사항 - 종합적 하천관리(수질, 수생태, 취수, 수도, 재해, 토지, 시설물 등)를 위한 법령 정비/연계 방안 - 유역물관리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신설(예: 유역관리법) 혹은 기존 법령의 통합·정비하는 방안
	상하수도(물재이용, 지하수 포함) 분야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물재이용, 지하수 포함)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상하수도 관련 법령과 타 분야 법령(물재해, 물환경 등)과의 정비에 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통합물관리 측면의 물환경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기타 향후 바람직한 상하수도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
한국물환경학회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조항, 용어, 개념 등)에 대한 의견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 물환경 관리를 위한 법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에 관한 의견 -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의견 - 현행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에 물환경 부문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의견

구분	의견조사 문항	
	하천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주요 기대 사항 또는 우려 사항 - 종합적 하천관리(수질, 수생태, 취수, 수도, 재해, 토지, 시설물 등)를 위한 법령 정비/연계 방안 - 유역물관리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신설(예: 유역관리법) 혹은 기존 법령의 통합·정비하는 방안 에 대한 의견
	물환경 분야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물환경 관련 법령과 타 분야 법령(물재해, 물(재)이용, 상하수도 등)과의 정비에 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통합물관리 측면의 물환경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기타 향후 바람직한 물환경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

자료: 저자 작성

계획 정비 관련 의견조사는 다시 학회 및 시민단체 의견조사 및 시·도연구원 의견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표 1-3>과 같은 조사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계획 정비 의견조사 시에는 연구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 1-3> 물 관련 계획 정비 관련 의견조사 일정

구분	조사일정	참석 기관	비고
학회·시민단체 의견 조사	2021.11.26.(금) 14:00	한국습지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 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지하수도양환 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법학 회, 한국농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환경 운동연합	포럼 형태로 오프라인 개최 (국가물관리위원회 , 환경부 관계자참석)
지역 연구원 의견 조사	2021.11.29.(월) 14:00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부산연구원, 대 구경북연구원, 인천연구원, 광주전남연구 원, 대전세종연구원, 울산연구원, 강원연구 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 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온라인/오프라인/ 서면 병행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해외 사례

- 제1절 EU 국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 제2절 일 본
- 제3절 호 주
- 제4절 시사점

제2장 /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통합물관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EU의 3개 국가(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호주의 물관리 정책, 거버넌스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 물관리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EU 국가

1. 독일

가. 수자원법 개요

독일의 국가적 수자원 관리는 연방수자원법(Wasserhaushaltsgesetz, WHG)에 기반을 두며, 지표수 규제(Surface Waters Ordinance, OGewV), 지하수 규제(Groundwater Directive, GWD) 등을 통해 유럽연합 물관리기본지침(European Union Water Framework Directive, EU WFD)의 주요 요구 사항을 국가 법률로 완전히 전환하였다. 물관리기본지침의 목표 및 관리 조항은 연방수자원법의 핵심 요소이며, 연방수자원법은 물관리기본지침의 요구사항 외에도 해양 전략관리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SFD) 및 홍수위험관리지침(Flood Risk Management Directive, FRMD)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일관되게 전환하였다.

연방수자원법 제23조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물관리 목표에 따라 법령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Länder)는 연방정부가 입법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않고 주에 의한 여지를 남겨두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조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자재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연방수자원법의 규정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채택할 수 있다. 독일 내에서 연방정부와 주는 물관리기본지침의 목표를 실행하는데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표 2-1〉 EU 및 독일의 수자원 관리 법령

수 준	법 령					
EU	물관리기본지침	도시폐수 처리지침	음용수 지침	질산염 지침	홍수위험 관리지침	해양전략 관리지침
	지하수지침	산업배출 지침				
	환경품질기준지침					
독일	연방수자원법	연방 수자원법	음용수 규제	비료법	연방 수자원법	연방 수자원법
	지하수 규제	하수도		규제		
	지표수 규제	요금법				
	수질 유해 물질 취급 시설 규제	하수도 규제				
주	연방주 법률(법률/조례, 면허, 통지, 모니터링)					

자료: Umweltbundesamt(2018),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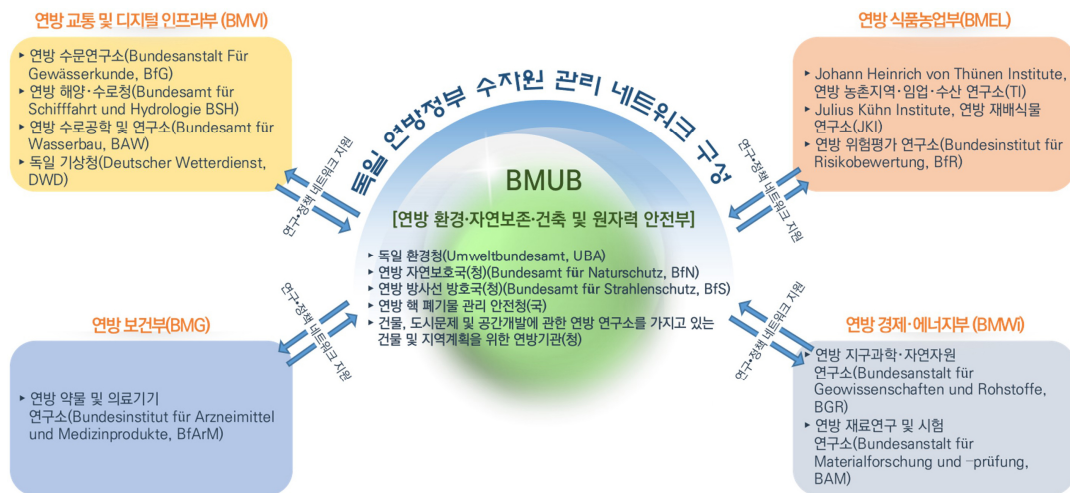
나. 연방정부 내 수자원 관리 조직

연방정부 내 환경·자연보전·건축 및 원자력 안전부(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BMUB)는 관련 연방 법규에서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규제할 책임이 있으며,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BMVI), 연방 식품 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연방 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 연방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연방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와 함께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BMVI)는 연방 수로 및 항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로 해상 및 내륙 수로에서의 위험물 운송 및 주운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며, 연안의 주(Länder)들과 함께 유류 및 기타 오염물질로 인한 연안해역의 오염방지에 대처한다.

연방 식품농업부(BMEL)는 농촌 부문의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촉진하며, 해안 보호와 비료 및 식물보호 법률을 담당한다. 연방 보건부(BMG)는 식수 공급 및 수영장 수질 문제를 담당하며, 의약품 인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연방 경제 에너지부(BMWi)는 카르텔 및 계약 할당법처럼 수자원 관리 부문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기본 프레임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영역을 담당하며, 수력발전을 포함하여 재생 에너지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 공급 재편성도 담당한다.

다. 연방 교육·연구부(BMBF)는 연방정부의 연구 촉진 노력을 조정하고 물 연구 및 물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개발 및 혁신을 조정한다.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MZ)는 양자 및 다자간 독일 개발 협력의 원칙과 조정을 담당하며, 특히 안전한 식수 공급 및 폐수처리 등 수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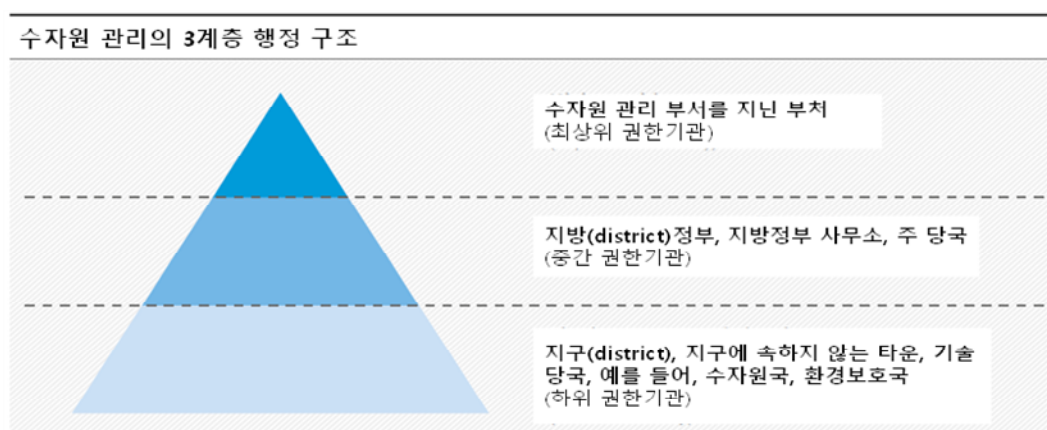


자료: Umweltbundesamt(2018),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Germany”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 독일 연방정부 내 수자원 관리 주요 네트워크 구성

다. 주(Länder) 수자원 관리

대부분의 주는 수자원 관리 시 3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중간계층이 없는 2계층 구조를 따른다.



자료: Umweltbundesamt(2018),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Germany”

〈그림 2-3〉 독일 수자원 관리 3계층 행정구조

최상위 권한 기관은 일반적으로 수자원 관리의 통제와 지배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담당하며, 주 수준에서의 법률 제정과 중간·하위 수자원 당국의 감독을 담당한다. 중간 권한 기관은 지역 수자원 관리계획 및 물과 관련된 중요한 입법 절차에 관여하며, 하위 권한 기관은 기술 조언, 수자원 모니터링, 수역 내 수역 위 시설의 인허가, 물 사용 승인, 폐수시설 승인 및 폐수 배출 모니터링, 수질 유해 물질 취급에 대한 고지 처리, 수질오염 알람의 수신, 수역 및 제방 검사의 실시, 홍수위험이 있는 경우 방어 조치의 발동, 벌금 및 보상, 빗물 관리 등의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연구소와 같은 소위 중앙 주 당국은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그들은 수문학, 수역 모니터링, 수자원 관리계획, 기술 조언 및 기술지침 작성과 같은 기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 주 당국은 일반적으로 최고위 당국 즉, (중앙)부처에 직접 보고한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자원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및 주의 환경 법규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보호 관련 업무 (식수 및 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 사용자 부담금 및 수수료 부과, 수역의 유지 및 개발 계획 수립 등 업무수행)를 수행하며, 특히 주민들을 위한 지역 환경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마. 협회 등 수자원 관리

독일에서는 물 공급, 폐수처리 및 수역의 유지관리가 기술 및 재정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조직되도록 함에 있어 협회(조합)와 지방 당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협회는 할당된 업무, 지역적 범위 및 조직 형태에 있어 다양하며, 주로 공법상 단체로서의 특수 목적인 조직, 물 조직법에 정의된 물 및 토양 협회, 특별법에 근거한 라인/베스트팔리아 산업지역 하천 유역을 위한 물 협회 등이 있다.

다양한 기술/과학 협회도 관련되어 있으며, 과학자, 협회 및 정치인(연방, 주, 지방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회(조합)를 대표한다. 이러한 기술 조직들은 수많은 기술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표준으로 공인되어 적용된다.

- 독일 물·폐수·폐기물 협회(Deutsche Vereinigung für Wasserwirtschaft, Abwasser und Abfall, DWA)

-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및 농업공학의 엔지니어 연합(Bund der Ingenieure für Wasserwirtschaft, Abfallwirtschaft und Kulturbau, BWK)
- 독일 육수학(陸水學)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Limnologie, DGL)
- 독일 표준화 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
- 독일 가스 및 물 전문가 협회(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 DVGW)
- 독일 지역 공기업 협회(Verband kommunaler Unternehmen e.V, VKU)
- 독일 에너지-물산업 협회(Bundesverband der Energie-und Wasserwirtschaft e.V, BDEW)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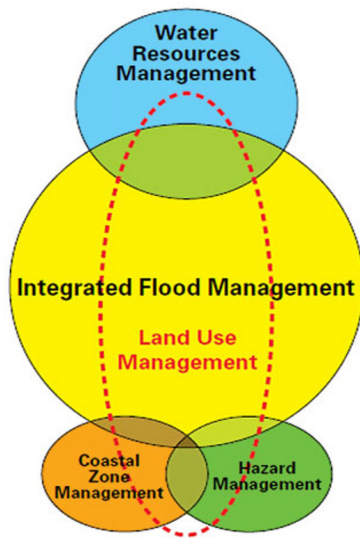
바. 독일 통합물관리 : 물재해

독일은 1993년과 1995년 다국가 공유하천인 라인강 대홍수로 인해 통합홍수관리(integrated flood management)로 국가 정책을 전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2년 대홍수를 한차례 더 겪은 이후 2005년 통합홍수관리 개념에 따라 유역별 홍수관리계획 준비, 홍수 취약지역 규제, 개인적인 조치 등을 실행하기 위해 홍수방어법(Hochwasserschutzgesetz)을 제정하였다.

2009년 7월에는 홍수방어법을 포함한 기존 법률을 통합 및 확대하여 연방수자원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유럽연합에서 2007년에 수립한 홍수 위험도 관리지침인 EC Directive 2007/60²⁾의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후 독일은 계속된 홍수피해로 인해 홍수 예방의 중요성과 개인적인 위험 예방 활동을 강조하고 홍수 적응을 위한 건축물 설계, 석유탱크 보호 등 규제를 강화하도록 연방수자원관리법을 2018년에 개정하였다.

2) 독일의 홍수방어법, 유럽연합의 EC Directive 2007/60는 2002년 유럽의 대홍수를 배경으로 수립되었음



전략	방안
홍수저감	댐 및 저수지
	제방과 둑
	홍수량 분담
	유역관리
피해 민감성 저감	저수로 정비
	범람원 규제
	정책 개발
	시설 설계 및 위치
	주택 및 건축법규
홍수영향 완화	홍수 방지
	홍수 예방 및 예보
	정보 및 교육
	재난관리
범람원 보호	사후복구
	홍수보험
	범람원 구획화와 규제

자료: WMO(2006), "Integrated flood management model"

〈그림 2-4〉 독일 연방정부의 통합홍수관리의 기본개념

연방수자원관리법은 홍수 위험도 관리의 접근법으로 ‘조건기반 거버넌스(condition-based governance)’와 ‘성과기반 정책규제(performance-based policy regulation)’를, 그리고 수단으로서 홍수 위험도 지도, 홍수 위험도 관리계획, 시민참여 등을 강조하였다.

동법 제73조에서 제75조까지에 홍수방어(Hochwasserschutz) 관련 중요 원칙을 〈표 2-2〉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EC Directive 2007/60에서 명시된 홍수 위험도 관리를 적극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이 모든 유역에 대해 홍수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위험도 지도를 토대로 홍수 위험도 관리계획을 6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였다.

위험도 평가는 재현기간 200년 이상의 확률, 재현기간 100년 이상의 확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재현기간이 짧은 확률을 추가로 상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위험도 관리계획은 재현기간 100년 이상의 확률을 기준으로 위험지역 피해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표 2-2〉 독일 연방수자원관리법의 홍수방어 관련 주요 내용

- 수자원관리법 제73조는 홍수 위험도와 위험지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의
 - 홍수 위험도를 홍수 발생확률과 건강, 환경, 문화유산, 경제활동, 중요자산 등의 부정적인 결과와의 조합으로 정의
 - EC Directive 2007/60의 Article 4(2)*에 따라 모든 유역의 홍수 위험도를 평가하고 홍수 위험지역을 결정
 - *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예비 위험도 평가(preliminary flood risk assessment)를 수행해 하천유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과거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홍수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며 장래 홍수의 부정적인 결과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
- 수자원관리법 제74조는 위험도 지도(hazard map)와 위험도 지도(risk map)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정의
 - 위험도 지도를 통해 홍수발생 시 침수되는 지역을 식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홍수 재현기간 200년 이상의 낮은 확률과 홍수 재현기간 100년 이상의 중간 확률을 지닌 홍수, 그리고 필요 시 높은 확률을 추가로 상정
 - 위험도 지도는 EC Directive 2007/60의 Article 6(5)*에 맞춰 홍수에 의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표시해야 함
 - * 상정한 홍수발생 확률 조건에 대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인구, 경제활동의 종류 등을 식별해야 함을 의미
- 수자원관리법 제75조는 위험도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의
 - 위험도 지도와 위험도 지도를 갱신하면서 6년 마다 위험도 관리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시에는 가능하다면 재현기간 100년 이상의 중간 확률을 지닌 홍수(해안지역의 경우 극히 낮은 확률을 지닌 홍수) 조건에서 위험지역의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위험관리 목표를 설정
 - EC Directive 2007/60의 Article 7(3)에 명시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EC Directive 2007/60 부속서에서 정의한 목차**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작성
 - * 위험도 관리계획에 비용·편익의 경제성, 홍수영향, 홍수 확산경로, 홍수 저류지역, 환경목표, 토지·물관리, 공간계획, 토지이용, 자연보호, 운하·항만 기간시설 등 모든 관점을 고려하고, 홍수의 예방·방어·대비 등 위험도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요구
 - ** 홍수 위험도 관리계획의 구성요소, 계획의 추진방법 등을 제안

자료: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das Bundesamt für Justiz(2013), 「Wasserhaushaltsgesetz」.

홍수방어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표준(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으로 홍수방어사업이 정의되어 있고 독일 상하수도 및 폐기물협회(Deutsche Vereinigung für Wasser, Abwasser und Abfall, DWA)에 의해 제방의 상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표준과 가이드라인 모두 실무적으로 참고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특정 주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홍수방어사업에 대한 국가표준(DIN Standard 19712)³⁾은 제6장 수리·수문 설계원칙에

3) 본 국가표준은 1997년에 처음 작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개정된 사항을 기초로 검토

서 정하였다. 먼저 지형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보호하려고 설치하는 모든 홍수방어시설은 홍수방어목표와 관련되어 일관된 개념에 따라 규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설계 홍수위와 여유고로 구분되는 홍수방어시설의 설계 높이를 홍수방어목표를 토대로 산정하되 하천의 상·하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홍수방어목표로서 홍수량의 초과확률과 그에 따른 재현기간은 배후지역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자연·경관, 도시계획 등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홍수방어목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정한 범주를 지닌 지역에 대해 <표 2-3>과 같이 홍수 재현기간을 부여하였다.

<표 2-3> 독일의 국가표준상의 배후지역에 따른 홍수방어목표 참조값

배후지역의 범주	피해 잠재력	재현기간	비고
홍수 시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는 특수지역	높음	개별 케이스에 대해 결정	재현기간 500년까지 허용
주거지역	높음	약 100년	
산업단지	높음	약 100년	
국가기간시설	높음	약 50년에서 100년 사이	-
비항구적인 단독 건축물	중간	약 25년	-
광역기간시설	중간	약 25년	-
농업지역	낮음	5년 이내	원칙적으로 농업지역은 상황에 따라 조정
자연녹지	낮음	-	-

자료: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2013)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홍수 시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는 특수지역의 경우 홍수방어목표에 대한 참조값을 정하지 않고 해당 케이스에 맞춰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특수지역 외에도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0년의 재현기간이 참조값으로 주어졌지만, 정당화할 수 있다면 500년의 재현기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위 세 가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홍수방어목표에 대한 기준은 그리 높지 않은데, 배후지역이 농업지역이나 자연 녹지인 경우 사실상 홍수방어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독일은 연방수자원관리법에서 100년의 설계빈도(1% 초과확률)를 기준으로 모든 유역

에 대해 홍수피해 저감 목표를 설정한 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며 구조적인 홍수방어 대책과 비구조적인 홍수 적응 대책을 종합하여 중기단위의 위험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100년의 설계빈도는 홍수방어를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수준으로 해석되며 하천의 홍수방어목표에 대해서는 국가표준(DIN Standard 19712)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따라 설계빈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홍수 시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는 특수지역의 경우 설계빈도를 명시하지 않고 500년의 설계빈도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하천 연안이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할 경우에는 100년의 설계빈도를 권장하되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500년의 설계빈도 범위까지 허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반해 하천 연안의 위험도가 매우 낮은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홍수방어목표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불필요한 하천 사업 시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설계빈도를 정하고 있어 홍수방어목표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구간은 별도로 홍수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한 설계빈도를 결정하도록 하여 홍수 위험도 개념을 직관적 ·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네덜란드

가. 수자원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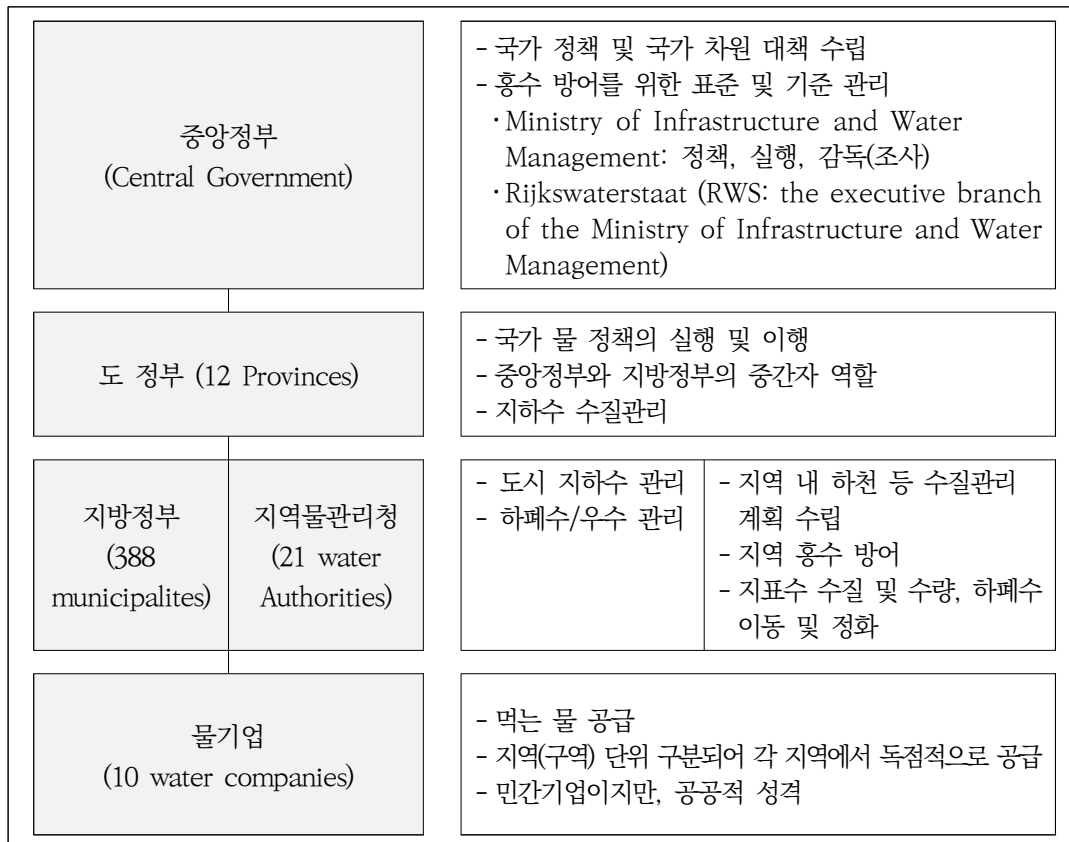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경우, 1985년 통합적 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개념이 도입되며 물관리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1953년 약 2,500개의 물위원회(water board)가 1986년 255개로 축소되었다.

2009년 수법(Water Act)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역 및 지방 단위 정부 관련 기관의 물 관리 역할이 정립되었으며, 2009년 제정된 수법은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에 따라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물 시스템(water system)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 수법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품질과 양처럼 모든 요소를 연결시키는 통합물관리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강을 네 개의 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별 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네덜란드는 ‘사회기반시설 및 물관리 부처’에서 물관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는 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실질적인 물관리는 국가물관리청(Rijkswaterstaat, RWS)과 지역물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y, RW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충분한 물 공급을 보장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국가물관리청은 바다와 하천과 같은 주요 수자원 관리를 하고, 지역물관리청은 지역의 물 즉, 운하, 간척지, 수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정화도 담당한다.

지역 정부(Provinces)는 중앙정부 차원의 물 계획을 지역 수준으로 전환 및 적용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 정부에서는 도시 배수와 우수 및 오·폐수를 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관리 기관별 기능은 2011년 행정 협약(Administrative Agreement Water)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료: Dutch Water Authorities(2017), "The Dutch Water Authority Model", p.18.; K-water(2018), "네덜란드의 지역 물관리 모델, case-brief", p.4.; OECD(2014), "Water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Fit for the Future?",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41.

〈그림 2-6〉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네덜란드는 5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와 기술에 대한 미래 계획과 정책을 제시한다. 물관리와 기술에는 국제 및 유럽연합(EU)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적법성(Legitimacy), 분산된 단일 국가의 틀에서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는 보완성(Subsidiarity), 투명한 절차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집행의 효과성(Effectiveness), 최소의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효율성(Efficiency), 서비스 제공 및 사용에 공정성을 보장하는 형평성(Equity)을 포함하는 다층적 관리를 포함한다.

〈표 2-4〉 네덜란드 수법(Water Act) 체계

네덜란드 수법(Water Act) 체계			
1장	일반 제·규정	6장	물순환 관련 수리권·오염방지 등 규제
2장	목적 및 기준	7장	조세·보상·보조금 규정
3장	물관리 기관	8장	규정 집행 관련
4장	계획	9장	사법 절차
5장	물관리시설 건설 및 관리	10장	보칙

자료: 저자 작성

나. 네덜란드 통합물관리 : 물재해

네덜란드는 유럽을 관통하는 라인강, 뉘르강, 스텔데강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토는 고도가 해발고도이거나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홍수방어를 중시한다(Pilarczyk, 2007). 1953년 해일에 의한 대홍수로 1,835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직후 중앙정부에서 델타 위원회(Delta Commission)를 구성하고, 피해 원인조사와 델타사업(Delta Program)으로 명명된 25년간의 치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6년에는 교통·공공사업·물관리부 주도로 홍수방어법(Flood Protection Act)을 입안하여 홍수 위험도 관리 개념을 반영하였으며, 53개의 원형제방시설과 42개의 뉘르강 제방을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1차 홍수방어구조물(primary flood defence structures)로 지정하고 구조물의 안전기준(초과확률)을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5년마다 평가하기로 하였다.

2009년 3월에는 홍수방어법을 포함한 다양한 물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수법(Water Act)을 제정하였다. 홍수방어를 위한 원칙과 함께 1차 홍수방어시설의 위치와 안전기준을 계속해서 명시하였으며, 2016년 11월 안전기준에 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1차 홍수방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법을 개정하였다. 과거에 비해 홍수방어시설을 구간 단위로 상세하게 지정하였으며, 사망 위험도에 대한 사회규범을 충족하는 홍수량의 초과확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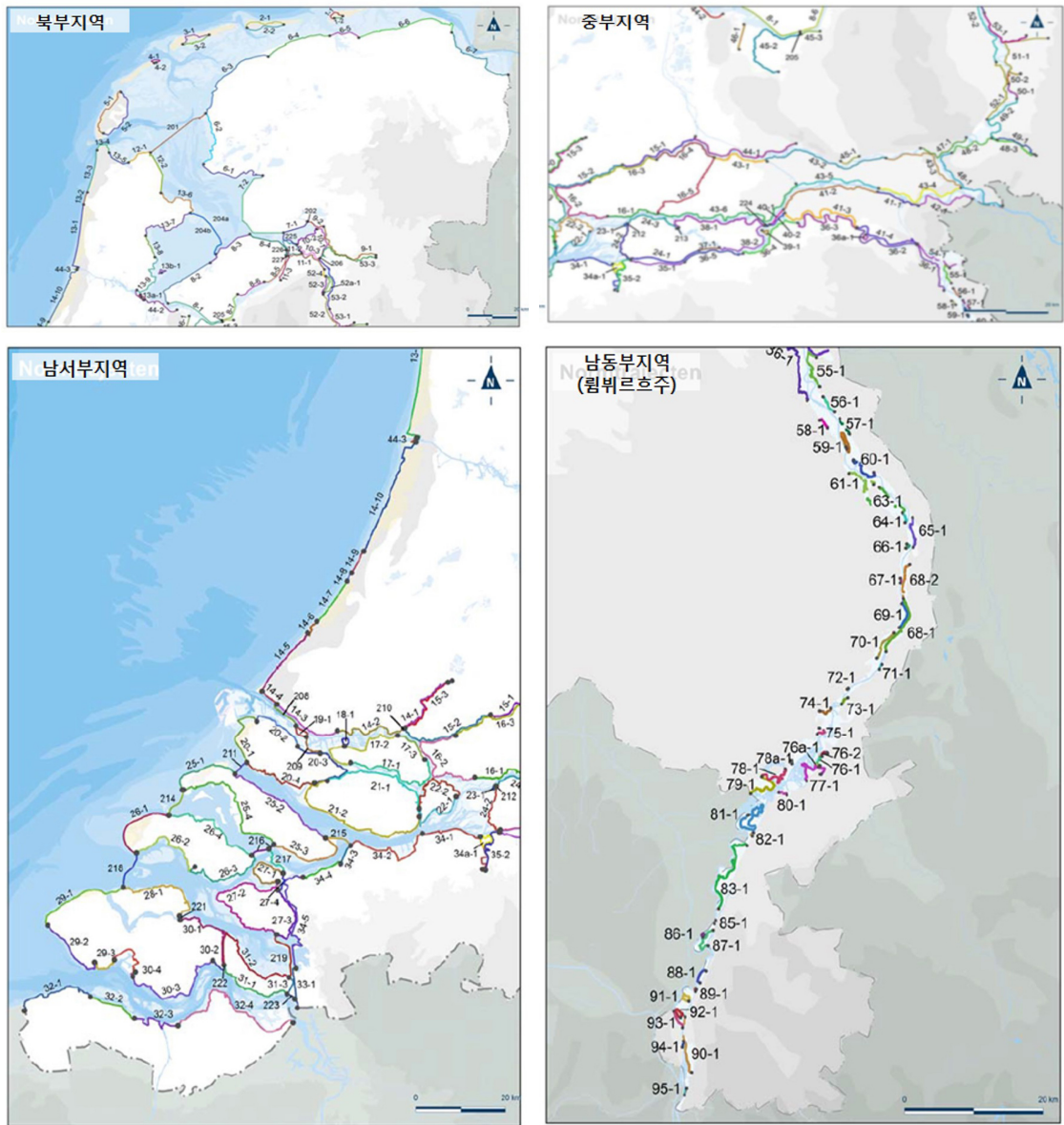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2010) 『Water Act』

〈그림 2-7〉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위치

〈표 2-5〉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안전기준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1	1:2000	16	1:2000	33	1:4000	48	1:1250	65	1:250	82	1:250
2	1:2000	17	1:4000	34	1:2000	49	1:1250	66	1:250	83	1:250
3	1:2000	18	1:10000	34a	1:2000	50	1:1250	67	1:250	84	1:250
4	1:2000	19	1:4000	35	1:2000	51	1:1250	68	1:250	85	1:250
5	1:4000	20	1:2000	36	1:1250	52	1:1250	69	1:250	86	1:250
6	1:4000	21	1:2000	36a	1:1250	53	1:1250	70	1:250	87	1:250
7	1:4000	22	1:2000	37	1:1250	54	1:250	71	1:250	88	1:250
8	1:4000	23	1:2000	38	1:1250	55	1:250	72	1:250	89	1:250
9	1:1250	24	1:2000	39	1:1250	56	1:250	73	1:250	90	1:250
10	1:2000	25	1:4000	40	1:1250	57	1:250	74	1:250	91	1:250
11	1:2000	26	1:4000	41	1:1250	58	1:250	75	1:250	92	1:250
12	1:4000	27	1:4000	42	1:1250	59	1:250	76	1:250	93	1:250
13	1:10000	28	1:4000	43	1:1250	60	1:250	77	1:250	94	1:250
13a	1:4000	29	1:4000	44	1:1250	61	1:250	78	1:250	95	1:250
13b	1:1250	30	1:4000	45	1:1250	62	1:250	79	1:250		
14	1:10000	31	1:4000	46	1:1250	63	1:250	80	1:250		
15	1:2000	32	1:4000	47	1:1250	64	1:250	81	1:250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2010) 『Water Act』



자료: Kingdom of the Netherlands(2016) 『Staatsblad 431』

〈그림 2-9〉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위치

〈표 2-6〉 네덜란드의 2016년 수법 개정 이후의 1차 홍수방어시설 안전기준

□ 북부지역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1-1	1:1000	6-1	1:3000	8-2	1:30000	10-2	1:3000	13-3	1:3000	201	1:10000
1-2	1:1000	6-2	1:3000	8-3	1:30000	10-3	1:10000	13-4	1:3000	202	1:10000
2-1	1:1000	6-3	1:3000	8-4	1:30000	11-1	1:3000	13-5	1:3000	204a	1:10000
2-2	1:1000	6-4	1:3000	8-5	1:3000	11-2	1:3000	13-6	1:3000	204b	1:1000
3-1	1:3000	6-5	1:3000	8-6	1:3000	11-3	1:300	13-7	1:3000	205	1:3000
3-2	1:1000	6-6	1:3000	8-7	1:3000	12-1	1:1000	13-8	1:3000	206	1:10000
4-1	1:300	6-7	1:10000	9-1	1:1000	12-2	1:3000	13-9	1:3000	225	1:30000
4-2	1:1000	7-1	1:3000	9-2	1:3000	13-1	1:3000	13a-1	1:300	226	1:3000
5-1	1:3000	7-2	1:3000	10-1	1:3000	13-2	1:3000	13b-1	1:300	227	1:3000
5-2	1:3000	8-1	1:30000								

□ 중부 및 남서부지역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14-1	1:30000	20-1	1:30000	27-3	1:3000	34-5	1:300	43-5	1:30000	52-4	1:3000
14-2	1:100000	20-2	1:10000	27-4	1:1000	34a-1	1:3000	43-6	1:30000	53-1	1:3000
14-3	1:10000	20-3	1:30000	28-1	1:1000	35-1	1:10000	44-1	1:30000	53-2	1:10000
14-4	1:10000	20-4	1:1000	29-1	1:3000	36-1	1:10000	44-2	1:300	53-3	1:10000
14-5	1:30000	21-1	1:3000	29-2	1:10000	36-2	1:30000	44-3	1:30000	54-1	1:1000
14-6	1:30000	21-2	1:300	29-3	1:100000	36-3	1:30000	45-1	1:100000	208	1:100000
14-7	1:30000	22-1	1:3000	29-4	1:1000	36-4	1:10000	45-2	1:300	209	1:100000
14-8	1:30000	22-2	1:10000	30-1	1:3000	36-5	1:10000	45-3	1:300	210	1:100000
14-9	1:30000	23-1	1:3000	30-2	1:100000	36a-1	1:3000	46-1	1:300	211	1:3000
14-10	1:30000	24-1	1:10000	30-3	1:1000	37-1	1:10000	47-1	1:3000	211	1:10000
15-1	1:30000	24-2	1:1000	30-4	1:3000	38-1	1:30000	48-1	1:30000	212	1:100000
15-2	1:10000	24-3	1:10000	31-1	1:30000	38-2	1:10000	48-2	1:10000	213	1:3000
15-3	1:10000	25-1	1:3000	31-2	1:10000	39-1	1:3000	48-3	1:10000	214	1:30000
16-1	1:100000	25-2	1:1000	31-3	1:300	40-1	1:30000	49-1	1:300	215	1:3000
16-2	1:30000	25-3	1:300	32-1	1:1000	40-2	1:10000	49-2	1:10000	216	1:30000
16-3	1:30000	25-4	1:300	32-3	1:1000	41-2	1:10000	50-1	1:30000	217	1:30000
16-4	1:30000	26-1	1:3000	32-4	1:3000	41-3	1:3000	50-2	1:3000	218	1:30000
17-1	1:3000	26-2	1:3000	33-1	1:3000	41-4	1:10000	51-1	1:1000	219	1:10000
17-2	1:3000	26-3	1:10000	34-1	1:300	42-1	1:10000	52a-1	1:3000	221	1:30000
17-3	1:100000	26-4	1:1000	34-2	1:1000	43-1	1:30000	52-1	1:3000	222	1:30000
18-1	1:10000	27-1	1:3000	34-3	1:3000	43-2	1:10000	52-2	1:3000	223	1:30000
19-1	1:100000	27-2	1:10000	34-4	1:1000	43-4	1:30000	52-3	1:3000	224	1:30000

□ 남동부지역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No.	설계빈도
55-1	1:1000	63-1	1:300	70-1	1:300	76a-1	1:300	82-1	1:300	89-1	1:300
56-1	1:300	64-1	1:300	71-1	1:300	77-1	1:300	83-1	1:300	90-1	1:3000
57-1	1:300	65-1	1:300	72-1	1:300	78-1	1:300	84-1	1:300	91-1	1:300
58-1	1:300	66-1	1:300	73-1	1:300	78a-1	1:300	85-1	1:300	92-1	1:300
59-1	1:300	67-1	1:300	74-1	1:300	79-1	1:300	86-1	1:300	93-1	1:1000
60-1	1:300	68-1	1:1000	75-1	1:300	80-1	1:300	87-1	1:1000	94-1	1:300
61-1	1:300	68-2	1:300	76-1	1:300	81-1	1:300	88-1	1:300	95-1	1:300
62-1	1:300	69-1	1:1000	76-2	1:300						

자료: Kingdom of the Netherlands(2016) 『Staatsblad 431』

네덜란드는 수법에서 1차 홍수방어시설(primary flood defence structure)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시설 설계빈도를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5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추진한 치수사업(Delta Program)이 1990년 말 완료된 이후 법적으로 홍수 위험도 관리 개념을 반영한 뒤 정부에서 위험도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뒤 홍수방어시설의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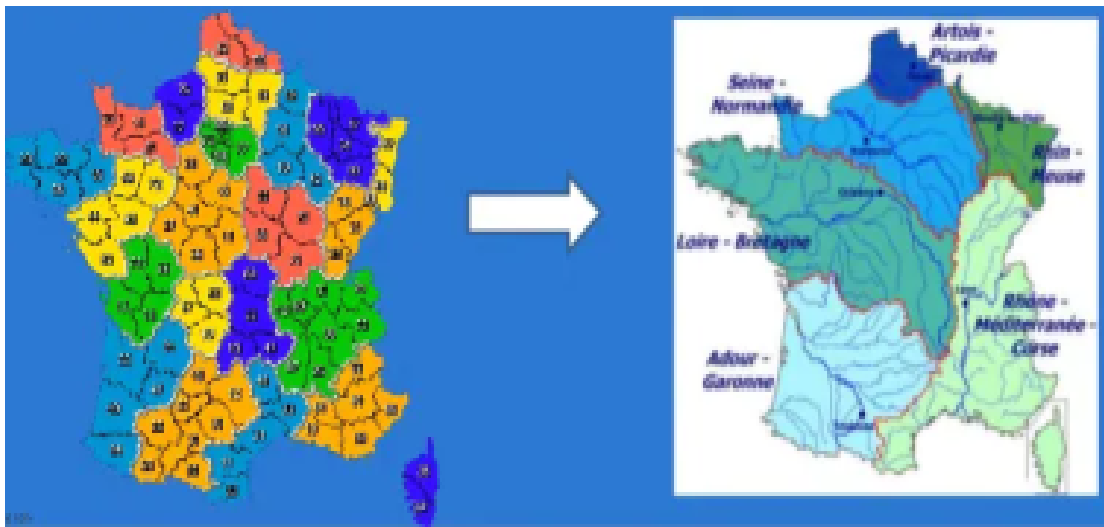
서부와 북부에 위치한 간척지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초과확률(설계빈도 300년에서 10만년까지)을, 내륙지역인 뫼즈강 상류에 대해서도 초과확률(설계빈도 300년에서 1,000년)의 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중앙정부(교통·공공사업·물관리부)가 직접 하천 구간별로 홍수 위험도 평가를 통해 홍수 초과확률에 따른 하천 연안의 인명 손실 위험을 분석한 뒤 적절한 홍수방어목표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홍수 위험도 개념을 분석적·강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프랑스

가. 물법 개요⁴⁾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분법화된 다원적 구조의 물관리 법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법체계는 법전(Code)체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하천과 해양에 대해서는 공적재산법전, 수돗물과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공중보건법전, 상하수도관리 및 빗물수집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물관련 법과 관련하여 물관리 기본원칙과 방향, 관리방법을 환경법전 제2권 제1장 ‘물, 수생태계, 해양’에 명시하여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1964년 법률 제64-1245호를 제정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 생활·농업·공업용수 공급 등 종합 물관리 정책을 법률로 규정하여 통합물관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4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별로 나누어 있던 물관리 행정체계를 프랑스 본토 기준 6개 대구역⁵⁾으로 나누어 각 유역위원회와 유역재정청을 신설하여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유역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각 유역 내 이해당사자의 조율을 통한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오염자부담원칙 하의 유역 재정 확보 원칙도 구현되었다.



자료: Courtecuisse(2019), p.3⁶⁾

〈그림 2-14〉 1964년 물법 제정으로 인한 프랑스 본토 6대 유역 지정

4) 여은태(2018). “프랑스 물관리법제에 관한 소고”, 사회융합연구 2(2), 3-12.

5) 코르시카는 별도의 유역이나 혼강(Rhone) 유역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 외 섬 및 기타 지역에 5개 유역이 별도로 있음

6) Courtecuisse, A.(2019). “Fees & subsidies, the pillars of the French Water Agencies – A short overview of the system implemented in 1964”. OECD Environment.

이후 프랑스는 홍수·가뭄예방, 상수원 확보 등을 중심으로 1992년 물법(법률 제92-3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물에 대한 정의에 공공개념을 강화시키고 국가 물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을 유역기본계획(SDAGE, schema directeur d'aménagement et de gestion des eaux)과 유역관리계획(SAGE, schéma d'aménagement et de gestion des eaux)으로 분류하여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차원의 물관리지침이 2000년 마련되자, 2004년 프랑스 의회는 마르티니크에서 '트로아-일레 선언'을 통해 지자체, 이해관계자, 정부 조직이 유역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함을 공식화하였으며 이후 2006년 물과 수생환경에 관한 법률 제2006-1772호를 제정함으로써 유역위원회 구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개발 및 보호에 대한 규정, 정수 공급 원칙 천명 등을 법률에 담았다.

나. 물관리 의사결정 및 계획 체계

프랑스는 총리 소관의 국가물위원회가 있다. 국가물위원회는 6개 프랑스 본토 유역에 대해 모든 수자원 개발 대형 사업과 2개 유역 이상 간의 갈등, 물관련 법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행한다. 이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 물관리 체계의 핵심은 유역단위 관리를 실현시켰다는 데에 있다. 본토 기준 6개 유역에 각 유역청(Agence de l'eau)이 설립되어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역위원회가 의결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5〉 프랑스 물관리 의사결정 체계 모식도

유역청은 프랑스어로는 ‘물 기관’이라는 뜻만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물관리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역물관리청은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수공급, 홍수통제 등의 역할 수행과 유역기본계획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 징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당사자에 배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유역위원회는 40%의 각 지방 선출직 공무원, 40%의 이해관계자(제조업, 농업, 환경보호단체, 어업, 소비자 등), 20%의 국가대표로 구성된다⁷⁾. 유역위원회는 유역물관리청 이사회 조직과 격년 단위 사업, 실행계획, 각 사용료·부담금 요율 등을 심의하고 유역기본계획을 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유역 내 지자체별로는 다시 지역물위원회가 조직되며 지역물위원회에서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커진다. 지역물위원회는 유역관리계획과 관련한 심의와 각 시행사업 의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구조는 우리나라 물관리위원회 구조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단,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중앙정부-국가위, 유역청-유역위 등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과 이해관계자 대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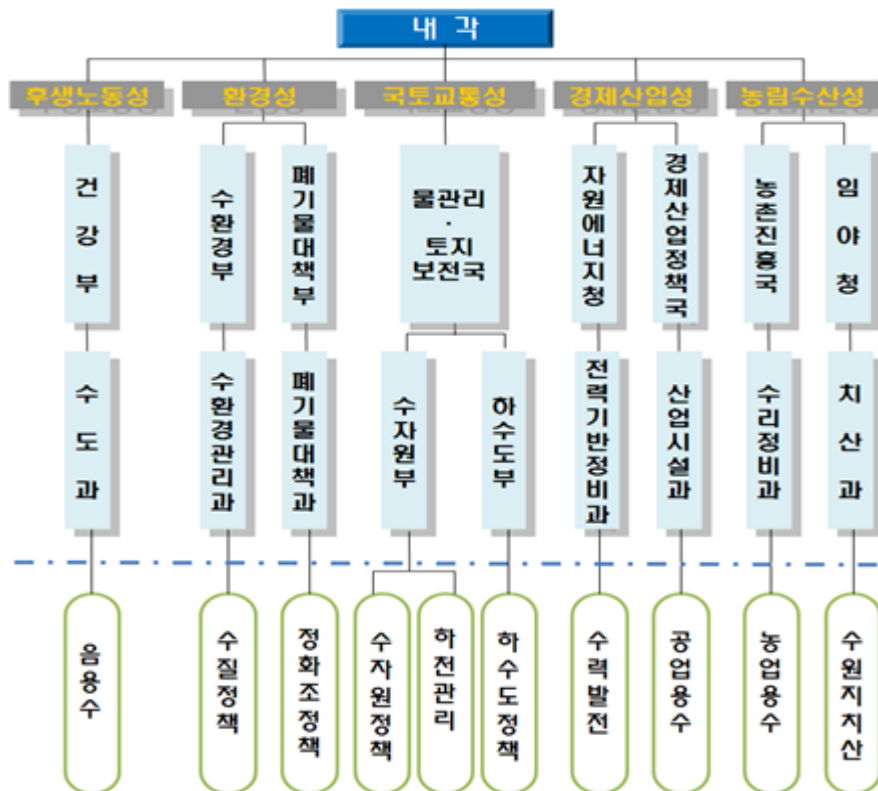
프랑스의 물관리 계획은 SDAGE(유역기본계획)와 SAGE(유역관리계획) 체계로 구분된다. 먼저 유역기본계획은 6개년마다 작성되며, 유역 차원의 수자원 개발 및 보전 목표와 수질목표 등을 설정하고 수력발전 등도 고려하고 있다. 유역기본계획은 유역 내 물관련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 계획 등 기타 계획도 유역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유역관리계획은 유역 내 소유역 단위에서 수립·작성되며, 해당 소유역 내 이해관계자 이익 조정, 수생태 보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7) 프랑스 환경부 홈페이지, <https://www.ecologie.gouv.fr/gestion-leau-en-france>, 검색일: 2021.4.6.

제2절 일 본

1. 일본의 정부 조직 및 소관 업무

일본의 물관리 체계는 기능에 따라 소관부서가 나누어져 있었으나, 2001년 1월 1일에 행정개혁에 따라 기존 1부(府) 22성청(省庁) 체계에서 1부 12성청(11성 1청)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성, 운수성, 국토청, 홋카이도 개발청이 국토교통성으로 통폐합되었다.



자료: 이영근 외(2011), "2011년 일본 국토교통성 조직개편의 의의"

〈그림 2-16〉 일본의 물 관련 정부 조직 및 소관 업무

과거 통폐합 이전에는 건설성 소관의 건설 관련 수자원 정책 및 하천관리 기능을 수행하던 건설성의 업무와 국토청이 가지고 있던 수자원 계획 기능이 국토교통성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성은 수량관리, 하천-수재해 관리, 하수도 등 수질관리, 사방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환경청은 환경성으로 승격되었으며, 수질모니터링, 기준 설정, 산업폐수 규제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농림수산업성은 농업용수, 경제산업성은 수력발전 및 공업

용수, 후생노동성은 상수도 등의 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물관리행정의 커다란 변화는 2011년 6월 28일 각료회의를 통하여 국토교통성의 조직개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됨으로서 나타났다. 이 조직개편을 통하여 국토교통성은 13개 국으로 통합 및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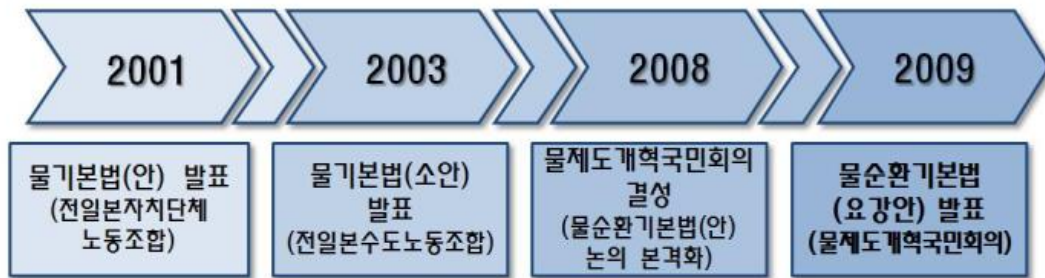
2. 일본 물순환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목적

통합관리 이전 한국과 일본의 물관리는 다부처가 분산되어 분리·관리하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자원부서를 중심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다. 업무 역시 집중관리 되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분산 관리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분산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효율적인 물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통합수법의 논의를 최초로 시작한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2001년 제안한 물기본법안(水基本法案)은 환경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처와 물관리 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한 통합물관리의 달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유역의 수원함양 및 치수, 이수, 배수 등에 대한 통합적인 물관리를 기술함으로서 물순환 및 물환경의 회복, 인류와 생물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일본수도노동조합이 2003년 제시한 물기본법안(水基本法案)은 물순환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물행정과 물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깨끗하고 풍부한 물의 공급, 공공용수역의 수질보전, 지속가능한 공생사회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일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물제도개혁국민회의의 물순환기본법연구회는 2009년 ‘물순환정책의 개요안(水循環定策 大綱案)’과 ‘물순환기본법의 요강안(水循環定策 要綱案)’을 공표하였다. 해당 개요안과 요강안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물순환계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형 사회형성의 기본이념을 명확화하였다.

2014년 4월 2일 제정·공포되고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물순환기본법(水循環基本法, 법률 제16호)은 물제도개혁국민회의의 개요안과 요강안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중요 의제였던 물관리 분산 행정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해외기업에 의한 지하수 남용이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법안의 신속한 가결을 촉진 시킨 결과 기존 법안과 현행 법령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



자료: 이영근(2021), “水循環基本法 제정 이후 일본 물관리행정의 변화와 최근의 동향”

〈그림 2-17〉 일본 물순환기본법 제정 과정

물순환기본법은 ‘건전한 물순환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의 책임과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의 성격이 강하다. 물순환기본법은 전문과 본문 4장 3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순환기본계획 수립, 기본적 시책, 물순환정책 본부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물순환기본법의 시책은 유역 연계 추진뿐만 아니라 물의 저장·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시작으로 물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언급하고 있다.

물순환기본법은 제22조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순환정책본부(水循環政策本部)’를 특징으로 한다. 하천, 상하수도, 농업용수 등의 관리는 국토교통성이나 후생노동성을 비롯하여 7개 부처에 분산되어 관리되어 왔으나(수자원 행정에 관한 조직과 관할 법률), 이를 일원화하여 실시하기 위해 정부 내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물순환정책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분권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던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을 물순환정책본부에서 각 분과회의, 심의회 등을 통해 종합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물순환에 관한 시책에서 중요한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을 진두지휘함으로써 전체적인 물관리통합을 이루어가려는 의도이다.

이와 같이 물순환정책본부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며 내각관방장관 및 물순환 정책 담당 장관을 물순환정책본부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무대신을 물순환정책본부원으로 하여 물순환기본계획(안) 작성 및 실시 추진, 관계 행정기관이 물순환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의 종합조정, 물순환에 관한 시책으로 중요한 것의 기획 및 입안과 종합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표 2-7〉 일본 물순환기본법의 주요내용

조 항	내 용
제1조 (목적)	- 사람의 활동과 환경보전에 재생된 물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의 물순환을 말하는 ‘건전한 물순환’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정책을 포 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3조 (기본이념)	- 물순환의 중요성 및 건전한 물순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방안의 추진, 물의 공공성 및 물의 적절한 이용, 건전한 물순환의 배려, 유역의 종합 적인 관리 및 물순환에 관한 국제적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① 물의 공공성, ② 국민의 책무와 권리, ③ 유역관리, ④ 지속가능한 물관리, ⑤ 국제적 협력
제13조 (물순환기본계획)	- 정부는 물순환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순 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 록 함 - 물순환기본계획은 크게 ‘물순환종합기본계획’과 ‘유역별 물순환계획’으 로 구분됨. 물순환종합기본계획은 기본적 시책의 기초가 됨과 동시에 유역별 물순환계획의 전제가 되며, 종합기본계획은 유역연합이 원활하 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제14조~제21조 (기본적 시책)	- ① 유역에 있어서 물의 저류, 함양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삼림, 하천, 농지, 도시시설 등의 정비, ② 물이용에 대한 규제 및 기타 조치의 강구, ③ 통합적이고 일체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체제의 정비, ④ 건전한 물순 환을 위한 교육 및 계몽의 실시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조치의 강구, ⑤ 연구체제의 정비와 연구자의 양성, ⑥ 건전한 물순환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확보 및 협력 추진 등을 규정함
제22조~제30조 (물순환정책본부)	- 물순환기본계획안의 책정, 관련부처가 실시하는 정책의 종합조정, 물순 환에 관한 정책 중 중요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각에 ‘물순환정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과 물순환정책담당대 신, 본부원은 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하도록 함

자료: e-gov 홈페이지, “水循環基本法”, 검색일: 2021.03.30.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6AC1000000016>),

물순환기본법은 물순환형 사회를 형성(제2조)하기 위해 5가지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제3조).

- ① ‘물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는 동일한 것이고 이는 공공수라는 개념임에 따라 유역별 물순환계획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② ‘국민의 책무’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한 물순환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건전한 물환경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 ③ ‘유역관리’와 관련하여 물순환관리는 하천유역을 원칙적인 단위로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 통합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 ④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형 사회의 형성이 건전한 국토와 행복한 국민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 ⑤ ‘국제적 협력’과 관련하여 물순환정책은 국제적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일본 물순환기본계획

물순환기본법에서는 물순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단위 물관리의 기본이 되는 물순환기본계획의 위상, 계획 기간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순환기본계획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방침을 정한 제1부와 물순환에 관한 시책을 기본법에 따라 나열한 제2부,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제3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2부에서는 기본법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의 기본적 시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물순환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2025년 계획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부 물순환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1. 유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관리
2. 건전한 물순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3. 물의 적정한 이용 및 물의 혜택 확보
4. 물의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물순환 유지
5. 국제적 협조 하에서의 물순환에 관한 대책의 추진

제2부 물순환에 관한 시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1. 유역 연계의 추진 등 - 유역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관리 틀
 - (1) 유역의 범위
 - (2) 유역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관리의 개념

- (3) 유역물순환협의회의 설치
- (4) 유역물순환계획의 내용
- (5) 유역물순환계획의 책정 및 프로세스와 평가
- (6) 유역물순환계획 책정·추진을 위한 조치
- 2. 저류·함양 기능의 유지 및 향상
 - (1) 삼림 (2) 하천 등 (3) 농지 (4) 도시
- 3. 물의 적정하고 유효한 이용 촉진 등
 - (1) 안정된 물 공급·배수의 확보 등
 - (2) 위기적인 갈수에 대한 대응 등
 - (3)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보전과 이용의 추진
 - (4) 물 인프라의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 등
 - (5)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효 이용
 - (6) 물 환경의 보전과 회복
 - (7) 물순환과 생태계
 - (8) 수변공간의 보전, 재생 및 창출
 - (9) 물 문화의 계승, 재생 및 창출
 - (10) 물순환과 지구온난화
- 4. 건전한 물순환에 관한 교육의 추진 등
 - (1) 물순환에 관한 교육의 추진
 - (2) 물순환에 관한 보급 계몽 활동의 추진
- 5.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6. 물순환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필요한 조사의 실시
 - (1) 유역에 대한 물순환 현황에 관한 조사
 - (2) 기후변화로 인한 물순환에의 영향과 적응에 관한 조사
- 7. 과학기술의 진흥
- 8. 국제적인 연계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 (1) 국제 제휴 (2) 국제 협력 (3) 물 비즈니스의 해외 전개
- 9. 물순환 관련 인재의 육성
 - (1) 산학관민이 연계한 인재육성과 국제 인적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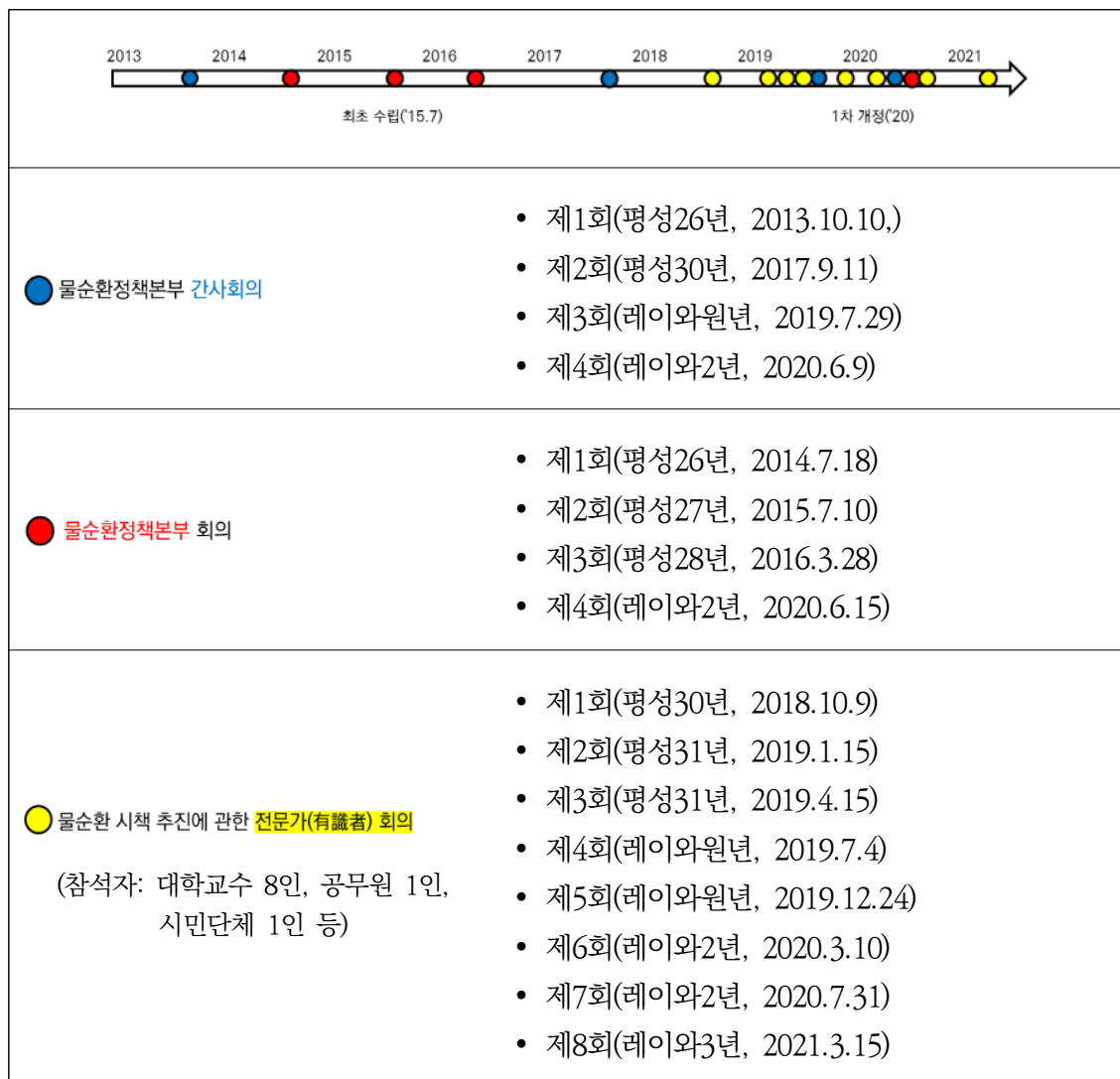
제3부 물순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물순환에 관한 시책의 효과적인 실시
- 2. 관계자의 책무 및 상호 연계·협력
- 3. 물순환에 관해서 강구한 시책의 공표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水循環基本法”, p.6. 검색일: 2021.01.25.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0900000-Kenkoukyoku/0000133383.pdf>),

물순환 시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순환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3년 10월 물순환정책본부 간사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4년 7월 물순환정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약 1년 후인 2015년 7월에 제1차 물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20년 1차 개정을 전후하여 최초 수립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순환 시책 추진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활발히 개최되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정되었다.



자료: 내각관방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 “内閣官房物循環政策本部”, 검색일: 2021.03.24.
(https://www.cas.go.jp/jp/seisaku/mizu_junkan/organization/action.html),

〈그림 2-18〉 일본 물순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 연혁

이와 관련하여, 물제도개혁의원연맹(일본 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순환기본법 팔로 우업 위원회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2015년 물순환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한 ‘물순환기본계획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물관리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민·관 및 정치계의 협력, 전문성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자료: 이영근(2021), “水循環基本法 제정 이후 일본 물관리행정의 변화와 최근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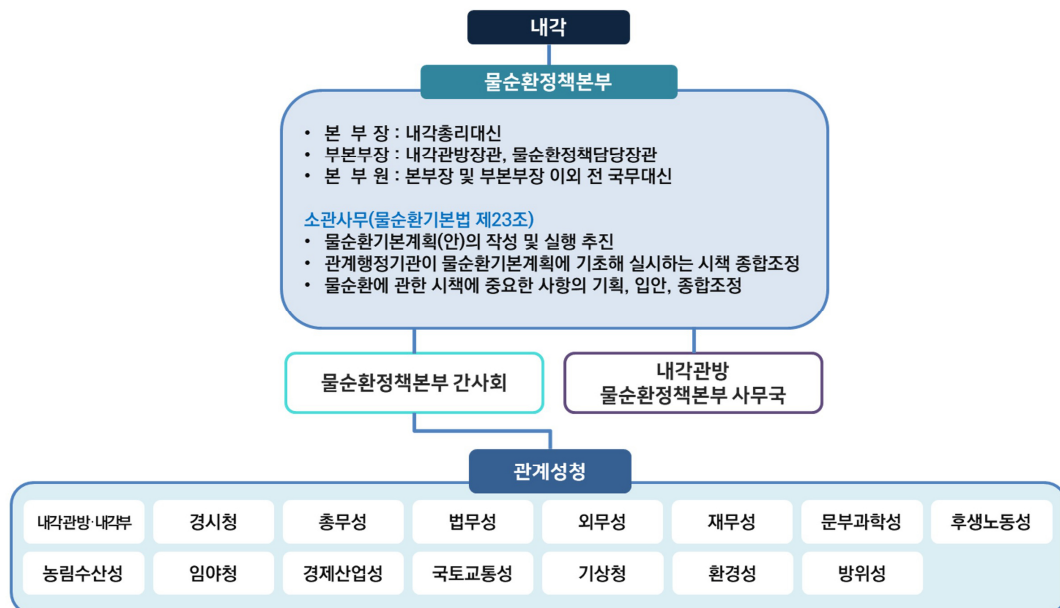
〈그림 2-19〉 일본의 제1차, 제2차 물순환기본계획

8) 좌장, 간사장 각 1명, 간사 7명, 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좌장은 東京대학 沖大幹 교수

4. 물순환 시책의 추진체계

가. 물순환 정책본부

일본은 내각에 물순환정책본부를 두어 물순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물순환기본계획의 작성 및 실행 추진, 관계 행정기관이 물순환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시책의 종합조정, 물순환에 관한 시책에 중요한 사항의 기획, 입안, 종합조정 등의 사무(물순환기본법 제23조)를 수행한다.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 수행하며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과 물순환 정책 담당 장관이, 본부장 및 부분부장 이외 전 국무대신을 본부원으로 한다.



자료: 내각관방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 “内閣官房水循環政策本部”, 검색일: 2021.03.24.
(https://www.cas.go.jp/jp/seisaku/mizu_junkan/organization/index.html)

〈그림 2-21〉 일본 물순환 정책본부 구성도

나. 물순환정책본부 간사회 및 사무국 구성

물순환정책본부 간사회는 물순환기본계획(안)의 작성, 동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실시 추진과 물순환 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책 중 중요한 것의 기획과 입안 및 종합조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간사회는 의장·부의장 각 1인, 내각과 14성청의 실무 책임자인 장관 또는 국장급 각 1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사회의 사무는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및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아 내각 관방 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내각관방 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은 물순환정책본부와 관련된 사무(중요사항의 조사, 기획 및 입안)를 위해 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칙(2014.5.19. 총리대신 결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은 물순환정책본부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물순환백서, 유역관리 안내서, 유역물순환계획 수립 안내서, 지하수 관리 절차서 등 다양한 정책간행물을 발행 및 관리하고 있다.

〈표 2-8〉 일본 물순환 정책본부 간사회 구성

의장	부의장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관방부장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관방 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부 정책통관관(방재담당) • 경찰청 경비국장 • 총무성 지역력창조심의관 • 법무부 민사국장 • 외무성 지구규모과제 심의관 • 재무성대신관방총괄심의관 • 문부과학성 관방장 • 후생노동성 건강국장 •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장 • 임야청 장관 • 경제산업성 지역경제산업심의관 • 국토교통성 물관리·국토보전국장 • 기상청 장관 • 환경성 물·대기환경국장 • 방위성 운용기획국장

자료: 내각관방물순환정책본부 회의 공개자료, 内閣官房物循環政策本部, 검색일: 2021.03.24.
(https://www.kantei.go.jp/jp/singi/mizu_junkan/dai1/siryoushi.pdf),



자료: 이영근(2021), “水循環基本法 제정 이후 일본 물관리행정의 변화와 최근의 동향”

〈그림 2-23〉 일본 물순환 정책본부 사무국 발행 정책 발간물

5. 일본 사례 주요 내용 및 특징

통합물관리에 관한 일본 사례는 인과관계적 측면으로 볼 때 유역의 상류부에서 자행된 해외 기업의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지하수 남용이 원인이 되어 건전한 물순환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결과로 물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성요소적 측면에서는 분산된 물관리 권한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를 비전으로 하여, 시민사회(2001년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2003년 전일본수도노동조합)가 물관리 개혁의 주체가 되어 정치권에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률(물기본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물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과관계적 측면에서는 분절된 물관리로 인해 외국기업의 산림훼손과 지하수 남용이라는 물관리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물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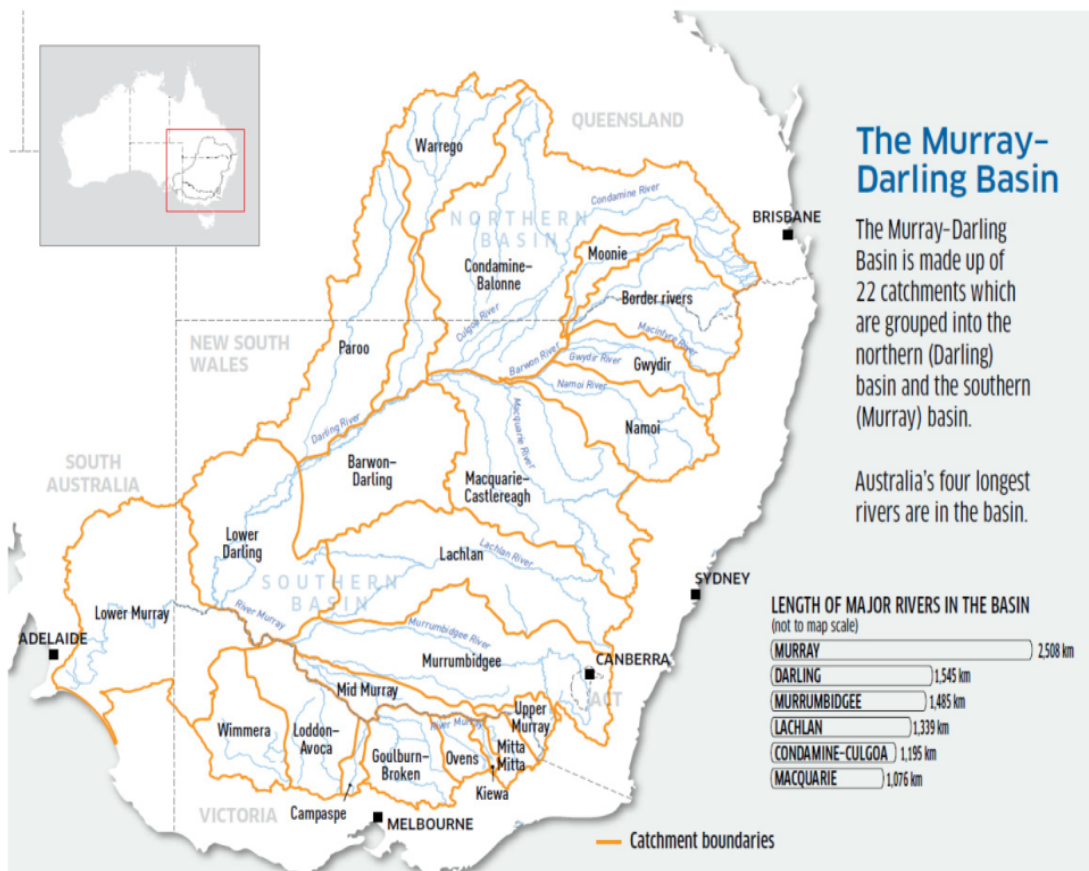
명확한 문제점 인식, 상향식(bottom-up) 문제 제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 공유, 충분한 협의 시간, 논의된 결과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서의 물순환기본법이 가지는 사회적, 행정적 권위 등은 현재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물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순환시책 추진과 물순환기본계획 수립 측면을 살펴보면 물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물순환정책본부에 전 국무대신(장관급)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산하에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회(구성원: 각 부처 국장급)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둬으로써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물 관련 관계성청과의 실무차원에서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순환시책의 추진에 관한 기획,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간사회)와 물순환정책본부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사무국)를 분리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순환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순환 시책 추진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물순환정책본부와 간사회 구성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물순환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측면에서 일본의 물순환본부는 역할 분담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순환시책 추진에 있어 정책결정자들의 권한 그리고 정책 시행의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제3절 호 주

1. 호주 물관리정책 변화 연혁

호주는 강우량이 적고 건조하여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용수 확보, 수자원 개발, 하천환경보호 등의 물과 관련된 정책이 매우 발달한 국가이다. 호주는 17개 대유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한 사막이 대부분인 서북부지역과 인구밀도가 높고 물 사용량이 많은 남동부지역, 해안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호주의 남동부에 위치한 머레이-달링 유역(Murray-Darling Basin)은 물 공유(water sharing)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인 동시에 유역관리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자료: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그림 2-25〉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 개황

머레이-달링 유역은 호주 전 국토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 주(New South Wales, Victoria, South Australia, Queensland,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역은 호주 농업 생산물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자원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역이다. 머레이강, 달링강 등 주요 대하천을 포함하고 북부와 남부로 구분되어 총 22개의 소유역(catch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Murray-Darling Basin Plan(MDBP)은 1816년 머레이강 유역을 통한 내륙하천의 항로 개선을 위한 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5~1902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수의 소유권 논쟁이 시작되었고, 1902년에는 연방정부 수립 이후 주 간의 물관리 협약(머레이강 물 관리 협약(River Murray Water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서 상류의 New South Wales 주와 Victoria 주간의 수자원 배분, 하류의 South Australia 주에 대한 최소한의 유량 보장, 하천과 물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댐과 보의 건설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합의하였고 하천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연방정부와 3개 주정부가 균등하게 분담하였다.⁹⁾

이후 약 10년여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1914년 머레이강의 공동 운영과 하천수 사용 기준, 하천 시설물(보, 댐, 저수지) 건설 등의 기본원칙 합의문을 도출하고, 머레이강 운영과 관리, 합의문의 이행을 위한 최초의 유역관리위원회 성격의 머레이강위원회(River Murray Commission)가 1917년에 설립되었다.¹⁰⁾

1922년 보 건설을 시작으로 1936년 흠(Hume) 댐 완공 등 하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자원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1992년에는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Murray-Darling Basin Commission)로 변경하였다.¹¹⁾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1992년 체결된 머레이-달링 유역협약서(Murray-Darling Basin Agreement; 부록 I, Water Act, 2007)에 따라 유역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유역 수자원장관협의회와 유역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93~1994년에는 “물 사용량 조절 및 규제 프로그램”을 통해 머레이-달링 유역의 물 사용량 증가를 규제하였다.¹²⁾

9)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10) 이종욱, 이승오(2018), “능동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선진사례 조사: 호주의 머레이-달링 유역”, 한국수자원학회지, 51(7)

11) MDBA, “THE MURRAY-DARLING BASIN as a glance”, 검색일: 2018.8.17.

12)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유역위원회는 주별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산정하여 배분하며, 하천 내 수리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구조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지시하였다. 주 간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개발이나 하천 운영 전반에 걸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주선·주도하고, 기술도 지원하였다. 또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주정부의 물관리 조직체계를 수립하였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수자원 개발과 환경관리를 두 부서로 나누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 서로 견제하는 물관리 조직체계를 통해 정책을 개발·집행 및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천관리와 물배분은 집행기관(우리나라의 공기업)에서 담당하고,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수자원 정책의 집행 결과를 수집·평가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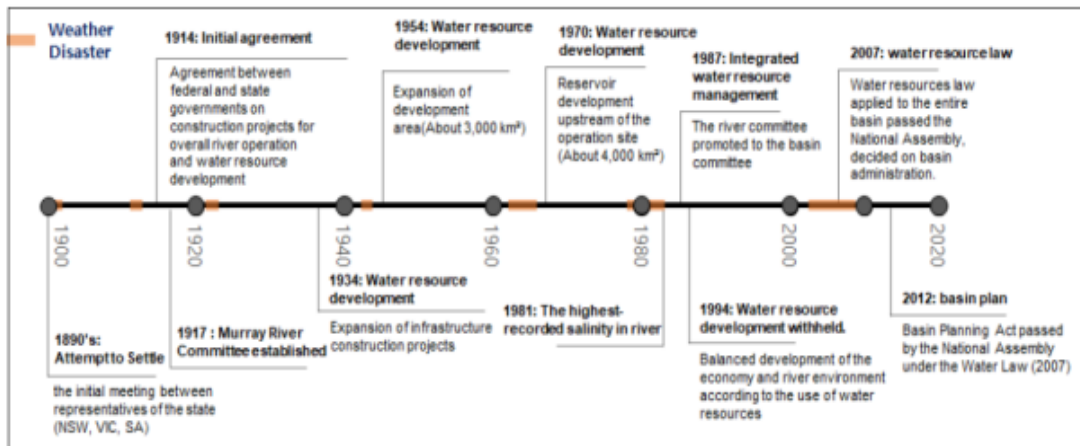
한편,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호주 역사상 가장 긴 가뭄이 시작되었으며, 머레이-달링 유역은 보와 저수지 건설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과도한 농업용수의 사용, 하천의 염도 증가 등 하천 환경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머레이강의 건강성 회복과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The Living Murray: TLM’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호주의 첫 유역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머레이-달링 유역의 하천 기능은 거의 상실하였으며, 어느 하나의 주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연방정부 중심의 유역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7년 호주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 Water Act 2007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를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MDBA: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으로 개편·설립하였으며, 유역 수자원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집행 권한을 포함한 기능 및 권한을 부여하였다.

머레이-달링 유역은 자연적(가뭄, 홍수, 기후변화, 물 부족), 환경적(수자원 개발로 인한 자연적 하천 기능 상실), 사회적(연방정부 중심의 하천관리 필요성 대두) 문제점이 확대됨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물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MDBA)을 중심으로 유역의 통합유역관리를 계획·이행하고 있다.

13)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14) MDBA(2011), “The Living Murray Story, One of Australia’s Largest River Restoration Projects”



자료: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그림 2-26〉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 물관리 정책 연혁

2. Murray-Darling Basin Plan(MDBP)의 관련 법 및 체계

2007년 호주 연방정부에서 유역의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Water Act 2007을 제정함에 따라 유역 및 물관리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의 물관리 정책체계는 Water Act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를 통해 연방정부 중심의 하천관리 및 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전략계획 개발 및 수자원 계획의 실행 감시와 계획의 승인을 하고, 주정부는 계획의 개발 및 실행 등의 역할분담을 하였다.¹⁵⁾

중앙부처인 농업물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¹⁶⁾의 소속기관인 기상청(BOM: Bureau of Metrology)에서는 유역 전반의 수문자료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속부서인 연방환경용수국(CEWO: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Office)에서는 국가수자원의 계획수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15)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16) 호주 정부조직에 대한 대규모 개편으로 2020.2.1.부터 기존 18개 정부부처를 14개로 감축함.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환경에너지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Energy)의 환경기능과 통합하여 농업물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로 개편됨

〈표 2-9〉 한국과 호주의 물관리 정책의 비교

구 분	한 국	호 주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재해 발생 빈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특성상 가뭄과 홍수가 반복됨 • 2000년 대가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기본법,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Act, 2007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 여부 • 유역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전략계획 개발 및 수자원 계획 실행 모니터링, 계획 승인 • 주정부: 계획 개발 및 실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수립 •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수자원장관위원회 및 유역위원회 설립 • 물사용량 증가 규제 • 주별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 산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물관리 시스템의 기반 • 중앙-유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 수질 안전 확보 • 기상/댐 저수량 예측으로 저수량 확보 • 다목적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홍수피해 최소화 • 음용수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별 관리계획 수립 • 연방정부 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활용수 관리 • 유역별 수자원계획 수립을 통한 용수사용 제한 • 수리권과 토지권의 분리를 통해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수리권의 경제적 투자 가능 • 기본 생활용수 개념 도입으로 생활용수 공급 보장

자료: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유역관리청은 유역계획을 작성하여 연방정부의 장관에게 보고하며, 이는 연방정부 중심의 유역계획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관의 지시 및 유역기관의 요청이 없을 경우 적어도 10년마다 유역계획을 수정·검토해야 한다. Water Act의 주요 목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하는 국가 통합물관리의 실행이며, 생태계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을 포함한다.

Part 1 - Preliminary**3 object**

- 연방정부는 유역 주정부와 함께 국가 수자원 관리
-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이득이 되는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이용 수량 결정
- 머레이-달링 유역의 생태적 가치, 생태계 서비스 보전 및 복원 제공
- 유역 수자원 이용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 모든 유역의 수자원 이용을 위한 확보
- 유역 수자원 관리가 머레이-달링 유역의 광범위한 천연자원 관리를 고려
-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 정보의 수집, 대조, 분석 결과 공유
- 호주의 수자원과 물의 이용 및 관리

자료: Australia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2007)

또한 법에 근거하여 연방수자원장관(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Minister)에게 연방환경수자원 관리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하원의원 의회에 상정되고 각 유역 주정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환경급수계획의 목표에 대한 성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Water Act section 114).

Part 6 -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er**Division 3 - Reporting requirements****114 Annual report****Contents of annual report**

(2) The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er must include in the report particulars of the following:

- (a) achievements against the objectives of the environmental watering plan:
 - (aa) for each disposal of water or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ings by the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er during the year:
 - (i) sufficient information to identify the water or water holdings disposed of; and
 - (ii) the amount of the proceeds of the disposal;
 - (ab) the purposes for which the proceeds of disposals of water or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ings have been used during the year;
- (b)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al Water Holdings Special Account;
- (c) all directions that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r the Minister, gave to the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er during the year.

자료: Australia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2007)

3. Murray-Darling Basin Plan(MDBP)의 배경 및 목표

유역관리청은 Water Act에 따라 유역별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사용량(SDLs)을 제시한 “유역계획 초안(Guide to the Basin Plan)”을 발간하였고 이후, 유역관리청에서는 각 주정부와의 협업 및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2012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Murray-Darling Basin Plan’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 유역계획을 통해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에 따른 물 배분 단계 정의, 유입량 예측 방법 등의 계획을 세웠고 후에는 머레이 강 운영을 위한 목표 및 성과를 통해 하천 운영에 관한 지시사항 등을 정립하였다.¹⁷⁾

유역관리청은 유역공동체(Basin Communities)의 관점에서 물에 접근하고, 환경에 적절하고 균형 있는 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역계획은 도시, 산업 및 농업에서 매년 이용가능한 물의 양을 결정하는데 이를 지속가능한 수자원 사용량(Sustainable Diversion Limits, SDLs)¹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역장관(Basin Minister) 및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계획에서 SDL 조정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한 SDLs 검토와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 SDL 조정 메커니즘의 경우 유역계획의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 Line, TBL)¹⁹⁾을 개선하고, 최종적인 물 회수(Water Recovery) 수치를 설정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역계획에 통합되었다²⁰⁾.

유역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1) 통합물관리를 통한 국제협력의 효과, (2) 지속가능한 장기간 적응형 관리체계 수립, (3) 국가 이익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최적화, (4) 유역 수자원의 수질관리 개선이며, 유역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바다와 근접하고 있어 염도 중심의 수질을 평가하며, 생태유량을 넘어선 하천의 물 사용량(농업용수)을 고려한 환경용수 획득 개념, 상·하류 유역에 해당하는 주정부 간의 협력, 수질과 수도 공급, 경제적 자원 교류, 이행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17)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18) 도시, 산업, 농업을 위해 하천으로부터 취수할 수 있는 양에 대한 Limits를 말하며, 머레이-달링 유역의 29개 하천 집하구역(river catchments)과 80개 지하수 지역은 각각 Limits를 가지고 있다

(<https://www.mdba.gov.au/basin-plan-roll-out/sustainable-diversion-limits>), 검색일: 2021.04.21.

19) TBL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triple bottom line)를 모두 고려한 최초유역통합관리로 이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는 농업용수 공급 효율을 높이고, 하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수자원을 환경용수로 전환하는 것, 둘째는 확보된 환경용수를 공급하고 보다 나은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임. 확보된 하천용수의 규모는 하천환경을 개선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여 홍수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함

20)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유역계획의 세부 내용〉

- (1) good quality water is delivered to people, businesses and the environment
- (2) environmental water is used effectively
- (3) state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Plan
- (4) communities always have access to drinking water
- (5) water trade is efficient and fair
- (6) implementation of the Plan is monitored and evaluated

2012년 유역계획 수립 이후, 매 2년 간격으로 유역계획의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매 2년 주기로 머레이-달링 유역계획 보고서와 유역기관의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 역할 등을 포함한 annual report로 유역의 현황 및 협력체계 등을 알 수 있다.

〈표 2-10〉 Murray-Darling Basin Plan의 경과

연도	보고서명	비고
2012	Murray-Darling Basin Plan	Murray-Darling Basin Plan(MDBP)
2012-13	Murray-Darling Basin Plan implementation Agreement Statements of Assurance	연차 보고서
2013-14		
2014-15		
2015-16		
2016-17	Basin Plan implementation report 2016-17	이행평가 및 수정계획
2017	Murray-Darling Basin Plan evaluation report	시범평가
2017-18	Murray-Darling Basin Plan implementation Agreement Statements of Assurance	연차 보고서
2018-19		
2020	Murray-Darling Basin Plan evaluation report	첫 번째 전체 평가

자료: MDBA, "Basin Plan Annual Report", 검색일: 2021.3.30.

2014년 Water Act 개정으로 2020년부터 5년 단위의 정기 이행평가를 통하여 이행지표 및 다른 유역계획의 검토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이 정기 이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시범평가 보고서를 제안하여 2017년에 'Murray-Darling Basin Plan evaluation report'로 시범평가 보고서(a pilot)를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의 기준은 2012년 유역계획의 환경·사회·경제·문화적 효과분석이다.

시범평가 보고서의 목적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현재까지의 계획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등 진행 상황을 부문별 이행지표로 보고하고, 향후 구현·이행 결과를

위한 선택 과제를 식별하는 것이다. 내용적 범위는 물 계획과 관리, 환경용수의 사용, 건강성 회복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평가대상은 모든 유역 정부,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 연방수 자원관리국의 조치사항까지 포함한다. 이행평가는 유역계획의 시행 결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답으로 구성하고 있다. 2017년 시범평가 후 첫 번째 전체 평가가 2020년에 착수되었으며, 다음 평가는 2026년 유역계획 검토를 위해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4. Murray-Darling Basin Plan(MDBP)의 구성요소

MDBP의 주요 특징은 도시, 산업 및 농업에의 이용을 위해 유역에서부터 매년 취수할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한 SDLs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현재 지표수에 대한 유역 전체 SDL은 연간 10,873GL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연간 13,623GL 수준에서 2,750GL 감소된 수준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수치를 기준으로 SDLs이 시행되며 공인된 State WRPs(Water Resource Plans)를 통해 실행되었다. 이렇게 유역계획이 설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²¹⁾

- State WRPs 하에 물 계획에 대한 접근을 일관성 있게 함
- 환경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급수계획(watering plan)을 제공하기 위함
- 수질과 염도체계를 유역관리에 통합하기 위함
- 가뭄기간에 인간의 물에 대한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기 위함
- 물 거래(water trading)를 위한 규칙을 포함하기 위함
- 유역계획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을 포함하기 위함

유역계획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급수계획(watering plan)은 습지 및 유역 내 환경자산을 유지·복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유역관리 계획의 주요 핵심 요소로 i) 물 기반의 생태계 시스템을 위한 환경목표, ii) 환경목표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 iii) 환경용수를 위한 관리체계, iv) 물을 필요로 하는 핵심 환경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v) 환경용수의 우선 사항을 정하는 원칙과 방법론, vi) 환경급수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 등을 포함한다.²²⁾

21)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22)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수질과 염도 관리계획(Water quality and salinity management plan)은 유역계획의 또 다른 주요한 핵심 요소로써, 유역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염도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머레이-달링 유역의 낮은 수질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유역 수자원을 위해 수질·염도 목표 수치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pH, 온도, 용존산소, 탁도, 침적물, 가용성 유기탄소, 중금속, 다양한 유기물질 및 남조류가 있다. 이 계획은 호주 수질관리전략(National Water Quality Management Strategy)에 따라 구성되어, 5년 주기로 검토해야 한다.²³⁾

물 거래(water trading)와 관련하여 유역계획은 물 거래제도 원칙을 포함하여 유역 내 수리권 거래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수리권 거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물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물 거래 제도의 원칙은 유역 내 다양한 수리권 거래 양상을 다루며, i) 수리권 거래 제도의 장애물 제거, ii) 수리권 거래 제도의 용어와 과정, iii) 수리권 거래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식, iv) 수리권 거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²⁴⁾

유역계획의 의무 조항 중 하나는 유역계획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과 체계를 개발하여 유역계획 내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은 주와 지역의 수자원계획에 대한 이행 및 승인, SDL 승인, 환경급수 및 수질, 염도 관리계획 준수 등을 포함한 유역관리 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하게 된다.²⁵⁾

이와 관련하여 연방환경수자원국(CEWO)은 유역의 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인 ‘MERI Framework’을 마련하였다. 이는 호주의 환경용수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하고 환경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3)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24)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25)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MERI Framework: three levels and principles〉

· The three levels of planning

- (1) annual water use options planning
- (2) five year portfolio management planning
- (3) the ten year Basin Plan

· The three principles

- (1)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orting activities for the use of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will complement, not duplicate or replace, existing and planned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orting activities.
- (2)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orting programs will be based on shared responsibility with partners in areas of common interest. “Partners” means any group or individual who has a participatory interest i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This includes other environmental water managers, local groups, landholders, catchment management authorities, state agencies, environmental water advisory groups, river operators and scientific organisations.
- (3) Consistent monitoring, evaluation, reporting and improvement systems will be adopted in the management of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and progress towards consistent and comparable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orting across the Murray-Darling Basin will be encouraged and supported.

자료: Australia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Office(2013), MERI Framework

i) 모니터링(monitring)은 계획 및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현황 진단을 위한 지표를 측정하고, ii) 평가(evaluation)는 진전 여부와 설정한 지표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표 대비 모니터링 결과 평가 과정이다. iii) 보고(reporting)는 계획 및 프로그램의 결과를 전달하는 계획서이다. iv) 개선(improvement) 과정은 계획에 대한 피드백 과정으로,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계획 개선 및 결과 향상에 활용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4단계의 체계는 환경용수계획(environmental water plan), 수자원계획(water resources plan), 머레이-달링 유역계획(MDBP), 유역계획의 효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고 있다. 10년 단위의 유역계획과 5년 단위의 관리계획, 연간 물 사용의 계획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트너 그룹은 환경관리자, 지역단체, 토지소유자, 환경관리 당국, 주정부기관, 환경 수자원 자문단, 하천운영자, 과학단체 등이 포함된다.

한편, Water Act 2007은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이 연방(Commonwealth)과 유역 주(Basin state)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의 결

과는 향후 유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피드백을 준다. 호주 물관리위원회(The National Water Commission)는 유역계획과 수자원계획의 이행 효율성에 대한 5년 주기의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회계 감사 결과는 연방장관(Commonwealth Minister) 및 유역 주정부장관(Minister in Basin state)에게 전달해야 한다.²⁶⁾

5. 유역계획 이행에 대한 현황²⁷⁾

가. 물 회수 현황 및 예상 감축

호주정부는 2014년 6월에 발표된 MDB에 대한 물 회수 전략에 따라 유역계획의 SDLs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물을 회수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 물 구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가 기업과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주 정부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2,038.5GL에 해당하는 물 회수량 중 환경적인 이용을 위해 보유된 물의 양은 1,825.1GL이며, 그 중에서 CEWH(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er)가 1,663.2GL, 주정부가 161.9GL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유역계획의 물 회수 목표인 2,750GL은 SDL 조정 메커니즘의 운영과 NBR(Northern Basin Review)의 결과를 통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DL 조정 메커니즘에 따르면 상당히 적은 환경용수로 동등한 환경결과(environmental outcomes)를 달성하여, 2,750GL의 물 회수 목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BR 결과, MDBA는 관련 유역 정부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관련 toolkit measures에 따라 북부유역의 물 회수 목표 감소를 제안하였다. MDBA는 현재 북부유역(Northern Basin)의 물 회수 목표인 390GL를 320GL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지역사회와 협의 중이다(즉, 유역 전체 물 회수 목표를 2,750GL에서 2,680GL로 감소).

장관협의회와 MDBA는 북부유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이 남부유역의 Triple Bottom Line 결과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6)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27)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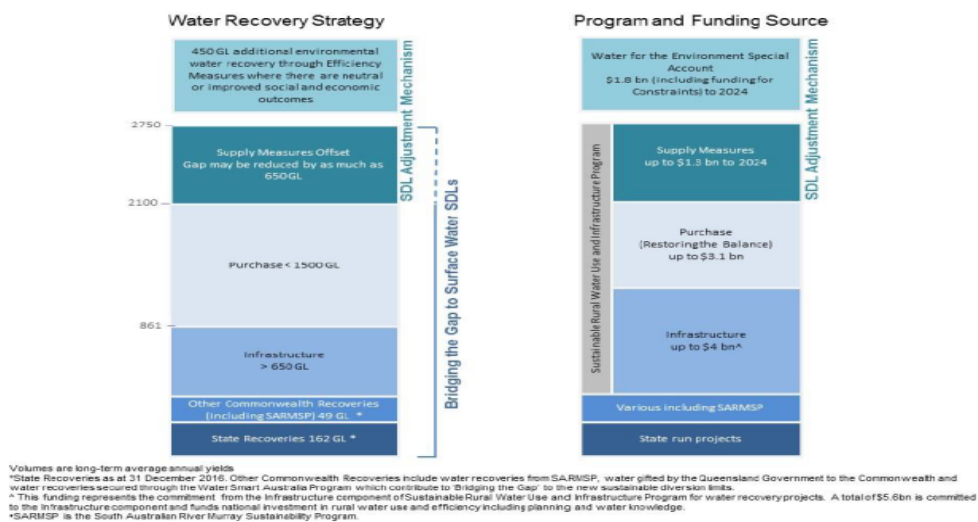
나. 관개 인프라(Irrigation infrastructure)에 대한 1,500GL 상한(cap) 법안

2015년 4월, 호주정부는 물 구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개 의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및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표수 구매에 대한 1,500GL 상한을 제정하였다. 이 상한은 주 정부 또는 물 회수 전략 발표 이후 인프라 합리화 또는 재구성과 통합된 정부로부터의 구매를 제외한 모든 구매에 적용된다. 호주 정부는 총 1,500GL 상한선에 해당하는 1,171.1GL LTAAAY를 구입하였다.

다. 정부의 투자

물 회수 및 SDLs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활동들과 유역계획을 이행하는데 130억 달러 이상의 호주정부 기금이 제공되고 있다. 2017년 초 기준, 유역에 대한 130억 달러 투자금 중 70억 달러 이상이 사용되었다.

주요 호주 정부 유역 프로그램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농촌 용수사용 및 인프라 프로그램, 환경특별계정(WESA, Water for the Environment Special Account)을 활용한 환경용수 공급 문제해결 및 환경적 이용을 위한 물 회수(450GL)에 17억 7,500만 달러, 머레이-달링 유역 지역 경제 다각화 프로그램을 위한 1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주 정부 기금은 Living Murray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 제공되어왔다.



자료: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그림 2-27〉 SDL 조정 메커니즘 구현의 주요 단계

라. 관개 인프라 투자

호주정부 기금의 대부분은 MDB 농장 안팎(on-farm and off-farm)의 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2008년 MDB 개혁(Murray-Darling Basin Reform)에 대한 정부 간 협약의 일부로서 다양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유역 주(Basin State)에 제공되는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On-Farm Irrigation Efficiency Program, The New South Wales Private Irrigation Infrastructure Operators Program 등의 물 회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1만명이 넘는 개인 관개자(individual irrigators)들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기후변화 대응 호주 물관리 사례²⁸⁾

가. 생태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용수를 확보

환경용수는 직접 구입하거나 하천운영을 개선하여 발생된 잉여 수자원을 환경용수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하는데 직접 구입하는 방법은 기득 수리권 사용자 중에서 더 이상 수리권을 농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부가 매입하여 환경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환경용수로 즉시 전환할 수 있으나 지역에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편, 잉여 수자원을 환경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은 기존의 하천운영 및 취수방법을 현대화·체계화하여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고 남는 수자원을 환경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토목·건설 사업이 필요하고, 환경용수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반대는 적은 편이다.

이 외에도 보다 적은 환경용수로 필요한 생태·환경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와 같은 하천구조물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환경에 필요한 수문학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환경용수도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만수위로 운영되는 보는 여울이나 소에 서식하는 생물이나 식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의 수위를 계절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위 변화는 만수위에 비해 수 표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증발산으로 인한 수자원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환경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28) 이종욱, 박태선, 이승연, 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나. “The Living Murray”를 통한 하천의 생태·환경 복원

이 사업은 “물이 살아야 인류도 산다”라는 모토하에 2004년 유역 수자원장관협의회에서 합의되었다. 연방정부와 4개 주정부(New South Wales, Victoria, South Australi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에서 집행·관리한 호주에서 가장 큰 하천복원사업으로 기존의 물공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확보된 수자원을 환경용수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농업용수 사용자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경용수를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환경용수를 직접 확보하고, 환경용수관리자에게 물 사용량과 사용방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다. 대가물 이후의 법령 변화

첫째, 기본 생활용수량(critical human water needs)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급을 보장하였다. 2006~2007년 사이에 유입량이 기존 연 최저유입량의 약 절반 정도로 급감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 생활용수량”이라는 개념이 Water Act에 추가되었고 다른 사용자에게 물을 배분하기 이전에 기본 생활용수량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저수지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하천수 손실량 보전을 통한 환경에의 악영향이 최소화되었다.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 감소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뭄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증하며, 일부 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하천수 손실량 보전을 의무화하였다. 대가물 기간에는 하천수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 습지·여울·소와 같은 소규모 자연저류시설을 하천에서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사용 가능량을 증대시키는 비상계획이 실행되었다.

셋째, 미사용 물량의 이월(carryover) 및 매매를 통한 물 사용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개인 물사용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수자원량 중 미사용량을 댐에 이월시켰다가 다음 해에 사용하거나 물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가뭄 동안 수리권 중 일정 부분을 스스로 관리·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2007년 Victoria 주 일부 지역에서 가뭄에 대한 응급 대책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유역 하류에 위치하여 이용할 수 없었던 South Australia 주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된 물은 생활용수 공급 등 중요도에 따라 우선 배분된다.

라. 해수담수화와 기후변화 연구추진 중인 Victoria 주

Victoria 주에서는 학계(University of Melbourne, 멜버른대), 관계기관(Bureau of Meteorology, 호주 기상청), 연구소(CSIRO, 호주의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162개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기상청은 기후예측능력 향상, CSIRO는 강우량 및 유출량 예측기법을 연구하고 주정부는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관측결과를 중장기 물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수자원 개발 및 평가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을 표준화한 “물공급 영향평가지침서(VicDELWP, 2016)”를 제정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지구순환모형(Global Circulation Model, GCM)에도 반영되지 않은 최신 기후변화 동향을 고려한 4개 시나리오(low, medium, high, step up climate change)별로 물 공급 취약점과 위험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해수를 담수화하여 호주 제2의 도시인 멜버른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소요 사업비가 불확실하고, 지역과의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지지를 받지 못하여 해수담수화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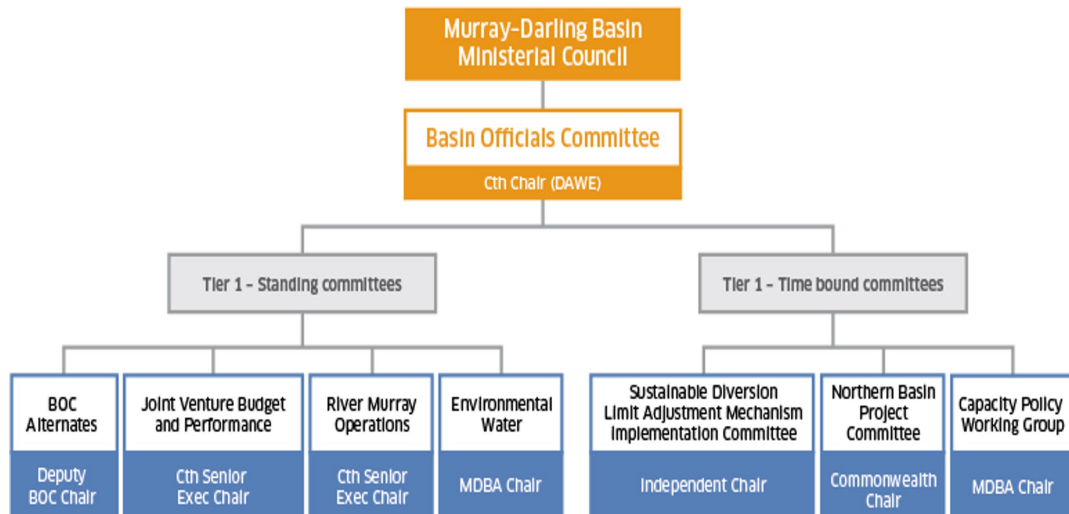
7. Murray-Darling 유역의 거버넌스

2019년 12월, 기존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 ‘독립적인 검토(Independent Review)’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물 장관 의회는 공동 정부가 제안한 수정된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선안을 승인하였다. 수정된 거버넌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유역 국장 위원회(Basin Officials Committee)’와 ‘유역계획이행위원회(Basin Plan Implementation Committee)’를 해체하고 유역개선포럼(Basin Improvement Forum)을 신설하였으며, 2012년 유역계획 수립 후 정책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역 국장 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였다. 개편된 유역 국장 위원회는 물 장관 의회를 유지하면서 총 7개 분과위원회 신설로 세분화 및 강화하였다.

현재 머레이-달링 유역의 거버넌스는 i) 물을 담당하는 호주 정부 장관(Commonwealth Water Minister), ii)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iii) 물 장관 의회(Ministerial Council), iv) 유역 국장 위원회(Basin Officials Committee), v) 유역주민위원회(Basin Community Committee)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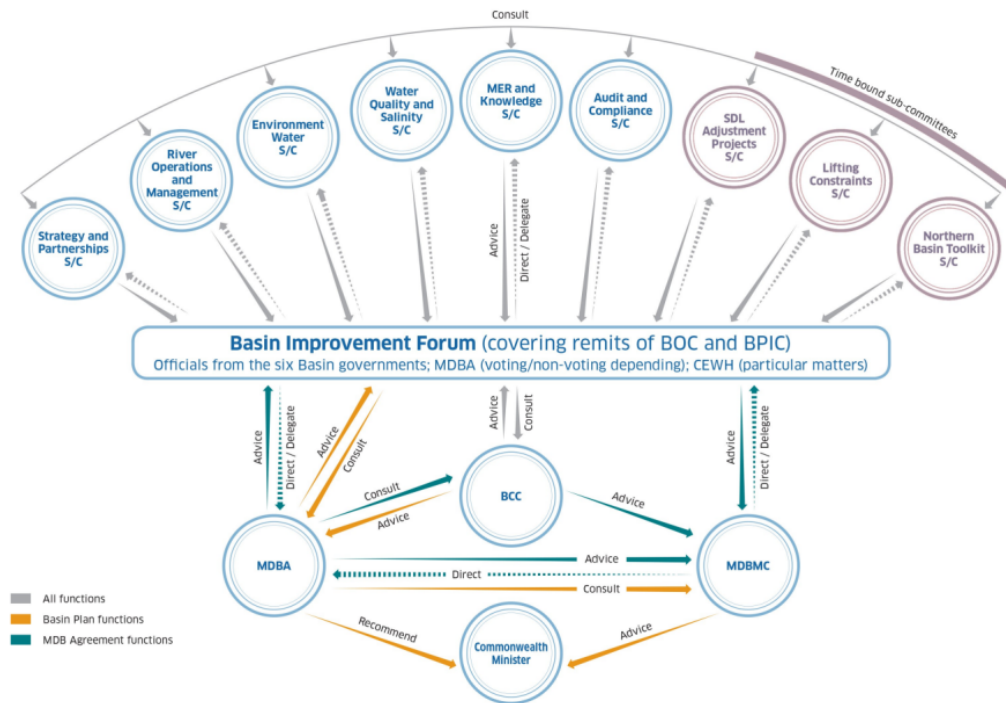
i) 연방수자원장관은 유역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자이며, ii)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은 유

역계획 수립·이행·평가 및 검토의 책임을 갖고 주정부를 대표하여 머레이강 시스템을 관리한다. iii) 물 장관 의회는 주(state) 물 공유에 관한 정책 및 의사결정 역할과 머레이-달링 유역 협정 공동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iv) 유역 국장 위원회는 물 장관 의회 대표단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유역계획에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 유역주민위원회는 유역지역사회 문제에 관하여 유역관리청과 물 장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사회·경제·환경과학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ciences), 독자적 강 운영 검토 그룹(Independent River Operations Review Group)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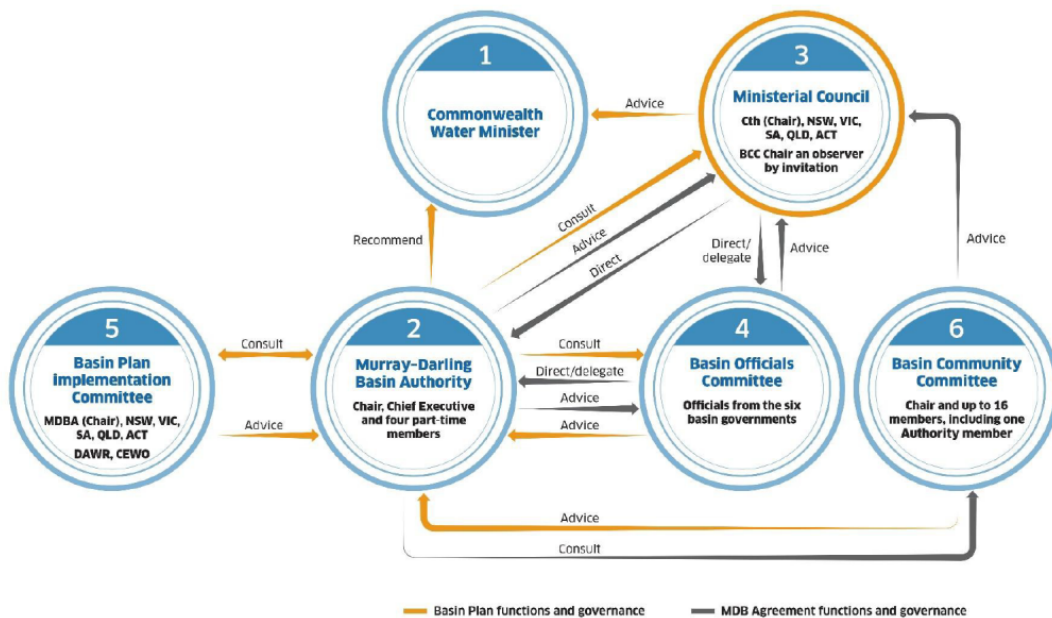
자료: MDBA, “Committees decision making”, 검색일: 2021.7.1.

〈그림 2-28〉 개편된 유역 국장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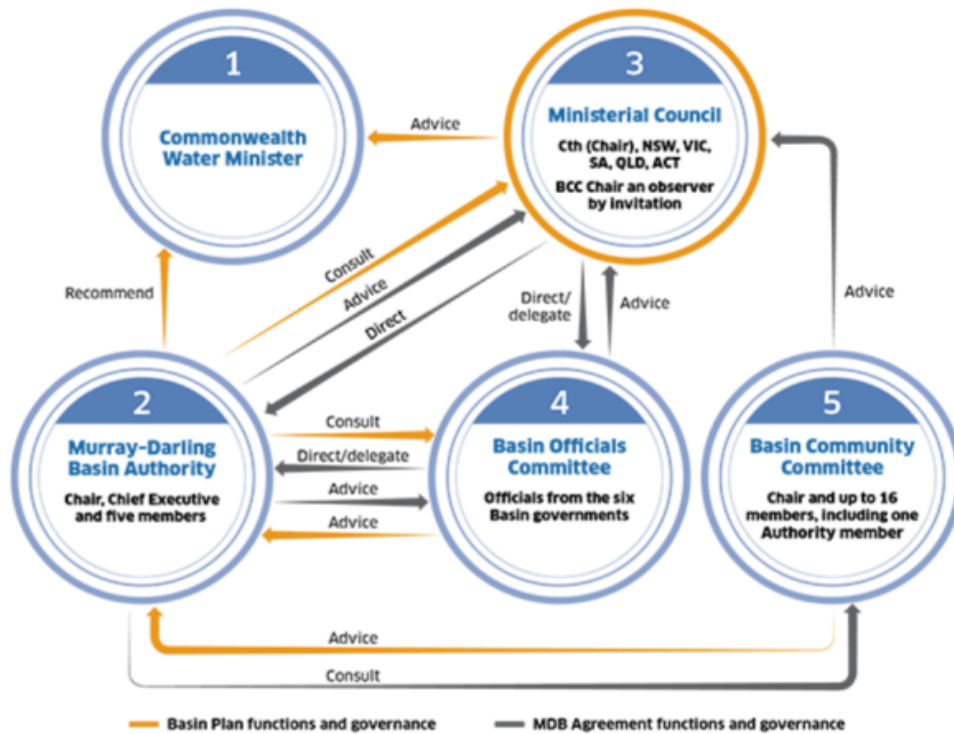
자료: Claydon,G.(2019), "Review of the Murray-Darling Basin Joint Governance Arrangements"

〈그림 2-30〉 유역 개선 포럼의 구성과 기능



자료: Claydon,G.(2019), "Review of the Murray-Darling Basin Joint Governance Arrangements"

〈그림 2-31〉 머레이-달링 유역의 거버넌스 (2019년 기준)



자료: MDBA(2021.11.16.), “Committees decision making”, 검색일: 2021.11.25.

〈그림 2-32〉 머레이-달링 유역의 거버넌스 (현재)

유역계획 이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그 효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없으나, Murray-Darling Basin Plan(MDBP) 이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다. 유역계획 내의 추진과제 중 환경용수의 계획 및 공급 개선, 북부 유역의 검토 완료, SDL 조정을 위한 패키지 개발, 수자원 계획의 개선 등은 거버넌스의 긍정적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 운영 조건 및 방식을 매년 검토하고 수정하며 지속적인 토론회 개최, 지역 상담, 포럼을 개최하고, 유역계획에 명시된 대로 유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지역주민, 호주 원주민 공동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수자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지의 물 공급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사회에 컨설팅 등 공동체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역의 이행평가 주체는 연방정부, 주정부, 유역청 등 기관별로 부문별 역할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표 2-11〉 Murray-Darling 유역의 거버넌스 구성 및 기능

구분	구성 및 기능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 (Murray- Darling Basin Autho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Act 2007에 따라 Authority Board를 지원하는 법적기관인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MDBA)를 설립함 • ‘Authority’는 Water Act 2007 제117조 및 제178조에 따라 총독부가 임명한 위원장, 최고경영자, 원주민 위원 및 4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됨 • ‘Authority’는 MDBA로부터 유역 전체의 전략,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고 농업물환경부(DAWE),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Holder 및 Basin jurisdictions와 협력함. 또한 유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유역지역사회, 산업, 환경단체 및 기타 정부기관(기상청,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포함)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음 • ‘Authority’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계획 준비·검토 - 유역 수자원과 물 생태계의 상태를 측정, 모니터링 및 기록 - 유역 수자원 및 물 생태계에 대한 연구 - 유역 수자원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조치 개발 및 지원 - 유역 수자원 및 물 생태계에 대한 정보 수집, 활용 및 공유 - 지역사회에 유역 수자원에 대한 교육 실시
물 장관 의회 (Ministerial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장관 의회는 각 유역 관할구역과 연방의 물을 책임지는 장관들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onwealth Minister for Resources, Water and Northern Australia - New South Wales Minister - Victorian - South Australian - Queensland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Minister • 물 장관 의회는 MDB 전체 물관리 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 다음에 대한 정책 및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state) 물 공유 - 자연 자원 관리 프로그램의 예산 조달 및 집행 - 법에 규정된 인력 요구와 관련된 이슈 •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은 물 장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매년 연간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 물 장관 의회는 유역공무원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능에 대해 유역주민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물 장관 의회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표 및 결과에 대한 고려와 결정 - 머레이-달링 유역 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결정 - Authority가 작성한 연간 계획, 예산 및 자산관리 계획의 승인 - 머레이-달링 유역 협약 개정에 동의

구분	구성 및 기능
<p>유역 국장 위원회 (Basin Officials Committ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 국장 위원회는 Water Act 2007 부칙 1에 따라 머레이-달링 유역 협약서에 의해 설립됨 • 유역 국장 위원회는 유역 수자원 및 기타 자연자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연방, 유역 주 및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유역 국장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각 유역 관할구역(연방,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호주 수도)의 고위 공무원 1명씩이며, 연방정부 위원이 의장을 맡고 있음 • Authority의 위원장, 최고경영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음 • 유역정부위원회는 장관협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국가 물 배분, 자연 자원 관리 프로그램 예산 조달 및 집행 등의 문제에 대한 물 장관 의회의 정책 및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 • 유역 국장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계획 및 제안된 유역계획의 수정안 작성에 유역 주 정부의 참여를 권고 - 물 및 기타 천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결과 및 목표와 관련하여 물 장관 의회에 자문 - 강 운영과 관련된 고위급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짐, 여기에는 머레이강 유역청의 운영 목표 설정과 결과가 포함됨 • 2019년 12월, 거버넌스 조정의 '독립적인 검토'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물 장관 의회는 공동 정부가 제안한 수정된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하는 위원회 거버넌스 개선(안)을 승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된 위원회는 4개의 상설 위원회(BOC Alternates, Joint Venture Budget and Performance, River Murray Operations, Environmental Water)와 3개의 임시 위원회(Sustainable Diversion Limit Adjustment Mechanism Implementation Committee, Northern Basin Project Committee, Capacity Policy Working Group)(2024.6월까지 운영)로 구성됨 - 수정된 위원회 구조 및 기타 변경사항은 기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유역의 공동 관리를 촉진하며 위원회의 전략적 집중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됨
<p>유역주민 위원회 (Basin Community Committ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주민위원회(BCC)는 광범위한 수자원, 환경, 문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점의 제공함 • BCC 위원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 사용, 물 관리, 원주민 및 지방자체단체 문제에 대한 전문성 또는 관심사를 바탕으로 선정됨 • BCC 구성원은 Authority의 주요 지역 연락담당자임. 그들은 지역사회에 우려와 유역계획 구현에 관한 이슈에 대해 보고하고 해당 정보를 유역지역사회에 제공함 • BCC는 다음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 수자원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 - Authority가 BCC에 언급한 사항 • BCC의 자문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관개, 환경용수, 토착수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함. 이러한 소위원회는 Authority와 장관협의회에 자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구분	구성 및 기능
사회·경제·환경과학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c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환경과학 자문위원회(ACSEE)는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자문에 중요한 역할을 함. 위원회는 강력한 방법론, 과학 및 지식의 지원을 받아 유역계획이 확실하게 이행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함 • ACCESS는 환경 물공급, 적응관리, 기후변화, 유역계획 결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유역계획 구현과 MDBA의 업무진행에 있어 과학적 부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학계, 지역사회, 산업 네트워크 내 과학 관련 사안들의 소통도 위원회 역할의 중요한 부분임 • 7명의 위원들은 MDBA의 작업에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수문학, 생태학, 복원력, 물 거버넌스, 법, 사회학, 지속가능한 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독자적 강 운영 검토 그룹 (Independent River Operations Review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강 운영 검토 그룹은 Water Act 2007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임 • 원래 강 운영 및 물 배분 활동 관련 MDBA의 성과를 검토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에 대한 검토역할이 확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BA의 환경적 물 전달 활동의 결과 - 머레이강의 유량 증가 운영 - South Australia의 보관권 운영 - MDBA 유역 국장 위원회(BOC)의 공식 강 운영 목표 및 결과 준수 • MDBA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 정부 공무원들을 인터뷰하며, 평가 프로세스에는 강 운영 개선, 목표 및 결과, 향후 연간 운영 전망 등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2018~19, 2019~20)에 대한 평가 결과 MDBA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MDBA, "Committees decision making", 검색일: 2021.7.1.

8. 호주 사례 주요 내용 및 특징

호주 물개혁의 주된 요인은 ‘기후변화/물부족’, ‘환경용수 확보’, ‘Performance Evaluation’ 등이며, 정책 전환의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꾸준한 정책 발전이 추진되어 왔으며, 유역 기반의 물관리를 위해 유역협의체(또는 위원회, Council)에서 독립기구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MDBA)’을 신설하였다.

호주 유역 물관리 정책 목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물 장관 의회(Ministerial Council)에서, 유역계획은 유역 국장 위원회(Basin Officials Committee)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개의 전문가 자문 그룹(Advisory Committee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ciences, Independent River Operations Review Group)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12년 유역계획 시행 후 실효성과 책임감 있는 유역계획 시행 및 이행평가(모니터링, 지표평가 등)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으며, 기존 거버넌스 체계(6개 위원회 체계)의 한계점이 연구 결과로 제시됨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역계획이행위원회’를 해체하고 유역 국장 위원회 체계를 7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책임성’, ‘전문성’, ‘참여성’을 강화하였다.

호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투자하여 확보된 수리권은 환경보전이나 개선에 이용하고, 환경용수관리자는 정부를 대신해 할당된 수자원을 하천의 생태·환경을 유지·복원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하천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이용하여 생태학적으로 수문 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같은 양의 환경용수로도 보다 나은 환경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경용수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환경용수 확보에 대한 개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며 하천관리자와 물 사용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산하에 각각 수자원 개발부와 환경부서를 두어 개발과 견제라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집행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을 이원화함으로써 물관리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실무적인 문제를 최대한 반영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의견 교환과 협력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댐 관리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한 농림부가 관할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요량 및 회귀 수량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완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대가물을 계기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여 물관리의 일원화에 성공한 호주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도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해야 해야 할 것이다.

제4절 시사점

이상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통합물 관리를 위한물관리기본법 제정 측면에서의 시사점이다. 두 번째는물관리위원회 등 조직 측면에서의 시사점이다.

먼저,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 통합 부분의 시사점이다. 사례로 본 선진국들 모두 물순환 개념에 기초하여 지표수-지하수 통합, 행정기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한 기본법 성격의 물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독일·네덜란드의 경우 비교적 통합이 용이한 물이용·물환경 등에 대해서는 통합 물법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으나, 토지이용 및 재난관리가 연계되는 홍수 등 물재해에 대해서는 최후에 통합시킨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까지 통합 물법에 포괄시킨 것을 주목할 만하며, 이는 홍수관리 등 물재해 관리의 영역을 위험도 및 시설관리로 구체화·고도화하여 토지관리·재난관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역시 물 관련 법을 고도화해 나가며 물재해, 물이용, 물환경을 통합하고 물에 대한 기본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물관리기본법에서 물관리의 범위·목표·대상에 대한 지향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특히 물재해 등 타 분야·부서와 필히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물관리 차원에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대체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히 일원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권 국가라 하여도 물에 대한 모든 기능이 한 개 부서로 통합되는 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조직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여전히 물과 관련하여서는 분화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조직(국가단위: 네덜란드의 물관리청, 일본의 물순환정책본부, 유역단위: 프랑스 유역물관리청, 호주의 머레이-달링유역관리청)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버넌스에서 부서 간 통합을 중시하는 경우는 일본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물순환정책본부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서구권은 대체로 지역·유역별 조직 구성 및 시민참여형 관리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민(民)주도 통합물관리를 지향하는가 관(官)주도 통합물관리를 지향하는가에 따른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관협력형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충적 방향으로도 볼 수 있으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조직 성격은 민관 정책 거버넌스에 가까우

므로 오히려 일본의 형태에서 통합 조직의 권한만 모호화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민·관협력형 위원회를 최상위기구로 두고 있기는 하나 주로 전문가 및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일반 시민, 지역 주민 참여는 제한적이고 또한 다양한 유관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1) 국가·유역물관리 위원회의 권한 및 사무국의 역할을 일본과 같이 구체화·강화하고 다양한 자료 및 지침을 생산하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선, (2) 지역 주민 및 일반 시민 참여의 확대 및 타 분야 전문가·관련자 참여 확대를 통한 의사결정 고도화 및 사회 의견수렴 강화 방향으로의 조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관리 혹은 분야별 정책 의사결정은 그 국가의 역사·사회적(민주주의와 인식과 성숙), 기후환경적, 경제적(산업-농업구조), 기술 수준, 무엇보다 행정체계적(연방정부, 준연방정부, 자치단체, 지방역량 등) 등과 같은 해당 국가의 제반여건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 일본은 물순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리와 기후재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하수(건천화, 기저유출, 산림, 물부족, 연계관리 등)와 물재해(내외수 범람 및 침수 통합관리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²⁹⁾와 일본³⁰⁾의 사례에서 볼 때, 양국 모두 정책 의사결정은 관(官) 주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의사결정자(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의 ‘책임성’은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 의회 주도의 전문가 팔로우업 위원회, 호주의 유역관리청 신설, 전문가 그룹, 주민위원회 등과 같이 일본과 호주 정부 관료의 ‘책임성’은 물관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독립성’, ‘전문성’, ‘참여성’을 토대로 한다는 특성 또는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운용하는 많은 위원회는 민(民)·관(官) 협의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물관리기본법 시행 3주년을 앞두고 현행 우리나라 물관리 운용체계(물관리기본법,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일원화, 하천관리일원화 등)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경우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통해 유역계획이행위원회의 기능을 유역 국장 위원회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참여성’이 한층 더 강화된 시사점이 있

29) 대신 호주는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에 가깝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수평적 의견 교환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30) 대신 일본은 물순환계획 수립과정에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순환 시책 추진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물순환정책본부와 간사회 구성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도 유역물관리위원회,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물재해, 물이용, 물환경, 하천복원, 수변구역, 수계기금, 오염총량 등 유역관리/하천관리에 필요한 유역 행정조직의 체계와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현황과 통합적 정비 방향

- 제1절 통합적 정비 방향
- 제2절 주요 법령의 현황
- 제3절 계획 정비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제3장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현황과 통합적 정비 방향



본 장에서는 먼저 통합적인 법령과 계획의 정비를 위해 정비의 대상과 범위, 기본원칙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법령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검토한 계획 정비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정리하였다. 법령과 계획의 통합적 정비 방향을 기본원칙과 개선 방향의 틀 속에서 설정하는 것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 취지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비 방향을 모색함에 크게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통합적 정비 방향과 기본원칙 및 개선 방향은 본 보고서의 4장과 5장에서 제시하는 법령 정비 방향과 계획 정비안 세부 실행방안의 기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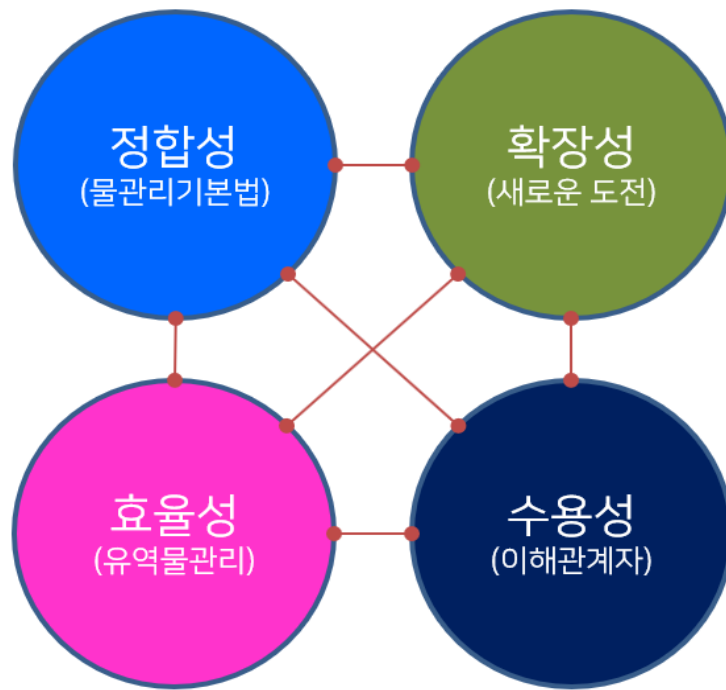
제1절 통합적 정비 방향

1. 대상과 범위

통합적 법령과 계획 정비를 위한 내용적 대상과 범위에는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그 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운용 중인 모든 법령과 모든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환경부 소관 법령과 계획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였다. 법령의 현황과 정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주요 법령의 제정 취지와 개정 현황을 살펴본 뒤에 물관리기본법과 환경부 소관 법률 중심으로 정비 방향을 도출하였다. 계획 정비안의 현황은 환경부가 준비한 정비안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검토한 정비안을 비교하고 세부 실행방안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

통합적 법령과 계획 정비의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은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물관리의 중요성, 물관리 관련 법령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체계를 갖추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고,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물관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정비에 대한 기본원칙은 정합성, 확장성, 효율성, 수용성으로 크게 4가지이다(그림 3-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 물 관련 계획 정비의 기본원칙

4개의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보면, 먼저 ‘정합성’은 기본법 우선 원칙에 따라 물 관련 법령은 물관리기본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하고 기타 하위 물 관련 계획을 정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전략적 성격의 가장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략 혹은 전략과 실행의 복합적 성격의 최상위 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토대로 각 부문 계획 순으로 계획 정비안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갖춘다. 그리고 국가·유역 최상위 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하위 법정계획(국가 단위 부문 계획)의 계획 시기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신설되거나 정비되는 계획은 2개의 최상위 계획의 부합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물관리의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통합물관리’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법령과 계획에 대하여 국가와 유역 단위에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하위법령과 법정계획 체계 제도화 등과 같은 시스템적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합성은 어떠한 법·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항상 강조되는 원칙으로, 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들의 최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연계성이 미흡하다면 공공성을 가진 물관리의 경

우 국가 또는 유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명분과 목적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합성은 법령과 계획 정비의 기본원칙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원칙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효율성’은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원칙으로, 물관리 기본원칙인 ‘유역별 관리’, ‘협력과 연계관리’, ‘물관리 정책 참여’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유역 내 물 문제는 유역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합의된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역 중심의 정비안에 기초하여 기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수립하던 수도계획을 통합하고, 하천계획 수립 시 수생태 복원과 보전에 관한 계획내용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 법령의 유역 중심의 법령 정비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서 유역물관리의 기본방향, 현안과 해소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실행적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은 법령과 계획 정비의 포괄성과 구체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내용적 함의는 기본원칙 정합성의 수준으로 소중하다.

그 다음으로 제시하는 기본원칙은 ‘확장성’으로, 정책여건 변화,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법령과 계획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계획 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변성, 유연성, 적응성을 확보하게 하는 원칙으로, 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물 분야 탄소중립, 디지털·그린 뉴딜, 건전한 물순환, 수량-수질 통합기반의 수생태 복원, 물관리 조사와 정보화 등과 같은 아젠다는 물관리일원화 전후에 개선되거나 새로운 법령과 계획 정비의 수요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성’의 기본 원칙은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법률·예산(재정) 체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령과 계획 정비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에 수용성은 투명성, 공론성, 체계성과 같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중요한 원칙이다. 수용성을 적용한 개선 방향은 부처별, 조직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물순환 전 과정을 고려한 통합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록 유역 물관리 측면의 조직개편, 수계기금, 물이용부담금, 토지매수 등과 같은 조직과 예산(재정) 체계 변화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감한 현안이지만, 타당하고 전향적 정비와 개편, 그리고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면, 물관리일원화의 궁극적 취지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파급과 효과는 불확실하게 될 수도 있다.

〈표 3-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3대 혁신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중점과제] ②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제도·조직 등 정비

2. 통합물관리 3대 혁신 정책방향의 중점 과제

혁신 ①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중점과제	①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 도시 및 도시의 지역 맞춤형 물순환 관리 모델 발굴 확산 '물 계경' 구축 등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선진 분석기법 도입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하천-하구-연안 통합관리 강화 하천 허가제 관리 강화 및 수리권체계 정비 수질·수량·수 생태를 동시 고려하도록 하천 및 하천시설 제도 정비
	중점과제 ②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제도·조직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관련 법령·계획·효율화·체계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
	세부 과제
혁신 ②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중점과제	① 유역 공동체의 참여·협력·소통 기반 강화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 유역별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유역 내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및 소통 기반 강화
	중점과제 ② 물갈등 및 물분쟁 조정·해소 체계 구축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관리기본법 중심으로 물분쟁 조정 체계 정비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갈등 조정 방안 마련
혁신 ③ 기후위기 시대 국민안전 물관리	
중점과제	①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부문 온실가스 관리 목표 설정 및 물관리 에너지 효율 제고 수질, 수생태영양, 하수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 수변생태벨트, 생태마을 조성 등 탄소 흡수 생태공간 확충
	중점과제 ② 신기술 개발·활용 및 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물관리 최적 기술 지속 개발 IoT, IC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물 기반시설 관리 선진화 사용자 중심의 물 기반시설 안전 문화 확산
세부 과제	

- 물 관련 법령·계획 효율화·체계화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국가와 유역단위의 최상위계획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하위법정계획 체계 정비
- 법정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계획은 통·폐합
- 정부정책 여건 변화,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은 신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물관리조직체계를 물순환 전 과정을 고려한 통합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재편
- 정부정책과 물 관련 공공기관 운영 성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간 연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물관리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등 물 관련 정부위원회 간 위상 정립, 통·폐합, 기능 분담 및 상호연계 방안 마련

-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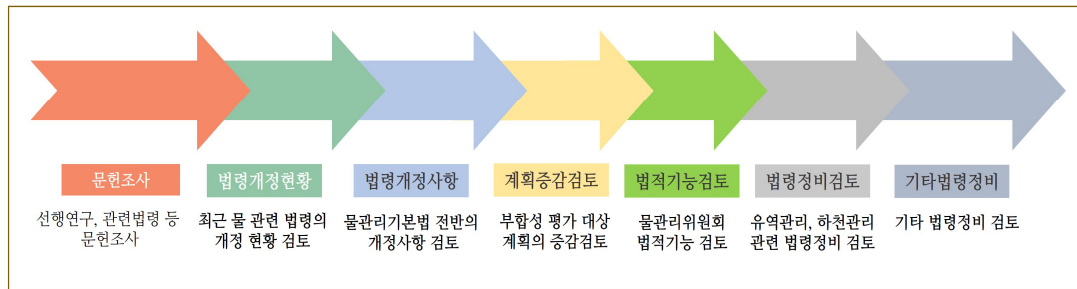
-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물 분야 전체 예산(수입·지출) 현황의 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체계 구축
- 기존의 물 사용료, 물 관련 부담금 등을 활용하여 유역 내 물문제를 유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지금까지 통합적 정비를 위한 살펴본 4개 기본원칙과 개선방향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제시된 3대 혁신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 중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제도·조직 등 정비'와도 부합하고 미래지향적 법령 정비,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이행과 계획 정비의 일관성 확보에도 유익하여 국가와 유역 차원의 물관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법령 정비의 체계적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체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3-2 참조). 우선 물관리일원화 후 부처별 물관련 법령 정비의 현황을 살펴본 뒤 문헌조사를 통해 법령 정비와 관련되어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정비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및 정비방향

등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객관성·논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증감, 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 유역관리 및 하천관리 관련법령, 주요 물관리 법령 정비 방향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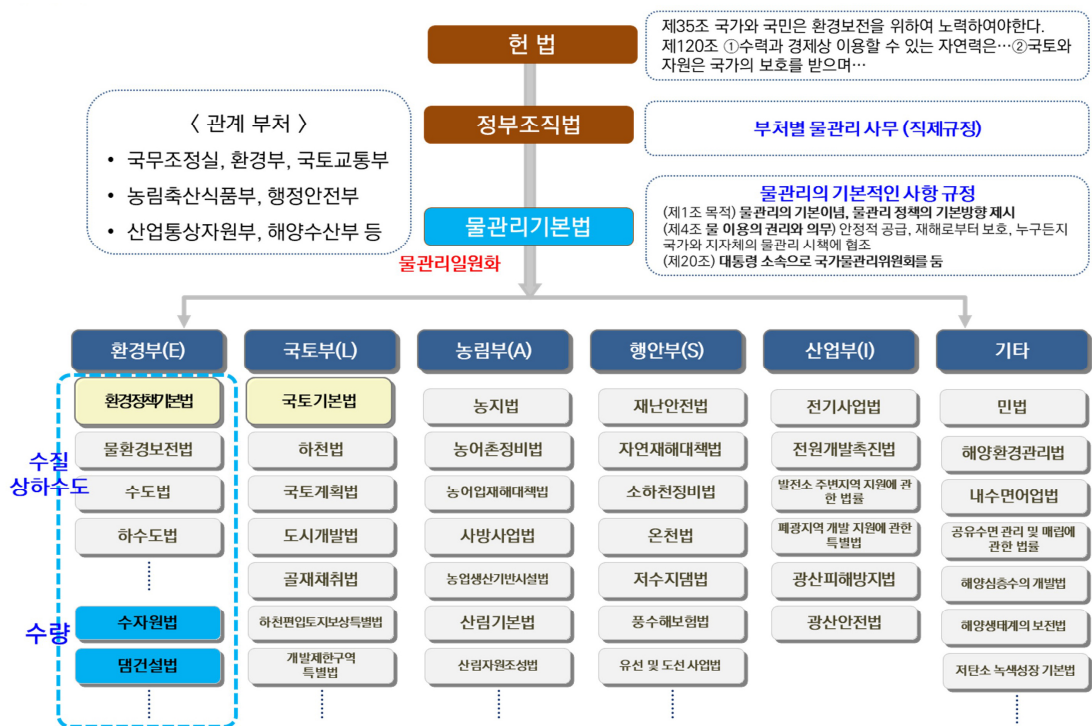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 법령 정비안 연구 분석 체계

제2절 주요 법령의 현황

현재 물 관련 법령은 헌법 제35조, 제120조를 근간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별로 물관리 사무에 대한 직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물관리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부처별로 물 관련하여 다음의 <그림 3-3>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 후 주요 물 관련 법령에 관한 제정의 이유와 개정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의 절과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4> 부처별 주요 물 관련 법령 현황

본 절에서는 <그림 3-2>를 바탕으로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의 개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법령에 대한 연혁,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사항을 검색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 물관리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부 소관 법률 14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2개,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1개가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부, 기타 행정기관 소관 물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현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하여 주요 법령에 대한 제·개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¹⁾.

1.물관리기본법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제협력 활성화에 대하여 물관리기본법 (법률 제17841호 (2021.1.5.)(시행 2021.7.6.))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우리나라 물 분야 국제협력은 국가적 의제 부족, 정부·학계·산업계 등의 협력부재,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해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로 우리나라 대표 의제 발굴과 회의 주도, 양·다자간 협력체계 강화, 물 분야 국제협력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기관 간의 역할 체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2016년 12월 정부가 유네스코와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³²⁾을 맺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인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으로 물이용 역량강화, 물관리일원화, 스마트물관리 등의 국내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 및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물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제36조의 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센터의 설립근거가 법제화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는 풍부한 수량확보, 적합한 수질공급, 재해·분쟁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접근성과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3A for Water Security’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사례·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물 안보 정보 플랫폼 구축이라는 3대 중점 추진목표를 통해 물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³⁾.

31) 본 절의 본문에서는 물관리 주요 법령의 제·개정 현황만 담았으며, 이 외에 관련 법령의 주요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32) 외교부 홈페이지(2016.12.20.) (조약 제2330호) 한-유네스코 수자원관리 국제센터 설립협정, 검색일: 2021.10.28.

33) 유네스코 물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unesco-iwssm.org/>, 검색일: 2021.11.15.

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와 보전을 가능하게 하며, 기후변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기본이념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정책기본법은 2015년 12월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중복 수립·시행되어 행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2021년 1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변경, 시·도 환경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시·군·구 환경계획은 시·도 지사가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을 통해 환경계획의 개념을 확장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물관리와 관련하여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과 동시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추가하게 하여 종합계획에 수자원의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는 점은 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일원화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물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이 없다는 점, 환경산업에 수자원과 관련된 물산업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아직까지 물관리 일원화의 근본적인 취지가 모두 반영된 개정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수도법

수도법은 1960년대 당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의 설치·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는 구 법령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의 수도상수도보호규칙과 수도에 관한 건을 폐지하고 동 법령의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되었으며,³⁴⁾ 이후 관리체계의 변화 및 사회적, 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 약 8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다.

한편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진 2018년 이후 수돗물과 관련하여 적수사태, 유출사건 등이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도법”,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10.28.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법은 수도관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장관 등이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상수도관망과 관련하여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관리, 시설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였으며, 관망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나아가 기존에 수돗물 조사의 경우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3년 단위로 환경부가 조사 실시,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돗물홍보협의회 주관으로 조사 실시, 그 밖에는 수도사업자들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수도법을 개정함에 따라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하여 조사의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³⁵⁾.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와 관련 정책, 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수도법의 개정은 수돗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현안대응 및 향후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도 정책과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4. 하수도법

하수도법은 도시계획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해 관련 사항이 분산 규정되고 있던 하수도에 관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1966년 8월 3일에 제정·시행되었으며, 하수도 설치·관리 기준 설정을 통한 하수·분뇨의 적절한 처리,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35) 한국상하수도협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wwapr>), 검색일: 2021.05.29.

이러한 하수도법은 일원화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기존에 하수도 설치·운영·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및 하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법률 제17852호(2021.1.5.)(시행 2022.1.6.)).

이는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조항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며,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하수도 설치·운영을 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물관리일원화의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하천법

하천법은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1927년 조선하천령을 폐지하고 196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관리·사용·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졌을 당시 하천수질과 댐 수량 조절은 환경부가, 하천 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기존의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유지보수, 하천시설관리 등의 하천관리 사무를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하천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17814호(2020.12.31.)(시행 2022.1.1.)).

이는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체계의 통합이라는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하천관리 분절에 따라 수량-수질-수생태 연계 및 홍수관리 등에 있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관리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하천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1991년 2월 2일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시행되었으며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여러 차례 법의 명칭이 바뀌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8년 1월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

이러한 물환경보전법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대부분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했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수립’,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 고시’등을 환경부장관이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물환경보전법의 제·개정은 앞서 살펴본 하천법과 같이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원화의 취지가 반영된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7. 4대강 수계법

4대강 수계법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한강수계는 1999년 8월 9일, 나머지 3개의 수계는 2002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

해당 법은 각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인근지역에 오염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 구역 설정,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등을 통한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최종 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상류와 하류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근 4대강 수계법은 물관리일원화(2018.6) 후 하천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2020.12.9.)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하천관리 담당자 지명에 관한 사무와 취수시설의 수질영향 조사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주체가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친수구역활용에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에 이관됨으로써 변경된 것으로,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을 함께 바꿈으로써 법적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8. 지하수법

최근 기후위기와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자원으로서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하수는 1961년 최초 지하수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하수공 개발로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가져다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으로 인한 우려가 증가하였다. 이에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1994년 6월 11일 지하수법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은 적절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절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수법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법률 제17850호(2021.1.5.)(시행 2022.1.6.)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국가물관리 원칙과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규정,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유출지하수 발생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의 합리화,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 조치 이행력 강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 관리의 기본원칙 마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부분은 일원화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9.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재정·중재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경 보전, 국민의 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91년 2월 2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으로 시행되어, 1998년 3월 1일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명칭과 주요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환경분쟁조정법에서 ‘환경피해’는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환경분쟁의 대상과 범위 중 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1991년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분쟁의 재정(裁定)·조정(調整)을 하였으나 물과 관련한 분쟁은 드문 상황이다³⁶⁾.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일원화 후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는데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환경피해에 대한 정의에서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가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로 변경되어 물과 관련된 피해의 범위를 넓혔고,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도 함께 추가되었다(법률 제17985호(2021.4.1.)(시행 2021.4.1.)). 이는 2020년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한 구제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³⁷⁾을 고려한 현안대응을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 분쟁 조정과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물관리위원회에서 물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조정 효과 미비, 분쟁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및 분쟁 조정 기준 등의 세부방안이 부재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정의되는데 이 중 물관리와 관련하여 수도,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하수도,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물관리일원화로 인해 해당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정된 해당 법률 제18564호(2021.12.7.)(시행 2022.12.8.)은 현재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

3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 설립되어 약 30여 년 동안 총 5,355건을 접수하여 4,557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물관리와 관련된 수질오염은 총 102건으로 전체 2.2%에 해당됨(2020년 기준)

37) 환경방송(2021.3.24.), ‘안호영 의원, “하천수위 변화로 입은 피해 ‘환경분쟁조정’ 대상” 본회의 통과’, 검색일: 2021.5.29.

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물 기반시설관리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고 맥락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11. 정부조직법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 2018년 6월 8일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과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존치되어있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개정된 정부조직법 법률 제17814호 (2020.12.31.)(시행 2022.1.1.)의 배경과 목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관리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홍수예보·댐 방류 등의 물관리는 환경부가,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는 홍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수량·수질의 연계 업무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물관리일원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 관련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법률의 개정 이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법률 개정의 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홍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홍수 대응 추진단’과 업무 이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적·기능적 정비를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표 3-2〉 물 관련 법령 개정 현황

구 분	관련 법령	주요 변경 사유 또는 내용
물관리 위원회	물관리기본법(2020.5.26., 2021.1.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국고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2021.10.5.)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2021.1.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해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에 목적이 있음 → 종합계획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가 추가되었으나, 물관리일원화 취지, 물관리기본법(홍수, 가뭄, 수량, 수자원, 하천관리 등)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사항은 없음; 환경산업에 수자원 관련 물산업은 미포함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2021.1.5. 개정)	
	수도법(2020.3.31., 2021.6.1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수돗물수질오염사고,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등) - 타 법(담건설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 관련 일부 개정
	하수도법(2021.1.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해당 하수도의 관리 및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0.12.8. 개정)/시행령/시행규칙(2021.2.17.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 권한으로 변경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법(2021.6.1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 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효율적·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수질·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체계 구현 -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댐관리 시 홍수·가뭄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4대강수계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12.3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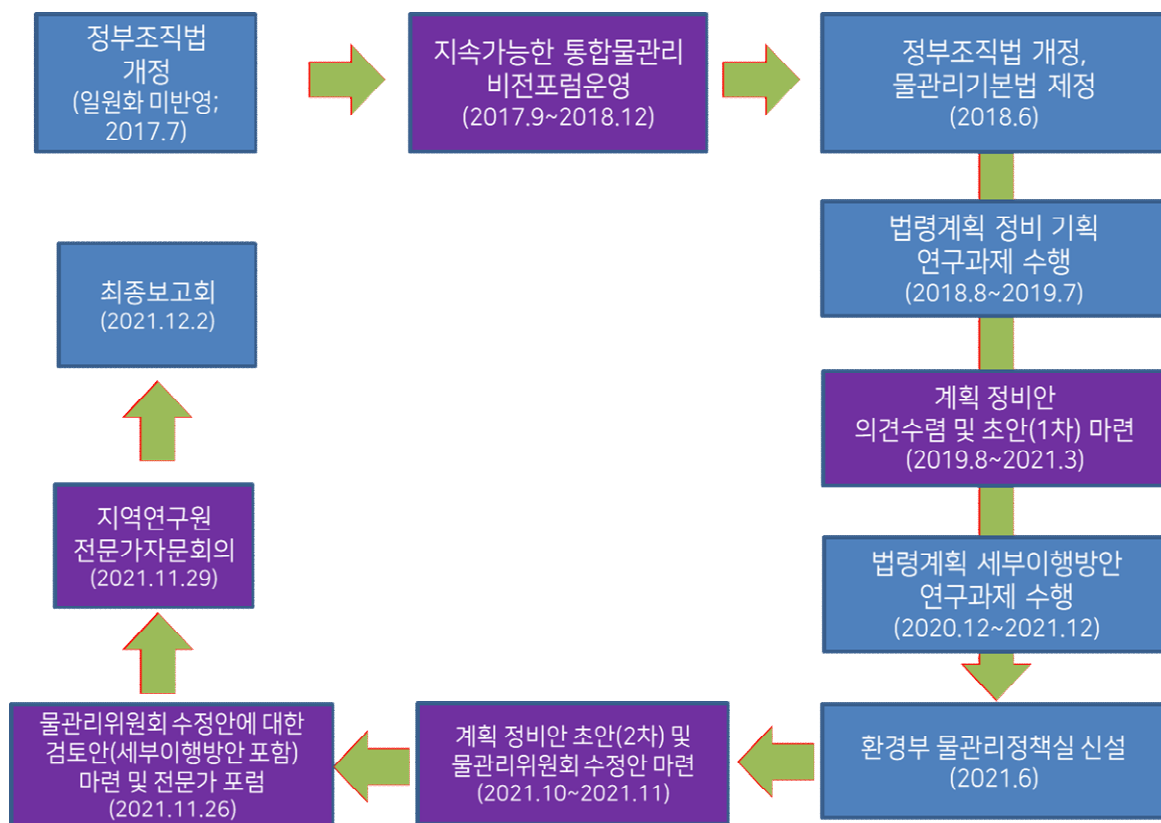
구 분	관련 법령	주요 변경 사유 또는 내용
	지하수법(2020.12.31., 2021.1.5. 개정)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 관리의 기본원칙 마련 → 물관리기본법 기본원칙(국가물 관리 원칙) 부합이 고려된 유일한 법 개정
	환경분쟁조정법(2021.4.1. 개정)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이 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한국환경공단법(2020.3.31. 개정)	-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국환경공단 사업에서 삭제하는데 목적이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법(2020.3.31. 개정)/시행령(2020.9.29. 개정)	-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분야 관련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에서 삭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개발·이용사업, 댐 및 그 상류의 물환경관리 사업,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2018.6.8., 2020.12.31 개정)	-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음
	소하천정비법(2020.12.31. 개정)	- 타 법(정부조직법, 하천관리일원화)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법(2018.12.31. 제정, 2020.10.8. 시행)	- 노후되어가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상수도, 하수도,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하천, 우수지 등)

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부, 기타 행정기관 소관 물 관련 법령에 대해 물관리일원화(2018.6) 이후 제정/개정 현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제3절 계획 정비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계획 정비안 마련의 경과

본 과제에서 논의의 기초로 두는 계획 정비안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설치 전후 2021년 3월,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과, 2021년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검토한 안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계획 정비안 마련의 주요 경과는 다음 <그림 3-4>과 같다.



<그림 3-6> 계획 정비안 마련의 주요 경과

물 관련 계획들의 통합적 정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에서 7대 기획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과제명: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2018.8-2019.7), 이 연구가 종료된 후 2년 이상 다수의 검토와 논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비안을 토대로 계획 정비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3장 3절

에서는 계획 정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 대상계획의 수, 계획내용, 계획 범위 및 계획 정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5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 정비안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위한 현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계획 정비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계획 정비의 대상 계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62개 물 관련 계획들이 있다. 여기에는 환경부로 이관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국가) 등 5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부 외 타 부처 소관 계획(국토종합계획 등 35개 계획)은 제외되었다. 물 분야 포함 종합계획과 물 분야 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물 분야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 단위 부문(수도, 하수도, 댐 등) 계획, 특정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성격의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간 범위는 국가 단위, 유역 단위, 지자체 단위로 구분하였다.

〈표 3-3〉 정비 대상 물 관련 계획의 구분과 성격

구 분 (62개)		국가 단위 (20개)	유역 단위 (10개)	지자체 단위 (32개)
물 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3개)		3개	-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
물 분야 계획 (59개)	(상위) 종합 계획 (9개)	3개	4개	2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하위) 부문 계획 (21개)	11개	1개	9개
		전국수도종합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 수생태계복원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국가계획이 없는 경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국가계획이 있는 경우〉

구 분 (62개)		국가 단위 (20개)	유역 단위 (10개)	지자체 단위 (32개)
		수문조사기본계획 물환경측정망설치계획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물기술산업육성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생태계복원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물기술산업육성시행계획
		3개	5개	21개
	(하위) 시행 계획 (29개)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하천기본계획(국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지하수관측망설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자료: 환경부(2021.10.),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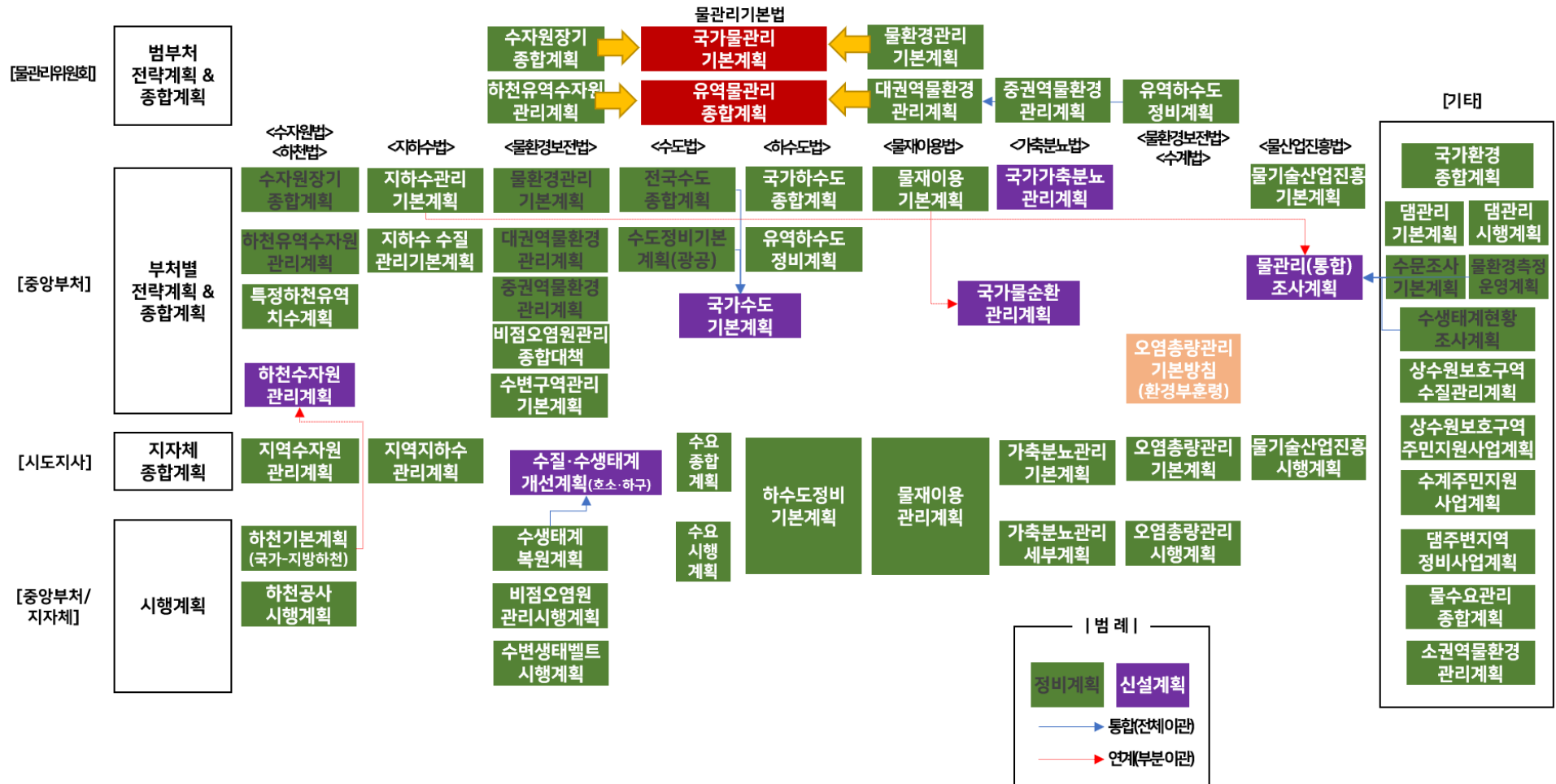
이상의 계획 정비 대상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계획 정비안(2021.10)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검토안(2021.11)은 각각 다음 <표 3-4>, <그림 3-5>, <그림 3-6>과 같이 도출되었다. 먼저, 환경부의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변화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통합시킨 것이다. 이에 맞추어 유역 단위에서는 대·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통합시켰다. 하천관리 일원화에도 발맞추어, 하천분야에 국가부문계획이 없다는 점과 수생태계복원계획이 하천기본계획과 중복된다는 점에 비추어 하천수자원관리계획을 국가 계획으로 신설하고 수생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대신에 수질·수생태계개선계획을 신설하여 수질 관련 국가 부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물관리(통합)조사계획을 신설한 것인데, 수문조사기본계획, 물환경측정망설치계획,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관측망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물재이용기본계획의 경우 물수요 및 물순환 관련 국가부문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을 신설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지역단위 계획만 지정되어 있고 국가계획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는 것,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등 법제화

가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검토안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 안과 동일하였으나, 부문별 계획에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먼저,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천수자원관리계획의 경우, 하천-호소-하구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이수·치수·수질·수생태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물관리 차원의 ‘국가하천종합계획’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질·수생태와 관련하여서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과 통합하여 물환경의 점·비점 오염원관리를 포괄하는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안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 내용 구성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부문별 계획의 내용 정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의 경우 환경부안과 유사하되, 현재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의 물순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의 경우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특화 계획 성격으로서 필요함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곧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 될 필요성과 실효성을 입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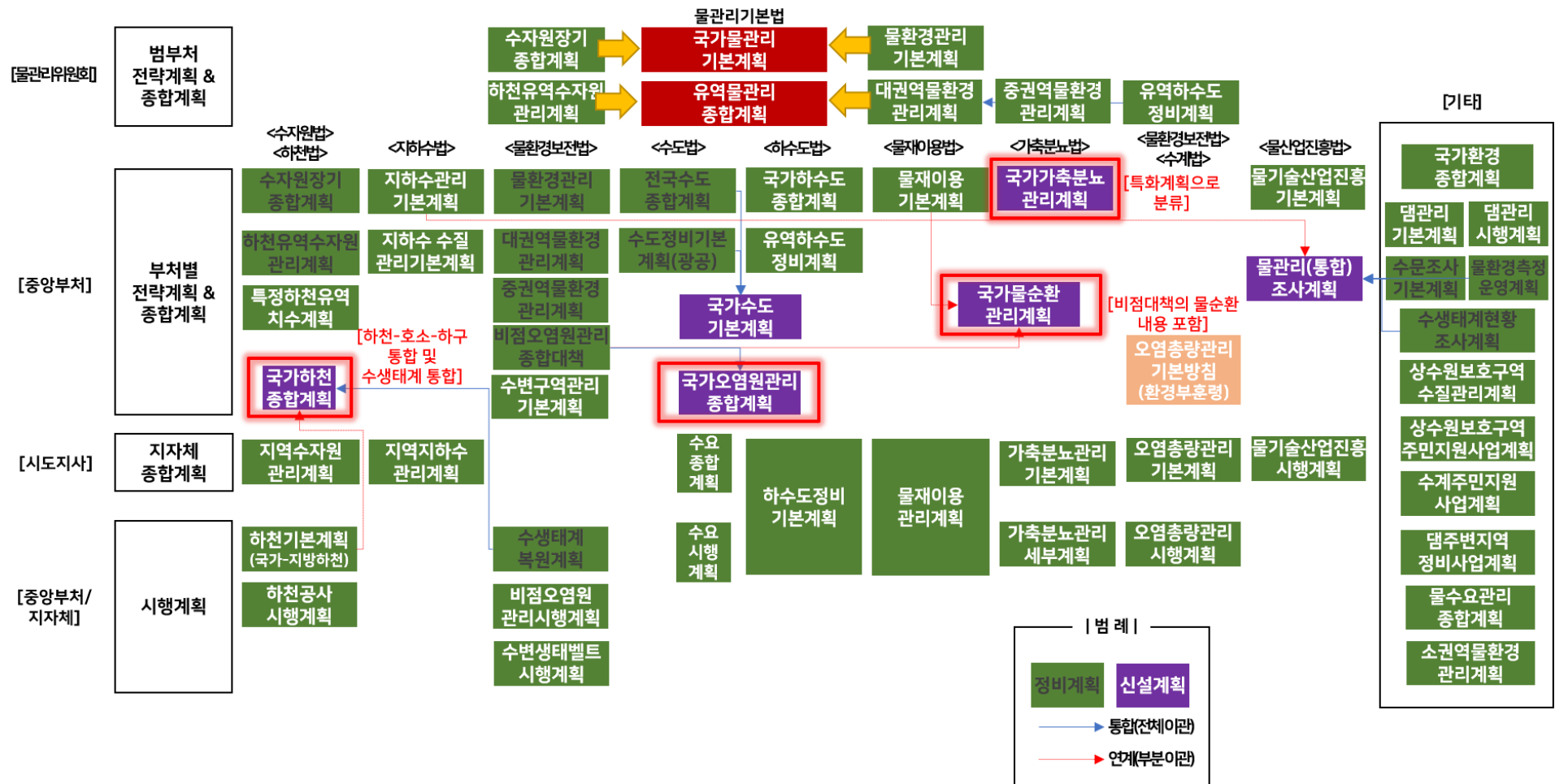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보고 자료(2021.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7〉 물 관련 법정 계획 정비안(환경부)

〈표 3-4〉 환경부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 정비안(요약)

구분	현재(20개)	환경부안(13개)	위원회안(12개)
종합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좌동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좌동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	국가물순환관리계획	좌동
	-		
부문 계획 등	※ 물수요 및 물순환 국가부문계획 없음	※ 물재이용, 물수요를 포함하여 물순환 부문계획 신설	※ 現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의 물순환 내용 포함
	-	하천수자원관리계획	국가하천종합계획
	※ 하천 국가부문계획 없음		
	수생태계복원계획*	※ 수생태를 포함하여 하천부문계획 신설	※ 하천-호소-하구의 연속성이 고려된 이수·치수·수질·수생태의 통합물관리 차원의 계획
	※ 수질·수생태(총괄) 국가 부문계획 없음		
	하천	수질·수생태계개선계획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총괄, 호소/하구		
	※ 수질을 포함한 계획 신설		※ 물환경의 점·비점 오염원 관리를 포괄하는 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좌동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좌동	좌동
		※ 관측망 설치계획 제외	
	댐건설장기계획	댐관리기본계획	좌동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좌동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좌동	좌동
	-	물관리(통합)조사계획	좌동
	※ 조사·정보 부문 통합 관리 필요		
	수문조사기본계획(10년)		
	물환경측정망설치계획(1년)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1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관측망)(10년)		※ 기존 조사체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계획
	물기술산업육성기본계획	좌동	좌동
특화 계획	-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	좌동
	※ 가축분뇨 국가부문계획 없음		

주)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생태계복원계획은 현행 유지
 자료: 환경부 보고 자료(2021.10.)를 기반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마련



자료: 환경부 보고 자료(2021.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8〉 물 관련 법령 계획 정비안(국가물관리위원회)

3. 계획 정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환경부의 계획 정비안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검토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 수행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5〉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내용-전문가 포럼

통합물관리 전문가 포럼
① 물관리기본계획에 탄소중립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② 물관리용어(개념)의 일치와 통일이 필요함 ③ 우리나라 재난의 90%를 차지하는 수재해에 관하여 환경부와 행안부의 역할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며, 기상법과의 관계 정립(호우특보 등)도 필요함 ④ 계획 정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본 경험이 있는 산업계 의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할 것임. 물순환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⑤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과 비점오염관리계획을 묶어서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유역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 필요함. 단기 정비와 장기 정비의 제안이 유효할 것임 ⑥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던 유역하수정비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할 때, 자료조사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재 체제는 유지하고,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한 투자를 먼저 고려해 주길 바람 ⑦ 물환경보전법에 있는 수생태를 통합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⑧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2개의 법률(계획)의 대한 역할이 구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⑨ 물관리(통합)조사계획은 시급하고 적절한 정비 방안임

자료: 저자 작성

〈표 3-6〉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내용-지역연구원 자문회의

지역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① 국가-유역 체계, 1개 유역-1개 종합 계획, 전략-종합-실행 계획 등으로 조금 더 체계화 되는 것에는 공감하나, 여전히 정확한 계획 간 위상 및 체계 등에 혼란이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종합계획으로 통합하면 효율성은 제고되겠지만, 반대로 신설 계획도 너무 많아 부합성평가 절차도 가중되고 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이 우려스러움 ③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물환경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양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편중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④ 상위 계획 위주의 통합안으로 이해되는데 실제 현장과 지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계획 단위로, 이에 대한 통합과 정비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 Bottom-up 관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⑤ 국가물순환관리계획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명칭 상 유사성이 크므로 이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중요할 것임 ⑥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은 불필요하거나, 타 계획(유역종합 또는 물순환계획 등)과 통합할 수 있으며, 검토한다면 총량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 ⑦ 통합조사계획 신설에는 대체로 동의하며 물관리기본법 소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고, 정보의 공유와 소통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자료: 저자 작성

전문가 의견 수렴 시에는 회의 및 본 연구의 취지를 최대한 전달하였으나, 의제 대상이 물 관리 전체에 걸친 계획정비 방안이었기 때문에 일부 의견은 본 연구의 범위를 부득이하게 벗어난 경우도 존재하였다. 모든 의견은 통합물관리 및 계획 효율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일정 부분 시사점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여러 의견 중 본 연구의 범위인 계획 정비안의 실행 방안 마련 측면에서의 의견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생각된다.

먼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우려 제기가 있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기존에 별도로 존재하던 대형 계획들(하천유역수자원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통합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우려는 자연스럽다. 단, 본 연구에서 소개한 호주의 유역 관리 사례나, 통합물관리의 방향이 유역 중심 관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계획의 통합과 효율화는 통합된 계획의 범위 확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며 그럴 경우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이 통합 주체로 가장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일로 판단된다. 단 이러한 전문가 의견의 우려는 실행측면에서의 부작용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기안과 중장기 안을 구분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유역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신설계획 중 일부계획(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국가물순환관리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 제기가 있었다. 먼저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 단위 계획 수립을 명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립 계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퇴·액비, 사육시설 등 물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지자체 계획은 이미 수립·실행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립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만 가축분뇨 계획은 특화계획으로서 타 계획 체계와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시한 안인데, 점/비점/기타 수질 오염원을 모두 묶어 관리하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존에 구체적인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획정비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일단 해당 계획이 신설될 경우를 가정하여 법령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물순환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아직 소관 법령조차도 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계획 및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온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4장

물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 제1절 법령 정비 관련 문헌 조사
- 제2절물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 검토
- 제3절 부처별 주요 법령의 정비 방향

제4장 물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제1절 법령 정비 관련 문헌 조사

1.물관리기본법 개정과 정비에 대한 문헌 조사

물관리일원화 전·후 물 관련 법제 관련 학술 논문은 약 25건이 있으나, 물관리기본법 개정(정비) 혹은 법령 정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정비) 혹은 법령 정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연구(심민석, 2021)’에서는 물분쟁조정위원회(가칭)의 신설, 환경부 소속의 유역물통합관리위원회(가칭) 신설, 분쟁조정법 제10조의 법적 효력 규정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수리권의 종류와 수리권 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전경운, 2020)’에서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리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통합 수리권법 제정 혹은 물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하천생태계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박종원, 2021)’에서는 물관리기본법에 하천생태계 복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을 물관리기본법에 반영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김홍균, 2020)’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의 개정 방향으로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체계성·효율성 제고, 물분쟁 조정 대상의 명확화와 실효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김홍균, 2021)’에서는 총 9개의 정비 방향(1. 정보의 통합, 2. 계획의 통합, 3. 수량/수질의 통합, 4. 유역 상류와 하류의 통합, 5.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6. 토지이용과 물의 통합, 7. 수리권의 통합, 8. 시설·사업의 통합, 9. 조직(기구)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간 위계체계를 정립하고 여러 계획들을 통합/조정/단순화(국가·유역계획 중심으로 단순화), 환경생태유량(물환경보전법)과 하천유지유량(하천법)의 통합 검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확대·강화, 수계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친수구역위원회를 유역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수자원 분쟁, 하천수 분쟁, 환경분쟁 중 물 관련 등의 물분쟁 업무의 국가물관리위원회로의 이관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4-1〉 물관리기본법 개정/정비 관련 문헌 조사

논문/보고서명	내 용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연구 (심민석, 2021)	<p>〈총론〉</p> <p>“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토대는 마련되어 가고 있음”</p> <p>〈개선과제 & 입법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물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기능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물분쟁조정위원회(가칭)’을 신설 · 2. 유역 단위의 물관리를 통합할 수 있게 4대 유역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환경부 소속의 ‘유역물통합관리위원회(가칭) 신설 · 3. 분쟁 조정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정의 법적 효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4. 물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법정계획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 · 5. 하천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 하면서 관련 법률(소하천정비법)을 하천법으로 통일하여 이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 · 6. 지하수의 관리(온천법, 농어촌정비법)를 환경부가 맡도록 하여 물관리의 일원화를 시키는 것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심의사항인지 아니면 의결사항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 “(환경부장관이 수립권자이므로)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인다”
수리권의 종류와 수리권 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전경운, 2020)	<p>〈총론〉</p> <p>“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리권 체계 확립을 위하여 통합 수리권법 제정 혹은 물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함”</p>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 하천용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농업용수 수리권, 해양용수권 등)의 난립과 중복으로 인하여 국가의 수자원 관리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귀중한 자원인 물의 사용과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김성수 2015; 김홍균 2018 등)”
하천생태계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박종원, 2021)	<p>〈총론〉</p> <p>“하천생태계복원의 개념, 기본이념, 원칙을 법제화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이 구체화되어야 함”</p> <p>〈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국가 차원에서 하천생태계 복원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함 · 물관리기본법에 하천생태계 복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을 반영/개정 · 하천기본계획 등이 국가계획 부합 여부 대상의 심의대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하천생태계 복원은 물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논문/보고서명	내 용
<p>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김홍균, 2020)</p>	<p>〈총론〉 “기본법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하고 할 수 있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p> <p>〈주요 문제점〉 ·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상의 한계, 국가계획·유역계획과 다른 물 관련 계획과의 중복성, 물분쟁 조정 대상의 불명확화와 그 효력의 약화, 다른 법제도·정책과의 연계규정의 미비 등”</p> <p>〈개정 방향〉 · 1.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명시, 권한의 확대, 독자적 예산 확보) · 2.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체계성·효율성 제고(국가계획 수립권자를 국가위원회로 변경, 중복성 있는 계획의 통폐합) · 3. 물분쟁 조정 대상의 명확화와 실효성 확보(법적 구속력 부여) · 4. 법 체계성·종합성·연계성의 제고 등</p>
<p>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김홍균, 2021)</p>	<p>〈총론〉 “기본법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하고 할 수 있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p> <p>〈주요 내용〉 ·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법령정비)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며 중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물관리일원화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함</p> <p>〈정비 방향(통합 주제)〉 · 1. 정보의 통합, 2. 계획의 통합, 3. 수량/수질의 통합, 4. 유역 상류와 하류의 통합, 5.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6. 토지이용과 물의 통합, 7. 수리권의 통합, 8. 시설·사업의 통합, 9. 조직(기구)의 통합</p>

논문/보고서명	내 용
	<p>〈세부 정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정보의 통합: 물관리기본법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의 무화시키고 미흡한 내용을 구체화 · 2. 계획의 통합: 계획간 위계체계를 정립하고 여러 계획들을 통합/ 조정/단순화해야함. 국가계획 수립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국가물 관리위원회로 이전을 검토. 국가계획과 유역계획 중심으로 단순화, 유역관리 기반 계획의 강조. 유사성이 많거나 효율성이 낮은 계획은 과감히 폐지 검토 · 3. 수량-수질의 통합: 하천법의 이관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물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은 한계가 있음. 환경생 태유량(물환경보전법)과 하천유지유량(하천법)의 통합 검토 · 4. 유역 상류와 하류의 통합: ‘수계, 권역 등의 개념은 유역으로 대 치되거나 재편될 필요가 있음’,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활성화’, ‘유역 내 물분쟁을 국가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기준 설정 필요, 재판상 효력으로 격상’,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확대·강화(불필요한 계획 은 과감히 폐지)’ · 5.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그동안 수량관리에 치우쳐 있던 상황 을 수질관리로 방향을 수정’ · 6. 토지이용과 물의 통합: 토지이용 관련 법제에서 국가계획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부합성 평가 · 7. 수리권의 통합: ‘수리권의 주체, 성격, 내용, 성립, 범위, 효력 등의 불명확은 물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가칭)수리권법으로 통합, 다만 신규 법 제정 은 쉽지 않음. 물관리기본법에 보다 구체적인 연계규정을 두고 추후 모색이 적절함’, ‘수리권 법제는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구축과 매우 밀접함’ · 시설·사업 등의 통합: ‘어떤 형태로든 수도사업의 통합이 필요’, ‘주민지원사업, 하천사업 등의 통합’, ‘하천시설, 댐, 4대강 보,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관리가 문제됨 → 물 관련 시설은 법적으로 규정 후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에 포함 검토’ · 9. 조직의 통합: ‘수계관리위원회(4대강수계법), 지역수자원관리위 원회(수자원법), 친수구역위원회(친수구역법)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와 통합 고려’, ‘수자원분쟁, 하천수분쟁, 환경분쟁 중 물 관련 등의 물분쟁 업무는 국가물관리위원회로 이관 검토’

자료: 해당 문헌을 토대로 저자 정리함

2. 물 관련 법령 정비 관련 문헌 조사

물 관련 법령 정비 선행연구(과제명: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환경부, 2019)에서는 물 관련 법령 정비의 주제별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 정비를 위한 총 6개의 주제를 선정·검토하였으며, 총 6개의 주제는 최상위법, 물의 분쟁, 물산업(물기술), 지하수, 조사 및 시설, 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4-2〉 주제별 법령 정비: 주요 주제 및 관련 법령

구 분	법령정비의 주요 주제	관련 법령
최상위법	환경정책 : 물관리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물의 분쟁	환경분쟁 : 물분쟁 : 수자원분쟁 : 하천수분쟁	환경분쟁조정법, 물관리기본법, 수자원법, 하천법 등
물산업(물기술)	환경산업(기술) : 물산업(기술) : 건설(기술) : 수자원산업(기술) : 친환경상품(기술)	환경기술산업법, 물산업진흥법, 수도법,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기상산업진흥법, 해외건설촉진법,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등
지하수	지하수보전구역, 온천공보호구역, 먹는샘물 등	지하수법, 온천법 등
조사 및 시설	수량관리 : 수질관리 (물관리조사, (관측)시설 등)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기상법, 수도법(담수화시설) 등
위원회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 4대상수계관리위원회 :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광역·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 중앙·지방저수지·댐안전위원회 등	물관리기본법, 4대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수자원법, 하천법, 소하천법, 저수지댐법 등

자료: 김익재 등(2019)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의 구조 및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량-수질 계획, 측정망이 분리되어 있으며, 계획과 위원회 등이 물관리기본법 상의 계획 및 위원회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법의 하천유역조사, 홍수피해·가뭄조사, 수문조사,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과 물환경보전법의 물환경종합정보망 구축, 수질 및 수생태 측정망 설치계획, 수질의 상시 측정은 유량-수질 측정망과 계획의 분리된 조향으로 볼 수 있다(김익재 등, 2019).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 상의 법정 계획의 공간적 대상범위가 유역, 하천 등으로 거의 유사하고, 계획의 항목이 수량과 수질-수생태로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공통점에서 수량과 수

질, 수량과 수생태, 수질과 수생태 등 상호 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분산적으로 수립되었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적사항이다. 또한 수자원법의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물관리위원회 기능과 일부 중복됨을 볼 수 있다(하천기본계획은 제외).

해당 연구에서는 2가지의 통합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통합하여, ‘(가칭)유역 물관리법’ 혹은 ‘(가칭)유역 물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수량-수질 통합관리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역 물관리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량-수질 통합법령 구축 시 수자원법의 이수기능은 타 법(수도법 등)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물환경보전법의 ‘산업폐수’는 하수도법에 이관하거나 ‘(가칭)산업폐수관리법’의 신설 또는 수질오염총량제도와 병합하여 ‘(가칭)오염원관리법’ 신설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다. 추가 검토사항으로 4대강수계법(‘오총제’, ‘수변구역’, ‘수계기금’)은 수량-수질 통합법으로 흡수 또는 타 법령(신설 및 개정)으로 정비하거나 4개의 수계법을 1개의 수계법(단일법, 환경부 2009)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표 4-3〉 물관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합 정비 방안(안)
물관리기본법(시행령)		· (중기적 정비) 법률의 목적, 이념, 기본원칙(통합물관리, 유역별 관리 등)을 법령 정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 (1안) 환경정책기본법에 수량 관련 기능 부여 · (2안) 각 상위법의 수량·수질 기능을 기본법 혹은 수량-수질 통합법으로 모두 이관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수계법 4개)	· (1안)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통합하여 (가칭)유역물관리법 또는 유역물환경보전법을 구축 → 유역기반의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법적 체제로 확고히 구축 · (2안) 수자원법은 수량(치수) 중심으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수질/수생태) 중심의 사무기능(조사, 보전관리 제도 등)으로 개별적 정비 추진(다만, 법정계획은 수량-물환경 통합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 · (추가검토사항) 다수의 전문가는 1안에 동의함, 수량-수질 법령 정비에 따라 수자원법의 이수 기능은 타법(수도법)으로 이관 검토, 물환경보전법의 ‘산업폐수’는 하수도법에 이관하거나 ‘(가칭)산업폐수관리법’ 신설을 검토, 수계법(오총제, 수변구역, 수계기금)은 통합법(1안)에 포함시키거나 1개의 단일법으로 정비(환경부 2009)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 지하수법은 지표수 연계와 지하수 수질보전 강화, 지속가능이용의 내용을 검토 보완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사전예방 중심으로 검토 보완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합 정비 방안(안)
댐건설법	수도법 물재이용법 먹는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건설법은 지방수도 활용성, 대체수자원 적용성, 기후취약성 등 정책적, 기술적 내용을 검토 반영(현재 환경부는 댐관리법으로 개정 검토 중) · 물이용 관련 법은 수요관리 및 지속성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 반영
하천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중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사무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로 통합 검토하고, 타법률의 환경부 소관 사무로 누락/변경 조항을 검토(예: 하천관리청)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수도법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도정비기본계획(국토부)은 전국수도종합계획으로 이관/폐지시키고, 광역·지방 상수도 연계 보완 측면으로 관련 내용 검토 반영

자료: 김익재 등(2019)

1안은 수자원 및 수량과 물환경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의 조항은 총 6장으로 구성하고 유역 물관리의 원칙, 수문 및 물환경 조사, 수량의 개발 및 보전과 물환경 보전 및 복원, 수질오염총량관리로 구상하였다. 유량-수질 측정망과 계획의 분리된 조항을 통합하고, 두 법에서 각각 수립되었던 수량계획과 수질계획의 내용은 국가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흡수를 전제로 하여 계획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제6장 수질오염총량관리 조항은 4대강수계법을 ‘단일수계법’으로 통합할 경우에 대한 사무를 작성한 것이다.

〈표 4-4〉 (가칭)유역물관리법/유역물환경보전법의 구성요소 (예시)

〈물환경보전법/수자원법〉		〈(가칭)유역물관리법/유역물환경보전법〉	
구 분		구 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제1장 총칙 · 수: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제2장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 · 수: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2장 유역 물관리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물관리를 지향하는 유역관리의 세부원칙과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수: 제3장 수자원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3장 공공수역의 수문 및 물환경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 물관리 조사의 범위 · 유량, 수질, 수생태 조사, 홍수, 가뭄, 수질사고 등 · 물조사와 정보화 체계 · 유역 물관리 여건 조사와 평가

〈물환경보전법/수자원법〉		〈(가칭)유역물관리법/유역물환경보전법〉	
구 분		구 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수: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4장 수량의 개발 및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의 개발 및 보전 관련 사무, 홍수에 관한 사무 · 지표-지하수 연계의 관리와 보전 ·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수: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5장 물환경의 보전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의 보전 및 복원 관련 사무, 비점 오염 관리, 불투수면적 · 생태유량, 수생태복원, 수변생태구역, 상수원 수질관리, 기타 수질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제6장 폐수처리업 · 수: 제6장 보칙 		제6장 수질오염 총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총량제 기본적 사무(4개 수계법 → 단일 수계법 경우) · 혹은 전반에(4개 수계법 → 통합법 경우) 대한 사항 · (제5장과 병합 가능)

자료: 김익재 등(2019)

2안은 각각의 법령을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먼저 수자원법은 기존 치수와 이수 중심에서 물환경과 연계한 치수 관리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이다. 다만, 수자원법과 수도법은 이수(예: 용수공급 및 수요관리 등) 기능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개별 정비 시 이수 기능을 수도법 중심으로 정비할 것인지, 수자원법 중심으로 정비할 것인지, 2개 법률 간의 연계 및 통합 정비방안이 추가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자원법 및 하천법 상의 수량관리와 연계한 물환경 개선관리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환경보전법의 생태유량 확보와 같은 제도는 개별 정비 시 수자원법과 하천법의 수량관리와 모두 연계 정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관리기본법 제9조(건전한 물순환, 생태계 및 인간활동 유지 등), 제10조(물환경의 기능과 가치, 수생태환경의 보전과 복원), 제11조(유역별 관리), 제12조(통합물관리)의 기본원칙이 개별 정비안에 반영되도록 하여, 균형 있고 조화로운 수량-수질(물환경) 통합관리 기반의 통합물관리가 구현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이 통합되지 않고 개별 정비가 추진된다면, 이 경우에도 수문조사기본계획과 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 하천유역수자원계획과 대권역물관리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량-수질/수생태 계획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통합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 및 의견수렴에서 다수의 물관리 전문가는 수량-수질 통합법령의 구축방안인 1안에 동의하였다. 다만, 통합법령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즉, 타 법령과의 관계 분석(4대강수계법, 하수도법, 기상법, 하천법

등), 통합의 세부 내용과 범위 설정, 이해관계자 영향분석, 소요 예산 추정 등에 대한 추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법령 통합 전이라도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 상의 관련 계획의 통합 정비(환경부 자체 통합 정비, 국가기본계획/유역종합계획과의 연계 수립 등)가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제2절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 검토

1.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운용 결과

가.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물관리기본법은 각 부처 소관 물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 총칙,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분쟁 조정,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총 6장, 4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물 분야 최상위 법률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목적(제1조), 기본원칙(제8조~제19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전 분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점과 국가물관리위원회(제20조~제22조)의 소속이 대통령이며, 정부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는 점, 그리고 물 관련 법령 개정은 물관리기본법에 맞추어야 한다는 조항(제7조)은 물관리기본법이 물 분야 최상위 법률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제27조~제31조)은 다른 물관리 관리계획의 근간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하천수, 댐용수, 홍수, 지하수 수위, 수질오염 등과 같이 복잡한 물분쟁을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에 근거(제32조~제34조)하여 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려는 배경을 알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물관리위원회 중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물분쟁, 복수 유역, 물관리협정 분쟁 등)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 여부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유역 물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한다. 민·관을 대표하여 총 2인의 공동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구성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남녀 성별이 고려된 위원 구성이 필요하므로, 물관리기본법은 민간과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의 물 관련 여건 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5〉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세부사항 위임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기본이념 - 물 이용자의 권리·의무 -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책무 - 타법과의 관계 	
제2장 기본원칙 (제8조~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물관리 기본원칙 · 물의 공공성, 물순환, 수생태 환경보전, 유역관리, 통합관리, 협력·연계, 물 배분, 수요관리, 사용 허가, 비용부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참여 등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설치 근거 - 위원 구성, 위원 임기 - 위원회 기능 - 회의 운영(정기·임시회) - 분과위 설치 근거 - 사무국 설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위 관할구역 구체화 - 공무원·공공기관 위원 구체화 - 국가위 물분쟁 기능 보완 - 회의 세부운영 사항 - 분과위 구성(4분과)·기능·운영 - 사무국 구성·기능·운영
제4장 물관리 계획 (제27조~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 유역계획 심의·조정 - 유역계획 적용 -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역 계획 수립내용 보완 - 국가·유역 계획 절차 - 관련 계획 명시(부합심의 대상) - 공청회 세부 절차
제5장 물분쟁 조정 (제32조~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절차(신청·관할·개시·통지) - 조정 전 합의 권고 - 자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절차, 신청보완, 조정종료 - 선정대표자, 대리인 - 조정안, 조정조서, 조정비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구 분	주요 내용	세부사항 위임 (시행령)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4조~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문화 육성, 관련 사업지원 - 국제협력, 남북한 협력 - 물관리 협정 - 조사연구·기술개발 지원 - 민간참여 활성화, 자료 정보화 - 업무 위임·위탁 - 물관리 관련 단체 설립 - 재정지원, 별칙 공무원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 협정 체결 세부 사항 - 업무 위탁기관 열거 - 물관리 관련 단체 설립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6.8.

나.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운용 결과

본 절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후 주요 조항별 운용 결과를 정리하였다. 주요 운영 결과는 물관리기본법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분석·정리하였으며, 물관리기본법 주요 조항의 시행에 관한 정부 사무의 성과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약 2년 6개월 동안 물 관련 타 법령의 개정과 물관리위원회 및 정부 부처의 사무 운용에 어떤 주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물 분야 최상위법률인 물관리기본법 시행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함에 큰 시사점이 있다. 또한 정책의사결정자와 입법 기관이 향후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도출함에 필요한 연구 분석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물관리기본법 관련 법령 개정

본 연구보고서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6월 12일 제정된 후 물관리기본법의 관련된 개정된 법령은 5개(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댐건설관리법, 정부조직법)로 파악된다. 5개의 법령 개정 중 정부조직법 개정은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물관리기본법 12개 기본원칙,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이 적용되었다. 이 5개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물관리기본법의 관점에서 추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2021.1.5.)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수량관리 사무를 환경부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제5호. 사)”이 추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개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내용과 연계를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수도법 개정(2021.1.5.)의 주요 내용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유역물관리종합

계획에 관한 것으로 “물관리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제4조의2 제3항)”을 하수도법에 추가한 것이다. 비록 물관리기본법 제28조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법적 수립 내용을 열거하며, 하수도 혹은 유역 하수도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이나 향후 물관리기본법 개정 시 (유역)하수도관리 관련 개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하수법과 댐건설관리법은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내용적으로 가장 많은 개정된 법령이다. 먼저 지하수법의 개정(2021.1.5.)은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원칙 중 건전한 물순환(물관리기본법 제9조), 통합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12조), 물의 배분(물관리기본법 제14조)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지하수법 제2조의2)이 대폭 추가되었다. 또한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6.15.)의 이유는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이 있지만 물관리일원화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 개편이 가장 핵심이며 이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취지와 부합된다. 이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건설장 기계획’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과 ‘댐관리기본계획’으로 각각 법률과 법정계획의 명칭이 대폭 변경된 것이다.

〈표 4-6〉 지하수법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지하수법 (2021.1.5. 개정, 2022.1.1. 시행)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와 결과

본 절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를 물관리위원회 운영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물관리기본법 제22조와 제24조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

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심의·의결 기능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포함하여 총 10개이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총 6개 수준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총 5회 개최되었고 심의·의결은 2회가 있었다³⁸⁾.

심의·의결의 안건은 보 해체·상시개방에 따른 물분쟁 조정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4회가 있었는데, 이 중 1회가 심의·의결 회의(안건: 보 운영 여건 마련)이었으며, 낙동강물관리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6회가 개최되었고, 2회가 심의·의결 회의(안건: 취양수장 시설개선,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이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4회였고 이 중 1회가 심의·의결 회의(안건: 보처리방안 의견문 제출)이었으며,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총 4회 회의 중 1회가 심의·의결 회의(안건: 보처리방안 의견문 제출)이었다.

지난 약 2년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 출범 후 역사적으로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내 물관리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책 안건, 즉 하천 시설물의 철거, 취양수장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에 같은 물관리 정책에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심의·의결 안건은 물관리기본법 상의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되도록 물관리기본법의 해당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사무국 업무 전반을 처리해야 한다(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나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조직은 환경부의 물관리위원회지원단이며, 사무국장에 해당되는 지원단장은 환경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물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사무국이나 지원단인가, 그리고 사무국장인가 지원단장인가의 여부, 그리고 물관리위원회 법적 기능의 개선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되는 법정 위원회는 6개(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위 6개 위원회는 소관 법률뿐만 아니라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도 운용하며, 100~600명 규모 이상의 공무원 인력 운영, 위원회의 많은 법적 기능과 행정처분력, 산하조직·기관의 운영 등과 같은 독립되고 법적 근거와 행정력을 가진 사무를 행하고 있다.

38) 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심의·의결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였다(2021.12.1. 기준).

그러나,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적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권한 혹은 법적 행정처분은 위 6개 위원회와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 개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의 법적 기능 설치 등을 추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물관리위원회의 운용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밀한 검토 과정과 결과를 통해, 최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고한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정비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지금처럼 유지·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8일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역사적으로 의결하였고, 현재 4개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다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권자인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각 유역물관리위원장의 정부 당연직이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환경부 장관이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권자는 유역물관리위원장(환경부 장관, 민간유역물관리위원장 각 1명)이므로 향후 국가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 수립권자, 수립 절차, 이행평가의 주체와 절차 등이 고려된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국가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이지만, 유역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은 유역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취지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물분쟁 조정에 관한 법적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후 2019년에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2020년에는 인천 정수장 갈따구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에는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에서 지역적 홍수와 침수가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 여름철에 기록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홍수 피해는 사회적 관심을 넘어 댐관리자, 하천관리자, 및 홍수피해자 간 물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물관리기본법에는 물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홍수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에 관한 구제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환경분쟁조정법 개정(2021.4.1.)의 결과로 귀결되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에는 홍수의 원인 분석이나 피해 규모

조사에 기반한 분쟁 조정 관련 법적 조항은 결여되어 있고,물관리위원회나 사무국(지원단)의 법적 기능·권한도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지난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관리기본법’ 의결안(2018.5.25.)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안 제33조 제5항은 “⑤ 제4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시되어 있어서 물관리기본법 법안에는 물관리위원회 물분쟁 조정의 법적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 문헌(제360회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록, 2018.5.28.)을 분석한 결과, “제33조 제5항은 물분쟁당사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분쟁 조정만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조정 조서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을 해당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함에 따라 해당 제33조 제5항은 삭제되었고, 같은 날(2018.5.28.)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위원회 물분쟁 조정의 재판상 효력없이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물관리기본법의 물분쟁 조정 효력과 눈여겨 비교해야 할 것은 하천법의 하천수 분쟁에 관한 것이다. 하천법 제7장은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1조(하천유지유량),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이 그 주요한 조항들이다. 물관리기본법과 하천법 간 분쟁 조정의 대상이나 절차 등의 관련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큰 격차는 하천법 제56조(하천수 분쟁 조정의 효력 등)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이해 당사자 간 합의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³⁹⁾.

심지어 하천법 제57조는 하천수 분쟁조정에 투입된 비용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위원장은 각각 국

39) 하천수(유수사용) 분쟁조정은 하천법 전문 개정(1999년 2월 8일) 시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무총리와 환경부 장관인 반면에, 수자원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며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이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을 둘 수 없는 심의 기구이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각 중앙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법령에 따라 사무국을 두어야 하는 정부가 운용하는 물 분야의 유일한 의결 기구이다. 이처럼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분쟁 조정의 효력은 지난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물분쟁에 관한 재판상 화해 혹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물관리기본법 제정 시 물관리위원회에 부여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 비용과 파급이 높은 물분쟁 해소의 한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물분쟁의 법적 정의에 관한 상세화, 법적 효력 등을 추가 검토하고 공론화 및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 제6장은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으로 물관리기본법을 준용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과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후 유일한 개정이 제6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제36조의2에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이 추가된 것이다. 물안보센터는 전세계 36개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UNESCO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ers; C2Cs)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와 유네스코 간 국제협약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다(김익재와 이재희 등, 2020). 국내에는 4개 센터(C2Cs)가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추가 3개 설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물 분야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에 물안보센터가 추가된 것은 국내 4개 센터는 법률에 기반되어 있는 점과 물관리기본법 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에 상응하는 센터의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함이다. 다만, 유네스코와의 협약은 국제협약이지만, 물관리기본법 제38조 ‘물관리 협정’은 국제기구·단체 및 타국 정부와의 협정 혹은 협약은 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제6장의 모든 조항(국제협력, 물문화 육성, 남북한 협력, 조사연구 등)에 대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와 사무국(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은 부재하여 향후 법제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 4-7〉물관리기본법의 물분쟁 관련 조항과 하천법의 하천수 분쟁 관련 조항

구 분	주요 내용
물관리기본법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안, 2018.5.25.)	제33조(조정외의 처리)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린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관리기본법 (현행)	제33조(조정외의 처리)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린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물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현행)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외의 효력 등)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6.8.

2. 물관리기본법 전반의 개정 검토

본 절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운용 결과 등에 기반하여 향후 물관리기본법 개정 시 개정되거나 검토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장별로 조항별로 분석·정리하였다. 제3장 ‘물관리위원회’ 관련 개정 사항은 별도의 절로 정리·제시하였으며,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서 발주한 타 연구에서 중점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검토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가. 제1장 총칙

통상적으로 법률의 제1조는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나 목적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물관리기본법 제1조 또한 ‘목적’으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취지, 정체성, 지향점을 가장 크게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1조의 내용 중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는 폭넓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목적의 포괄함에는 축약적 한계가 있고, 자칫 ‘재해 예방 등’에 치중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전반에 걸쳐서 ‘재해’에 관한 다수의 조항들(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이 있는데 그 의미와 내용 및 용어의 정합성이 부족한 것도 있으므로 재해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념 및 용어를 정리하여 제1조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제1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제3조)’, ‘가뭄·홍수 등의 재해(제4조)’,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제11조)’,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제12조)’,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제27조)’, 그리고 ‘재해’, ‘재해 예방’, ‘재해 경감’, ‘재해 줄이거나’의 조항 문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관리기본법 제3조는 단지 4개의 용어(물순환, 물관리, 수자원, 유역)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 물관리기본법에 있는 주요한 용어(물분쟁, 물재해, 물이용, 물환경, 수생태, 유역(물)관리, 사업자 등)를 추가하여 조항별 법적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물 관련 타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최대한 많이 물관리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해당 법률은 물관리기본법 제3조의 용어(정의)를 법적 인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제6조 ‘사업자’에 관한 의미가 다소 모호성이 있어서 제3조 ‘용어’에 추가하거나 사업자의 정의와 대상을 제6조에 명시하여 구체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타 부처에서 물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물관리위원회와 사무국(지원단)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 시행령이나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관리기본법 제2장은 12개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는 물순환 전주기와 직접적 요인들, 즉 산림, 투수면적, 용수이용과 재이용 등을 명시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10조 ‘수생태환경’은, 하천환경과 같은 타 법률의 용어가 인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건강한 수생태’, ‘수생태 보전’으로 개정하고 수질개선, 생태유량확보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수생태 복원을 유도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11조에 따라, 유역별 관리가 마치 현행 내용(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 가뭄·홍수 등의 재해예방)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있다. 제11조 개정은, ‘유역별’ 혹은 ‘유역 단위’와 같이 ‘공간’으로서의 물관리를 강조할 것인지,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균형있게 표현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제3조 ‘용어’에 유역 (물)관리를 추가한다면, 제11조는 현재처럼 ‘유역별 관리’의 의미가 두드러질 것이며, 유역의 상하류 협력, 공간적 하천관리와의 연계와 같은 개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12조 주요 내용에 따른 ‘통합 물관리’는 첫째, 상호균형(지표수-지하수 등 모든 형상의 물)의 물관리, 둘째,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물관리, 끝으로 자연환경과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물관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균형, 물순환 전주기, 자연·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물관리기본법의 ‘통합’에 해당하는 정의 혹은 기본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모호성이 크다. 하지만, 선행연구 및 문헌 등⁴⁰⁾을 통해 국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연구되어 통용되어 온 ‘통합(統合, integrated)’의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3조의 내용적 의미는 제11조의 핵심내용인 유역 차원에서 시행하는 물관리 정책을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역 간 협력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항 제목의 ‘협력’과 본문 내용의 ‘연대’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조항 제목의 ‘연계’에 대한 본문 내용은 부재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본문 내용의 ‘유역 전체’에 유역의 상하류와 같은 개념을 추가 정비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14조는 ‘물의 배분’은 하천수, 댐용수, 지하수

40) 김익재 외(2017),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Global Water Partnership (<https://www.gwp.org/en/gwp-SAS/ABOUT-GWP-SAS/WHY/About-IWRM/>)등

등 수리권 관련 개념과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고 이를 제16조 ‘물사용의 허가’와 균형있게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선행연구의 제안처럼 수리권은 물의 배분 및 허가뿐만 아니라 물관리 시설, 물이용, 수요관리, 요금, 물분쟁 등과 매우 밀접하고 사회적 여파가 있으면 별도의 법제화도 검토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급적 물관리기본법 자체 또는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 범부처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정책과 사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15조 ‘물수요관리 등’의 본문 내용 중 용수에 관한 개념을 모든 형태의 물이용(농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취수와 공급, 상수도, 물재이용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유역 차원에서 수요관리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문 중 홍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이, 수자원 부족은 물부족으로, 대체 수자원은 타 법률 용어(예: 수도법 제5조의 대체수원)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제17조 ‘비용부담’은 물의 사용과 물관리에 장애에 관한 것인데, 사용과 장애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화되어야 비용부담의 대상과 범위가 뚜렷해질 것으로 판단 된다. 예를 들어 물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과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의 수질오염 관련, 또는 하천법 제29조(공무원인자의 공사 시행)의 하천공사 비용부담 관련이 물관리기본 법 제17조와 정합되는지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18조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내용에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같은 개념을 추가하는 논의 가 필요하고 물순환 회복뿐만 아니라, 홍수·가뭄, 침수, 해수면 상승, 하구언 관리 등의 재해 예방, 수생태계 고유성과 다양성 보전 등과 같은 물 분야의 포괄적 기후변화 대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하천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이 추가되는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며, 12개 기본원칙 전반 걸쳐 용 어와 개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먼저 제4장의 제목에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추가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현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으로 명시한 배경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관 혹은 하위 기구로 인식함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물 관련 법정 계획의 정비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는 별도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의 중요성과 위상은 유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으로 자리 매김되기 때문에 현행 물관리기

본법 상의 2개 계획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제27조)의 계획기간은 타 분야 최상위 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과 같이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연장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었고, 물관리 기본원칙 제18조의 개정 방향처럼 탄소중립을 추가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국가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와 개선 방향은 각 부문별(물 재해, 농업용수, 상수원, 물관리시설 등)로 정보 공개하고 수정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28조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개정 방향은 본 보고서 제4장에 상세하게 제안하였다.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와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는 제27조와 유사하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개정하면서 제28조로 이관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제31조 ‘공청회의 개최’의 내용에 해당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의 주요 내용, 즉 국가·유역계획 수립 후 공지하는 곳은 기존 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의 홈페이지로 따로따로 혼용할 것이 아니라, 병기하는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시행령 제13조 2항과 제14조 2항의 주체를 계획수립권자로 할지, 계획 수립 심의·의결 기구인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관되게 개정할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라.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5조 ‘물문화 육성 등’은 문화를 다루고 있는 물 관련 법령은 물관리기본법의 이 조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생활과 산업계와 밀접한 영역은 상하수도(물이용), 농업용수, 하천 활용과 수질보전 등임에 반하여 조문의 내용은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관한 물문화 육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 물의 날, 대한민국 세계물주간과 같은 굵직한 행사는 국내 물문화적 측면도 있지만, 제36조의 국제협력과도 직간접 연관성이 깊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국제협력 부문(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협력 시책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은 그만큼 물 분야 국제협력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 제고의 고유성과 파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아직까지 물 분야 국제협력 시책 혹은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물관리기본법의 가장 큰 개정은, 본 보고서에서 서술하였듯이, 국제협력에 해당되는 제36조2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의 주요 내용으로 한반도 차원의 공유하천, 산림복구, 환경기초시설 등과 같은 구체적 협력 사항이 증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물관리기본법에서 다루는 협정은 국내 물관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타국 정부, 국제기구·단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은 제5장 물분쟁과 연계하여 물분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개정 검토사항일 것이다. 제41조 물관리 정보화는, 본 보고서 5장의 계획 정비안 실행방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승격시키는 개정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7조(공유하천)에 근거하여 제44조의 3호(북한의 수자원 조사·연구)에 공유하천 조사와 연구에 관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6장의 주요 법적 사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물관리위원회의 유일한 기능은 제42조(업무의 위임·위탁) 제1항의 환경부 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장이 국가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물관리위원회 역할의 관점에서 제6장의 각 조항을 선별하여 사무 주체로 물관리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논의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⁴¹⁾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5장(물분쟁 조정 등)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지만, 물분쟁을 현행 제32조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다툼’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타 법령(수자원법, 하천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의 물 관련 분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며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관련 기능은 다음 절에 소개한다.

41)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사무국으로 확대되거나 특히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위상과 직제로 개편된다면 제6장의 전체 조항에 관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물관리위원회 기능의 개선 검토

본 절에서는 현행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물관리위원회 기능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일반적이고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의 개선을 각각 검토·제시하였다.

가. 물관리 관련 법정 위원회의 현황과 기능

1) 물관리 관련 법정 위원회 현황

물관리 관련 법정 위원회는 각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진의 조사 결과, 물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4대강수계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자원법, 하천법, 환경분쟁조정법, 소하천정비법, 저수지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총 15개 법령하에 24개 위원회가 존재한다.

각 법령 별 24개 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중앙·지방환경정책위원회,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4대강수계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수자원법(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유역관리협의회), 하천법(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수조정협의회), 환경분쟁조정법(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하천정비법(광역·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저수지법(중앙·지방저수지법안전위원회), 국토기본법(국토정책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난안전법(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이다(〈표 4-8〉 참조).

〈표 4-8〉 물관리 관련 위원회 법적 근거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1.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2. 유역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
3.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4. 지방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5.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6. 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법 제24조, 낙동강수계법 제37조, 금강수계법 제35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35조
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법 제29조, 하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51조 등
8.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법 제32조, 하천법 제7조, 제10조 등
9. 하천유역관리협의회	수자원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10. 하천수조정협의회	하천법 제53조, 시행령 제62조, 제63조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제7조
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제7조
13.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시행령 제18조
14.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시행령 제18조
15.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법 제4조
16.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법 제5조
17.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제26조
1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제106조
19. 지방(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제113조
20.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제113조
2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2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법 제9조
23.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재난안전법 제10조
24. 지역위원회	재난안전법 제11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6.8.

2) 물관리 관련 법정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 특성에 따라 법률상의 기능은 크게 심의(審議), 의결(議決), 협의(協議), 자문(諮問), 검토(檢討), 조정(調整)/(調停), 재정(裁定), 중재(仲裁)로 구분되며,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4-9>와 같다. 심의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과정으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임에 반해, 의결은 해당 안건의 가부를 판단하는 법률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다.

〈표 4-9〉 위원회 특성에 따른 법률상 기능

법률상 기능	설명
심의(審議)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 /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되 의견수렴을 거치게 하는 취지
의결(議決)	각각의 안전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 형성 행위, 통상적으로 행정 처분력 또는 구속력이 있음
협의(協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함
자문(諮問)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검토(檢討)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조정(調整)/(調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자 중 어느 한 측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결되는 제도
재정(裁定)	심사관의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
중재(仲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자료: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검색일: 2021.3.22.

위원회별 기능을 살펴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제외한 모든물관리 관련 법정 위원회가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 중재, 재정의 역할을 하며, 하천유역관리협의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기능이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 협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심의·의결 기능을 동시에 가진 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법 제29조에는 심의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는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지방환경정책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능과 함께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계관리위원회’는 심의기능과 함께 협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도 다른 기능과 함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물관리 관련 위원회 기능 (법률상 기능)

위원회	심의	의결	자문	검토	협의	조정	중재	재정
1. 국가물관리위원회	○	○			○	○		
2. 유역물관리위원회	○	○			○	○		
3.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					
4. 지방환경정책위원회	○		○					
5.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					○		
6. 수계관리위원회	○				○	○		
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				○		
8.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					
9. 하천유역관리협의회								
10. 하천수조정협의회	○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
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
13.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							
14.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							
15.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							
16.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							
17. 국토정책위원회	○							
18. 기반시설위원회	○							
1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0. 지방(시·도)도시계획위원회	○		○					
21.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					
2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2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4.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		○		
25. 지역위원회	○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총괄분과위)의 의결은 훈령(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른 것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3.31.

각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등은 〈표 4-11〉과 같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수계별 유역범위의 지정,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간의 물이동, 물분쟁의 조정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계획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 유역 내의 물이동, 물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 4-11〉 각 법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유역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 구성: 20명 이상 50명 이내(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1인) -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을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관련, 물분쟁 조정,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i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ii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iii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사무국 업무(i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ii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iii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iv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v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항 존재 - 심의·의결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6. 물분쟁의 조정(i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ii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 구성: 30명 이상 50명 이내(위원장: 환경부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1인) - 심의·의결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 4.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중앙(지방)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200명 이내(위원장: 환경부장관/민간1인, 10명 이내 분과위원장), 약 6개 분과위원회(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 기능: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시·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30명 이내(위원장 1명: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기능: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수계관리위원회 (4대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제37조 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제6조, 제7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하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51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10명 이내) · 자문위원회(위원회의 협의·조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 28명 이내) · 실무위원회(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 위원장(유역환경청장) 포함 13명으로 구성) · 사무국(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사무국장: 유역환경청장)으로 구성 - 수계법에 따른 협의/조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종합계획 ·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5.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 6.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수계법(제4조의2, 제23조)에 따른 심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친환경정정사업계획(한강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하천법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구성: 50명 이내(위원장: 환경부차관, 부위원장: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개 분과위원회(총괄, 제1~제5분과위원회)로 구성 - 위원 제척·기피·회피, 해임 및 해촉 조항 존재 - 수자원법에 따른 기능(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수자원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하천법에 따른 기능(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의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지방하천 경계의 관리,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폐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 환경부장관의 하천유지유량 고시, 하천수 허가 수량을 조정,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하천법 제7조, 제10조, 제25조 등)	하천유역관리협의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하천법 지방하천관리위원회 - 구성: 3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시·도 3급 이상, 부위원장: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분과 위원회 가능, 시·도에 둔다 - 위원 제척·기피·회피, 해임 및 해촉 조항 존재 - 수자원법에 따른 기능(심의/자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하천법에 따른 기능(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의 지방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할 때,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폐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15명 이내(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관서에 둔다 - 목적: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 - 심의기능 없음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하천수조정협의회 (하천법 제53조,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20명 이내(위원장: 관할 홍수통제소장, 홍수통제소에 둔다) - 목적: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 - 심의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2.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중앙 30명 이내(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이내), 지방 20명 이내(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사무국(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 규명,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등) 가능 - 위원 결격사유, 제척 등 조항 존재 -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환경분쟁의 조정(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등) ·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분쟁의 재정 및 중재(중앙/지방)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중앙) ·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중앙) · 4. 직권조정 및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중앙) · 5.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중앙) · 6.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2~5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관할(지방) · 7. 조정 목적의 가액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지방)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광역(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시행령 18조)	중앙(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광역 20명(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내 / 기초 10명(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내 -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 목적: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u>심의</u> - <u>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기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2. 소하천 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청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u>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기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하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소하천 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13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중앙), 시·도지사 소속(시·도), 실무위원회 가능(중앙, 시·도) -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u>심의기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 4.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u>심의기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률에서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제26조)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42명 이내(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2인), 2개 분과(지역발전, 국토계획평가) - 심의기능: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 4. 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 (수자원) ·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업무(국토교통부에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지방(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시·도에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자문을 위해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사항의 심의 · 2.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3.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p>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p>	<p>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20명 이상 100명 이하(위원장: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 국장 또는 국장급, 부위원장: 위원장과 위원 중 호선) - 위원 제척·기피·회피, 지명철회 및 해촉 등 조항 존재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u>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u> 전문적으로 <u>심의</u>하기 위하여 <u>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u>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검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 4.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 6.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 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 8.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 9.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1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의 계속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간사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 담당 본부장 -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 · 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 4.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6. 집행계획의 심의 · 7.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 9.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④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시·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 시·군·구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해당 위원회들의 실제 논의된 주요 회의 안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2〉과 같다.⁴²⁾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 처리방안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주요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물관리 관련 법정 위원회 회의 안건 및 결과에 관한 세부 내용은 부록에 수록함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경제, 기후대기, 물·상하수도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의견 수렴 및 심의·자문을, ‘지방환경정책위원회’는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역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 대안, 기타 지역 추진사업·과제에 대한 심의·자문을, ‘중권역 환경관리위원회’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심의를,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용 교부율 현실화, 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주요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먼지 등의 피해 분쟁조정을, ‘광역·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광역·기초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를, ‘중앙 및 시·도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는 재해위험저수지·댐정비기본계획, 안전관리정책 등에 관한 심의를 주요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신설 하천의 지방하천 지정, 하천구역 변경, 폐천부지관리계획 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하천 유역관리협의회’는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방향, 유역 홍수량 산정 및 치수계획 검토 등을, ‘하천수조정협의회’는 갈수예보 추진에 관한 사항, 가뭄 대응 단계별 취수제한 기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 및 정책 중요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지방 및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시설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주요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해저감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전 조정, 집행계획,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지역위원회’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주요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물관리 관련 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

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
1. 국가물관리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 내용 등 심의·의결
2. 유역물관리위원회	-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 처리방안 등 심의·의결
3.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분과별(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경제, 기후대기, 물·상하수도 등) 해당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의견 수렴, 심의·자문
4. 지방환경정책위원회	-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역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 지역 추진사업·과제 자문·심의
5.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심의
6. 수계관리위원회	- 국유재산 매각 및 사용 허가, 일반수도사업자 정수처리비용 지원 기준,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용 교부율 현실화, 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심의
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심의
8.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신설 하천 지방하천 지정, 하천구역 변경, 폐천부지관리계획 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심의
9. 하천유역관리협의회	-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방향, 유역 홍수량 산정 및 치수계획 검토 등
10. 하천수조정협의회	- 갈수예보 추진에 관한 사항, 가뭄 대응 단계별 취수제한 기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소음·진동 피해 분쟁 조정
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소음·진동·먼지 등 피해 분쟁 조정
13.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 광역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
14.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 기초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
15.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 기본계획, 저수지·댐 안전관리 기술증진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정책 심의
16.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 기본계획, 저수지·댐 안전관리 기술증진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정책 심의
17.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 및 정책 중요 사항 심의
1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심의
19. 지방(시·도)도시계획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등 세부 심의·자문
20.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등 세부 심의·자문
2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재해위험 요인,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 심의

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
2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3.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전 조정, 집행계획, 국가핵심 기반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의
24. 지역위원회	-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자료: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및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중복성 검토

1)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정부의 중앙부처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란 특정사안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복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합의제 기구를 의미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위원회는 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산하에 보좌기관을 두는 경우가 많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의 신중성·창의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합의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 그리고 집행·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조직법 제2조에 있는 총 6개의 위원회는⁴³⁾ 사실상 행정부와 같은 법적 행정력이 가지고 있으므로 여타 행정위원회와는 구별된 법적 성격이 있다. 그러므로 법정 위원회가 행정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로 분류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위원회 기능으로서 강제력·집행기능·결정권한·처분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이다. 자문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협의의 자문위원회와 의결위원회로 세분된다. 협의의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위원회로 다시 순수 자문위원회와 심의조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순수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상정하는 사항에

43)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하여 자문·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나, 자문·의결의 결과로써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는 위원회이다. 심의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신중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 위원회이다. 다만 의결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한다. 이는 법령에 ‘심의·자문’, ‘심의·조정’, ‘평가’, ‘조정’ 등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결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로 일반적으로 법령에 ‘의결’, ‘결정’, ‘재결’, ‘심판’, ‘심사’, ‘분쟁조정’ 등으로 규정된다.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권한 사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그 의결의 결과로서 행정기관에 대해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기속력의 성격을 가진다.

〈표 4-13〉 행정기관위원회 성격별 구분

구 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현 황	42개	580개
개 념	- 행정기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5조)	-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의결위(기속)와 심의위(불기속)으로 구분
예 시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권 한	-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할 권한(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 -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정권한 행사	-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 표명 권한 없음(정부조직법 상 자문기관에 해당) - 행정권한을 행정기관 명의로 행사
설 치 요 건	-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사 무 기 구	- 설치 가능	- 설치 불가, 단,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는 설치 가능

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분류됨
 자료: 행정안전부(202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그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행정위원회 성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물관리 기본법 상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이 행정처분 권한이 부재하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그 대표적 예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근거한 행정위원회 성격이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각 부·처·청이 제정하는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심사분석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능, 특히 제3호의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과 제4호의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에 대한 심의·의결이 강제력이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조의 5호와 제27조의 제3항에 해당되는 부합성 심의에 관한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마도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에 대한 재판상 효력 기능을 확보한다면 정부 중앙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행정위원회로서 위상은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4〉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등 비교

구 분	국가물관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근거법령	물관리기본법 제22조(심의·의결)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심의·조정)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수계별 유역 범위 지정 - 유역 간 물 이동 - 관련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가 당사자인 물분쟁 - 복수 유역 물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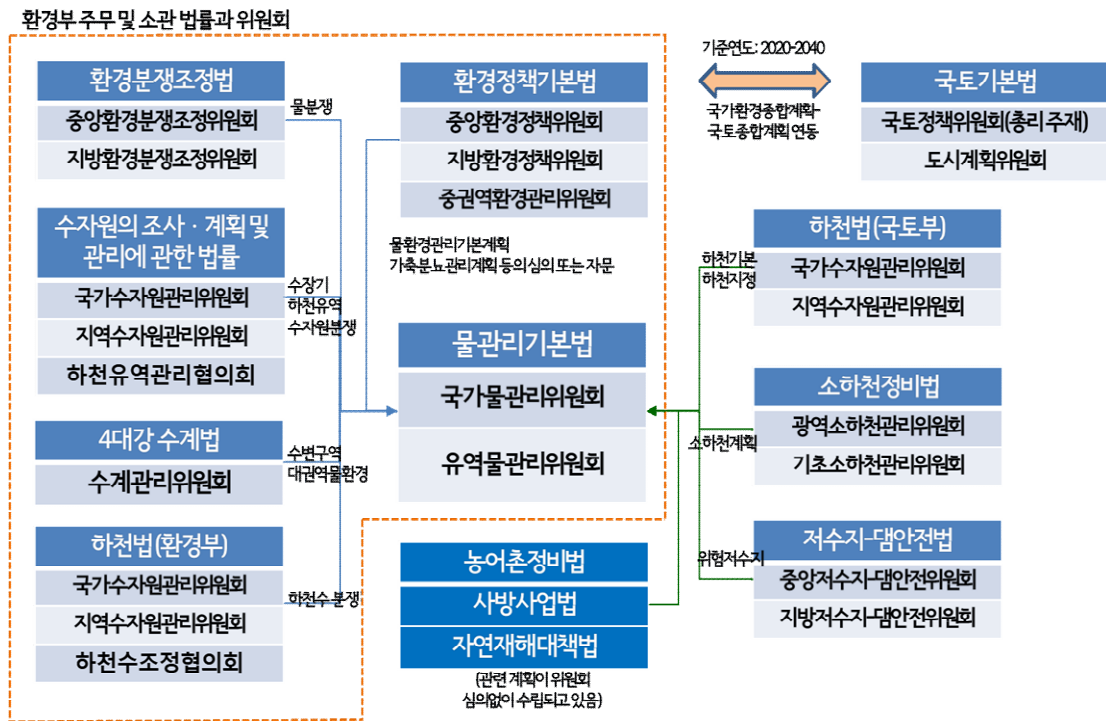
구 분	국가물관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분쟁 중 공익에 중대한 영향 있는 분쟁 - 물관리 협정 해석 분쟁 - 국가계획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 평가 - 국가물관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30명 이상 50명 이내 - (위원장) 국무총리, 교수·물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중 대통령 임명한 자 - (위원) 非공무원 과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7인(기재·행안·농림·산자·환경·국토·해수) · 국무조정실장 · 유역위원장(4) · 기상청장, 산림청장 · 공공기관장 4인(수공, 농공, 공단, 한수원) · 10년 이상 경력의 부교수·물 관련 단체/기관 종사·법조계 재직 · 사회적 신망, 물 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20명 이상 25명 이하 - (위원장) 국무총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 - (위원) 非공무원 과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4인(기재·행안·산자·중기) · 국무조정실장 · 공정거래위원장 · 법제처장 · 부교수이상·연구기관 · 변호사·공인회계사 · 사회·경제 관련 단체 임원 · 1급 이상 공무원 경력 · 규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 1/4 요구 - (의장) 위원장 - (구분) 정기/임시 회의 - (의결) 과반출석, 과반찬성 - (조직) 분과위,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 위원장 - (의장) 위원장 - (공개) 회의록 공개원칙 - (의결) 과반출석, 과반찬성 - (조직) 분과위
조사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조사위원 - 관계 행정기관에 설명 및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 이해관계인·참고인·공무원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현지조사

자료: 한국수자원공사(2019),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위한 제언

2) 물 관련 법정 위원회 간 중복성 검토

법정 위원회 간 기능의 경우 크게 분쟁조정, 유역 범위 및 국가·지방하천 지정, 유역 내 유역 간의 물이동 부문이 있다. 법정 위원회는 각각의 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과 절차도 제각각이고 부문별 물관리 및 계획을 개별 심의하고, 물관리 안전에 따라 협의 및 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2차례 받아야 하고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수자원관리

위원회 혹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1차례 심의를 받는다. 이처럼 일부 계획의 심의를 위한 법령 간 위원회의 절차가 다르고, 하천기본계획처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처럼 일부는 아예 위원회가 없이 수립되는 물관리 계획도 있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운영되는 현시점에서 타 법령의 기존 위원회 기능과 심의 제외 대상계획, 심의중복 계획, 무심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절차적 행정력 낭비 등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 관련 위원회들을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김익재 등(2019)

〈그림 4-1〉 위원회 간 기능 연계성 검토

하천법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지방하천 경계의 관리,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폐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관련 기능은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기능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자문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기능, 수계관리위원회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기능 등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 검토 대상계획과 중복됨에 따라 통합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천수조정협의회와 하천유역협의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하천수조정협의회는 하천허가수량,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유역관리협의회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과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분쟁 조정’ 등이 두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담고 있으므로 유역물관리위원회로의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 소하천관리위원회와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여, 위원 구성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사안별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홍수·가뭄에 대한 재해 평가 시에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정책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이해충돌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물관리 분야 계획 내용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아래에는 각 위원회 간 주요 기능을 상세히 비교 정리하면서 중복성을 검토하였다.

〈 물관리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비교 〉

물관리기본법 제32조(물분쟁의 조정)와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하천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와의 법령·관련 위원회 측면에서의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표 4-15>는 물관리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범위, 법적 기능, 법령 조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분쟁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수질오염,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자원법과 하천법에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각각 수자원의 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 후 수질오염, 지하수, 하천수, 홍수, 유역 간 물배분, 상·하류 간 물이용과 물환경 등 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의 분쟁 조정처리를 어느 법령의, 어느 위원회가 맡게 될지는 아직 기준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동일 유역 상·하류의 다른 시·도가 취수원 이전 혹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응책, 피해보상, 운영방안이 충돌할 때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조정하거나 심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방향이 설정(정비)되어야 한다. 즉, 물관리기본법의 물분쟁, 환경분쟁조정법의 수질오염과 지하수를 포함하는 환경피해 관련 분쟁, 수자원법의 수자원 분쟁, 하천법의 하천수 분쟁에 관한 범위 설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현재 환경피해라는 범위에 국한되어 있고, 수질오염, 지하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라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인 만큼 조정뿐만 아니라, 재정, 중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실제 조정 기능은 어느 한 측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재정,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 가능한 중재 기능이 물분쟁 조정에 꼭 필요한 법적 기능이라고 판단된다.

〈표 4-15〉 물관리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비교

구 분	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법/하천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분쟁의 범위	물분쟁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	환경분쟁
법적 기능	조정 (중재, 재정의 효력은 없음)	조정 (중재, 재정의 효력은 없음)	조정, 재정, 중재
법령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 물관리기본법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정의)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1.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경우)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비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검토를 위해 〈표 4-16〉과 같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대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포함하는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을 심의하고, 국가하천의 지정, 변경, 해제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총괄분과위원회

와 제1분과위원회~제5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괄분과위원회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하천수 사용의 조성, 하천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실제 수자원법에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기능을 심의만으로 두고 있으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는 심의·의결 기능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판단을 통해 법 혹은 운영세칙 변경이 필요하다. 제1분과위원회~제5분과위원회는 <표 4-17>과 같이 업무 관할 하천들을 분할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심의하고, 하천구역 결정, 변경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한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관련 기능은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으로 국한된 반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지방하천 경계의 관리,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폐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유역 범위 지정과 국가하천 경계 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나의 통일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계획 통합 방안을 연계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 하천수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과 중복이 발생한다. 물분쟁, 하천수 분쟁, 수자원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하나의 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6〉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비교

구 분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법적 기능	<p>-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p>-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수자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 하천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지정, 변경 및 해제 <p>- ② 총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6. 시도의 협의에 의해 관리청 및 관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사항 7.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8. 하천수 사용의 조정 9. 하천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p>- ③ 제1분과위원회부터 제5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폐지 3.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및 폐지 4.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종류 및 업무 관할

종 류	업무 관할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국가수자원 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제1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하류 유역(북한강 유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유역, 안성천 유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사이의 한강 서해권 유역
제2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상류 유역(북한강 유역을 포함한다), 양양 남대천 유역, 강릉 남대천 유역, 삼척 오십천 유역, 경북·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유역
제3분과위원회	삽교천 유역, 금강 유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유역
제4분과위원회	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 영산강 유역, 탐진강 유역, 섬진강 유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유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유역, 제주도권 유역
제5분과위원회	가화천 유역, 서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 회야강 유역, 태화강 유역, 형산강 유역, 영덕 오십천 유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유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유역

〈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 기능 비교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분과위원회~제5분과위원회는 관할 유역의 국가하천에 관한 심의를 맡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자체별 지정된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 사항들은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폐지, 홍수관리구역 지정, 변경 및 폐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유역 내 물관리의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들을 진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특히,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의 위계에서 국가·지방하천의 경우 유역계획과의 부합성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하천기본계획의 경우 최소한 부합성 심의대상에 추가가 필요하다.

〈표 4-18〉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비교

구 분	유역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적 기능	<p>-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p>-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2. 수자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 하천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지정, 변경 및 해제 <p>③ 제1분과위원회부터 제5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폐지 3.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및 폐지 4.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p>-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p> <p>- 수자원법에 따른 기능(심의/자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하천법에 따른 기능(심의사항) · 시·도지사의 지방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할 때,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폐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 비교 〉

물관리기본법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와 관련하여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당 수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계법과의 위원회 기능 측면에서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수계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권역마다 개별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각 수계별 특성을 반영함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일부 법령상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표 4-19〉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 기능

사 업	세부사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운영규정 제·개정	○	○	○	○
	운영세칙 제·개정	○	○	○	○
	위원회 개최	○	○	○	○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립	○	○	○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	○	○	○
기금운용관리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매5년)	○	○	○	○
	기금운용계획 수립	○	○	○	○
	기금결산	○	○	○	○
토지매수사업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	○	○	○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제·개정		○	○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	○	○	○
	(매수토지 사용허가)지자체 사용수익허가	○			
하천유지용수확보	하천유지용수확보 기본계획 수립		○	○	○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매 5년)	○			

자료: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2016), 「상·하류 공영을 위한 수계기금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강수계를 예로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의 기능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수계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의 위원회 기능을 비교해보았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수계위)는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한다. 한강수계위는 또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친환경청정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계위에서 기능을 가진 물 관련 계획들 중 유역위에서 부합성을 검토하는 계획은 없으며, 수계위에서 협의·조정 기능을 가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만 유역위가 아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부합성을 평가한다. 유역위는 법률상으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들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역 내 지표수 수질관리와 밀접한 수계법에 의한 계획들과 수계위에서 협의·조정하는 기능들에 대한 부합성 심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계위의 수질관리 관련 수립계획 및 법적 기능에 대해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부합할 수 있는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4-20〉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위원회(한강)의 비교

구 분	유역물관리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한강)
위 원 회 설 치	- 제20조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24조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 원 회 의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10명 이내) ·자문위원회(위원회의 협의·조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 28명 이내)

구 분	유역물관리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한강)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실무위원회(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 , 위원장(유역환경청장) 포함 13명으로 구성) · 사무국(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사무국장: 유역환경청장)으로 구성
위 원 회 기능	- 심의·의결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 4.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수계법에 따른 협의/조정 기능 · 1.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5.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한강 제외) · 6.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수계법에 따른 심의 기능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친환경정정사업계획(한강수계) - 수계법에 따른 협의 기능 ·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수계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가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수계별로 수계법에 의해 상수원 상류의 규제지역의 지원과 수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되었다.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수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오염총량관리 및 조사연구사업, 기금운영비 등으로 집행된다. 수계위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표 4-21〉 수계 기금의 운용과 관리

구 분	수계관리위원회(한강)
수립 (한강수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자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수계관리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은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기금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국가재정법 제 7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국가재정법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며 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회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종결정권자인 수계관리위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맡고 지자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이 맡고 사무국은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수계위는 연도별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심의와 더불어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 할 수 있음에 따라 기금 집행은 환경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수계관리기금 집행 과정은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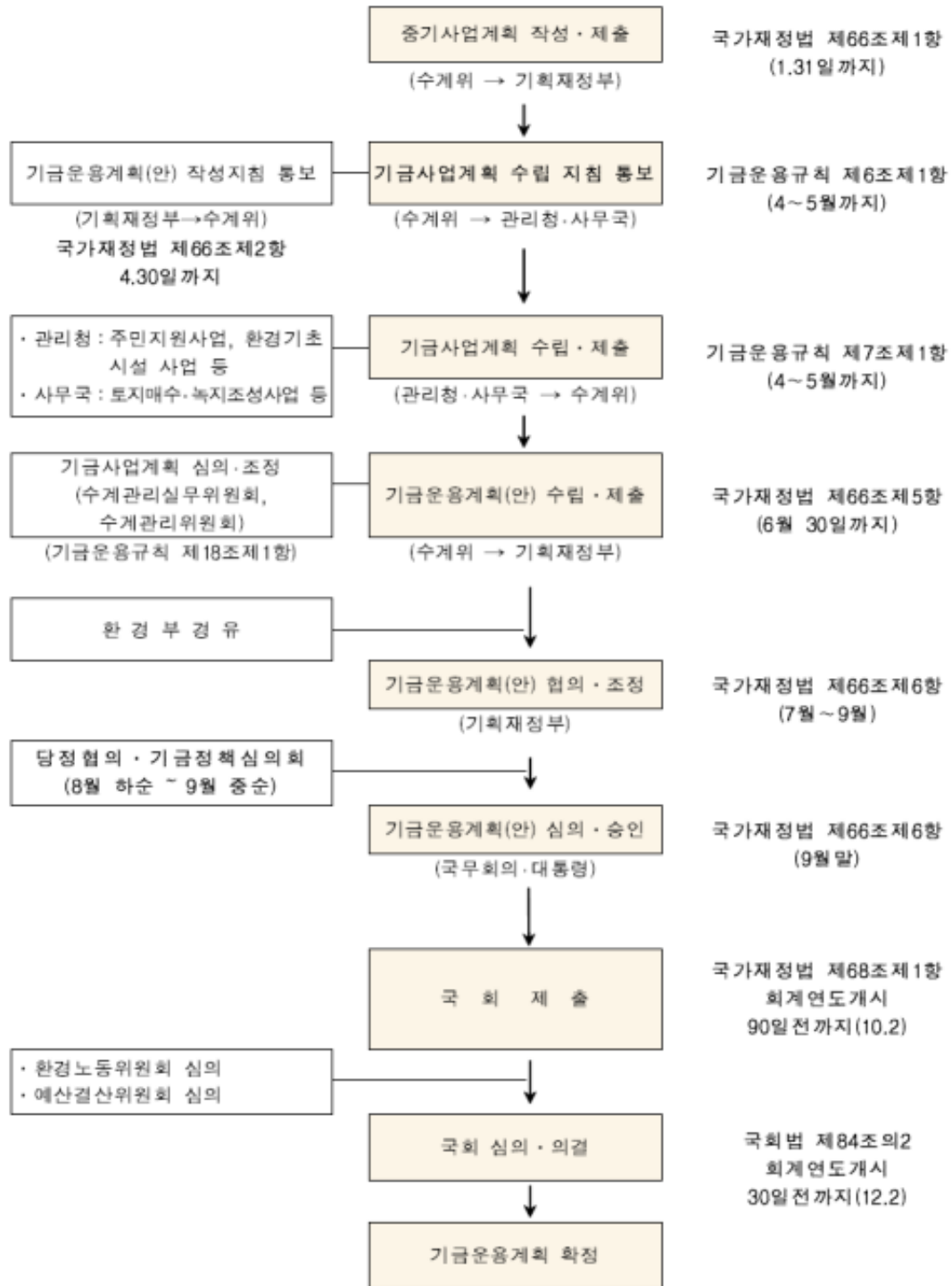
〈표 4-22〉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 관련 내용

구 분	국가재정법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⑧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의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 부산일보(2020.9.13.), “수계법’ 개정 통해 기금 운용에 시민 의견 반영해야”, 검색일: 2021.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심의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금강수계관리위원회(2019),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20~’24) 운용계획 수립」.

〈그림 4-2〉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절차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과거 수행된 연구들에서 재기한 쟁점 사항과 개선안들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다. 첫째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서 조정과 감시 기능 미흡에 따른 개선안이 필요하며, 둘째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셋째로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강화 등이 있다. 해당 사항들은 모두 환경부에서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 등 수계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전반이 환경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계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나아가 유역관리 차원의 수계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표 4-23〉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리의 주요 쟁점

보고서	쟁점 및 개선안 제시
한강수계기금 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 수립에서 조정과 감시 기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은 관리청과 사무국이 세우고, 위원장이 종합 및 조정하여 수계위를 거쳐 확정함에 따라 위원장의 역할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인 조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지자체들은 주민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환경부는 토지매수 사업의 확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 -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기금운용평가를 시행 중이나, 이는 사후 평가로 사전 평가를 위한 제도가 없음. · 사후 평가도 모든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매년 두세 개만 평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또한, 기금운용 조직으로 수계위와 사무국의 업무 및 회계 감사기구가 부재하여 중장기 부담금 운용계획 법정화,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가 부실함 - 관리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유역자원 관리 차원에서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실질적 수질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제고하는 등의 기본적인 운용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함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이 필요(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수계 재적위원 포함 2/3 이상 찬성의결)하며,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원 개선(사무국, 기금사업평가위원회 지자체 공무원 참여)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상·하류 공영을 위한 수계기금 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KEI,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관리위원회 의견 결정 및 피드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도 운영 시 특정 기한으로 부담금의 존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필요 - 자문위원회 운영 및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 전반과 관련하여 중대 의사결정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자문위원회의 정기적 실시 및 관련 전문가 보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고서	쟁점 및 개선안 제시
	<p>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기금 및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 평가 도입 · 수계기금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계기금의 운영에 지역주민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각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른 정비방안으로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간의 부합성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은 수계관리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은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의 제도적 여건에 영향을 줄 상위계획인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된 상황이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계별로 4대강 수계법에 의해 별도로 수립하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평가하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상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과 중장기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의결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성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24〉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20~’24) 운용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및 사업별 특징	- 금강수계관리기금의 개요 -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사업별 특징
재정운용 분석	- 수계기금 운용현황 - 수계기금 운용성과 -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 FGI 조사
기금운용 방향 및 목표	- 여건변화 및 전망 - 대내외 평가 결과 - 사업별 개선사항 - 기금운용의 목표 - 기금운용의 방향
기금운용 계획	- 수입전망 - 지출계획
기금운용 및 법·제도 개선	- 기금운용의 여건변화 - 기금운용 개선 방향 - 제도적 개선사항

자료: 금강수계관리위원회(2019),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20~’24) 운용계획 수립」,

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의 개선 검토

본 절에서는 앞서서 분석한 물관리위원회와 기타 물 관련 법정 위원회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현행 기능을 3가지 안(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으로 정리·제시하였다.⁴⁶⁾

(1) 1안: 소규모 개정

현행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심의·의결 기능은 총 9개가 있다. 1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로 ‘물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조정’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 물관리의 전반에 걸쳐 정책과 법·

46) 앞서서 서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능 개선의 방향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세부 실천방안과 밀접한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위상 정립, 물분쟁 효력 확보, 운영체계 개선 등은 현재 별도 연구(과제명: 물관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연구)에서 검토 중에 있다.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간, 혹은 유역 간 정책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이다.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심의 위원회로 그 첫 기능은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이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정책, 법, 제도, 계획, 집행에 관한 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1호를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조정으로 개정하면, 현행 제7호는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로 부분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3호의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에서, 유역 범위의 지정뿐만 아니라, 범위의 변경, 해제도 추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제4호의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물관리위원회 운용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댐과 저수지의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으로부터의 적정한 물 배분과 이를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으로 개정 검토를 제안한다.

(2) 2안: 중규모 개정

2안은 중규모 개정안으로 1안의 소규모 개정에 몇몇 기능을 추가한 안이다. 현행 제6호는 물분쟁 조정의 대상 위주로 입법되어 있고, 물분쟁의 용어 정의는, 앞서서 서술하였듯이, 제32조가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물분쟁 정의가 아닌 물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중대한 영향, 물관리 협정)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천법 제54조에 따라 하천수 분쟁의 조정 대상자는 댐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자, 기득하천 사용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물관리기본법의 용어(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도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⁴⁷⁾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이 관되는 정비 과정을 거치듯이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2안의 개선점은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41

47)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조가 의무화된다면, 범부처의 물관리 자료와 정보화를 아우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신설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3안: 대규모 개정

3안은 대규모 개정안으로 2안의 정립된 물분쟁 조정을 넘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물분쟁 조정의 결과가 환경분쟁조정법, 하천법과 같이 중재와 재정조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개정의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법에 있는 물 관련 분쟁 내용들을 물관리기본법으로의 이관 적정성이 검토되면 형평성 있는 절차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서 설명한 2안의 수자원법과 하천법의 분쟁 조정에 추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위원회에 재정기능을 부여하였고, 2008년에는 동 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직권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제1호나목의 지하수 관련 분쟁 규정 등에서 보듯,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물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도 조정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⁴⁸⁾

다만, 실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보면,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고 분쟁 건수도 상당히 많다. 물과 관련된 분쟁은 수질오염 혹은 지하수 수위와 관한 피해와 조정 사례가 드물게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물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은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물관리위원회에서,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쟁조정은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 있는 기반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의 중복을 막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개인이나 사인 간 물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의 전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분쟁의 이해당사자 혹은 피해자는 재판상 효력과 조사평가 기능이 없는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보다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 및 물 관련 분쟁 조정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생략)
 -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 2.~5. (생략)

그리고 물관리위원회가 재판상 효력 기능 확보하기 전에는 ‘조정’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간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다툼 등에 대해 권고 또는 조정하는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안한 물관리기본법안의 법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개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안의 물관리 조사와 정보화에 대한 사항에 추가하여 3안에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끝으로 물관리에 필요한 재정과 기금에 대한 기본 사항을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으로 확보하여 연도별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현재 기능과 연계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앞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선행적으로 진행하여 실태,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별법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물 관련 주요 법령들은 어김없이 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정보의 보급(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수자원 조사(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상시 측정 및 조사(물환경보전법 제9조), 지하수의 조사(지하수법 제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물환경보전법 제5조), 지하수 정보화(지하수법 제5조의2),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수도법 제7조의3) 등이 좋은 예이다. 이렇게 정책에 중대한 사무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정작 물관리기본법에서 의무 조항이 아닌 선택 조항으로 방치해두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물관리기본법에서 관련 조항을 의무화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그 기능을 둔다는 것은 기본법의 위상을 제고하고 법체계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 4-25〉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 검토안

구 분	현행	1안 (소규모)	2안 (중규모)	3안 (대규모)
법적 기능 (제22조)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부처 물관리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6. 물분쟁의 조정 7.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 물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유역 범위의 지정, 변경, 해제 5. 댐 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정한 물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6. 관계부처 물관리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7. 물분쟁의 조정 8.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1. 물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유역 범위의 지정, 변경, 해제 5. 댐 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정한 물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6. 관계부처 물관리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7. 물분쟁의 조정(수자원법, 하천법 정비) 8.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9. 물관리 조사와 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 물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유역 범위의 지정, 변경, 해제 5. 댐 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정한 물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6. 관계부처 물관리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7. 물분쟁의 조정 중재 재정(환경분쟁법 정비) 8.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9. 물관리 조사와 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물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11. 물관리 관련 재정 및 기금에 관한 사항 12.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자료: 저자 작성

라.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의 개선 검토

본 절에서는 현행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3가지 안(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으로 정리·제시하였다.

(1) 1안: 소규모 개정

물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현행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심의·의결 기능은 총 6개가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는 총 9개의 조항이 있고, 법률 기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3가지 차이점은 국가위원회는 유역의 범위를 지정한다는 점,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심의를 실시한다는 점, 끝으로 국가위원회는 국가계획의 이행상황과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유역위원회 법적 기능 개선을 위한 1안의 주요 내용은 제3호를 국가위원회 개선안처럼 적정 배분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위원회가 유역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듯이, 유역위원회는 국가·지방 하천의 지정·변경·해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처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를, 국가위원회 기능(제22조 1항 7호)처럼, 유역위원회 기능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2) 2안: 중규모 개정

유역위원회 2안은 1안의 소규모 개정에 환경부가 별도의 심의 기구없이 정하는 구역들(상수원보호, 비점오염관리, 수변)에 관한 것이다. 이들 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유역 내 상·하류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갈등유발이 빈번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심의, 조정 및 의결 기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자원법과 하천법 등의 물분쟁(수자원분쟁, 하천수 분쟁) 내용을 고려한 물관리기본법 제3조 용어 정비와 국가위원회 기능 개선 2안과 같이 물분쟁에 관한 기능 정비로 제안하였다.

(2) 3안: 대규모 개정

유역위원회 3안은 대규모 개정안으로 먼저 물분쟁의 조정, 중재, 재정과 같은 재판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하천 지정·변경·해제의 범위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포함시키는 제안이며, 하천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또한 2안의 3가지 구역 설정에 하천구역, 농업용수구역을 추가하고, 유역 내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세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끝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유역 물관리 기금과 관련 사항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였듯이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위원회와 유역위원회의 운용 실적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국가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대비하고 유역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물관리 현안과 갈등·분쟁에 관하여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원회는 상호보완적으로 매우 유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은 법률 개정에 해당하고 물 관련 법령의 정비와 계획 정비안의 후속 조치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기간에 신속히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기적 장기적 추진과 방향 조정과 참여 및 협치를 통해 종착점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 외에도 물관리위원회와 사무국(지원단)이 정책 조정이나 물분쟁 조사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 등과 같은 조사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조정법 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고⁴⁹⁾,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모든 사안을 위해 조사 권한을 의견 청취 권한과 함께 부여받고 있다.⁵⁰⁾ 또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와 ‘의결’로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다.

49) 환경분쟁조정법 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50)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표 4-26〉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 개선 검토안

구 분	현행	1안 (소규모)	2안 (중규모)	3안 (대규모)
법적 기능 (제24조)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유역 내 발생한 물분쟁 조정 5.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 관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 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3. <u>댐 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u> <u>정한 물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u> 4. 유역 내 발생한 물분쟁 조정 5. <u>유역 내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지정, 변</u> <u>경, 해제</u> 6. <u>유역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u> 7.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 관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 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3. <u>댐 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u> <u>정한 물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u> 4. <u>유역 내 발생한 물분쟁조정(수자원법 등)</u> 5. <u>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지정, 변경, 해제</u> 6.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7. <u>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관리지역,</u> <u>수변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u> 8.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 관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 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3. <u>댐 저수지 용수, 하천수, 상수원 등 적</u> <u>정한 물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u> 4. <u>유역 내 발생한 물분쟁 조정, 중재, 재정</u> 5. <u>소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지정 변경 해제</u> 6.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7. <u>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관리지역,</u> <u>수변구역, 하천구역, 농업용수구역</u> <u>의 지정, 변경, 해제</u> 8. <u>유역 내 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u> <u>에 관한 세부 사항</u> 9. <u>유역의 물관리 기금에 관한 사항</u> 10.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 관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 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부처별 주요 법령의 정비 방향

본 절에서는 앞서서 살펴본물관리기본법 전반과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개정 검토에 이어서 부처별 주요 물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였는데, 정비의 기본 방향은물관리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제안하였다.

1. 환경부

환경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물관리일원화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후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하였다(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의 타 조항에는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사무, 즉 수량, 홍수, 가뭄 등의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하천관리(시설물, 점용토지 등)가 환경부로 이관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추가 개정의 적기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수, 가뭄, 하천관리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물재이용법의 일부 조항도물관리기본법이나 기타 환경부 소관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만 근거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4-27〉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물관리기본원칙
제3조(정의)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정의)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u>하천, 호소, 유역의 물순환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이용(<u>상하수도</u>),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9조 (건전한 물순환) 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1조 (유역별관리)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u>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및 대응과 하천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u> 아. <u>지속가능한 상하수도의 보급 및 용수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u>	제12조 (통합 물관리) 제18조 (기후변화 대응)

현 행	개선안	물관리기본원칙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 폐수·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홍수 및 가뭄을 예방 및 대응하고 수질오염 저감 및 안정된 용수공급을 위하여 하천, 하천구역 및 호소의 시설, 상수 공급 시설 및 폐수·하수의 처리, 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12조 (통합 물관리) 제18조 (기후변화 대응)

〈표 4-28〉 물재이용법의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물관리기본원칙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u>물관리기본법 제15조의 물수요 관리 등 기본원칙과 제13조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제14조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u>	제15조 (물수요관리 등)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관할하는 총 262건의 법령 중에서 물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다수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약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법, 농어촌공사법 등이 그 대표적 예인데, 그 중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공사법이 농업용수 또는 농어촌용수 관련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는 농어촌용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의 수립을, 제15조는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과 농어촌용수 구역역을, 제15조의2는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 조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국가 소유의 농업용수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처럼,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물관리일원화 시행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따른 물 관련 법령의 개정은 최대 5건 수준이며, 2018년 6월 후 최근까지 농어촌정비법은 총 19회 개정이 있었으나,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과는 무관한 개정으로 파악된다. 즉 농림부가 지금까지 운용했던 농어촌용수 관리정책의 전환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공사법의 핵심 법률 조항이 ‘지속가능발전 관점’과 물관리기본원칙에 기반한 전향적 개정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공사법의 물관련 핵심 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표 4-29〉 농어촌정비법의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물관리기본원칙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u>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 및 재</u>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건전한 물순환), 제14조 (물의 배분), 제16조 (물사용의 허가등) 제18조(기후변화 대응)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구역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u>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및 물순환 보전</u>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u>지속가능하게 활용</u> 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현 행	개선안	물관리기본원칙
시행령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세울 때에는 <u>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u>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u>물관리위원회</u> ,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표 4-30〉 농어촌공사법의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물관리기본원칙
제10조(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물순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제9조 (건전한 물순환) 제12조 (통합 물관리) 제14조 (물의 배분)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용수를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보전해야 한다. 〈또는〉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지속가능하게 가능하게 관리하고 적정한 물 배분 등 물순환을 보전해야 한다.	

3. 향후 과제

물관리기본법을 제외하면 환경부의 유역 물관리 관련 가장 대표적 법령은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그리고 4대강 수계법이다. 특히 수자원법은 유역하천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법이며, 물환경보전법은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과 유역 기반과 지자체 협력 기반 수질오염총량계획의 근거법이다. 4대강 수계법은, 법령의 명칭도 유역물관리에 해당하며, 각 유역별 특성이 나름대로 반영되었고, 수질오염오량계획과 수계기금 운용 및 수변토지 매수의 근거가 된다.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의 법정 계획은 총 13개 종류가 있으나, 환경부 소관 계획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안에⁵¹⁾ 따르면, 최소 11개 종류의 계획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국가물순환관리계획, 물관리 조사와 정보화 계획 등으로 부분·전체 이관되거나 별도 계획으로 포함되어 해당 계획과 사무는 없어지거나 크게 분획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계획 정비안의 추진은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의 전체 구조와 법적 사무 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하천관리일원화에 따라 하천법 전체가 환경부 소관 법률이 되고, 계획 정비안 이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있는 수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관련 내용은 하천법 자체적으로 추가되고, 환경생태유량, 수변생태구역 등과 같은 법적 사무는 물환경보전법에서 하천법에 이관되고, (가칭)도시물순환법이 신규 제정된다면, 결론적으로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은 여건 변화에 따라 각각 또는 통합 전문 개정이 대두될 수 있다. 전문 개정 수준의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검토된다면, 물관리일원화의 본질적 취지인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의 법제화 이슈가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이 통합된 (가칭)수자원-물환경보전 통합법, (가칭)유역물관리법, (가칭)유역물환경보전법으로의 법제화 검토가 향후 과제로 볼 수 있다. 수량-수질 통합법제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슈는 4대강 수계법의 단일 법체계화와 (가칭)유역물관리법과의 전체 통합법제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1) 계획 정비안의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5장에 기술하였다.

수자원법의 구조(7장, 42개 조항)

수 자원 법

1. 총칙

- 목적, 정의, 책무(수자원분쟁 등)
- 수자원 관리의 원칙

2. 수자원 조사 등

- 하천유역조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 수문조사(수문조사기본계획)

3. 수자원계획 수립과 관리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4. 수자원관리의 효율화

-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
-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5. 수자원관리위원회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국가수자원관리위원 제척·기피·회피, 해임 및 해촉

6. 보칙, 7. 벌칙

물환경보전법의 구조(7장, 82개 조항)

물 환 경 보 전 법

1. 총칙

- 목적, 정의, 책무
- 물환경종합정보망 구축 ◦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2.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수질의 상시측정, 수질 및 수생태 측정망설치계획
- 환경생태유량, 수변생태구역, 상수원수질개선 하천관리와 직접 관련 사항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생태계 복원 계획

3. 점오염원의 관리

- 하수/가축분뇨처리는 하수도법/가축분뇨법을 준용함
-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를 포함하나, 사실상 산업폐수 조항임

4. 비점오염원의 관리

-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 비점오염관리지역 선정, 농약잔류허용기준
- 고령지 경작지

5.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골프장 농약 사용 제한
- 물놀이형 수경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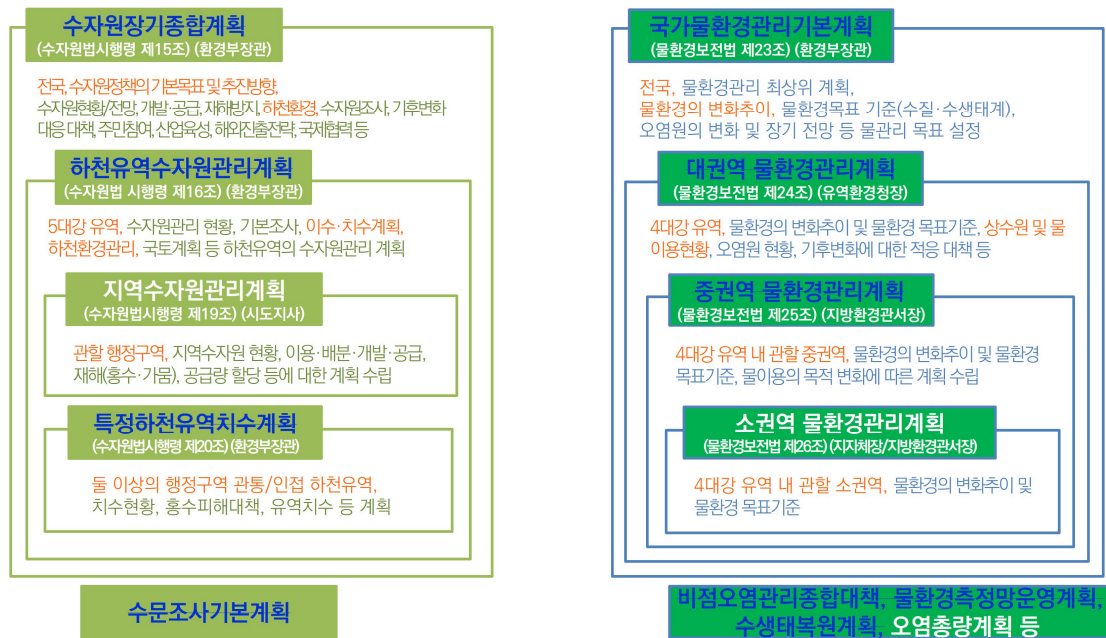
6. (산업)폐수처리업

- 산업폐수처리업의 등록

7. 보칙

출처: 김익재 외(2019)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그림 4-3〉 수자원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구조와 정비



출처: 김익재 외(2019)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설명: 수자원법(왼쪽), 물환경보전법(오른쪽)의 법정 계획과 정비 대상 계획(취소선)

〈그림 4-5〉 수자원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법정 계획과 정비안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그리고 4대강 수계법의 법령 정비와 유관하게 또는 무관하게 하천법이 환경부로 전체 이관됨에 따라 종횡적 하천관리의 연속성과 수생태 건강성 관련 법적 내용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관리일원화 후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계획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지만, 하천관리 일원화 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으로 남겨져 있던, 수생태계 복원과 보전, 하천 유지유량과 생태유량, 홍수관리구역과 수변구역 및 수변생태구역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천관리의 세부원칙, 물환경보전법 상의 하천관련 내용(환경생태유량, 수변생태구역), 하천계획의 수질 및 수생태 개선, 하천계획의 부합성 심의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법령 정비는 물관리기본법과 환경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농림부의 일부 법률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았다. 다만, 물재해, 위험저수지, 도시 침수 등 내외수 범람 통합관리, 수생태계 고유종 등에 관한 법령 정비,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을 위하여 유역 물관리만큼 중요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의 통합 하천 법령에 관한 정비가 향후 과제로 판단된다.

하천법

1. 총칙
 - 목적, 정의, 책무
 - 하천관리의 원칙, 권리/의무의 승계
2. 하천의 지정 등
 - 하천의 구분 및 지정, 하천관리청
 - 경계하천의 관리,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결정
 - 하천시설 등의 기준, 하천관리대장
3. 정보화 및 계획 수립
 - 하상변동조사, 하천관리 자료 정보화
 - 하천기본계획, 시설의 비상대처계획
 - 기타 계획/정보화 관련 전항 삭제됨(2017.1.7)
4. 하천공사 등의 시행
 -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공사의 대행
 - 하천공사 시행
5. 하천의 점용 등
 - 하천 점용허가,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 점용료 징수/감면하천공사 시행, 행위제한
 - 홍수조절 조치
6.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 자연친화적 공법, 보전지구 지정/관리
 - 하천 사용금지, 원상회복의무
7.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하천수 사용/배분 원칙,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유지유량, 하천수 사용/조정, 분쟁조정
8.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비용수익의 범위, 비용부담의 원칙, 비용보조
9. 감독, 10. 보칙, 11. 벌칙

수량-수질
통합법
(유역관리)



하천관리
일원화

하천법

1. 총칙
 - 목적, 정의, 책무
 - 물관리기본법에 기반한 하천관리의 세부 원칙
2. 하천의 지정 등
 - 하천의 구분 및 지정, 하천관리청
 - 경계하천의 관리,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결정
 - 하천시설 등의 기준, 하천관리대장
 - 홍수조절 조치
3. 하천관리의 계획 등
 - 하천 보전지구 지정/관리
 - 하천 수생태계 복원 및 보전
 - 환경생태유량, 수변생태구역(이상 물환경보전법에서 이관), 유지유량 등의 관리
 - 하천기본계획(하천공간계획: 치수, 이수, 수질, 수생태, 유지관리)
 - 하천정비계획(하천기본계획의 공사시행 계획)
 - 하천기본/정비계획의 부합성 평가 절차
4. 하천의 점용 등
 - 하천 점용허가,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 점용료 징수/감면하천공사 시행, 행위제한
 - 하천 사용금지, 원상회복의무
5. 하천수의 사용 등
 - 하천유지유량, 하천수 사용/조정
6.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비용수익의 범위, 비용부담의 원칙, 비용보조
7. 감독, 8. 보칙, 10. 벌칙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7〉 수량-수질 통합법 및 하천관리 일원화를 고려한 하천법 개정의 주요 방향

제5장

물 관련 계획 정비안의 세부 실행방안

- 제1절 계획 정비안의 주요 내용
- 제2절 계획 정비안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 제3절 시사점

제5장 물 관련 계획 정비안의 세부 실행방안



제1절 계획 정비안의 주요 내용

1. 계획 현황 및 정비 개요⁵²⁾

가. 계획 종류

현재 7개 부처에서 약 97종류(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물관리와 연관된 계획을 모두 포함)의 물 관련 계획이 수립 중이다. 환경부 소관 물 관련 계획은 17개 법률에 약 59종류로 파악되며, 환경부(본부·유역·지방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등 수립 주체가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개수(발간 책자 기준)는 1,600권⁵³⁾에 달한다.

나. 수립 주기·기간

대부분의 계획이 10년 단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며, 수립 기간은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의 경우는 20년 단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은 5년 단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대부분의 계획은 수립에 2년 내외로 소요되나, 하천유역수자원종합계획 등과 같이 내용이 방대한 경우 계획 수립에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다. 수립 절차

분야별 법정계획들의 수립·심의 절차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7.7)으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수자원 관련 계획을 심의하는 등 수립·심의 절차의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였다.

반면, 물환경 분야의 경우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은 수계위원회 심의, 나머지는 대부분 관계 기관 협의 후 환경부 장관 승인 등의 체계로 수자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일관된 체계가 부족하다. 끝으로

52) 본 절의 내용은 환경부 내부 자료(2021.3, 2021. 10)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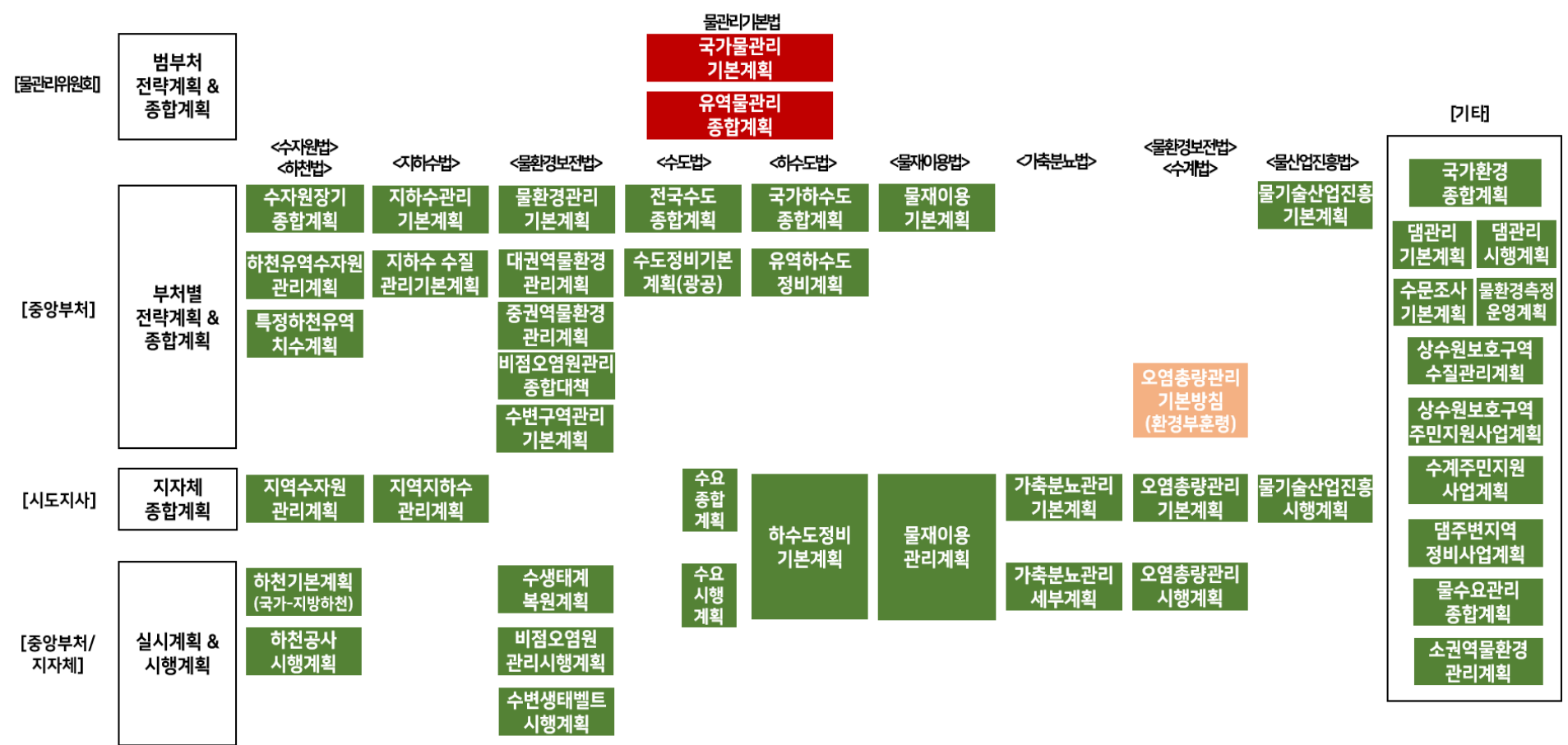
53) 본부 88권, 유역·지방청 54권, 광역지자체 136권, 기초지자체 약 1,310권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명시된 물 관련 법정 계획들을 수립·변경하려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계획 수립 예산

환경부는 물 관련 계획 수립에 연평균 125억원, 지자체 포함 시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과거 10년간 예산은 연평균 125억원 수준, 2020년의 경우 185억원⁵⁴⁾이 편성·집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자체 예산 포함 시 국가적인 소요 재원은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지자체별·계획별로 수립 비용이 상이하여 정확한 비용 추계는 어려우나, 계획 당 평균 2억원으로 단순 가정할 경우 해당 예산은 약 1,44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54) 수도정비기본계획 35억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39억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41억원, 유역하수도정비 계획 50억원, 유역물관리종합계획 20억원



자료: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환경부, 2021.3)를 참고하여 저자가 수정·작성
주: 계획의 구분은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임

〈그림 5-1〉 물 관련 법정 계획의 현황

제2절 계획 정비안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⁵⁵⁾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의 통합 정비

가. 정비내용 및 이행 방향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기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간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합계획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폐합한다. 또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의 각 계획 관련 전반의 내용을 삭제하고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에서 해당 계획을 제외한다.

〈표 5-1〉 국가물관리기본계획(통합)

현 행	개 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나. 계획 수립의 법적 내용

현행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적 정비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물관리의 탄소중립 고려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6호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방안’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대응방안’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적응 측면 이외에 기후위기 완화 측면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는 별도의 목차로 ‘물관리 탄소중립을 위한 사항’을 편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55) 환경부의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2021.10)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수정안(2021. 11)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의 검토(안)을 제시함

〈표 5-2〉 계획 수립의 법적 내용 비교

구 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법령	「수자원법」 제17조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물관리기본법」 제27조
계획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 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물환경관리 관련 경제·사회·기술변화 전망;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투자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세부 이행방안

법령의 용어(예, 수자원:수량, 하수도, 농업용수, 지하수 등) 개정에 관한 점진적 검토와 유역 단위 계획들의 통합 사례와 같이, 환경부와 타부처 상위 국가 부문 계획들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 정비하는 논의가 향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국가물관리기본계획(통합) 관련 법령 정비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법령 정비 (삭제 또는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법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등; 시행령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1조(공청회),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부칙 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 제23조의2(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29조의5(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등과 관련 부칙 조항 - 댐건설법 시행령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정비 조항	
현행	개정안
<p>수자원법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p>④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수자원법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공청회의 개최 6.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p>④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수자원법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p> <p>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p>	<p>수자원법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p> <p>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p>

<p>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수자원법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p> <p>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p> <p>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수자원법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p> <p>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p> <p>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수자원법 시행령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p> <p>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p>	<p>수자원법 시행령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p> <p>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수자원법 시행령 제21조(공청회)</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관련 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수자원법 시행령 제21조(공청회)</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관련 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1. 24.></p> <p>④③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수자원법 시행령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p>	<p>수자원법 시행령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p>

<p>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필요한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필요한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p> <p>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p> <p>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p>

<p>②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p> <p>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p> <p>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5(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p>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5(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p>

<p>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3.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p>②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삭제</p>	<p>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3.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p>②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p>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의 통합 정비

가. 정비내용 및 이행 방향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현행 유역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간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계획들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폐합한다.

〈표 5-4〉 유역물관리종합계획(통합)

현 행	개 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대·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나. 세부 실행방안 및 추가 고려사항

먼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에서 해당 3개의 계획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⁵⁶⁾ 그리고 이번 계획 정비안에 따라 하천기본계획(하천법)의 기반은 현행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에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정립됨이 적절할 것이다⁵⁷⁾. 이와 비슷하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 제5조, 제6조)의 바탕이 되므로 이를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또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기존 유역단위 4개 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번 법정계획 정비안의 가장 큰 변화로서 각종 유역 물관리와 직간접적 영향이 크며 신설되는 계획들과도 높은

56) 현행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에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57) 다만,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가하천종합계획(신설)’의 수립 범위와 세부 내용 등이 구체화되면 하천기본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의 각 계획 관련 전반의 내용(표5-5)을 물관리기본법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제28조)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부 내용은 계획 정비안의 큰 틀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존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의 유역단위(2~3차원 공간, 面)에서 혹은 유역별 발생하는 홍수량(유출 발생량, 저장·저감·배분량, 하천 말단의 홍수량 등)과 이의 이수안전도와 치수안전도는 통합되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 수립하되, 하천단위(1~2차원 공간, 点 또는 線) 혹은 하천구간별 갈수량, 하천환경자연도, 그리고 이의 이수·치수 내용은 향후 하천계획의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⁵⁸⁾ 그리고 대권역·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에서 수립되었던 내용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이관될 때, 수질오염물질(점, 비점, 기타수질오염원 등)의 발생 및 배출량에 관한 내용은 신설되는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에서 수립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정비안은 2022년 6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제1차 유역계획 수립에 수정 계획이 준비되는 기간까지(2026~2027년경) 신속한 추진되어야 하는데 유역관리와 상관이 높은 부문(환경계획, 국토계획, 사회기반시설계획, 가축분뇨 등)과의 연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정비안 추진에 따라 각 법령의 기타 계획들, 즉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계획들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비안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유역계획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두꺼운 문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해외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구적 기후변화와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유역관리의 정책적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으므로 무게감이 큰 유역계획으로의 전환과 실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보고서는 체계적 목록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서화 기법을 적용·작성한다면, 유역물관리계획 보고서의 유통과 기록 및 보관은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통합되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타 계획들 간의 정책적 일관성과 실행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뚜렷한 책임과 권한 부여, 참여의 확대와 투명성 제공과 확대, 물갈등 최소화와 같은 가시적 시너지 효과는 담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58) 관련 내용은 수자원법 시행령 제1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후 고시 대상이지만,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가하천종합계획(신설)’의 수립 범위와 세부 내용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하천의 홍수량과 이수·치수에 관한 일부 내용은 국가하천종합계획에서 수립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역관리 관련 용어의 정의, 계획내용의 상세한 범위와 의미 등의 정비내용을 물관리 기본법 개정에 모두 담기보다는 별도 규정(훈령, 지침, 용어설명집 등)을 신설과 보완하여 통합물관리의 보편적이고 선택적 편익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정비안에 대한 기초자료와 실행방안은 <표 5-6>, <표5-7>에 상세히 정리하였다.

끝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있어서 환경부의 관련 기타 계획들(상수원, 지하수, 수변구역, 비점오염, 하천, 가축분뇨, 수(변)생태계 등)과 타 부처의 관련 계획들(농업용수, 수력용수, 우수유출저감, 위험저수지, 사방댐, 내수면어업 등)이 어느 범위 또는 어느 수준까지 확대 통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물재이용, 물수요 등의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도 이 과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 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도시계획/도로, 치수계획, 농업비점 등)이 필요한 부문(지하수, 비점오염, 농업용수, 침수, 수(변)생태계 등)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시행 및 이행 평가에 따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포함 여부도 중장기적 검토가 요구된다.⁵⁹⁾

59)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표 5-5〉 하천유역수자원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하천유역수자원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⁶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법적 기능 (제22조)	<p>〈수자원법 제18조〉</p> <p>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1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p>〈시행규칙 제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 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지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p>〈물환경보전법 제2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시행령 제32조의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p>〈하수도법 제4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60)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은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5-6〉 유역물관리종합계획(통합) 관련 법령 정비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법령 정비 (삭제 또는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수자원법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시행령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21조(공청회),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부칙 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관련 부칙 조항 -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정비 조항	
현행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p>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국가하천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p>
수자원법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수자원법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p>수자원법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③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수자원법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p>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p> <p>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p> <p>④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수자원법 시행령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p> <p>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수자원법 시행령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p> <p>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수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p>※ 수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내용은 명시적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내용(수자원법 제18조 7항과 수자원법 시행령 제16조 2항)은 아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일부 내용(갈수량, 하천환경자연도 등)은 하천법 등 타 법으로 조정·정비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p>
<p>물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p> <p>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p>	<p>물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p> <p>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신설되는 국가오염원관리계획으로 이관)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신설되는 국가오염원관리계획으로 이관)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물환경보전법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p>	<p>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p>

<p>정비계획을 수립한다.</p> <p>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정비계획을 수립한다.</p> <p>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	---

본 연구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법적 내용의 개정안을 단기와 중장기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안은 계획 정비에 따라 권역별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이 통합됨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구성한 것이다. 중장기안은 단순 통합에 더하여,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에 대해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사항과 물순환, 기후변화, 물문화, 물산업 등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 제원칙에 따라 유역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관한 각 용어의 정의, 계획내용의 상세한 범위와 의미 등도 해당 법령에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별도 규정(훈령, 지침, 용어설명집 등) 마련이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내용 (단기안과 중장기안)

구 분	유역물관리종합계획(현행)	유역물관리종합계획(단기안)	유역물관리종합계획(중장기안)
계획의 내용	<p>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의 물 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의 수자원, 물환경, 상수원, 물이용 등의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에 관한 사항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수질오염 보전 및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하수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포함) 통합 운영·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등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현황 및 대응 방안 7.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8.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9.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의 수자원, 물환경, 상수원, 물이용 등의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 증진을 위한 관리 방안(지표수, 지하수, 수질오염, 물재이용, 투수면적, 강우유출수 등) 3. 유역의 물 관련 재해관리를 위한 방안(하천법률, 도선침수, 가뭄, 수질사고, 지하수 수위, 사방댐의 설치 등) 4. 유역의 이수관리에 관한 방안(수량배분, 상수원, 하천, 호소 및 지하수의 취수와 공급, 수력용수 등) 5. 유역 및 농어촌용수구역 내에서의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방안 6. 유역의 수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방안(환경생태유량 및 유지유량의 산정과 확보, 수생태계 연속성 등) 7. 유역의 수질 보전에 관한 방안(하수 및 분뇨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등) 8. 유역의 적절한 수질의 대체 수량 및 재이용 증진과 관리에 관한 방안(빗물, 유출지하수, 공공하수처리수 등) 9.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이용 및 물환경을 위한 물수요 관리에 관한 방안 10. 유역 물관리 비용 관리 계획의 수립 11. 유역의 물관리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자산 관리에 관한 방안 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에 관한 방안 13. 유역 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에 관한 방안 14.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방안 15. 환경계획, 국토계획, 사회기반시설계획, 가족분노 등 각종 물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유역 물관리 실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의 통합 정비

가. 정비내용 및 이행 방향

물관리일원화로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국토부 수립)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1개 수도계획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2개 수도계획(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한다.

〈표 5-8〉 국가수도기본계획(통합)

현 행	개 선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	국가수도기본계획

〈표 5-9〉 국가수도기본계획 개정(안)

현 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용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립 * 물관리일원화 이전에는 국토부장관이 수립 -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국수도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이 2개 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 수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수도정비기본계획 (제4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지자체별 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전국수도종합계획 (제5조) (환경부장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국가수도기본계획 (안 제4조) (환경부장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 전국수도종합계획 확대 개편, 광역·공업용 수도정비기본계획 통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수도정비계획 (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div>

나. 추가 현황 및 세부 실행방안

최신 수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은 각각 진행(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2019.10~2020.12.), 광역·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2019.8~2021.9))되었다. 동시에 수도계획 단일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11.19.)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2021.2.17.) 후 2021년 12월 9일에 다른 내용의 발의안과 함께 구성된 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통합이 이루어졌다.

〈표 5-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9. 가결)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도정비계획 ----- -----.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 계 획 ----- ----- -----.

<p>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p> <p>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생략)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 14. (생략) <p>⑧ 삭제</p> <p>⑨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수도정비계획-----고시하고 그-----.</p> <p>⑥-----</p> <p>-----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도정비계획-----.</p> <p>⑦-----수도정비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대체수원의 확보----- 4. ~ 8. (현행과 같음)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11. -----수질 및 서비스 개선----- 12. ~ 14. (현행과 같음) <p>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수도정비계획-----수도정비계획-----의-----.</p> <p>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수도기본계획-----“기본계획”-----.</p> <p>②기본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수도정책의 -----기본방향 4. -----관리계획 5. -----관리계획
--	--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 관리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 관리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 관리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9. -----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10. ~ 15. (생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6. ----- 수질 및 서비스 개선 -----
17. ~ 19. (생략)	17. ~ 19. (현행과 같음)
〈신설〉	20. 제1호에서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계획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 ----- ----- 기본계획 -----.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 시·도지사-----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 ----- ----- 수도정비계획 -----.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⑦ ----- 기본계획 ----- 기본계획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생략)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 ----- -----.

4. 국가하천종합계획의 신설

가. 정비내용 및 이행 방향

환경부 개선(안)에 따르면 하천관리 일원화('22.1)로 하천·수생태 계획 통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천수자원관리계획을 신설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생태보전 및 복원 내용을 통합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수정안에서는 하천수자원관리계획과 수질·수생태계개선계획⁶¹⁾을 국가하천종합계획으로 통합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표 5-11〉 국가하천종합계획(신설)

현 행	개 선
하천종합계획(법정無), 수생태계복원계획(하천)	국가하천종합계획
수질계획(법정無), 수생태계복원계획(총괄, 호소, 하구)	
하천기본계획(수생태 미포함)	

나. 세부 실행방안 및 추가 고려사항

먼저 국가하천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내용적 범위로는 현행 범위인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서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과 복원” 관련 내용적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적 범위로는 하천뿐만 아니라 호소와 하구가 포함되므로 하천법에 하천, 호소, 하구에 관한 용어 정립⁶²⁾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국가하천종합계획에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과 복원의 신설은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⁶³⁾ 국가하천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에 정수형(저수지, 하구연 등) 수생태계 보전 관련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하천계획에서 최적 반영되도록 수립되는 것이

61) 수질·수생태(총괄, 호소·하구) 분야의 계획(공공수역 수질목표, 녹조 및 수질오염사고 관리, 수생태계 평가 및 복원 우선순위 등)

62) 하천법 제2조(정의)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63)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근거 법령과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국토교통부)는 관련 연구용역(과제명: 하천기본계획 체계 개선 방안, 2020.1.~2021.12.)을 통하여 하천계획 정비를 위한 하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2023년 목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하천기본계획’을 ‘하천기본계획(중권역 117개, 국가/지방하천을 모두 국가가 일괄 수립)’과 ‘하천정비계획(하천관리청이 실시)’으로 구분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수정(안)의 국가하천종합계획 신설은 정부(국토부 등)가 개정하려는 (신규)하천기본계획과도 내용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하천법 상의 하천(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법 상의 소하천까지 포함되므로 종적 하천 연속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하천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는 기본적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기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4개의 계획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국가 차원에서 단일 계획의 국가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하천 정책의 일관성은 담보될 수 있고 명확한 지침의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각양각색의 유역과 하천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여건에 따라 국가하천종합계획이 단일 계획으로 수립된다면 보다 충분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의견수렴과 공론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유역별 국가하천종합계획 수립은 하천관리의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역종합계획과의 촘촘한 일관성, 체계성, 그리고 연계성을 확보한다면 기대치 못한 시너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계획의 명칭에 ‘국가하천’이라는 용어의 혼선이 단일 계획보다 클 수 있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충분하지 못한 연계는 비효율성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기능과 계획의 이행평가와 성과 분석, 그리고 홍보 및 설명자료 배포와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신설되는 하천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향후 호소 및 하구(역), 수변(구역), 그리고 필요 시 하구의 연안 인근까지 국가하천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연계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온전한 종합적 하천계획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국가하천종합계획 신설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 대상이 되도록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하천기본계획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표 5-12〉 국가하천종합계획 관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하천법 제00조에 따른 국가하천종합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p>	<p>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p> <p>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p> <p>⑤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5.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의 신설

가. 주요 정비내용

물관리기본법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로 건전한 물순환이 규정됨에 따라 물순환의 개념과 목표·지표·상태진단·정책 우선순위 도출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법정계획이 필요해 기존의 물수요·물재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물순환관리계획을 신설한다.

〈표 5-13〉 국가물순환관리계획(신설)

현 행	개 선
물재이용기본계획, 물수요관리·물순환계획(법정無)	국가물순환관리계획

나. 관련 추진 경과

수질과 수생태계, 수자원, 하수관리, 조경·경관, 도시계획, 재난 안전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64명으로 구성된 도시 물순환 포럼(2018.9.4.)에서는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며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시도별, 유역별 물순환 목표(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를 설정하고, 지자체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물순환 목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린 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 포럼(2020.7.30.)에서는 도시 물순환 전략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도시 물순환 법 제정의 필요성, 도시 물순환 정책의 기반으로서 물순환지표의 개발 및 적용방향 등에 대해 발표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2020.12.14.)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의 역할, 물순환지표 개발, 분산되어 있는 물순환 법령의 통합 필요성, 구역지정을 통한 관리, 물순환 인증제, 도시물순환위원회 및 지원기관 설치, 물순환 특별회계 등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 세부 실행방안

환경부는 2018년부터 ‘도시 물순환 포럼’을 구성하여 물순환 관련 구체적 정책 및 제도의 신설 추진을 위하여 “(가칭)도시물순환법”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물순환

관리 법률 정비 및 행정체계 개편(2021년~)과 도시형(환경부), 산림형(산림청), 농촌형(농림부)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 및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물순환목표제, 투수면적율 등의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칭)도시물순환법 제정 시 신설되는 계획의 명칭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관리기본법)”과의 차별성을 위해 “전국 물순환” 또는 “도시 물순환” 관리계획으로 명명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물순환관리계획에 필요한 상하수도, 투수면적관리, 빗물, (저장)강우유출수, 도심(유출)지하수, 내외수(침수-범람) 통합관리, 비점오염관리, 저영향기법, 물재이용, 물수요관리 등과 체계적이고 연계적 계획(중앙부처 및 지자체)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한편, 물재이용기본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핵심 계획이므로 계획의 이관(폐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의 핵심기능 상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계획정비 안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물재이용관리계획은 신설되는 국가물순환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되도록 법률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으로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지자체 물순환계획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 물재이용법은 존속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도시물순환법이 별도로 제정된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행 방안은 향후 도시물순환법의 제정여부와 제정 시 물재이용법 등 관련 법령과의 작구 체계, 내용 정비, 관계 설정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상당 부분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표 5-14〉 국가물순환관리계획 관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물재이용법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p>	<p>물재이용법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p>

<p>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⑥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⑦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물재이용법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후략〉</p>	<p>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⑥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⑦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물재이용법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물순환법 제0조에 따른 국가물순환관리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기준과 같음〉</p>
---	--

〈표 5-15〉 국가물순환관리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안)

물 재이용 기본계획	국가물순환관리계획(안)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국가 물순환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국가 물순환 부문별(투수면적, 물재이용, 물순환율, 수요관리)등의 현황과 전망 3. 유역별 물순환 목표 및 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투수면적, 물수요 및 물재이용 등의 관리 방안 5. 물순환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6. 물순환관리시설 구축 및 관리방안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워터저널(2021.3.5.)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6.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신설

가. 주요 정비내용

현행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을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한다.

나. 세부 실행방안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물환경보전법의 제1장(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3장(점오염원, 산업폐수 포함), 제4장(비점오염원), 제5장(기타 수질오염원), 그리고 가축분뇨법의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세부계획)에 해당된다.

이번 계획 정비안(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이관, 대권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이관)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오염원관리종합대책은 물환경보전법 제2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내용적 범위는 단기적으로는 점오염원(산업폐수 포함), 비점오염, 기타 수질오염원(특정수질유해물질,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등), 양분관리(가축분뇨) 관련 내용을 총망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질오염총량계획과 가축분뇨의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된다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오염원 관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 내용적 중첩이 상당 부분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행 오염원 관련 모든 법정 계획들은(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대권역/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축하는 전국오염원조사에 기반되어 같은 데이터가 서로 다른 계획 수립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이 제시한 수질오염원 개선 대책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질오염원 개선 대책과도 중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예는, 만약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이 계획 수립의 내용으로 수질오염의 발생, 배출과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범위까지 설정된다면, 환경부가 운용 중인 수질오염총량의 오염원 관리 및 삭감계획과 중첩이 예상된다. 이는 수질오염총량계획 상의 관리목표 지점만 다르고 기타 수질오염 관리에 관한 전반 내용은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과 유사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수질개선 방안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계획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신설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점오염원 저감의 대부분 정책 수단이 반영되어 있는 하수도 관련 계획들(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수립 주체에 관련 부처를 추가 확대(예: 현행 6개 기관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하고, 상대적으로 정책 수단이 부족했었던 기타 수질오염원(산업폐수 등)에 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의 명시 등으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환경보전법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위상으로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을 신설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6〉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관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p>	<p>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과 전망</p>

<p>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p> <p>3.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p> <p>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p> <p>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2. 수질오염원 저감 및 관리의 목표와 정책 방향</p> <p>3.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 대책과 예산의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p> <p>4.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방안</p> <p>5. 수질개선 관련 타 계획과의 연계 방안</p> <p>6. 수질오염원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p> <p>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5(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5(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7. 물관리 (통합)조사계획의 신설

가. 개선 방향

현재 환경부가 주관하는 물관리 조사 정보 부문은 유역조사, 수문조사의 경우 「수자원법」, 물환경조사, 수생태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지하수조사는 「지하수법」, 하상변동조사는 「하천법」에 조사와 정보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관련하여 법정계획 수립 여부는 수문조사의 경우 10년 단위로 수립되어있으며, 물환경조사의 경우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만 해마다 수립되고 있다.

〈표 5-17〉 현행 물관리 관련 조사·정보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

조사구분	조사내용	법적근거	법정계획수립 등
하천 유역	-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현황 - 하천유역의 이수현황 및 치수현황 - 하천환경 - 기타 하천유역의 현황, 이용·관리 관한 사항	「수자원법」 제6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 조사보고서 발간 (조사항목별 1년, 5년, 10년 주기, 수시 및 특별 조사)
수문	- 하천유역·호수·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하천유지, 하천시설 설치·각종 구조물 설계 - 하천 주변 지역의 이용 및 관리 - 홍수 및 갈수의 예보 -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자원법」 제9조	수문조사기본계획 (10년 주기) 타당성검토(5년 주기)
물환경	- 수질오염도	「물환경보전법」 제9조 등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매년)
수생태	- 수생태계 현황 * 하천: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 환경 * 하구: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 (일반:3년/상시:1년) 타당성 검토(3년 주기)
지하수	- 전국 지하수 대상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	「지하수법」 제5조	지역별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 및 기초조사 이행,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운영
하상 변동	-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하상변동조사 실시	「하천법」 제21조의2	법정계획 수립에 해당되지 않으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실시해야 함 (하상 변동 특성별 1년, 2년, 5년, 10년 주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하천법”, 검색일: 2021.12.1.

그 외 산업폐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농림부의 농어촌용수(「농어촌정비법」), 기상청의 수문기상(「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종(「내수면어

업법) 등과 같은 조사 부문에 대한 근거만 관련 법령에 마련되어 있으며, 상수도과 하수도는 정보 부문에 대한 근거가 각각 「수도법」, 「하수도법」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제로 인해 물정보는 분산된 체계하에 각 부처 또는 기관의 목적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자료만 기관 간 상호공유됨으로써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수문, 유역, 물환경, 수생태, 지하수 등의 조사를 아우르고, 이들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보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물 관련 조사·정보 통합계획을 신설한다(수문조사계획 흡수 통합).

기존 물관리 계획상의 물관리 현황 조사·분석 과업을 분리하여 전문기구가 조사·분석 과업을 전담 수행 후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분야별 전문 특성,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한 조사·분석업무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정책 마련, 계획 수립 등에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장래 여건 분석(전망) 등을 전담 기구로 일원화하고, 그 성과는 개별 계획에서 활용하고 개선방안 마련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계획 수립 기간 단축, 중복 해소, 계획 간 자료 일관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물관리 기술력 축적 등 지속성 확보 및 고도화를 도모한다.

〈표 5-18〉 조사·정보 부문 계획 통합

현 행	개 선
수문조사기본계획, 물환경측정망설치계획,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관측망+이용+수질보전)	물관리(통합)조사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중 관측망 설치계획 포함

나. 추진 현황 및 세부 실행방안

현재 환경부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물정보 수집·유통·활용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 도출·제시, 물정보 통합체계 비전 및 목표 정립, 물정보 통합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제도적 방안, 그리고 법제화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조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물관리(통합)조사계획의 신설을 대비하여 물관리기본법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정보화에 관한 ‘노력’의 수준이 아닌 ‘의무화’ 수준으로 승격 개정하는 방안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표 5-18). 또한 계획의 명칭도 ‘국가물관리정보기본계획’, ‘국가물관리조사기본계획’ 등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9〉물관리 통합조사계획 신설 관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표 5-20〉물관리 조사·정보 부문 현황

구 분	법적 근거		법정계획 수립여부	비 고
	조사	정보화(통계)		
유역조사	수자원법 6조	동법 25조	무	
수문조사	수자원법 9, 10조	동법 25조	유(10년단위)	
물환경조사	물환경보전법 9조	동법 5조	무	설치운영계획수립(년)
수생태조사	물환경보전법 9조의3	동법 5조	무	
지하수조사	지하수법 5조	동법 5조의2	무	
하천변동조사	하천법21조2	동법 22조		
농어촌용수	농어촌정비법			
(수문기상)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상수도		수도법 74조의3		국가수도정보센터
물재이용				
하수도		하수도법 68조의2		하수도정보시스템
산업폐수	물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46조2			
비점오염조사				
발전용수				
내수면어종	내수면어업법			

자료: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환경부, 2021.10)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추가 작성

8.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의 신설

가. 주요 정비내용

현재 지자체 단위 가축분뇨관리계획만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국가계획을 신설하며(환경부안), 이 국가계획은 일반적인 전략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아닌 특화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한다(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안).

나. 세부 실행방안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은 국가법정계획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비전 및 관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가축분뇨관리계획과 세부계획의 연계성, 이행체계 내실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계획 신설과 함께 세부계획과 상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장과 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체계 마련, 공공처리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법률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 신설의 근거는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시된 광역지자체 단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은 있으나, 중앙부처가 직접 세우는 계획은 부재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또한 지자체 계획 내에서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세부계획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없고 이행실적 관리가 되지 않는 등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실행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국가 차원의 목표 설정, 기존 정책 성과의 평가, 가축분뇨 발생·처리·이용 현황 및 전망, 가축분뇨 관리의 이해관계자(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축산업계 등) 간 책임과 권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방안, 분야별, 사업별 예산투입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등이 제안 가능하다. 그리고 가축분뇨계획은 특화계획임을 고려하여,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의 현행 사례와 같이, 그 명칭을 단기적으로는 ‘가축분뇨관리종합대책’으로 명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 후 금회 제안된 명칭으로 자리잡는 것도 적절한 제안이다. 최근 환경부는 관련 연구(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0.10 ~ 2021. 8)를 완료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가축분뇨계획 체계 개편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등에 대한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5-21〉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 신설 관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가축분뇨법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가축분뇨법 제5조(가축분뇨관리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의 수립내용, 절차,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가축 분뇨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축 분뇨 발생과 처리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가축 분뇨의 처리, 재활용, 에너지화 시설의 관리방안 4. 가축 분뇨 시설 주변의 악취 관리 방안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가축 분뇨 관리 방안 6. 가축분뇨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 대책과 예산의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7. 가축 분뇨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9. 댐건설장기계획의 정비

가. 개선 방향

환경 이슈 등으로 댐 패러다임이 변화(건설→관리)됨에 따라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의 효용성이 감소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댐관리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한다.

〈표 5-22〉 댐 부문 계획 체계 전환

현 행	개 선
댐건설장기계획	댐관리기본계획

나. 추진 현황 및 결과

해당 법률과 계획은 이미 일부 개정(2021.6.16.)되어 시행 예정(2022.6.16.)이다. 먼저 법률 명칭 변경과 내용 개정의 주요한 이유는 물관리일원화 등 국내 물관리 정책 여건과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 댐 중심의 관리의 효율화, 통합물관리 관점의 댐관리 등이 있다. 특히 기존 댐 건설에서 ‘관리’를 추가하여 신규 댐건설의 추가보다는 사회·기후적 변화 측면에서 능동적 대처와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명이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계획명도 기존 “댐건설장기계획”에서 “댐건설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댐관리”에 대한 정의(제2조)가 신설⁶⁴⁾되었다. 또한 제3조(적용범위)의 제2항이 추가되면서 댐관리기본계획의 대상도 농업용수댐의 경우 저수용량 기준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댐으로 변경되었다.

〈표 5-23〉 댐건설장기계획 관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비 내용

현행	개정안(2022.6.16. 시행)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의 기본방향 2. 각종 용수의 수급 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 보전 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11.13.

6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절 시사점

먼저, 환경부 정비안을 검토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 정비안은 기존 국토부의 수자원/하천 분야와 환경부의 물환경 분야의 핵심 중 핵심 계획의 정비(통합 및 신설)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운영(2017.8~) 후 물관리일원화의 취지(수량-수질 통합관리, 하천을 고려한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 하향식과 상향식 물 거버넌스의 조화 등)가 반영된 성과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이번 정비안은 환경부의 핵심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비안이므로, 향후 환경부 및 타 중앙 부처의 현행 상위 계획 정비 및 연계 방안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예: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관련 계획 등)할 것이다. 또한 유관 계획(예: 상수원관리계획,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농업용수관리,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내수면어업진흥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정비 방향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계획 정비안 추진에 따라 계획의 수립은 물론, 이행모니터링에 대한 보다 큰 정책적 수요가 전망되며, 통합/이관된 계획의 경우 수립 및 부합성 검토와 관련한 행정 및 경제적 비용 소요 감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기존 59종에 달하던 계획의 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안으로 정비할 시 50종으로 정비될 예정이며, 정비되는 계획이 대부분 핵심계획 및 종합계획이므로 하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물 관련 계획 수립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실제 정비안이 실행되면 수립 비용 등이 다시 책정되어 정확한 경제적 효과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 정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음의 가정들을 바탕으로 개략적 추정하였다. 먼저 국가기본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유역종합계획(하천 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⁶⁵⁾으로 통합되는 계획들에 한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은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가장 상위 계획이기에 추정 결과의 상징성이 크고, 나머지 신설되는 계획들의 정확한 예산을 아직까지는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본계획과 변경(수정)계획으로 분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이면 변경계획은 20년 간 2회, 수립 주기가 20년이면 변경계획은 20년간 3회가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총 29개)은 19개 계획들의 각 평균 예산을 적용하였다. 또한 각 계획의 기초자료

65) 필요 조건에 따라 수립되는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산 등)는 조달청, 환경부, 국토부 등의 공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수집 기간은 약 5.5년(공고일 기준 2015년 7월 30일~2020년 12월 21일), 예산 규모는 계약 기준이 아닌 공고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만약 계획 수립의 예산 자료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계획과 변경계획의 예산 간 격차는 50%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 기간의 물가상승률이나 계획 용역 예산의 변동 추세, 계획 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변동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20년 동안 예산은 약 79.4억원이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47.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계획 정비에 따라 이 규모의 예산이 모두 사라지거나 절감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계획들이 통합되면서 국가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 수립 내용은 현행 보다 대폭 보강될 여지가 큼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증액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의 예산 증감 없이 통합되는 기본계획과 변경계획의 예산을 전체 삭감시킨다면 오히려 기존 계획들의 목표 달성과 체감적 효과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물관리의 최상위 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투입되는 예산은 현행보다 증액될 필요성이 높다. 다만, 다수의 유역 단위 계획들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비록 본 연구의 개략적 분석에서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량은 어렵더라도 다수의 계획들이 미수립됨으로서 행정적 비용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장

국가기본계획·유역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부합성 심의

- 제1절 부합성 심의: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
- 제2절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현황 및 정비
- 제3절 부합성 심의 절차

제6장

국가기본계획·유역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부합성 심의



제1절 부합성 심의: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

1. 법적 근거

가. 부합성 심의의 목적 및 개념

2019년 6월,물관리 최상위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이념,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고 있다. 그 중 법정 계획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령 시행의 근간이 된다. 물관리일원화 이전 다양한 부처와 법률에 따라 약 97개 종류의 물관리 관련 계획들이 분절적으로 수립·시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물 관련 계획들 간 부합성을 확보하여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 절차가 필요하다. 물 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가계획·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물관리기본법 제22조와 제27조 등).

사실 부합성이라는 법적인 용어와 정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론 기타 법령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학술적 측면에서 부합성의 개념은 해당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거나 최소한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제도정합성(또는 정책정합성)과 유사하며, 이는 제도와 관련된 요소들 간 상호부합성(congruence)으로 간주될 수 있다(정정길, 2002). 이와 같은 제도정합성은 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검토, 분석과 평가가 수반될 수 있고(전상환, 2015), 제도정합성은 수평적, 수직적, 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평적 정합성은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의 갈등조정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조정·정책통합을, 수직적 정합성은 정책 간 공동목표수립,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한 정합성 확보를, 시간적 정합성은 일련의 정책과정 속에서 일어날만한 문제들에 대한 정합성 확보를 의미한다(OECD, 2005).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부합성은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유역계획과 물관리 관련 계획 간의 관련성(relevance), 일관성(coherence), 연계성(connectivity)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는 현행 법령상 규정

된 다양한 계획 간의 부합성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과정적으로는 관련 계획들의 부합성 여부 확인 후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갖추고, 합리적으로는 각 계획들이 물관리 부문에 있어 설정한 목표가 상충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충될 경우 부합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물관련 계획과 계획 간 부합성 검토 절차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법적 근거와 개념, 유사사례, 검토 범위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합성 심의·의결이 물관리위원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나. 부합성 심의의 법적 근거

국가기본계획·유역종합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관리기본법의 여러 조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표 6-1). 먼저 물관리기본법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에서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30조에서 ‘물관리 관련 계획의 조정’과 관련하여 국가·유역위원회가 부합성 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 수립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합성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므로 부합성 심의는 물관리위원회의 고유 기능이며 동시에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부합성 심의는 부처별·부문별로 분산되어 수립되어오던 계획에 대하여 물관리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능이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부합성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그간 물 관련 계획과 계획 간 부합성 심의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현행 부합성 심의도 물관리위원회의 주요한 법적 의무임에도 ‘계획에 대한 조정 요구’의 근거는 미비하다. 또한 계획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평가’ 절차의 경우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부합성 심의에 대한 개념과 목적,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부합성 심의 절차와 운영체계(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표 6-1〉물관리기본법 부합성 심의 관련 법 조항 및 내용

구분	내용
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부합성 심의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합성 심의 결과에 따른 계획 조정 요구
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부합성 심의 ②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 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부합성 심의 결과에 따른 계획 조정 요구 ③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유역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합성 심의 결과에 따른 계획 조정 요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9.27.

2. 유사 사례

가. 국토계획평가제도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수립단계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계획에 반영하고,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 2~4에 근거하여 대상, 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요청서 작성과 제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정하게 되며, 계획수립권자는 법에 규정된 평가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을 토대로 계획(안)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보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수립 중인 계획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평가’이며, 계획수립 초기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자체적 평가’에 해당되고, 국토관리 기본이념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종합적 평가’의 역할을 하며, 계획수립권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시행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이에 국토계획평가를 받는 대상 계획의 경우 크게 종합·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2〉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현황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종합계획 지역계획	· [총 5개 유형] 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해안권·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 [총 11개 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린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 [총 12개 계획] 주거종합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4.11.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관리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요청서 제출은 계획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해당 계획의 관계기관 협의 시 또는 해당 계획수립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루어진다(「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 참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의를 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경우 「국토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들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라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체계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권자와 함께 세부평가기준 범위 및 평가방법을 검토하며, 계획수립권자는 결정된 세부평가기준범위와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을 작성한다. 요청서 초안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이 초안 검토를 한 후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에 요청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작업은 국토연구원과 환경부에서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후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며, 심의가 끝난 후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권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계획수립권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필요할 경우 계획 간의 조정 요청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이 함께 수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요청서 제출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자료: 국토연구원(202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기본법」, 검색일: 2021.5.10.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

나.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 해당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과 분석 등

을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부합성 심의와 유사한 정책계획의 경우 현재 총 33종이 평가대상이 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표 6-3〉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세부 평가항목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세부 평가항목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예.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보전증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연계성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 관련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계획 목표와 계획 세부내용의 일관성
적정성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계획의 적정성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검색일: 2021.5.10.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권자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계획이 다른 계획에 미치는 영향,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결정되면 계획수립권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결정내용을 공개한다. 이후 계획수립권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며, 검토·협의를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45일 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및 검토전문기관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심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계획수립권자에게 통보하며, 계획수립권자는 해당 의견을 반영 또는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다시 환경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자료: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제도」 매뉴얼;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검색일: 2021.5.10.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대상) 절차

3. 소결 및 시사점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부합성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출범 후 물 관련 계획들이 국가 발전에 지대한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관리 행정 체계가 운영·관리되어 오랫동안 고착되면서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및 참여성을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드러났고, 물 관련 계획들의 수립·시행에도 같은 문제가 축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관리위원회가 97종의 물 관련 계획들 중 일부의 굵직한 계획이라도 통합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한편 물관리 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의 절차 체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사무는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앞서서 살펴본 국토계획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계획에 대하여 기본이념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심의 시기의 경우 대부분 평가대상 계획의 최종 승인 및 결정이 되기 전에 받고 있었으며, 심의 주체는 제도별·단계별로 상이하나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기관, 연구기관 등을 통해 협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사전준비 또는 사전심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있다는 점은 심의절차의 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심의 대상 계획수립권자들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국가·유역계획의 부합성 심의 체계는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절차 확립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해당 계획수립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물관리위원회가 부합성 심의·의결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는 근거, 배경, 필요성 및 준비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후 계획별 재검토(수정계획 수립) 주기가 대부분 5년으로 동일하기에 특정 연도에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량을 고려한 사전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련 계획의 경우 계획 유무를 조사하여 유역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합성 심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계획 또는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에 대한 현황 및 이행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2절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현황 및 정비

1. 대상 계획의 현황

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현황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4항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계획을 유역과 중앙으로 나누어보면 유역계획 4개, 중앙부처 물관련 법정계획 55개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유역 부문 4개, 물환경 부문 43개, 물이용 부문 5개, 수자원·물안전 부문 7개로 총 18종 59개였다. 이에 계획에 따라 재검토 주기를 고려할 경우 심의해야 하는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분야	소관주체	유역·중앙부처 계획	
유역(4)	유역물관리위원회	·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4)	
물환경 (43)	환경부	· 4대강수변관리기본계획(4)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 대권역물환경관리기본계획(4) · 수생태계복원계획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 친수구역조성사업에관한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29)*
	산림청	· 사방사업기본계획	
물이용(5)	환경부	· 수도정비기본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 물재이용기본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농림부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자원 물안전 (7)	환경부	· 댐건설기본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5)**	

1) * 유역하수도정비계획(29): 한강(9), 낙동강(8), 금강(6), 영산강(3), 섬진강(3)

2)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 중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4대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수자원법에 근거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 총 5종 계획에 대해서는 유역관리와의 관련성 및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물관리기본법 제

27조 3항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를 받는 계획들에 대하여 향후 10년 동안 연도별 물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인원 및 시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합성 심의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결과 부합성 심의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0여 건(최대 16건)으로 나타났다.

〈표 6-5〉 2021~2030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법정계획 연도별 현황

연도	개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법정계획명	
2021	9	· 유역물관리종합계획(4)	· 유역하수도정비계획(5)
2022	15	· 댐관리기본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5)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6)
2023	9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 사방사업기본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7)
2024	5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4)	· 유역하수도정비계획(1)
2025	14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4)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7)
2026	12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댐관리기본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7)
2027	7	· 유역하수도정비계획(7)	-
2028	13	· 사방사업기본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5)	· 유역하수도정비계획(7)
2029	5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4)	· 유역하수도정비계획(1)
2030	16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 물재이용기본계획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4)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7)

66) 이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안에 따라 일부 계획들(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통합 또는 폐지 되면 이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나. 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물관리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부합성 심의를 하게 되는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은 물환경 부문 534개, 물이용 부문 356개, 수자원·물안전 부문 339개, 물산업 17개로, 총 14종 1,246개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를 받는 계획들에 대하여 향후 10년 동안 연도별 심의 물량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2건, 총 250건 이상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하여 유역위원회별 현황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

〈표 6-6〉 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계획명	계획수립권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시행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물재이용관리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수생태계복원계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환경부장관 수립계획 제외)
지역사방사업계획	·시·도지사(지방산립청장 수립계획 제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하천정비중기계획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일반수도, 공업용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시·도지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시·도지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시·도지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계획 정비안에 따른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증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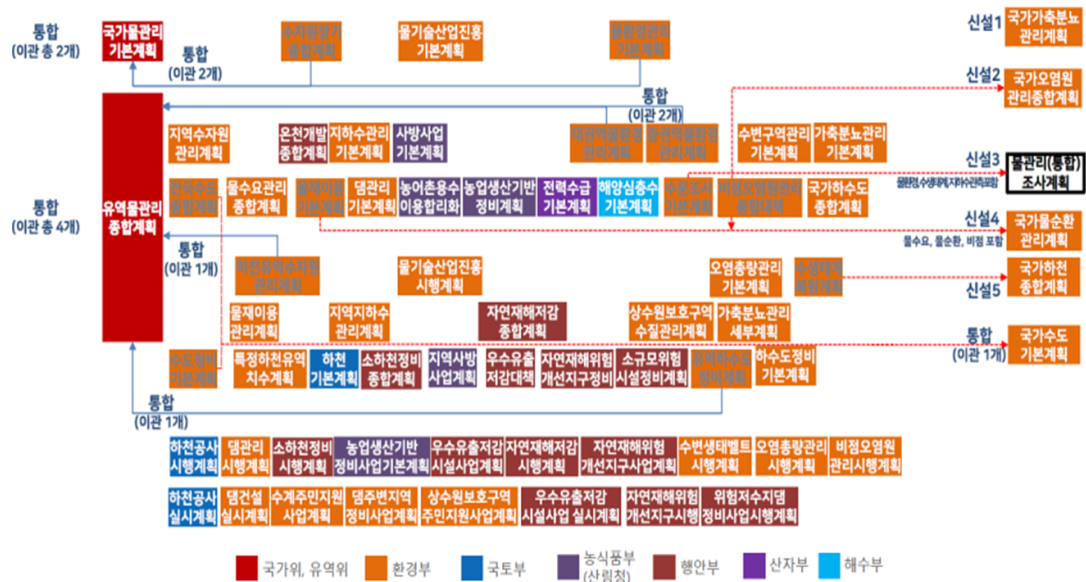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부합성 대상 계획 현황에 대하여 5장에서 제시한 계획 정비안 이행에 따른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증감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물 관련 계획 정비이행으로 인해 이관이 예상되는 계획 및 평가 대상이 되는 추가 계획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추후 물관리 위원회에서 진행할 부합성 심의의 검토체계 및 세부 운영 절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물 관련 법정계획은물관리 업무 관련 7개 부처 약 97개 법정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전략, 종합, 실행, 시행계획으로 임의 구분할 수 있다.⁶⁷⁾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물 관련 법정계획은 과도하게 분절화되어있고, 법정계획의 명칭은 혼재되어 계획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정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상·하위 법정계획의 위계를 확립하며, 유사·중복되는 계획들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그림 6-3>과 계획 정비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 정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5장에서 제시하였기에 본 장에서는 부합성 심의와 관련하여 계획 정비에 따른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고자 하며, 법정 정비에 따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증감은 다음과 같다(표 6-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6-3>과 같이 물 관련 계획 정비안이 이행될 경우 통합·이관될 예정되는 계획은 ①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공업), ② 하수도법에 근거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③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④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⑤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수생태복원계획, ⑥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⑦ 수자원법에 근거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⑧ 수자원법에 근거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재이용 기본계획 총 9종이다. 그러므로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국가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은 18종에서 12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물 관련 법정 계획이 통합·이관될 경우 해당 법령에 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의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역계획의 이행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별 이행평가 절차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67) 전략·종합·실행계획의 경우 정책·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행계획은 확정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의 성격은 법적 혹은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임의로 구분할 수 있다.



주) 계획의 성격은 종합계획(국가, 유역), 부문계획, 특화계획(가축분뇨)으로 구분

자료: 유역기반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환경부, 2020.9)을 참고하여 저자 수정

〈그림 6-3〉 물 관련 법정 계획 정비안

〈표 6-7〉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증감 변화

소관주체	대상 계획(현행)	대상 계획(증감안)
유역물관리위원회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좌동
환경부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삭제)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삭제)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삭제) · 대권역물환경관리기본계획(삭제) · 수도정비기본계획(삭제)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삭제)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삭제) · 4대강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수생태계복원계획(삭제) · 물재이용기본계획 · 댐건설기본계획 · 친수구역조성사업에관한계획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신설)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명칭변경)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신설) ·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신설) · 물관리(통합)조사계획(신설) · 국가하천종합계획(신설) · 4대강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물재이용기본계획 · 댐관리기본계획(명칭변경) · 친수구역조성사업에관한계획
농림부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 좌동
산림청	· 사방사업기본계획	· 좌동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부합성 심의 절차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합성 개념과 목적, 유사 사례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부합성 심의·의결 절차에 대하여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2가지 안은 부합성 심의·의결 결과가 ‘가결-조건부 가결-부결’ 또는 ‘조정 필요-조정 불필요’로 구분되며, 두 가지 안의 경우 심의·의결 절차는 동일하고 통보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합성 심의 절차 A안: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A안으로 제시한 부합성 심의 절차의 경우 결과가 ‘가결-조건부 가결-부결’로 제시되는 방안으로, 계획수립권자가 국가·유역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접수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 부합성 검토 전문기관’에서 초안을 검토하며, 검토된 요청서 초안에 대하여 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에서 부합성 심의 요청서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전검토의 경우 30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어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국가계획은 최대 15일, 유역계획은 최대 30일 추가가 가능하게 한다. 이후 물관리위원회에서 대상 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며, 의결 결과에 대한 내용을 물관리위원회에서 계획수립권자에게 ‘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 또는 ‘부결’의 형태로 통보한다. 통보 결과를 받은 계획수립권자는 조치 착수 혹은 계획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관리위원회에 조치결과에 대해 송부를 해야 한다. 다만 통보 결과에 대해 해당 계획수립권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검토결과 보완 혹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이 사항에 대해서 물관리위원회는 부합성 검토 기관 및 해당 계획 부합성 심의에서 ‘부결’의견을 제시한 검토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재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안은 조정 요청 및 재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기에 행정적·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부합성 심의·의결 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역계획에 최대한 부합한 대상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A안의 경우 현행 물관리기본법상 ‘조건부 가결’ 또는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해 법률상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한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해야 하지는 않으나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부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반면 부합여부를 심의해서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권한은 ‘부결’이 아닌 ‘조정요구’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결은 어렵다는 주장의 해석이 있다⁶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4〉 부합성 검토 절차 A안

한편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조정 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 또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에 있어 유연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부처 간, 조직 간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로 물관리 부문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발전될 수 있다는 잠재적 장점이 있다.

반면 재심의·의결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기에 법령 개정이라는 과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결로 인해 협의절차, 행정처리 등에 대한 시간 소요로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물관리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대상 계획을 수립·완료할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68) 법률적 해석에 대한 의견은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조인, 법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개인별 의견으로, 이 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2. 부합성 심의 절차 B안: ‘조정 불필요’, ‘조정 필요’

B안으로 제시한 부합성 심의 절차의 경우 A안과 비교하여 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단계까지 동일하게 진행되나 부합성 의결 결과 통보를 ‘조정 필요-조정 불필요’로 하며 이후 통보 결과에 대한 계획 조정 결과를 조치 착수 혹은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한 물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5〉 부합성 검토 절차 B안

해당 방안의 경우 현행 물관리기본법을 준용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소한 행정력과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부각된다. 또한 A안과 동일하게 부합성 심의·결과에 대하여 계획수립권자가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조정 결과를 송부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부합성 심의·의결의 취지 또는 목적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계획수립권자의 조정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원인으로 인해 부합성 검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방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심의·의결 결과에 ‘부결’이 없으므로 대상 계획(안)의 수정·보완에 대한 재심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합성 심의 절차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B안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의가 필요한 점은 ‘조정 필요’, ‘조정 불필요’로 의결 시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계획에 대한 법적 효력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이 경우 조정요구가 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계획이며, 물관리위원회의 수정·보완요구를 수립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계획수립권자가 조정요구를 따라야 하는 책임은 있으나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부합성 심의 절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 제출하게 하여 그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재심의하는 과정은 가능하다고 본다⁶⁹⁾.

3. 소결 및 시사점

앞서 말했듯이 물관리일원화 후 다양한 부처와 부문에서 수립되어왔던 법정계획이 국가계획과 유역계획 중심으로 정비되는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통합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기반인 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합성 심의·의결은 여전히 분산되어있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정책·계획 간 통합적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능으로, 그간 우리나라에는 물 관련 계획과 계획 간 부합성 검토 절차가 거의 부재했기 때문에 단계적,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합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개념, 유사 사례, 검토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 후 부합성 심의·의결에 대한 2가지 절차(안)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절차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6-8〉 부합성 심의 절차안(A안, B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A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권자는 심의·의결에 대한 파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역계획에 최대한 부합한 대상 계획 수립 가능 ✓ 심의·의결 결과통지에 대한 조정요청 가능 ✓ 조정 협의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의결에 관한 현행 법적 근거 부족 ✓ 협의절차, 행정처리 시간소요, 복잡성 증가 ✓ 부결 결과를 불수용하고, 대상 계획을 수립 완료할 경우 분쟁 발생 가능
B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을 준용하는 절차(안) ✓ 비교적 간소한 행정력과 소요시간 적음 ✓ 조정 협의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계획수립권자는 조정요청 불가능 ✓ 심의·의결 결과에 ‘부결’이 없으므로 대상계획(안)의 보완·수정에 대한 재심의가 어려움

69) 법률적 해석에 대한 의견은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조인, 법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개인별 의견으로, 이 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부합성 심의 과정은 물관리 정책 시행에 있어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법적으로 부합성 심의에 대한 의결 결과를 이행해야 할 의무성 또는 강제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해당 계획수립권자들이 부합성 심의·의결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여 해당 계획을 이행하는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은 향후 과제이다. 부합성 심의·의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물관리위원회 권한과 역할은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처 간 업무영역 갈등과 상호 소통 부족으로 인해 부처 이기주의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책임성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합성 심의의 시행 초기 단계가 지나면서 문제들은 보완될 것이고,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고 제도가 안착한다면, 우려보다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제7장

법령 및 계획 정비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

- 제1절 법령 정비 추진 로드맵
- 제2절 계획 정비 추진 로드맵
- 제3절 향후 과제

제7장

법령 및 계획 정비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



본 장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법령 정비(제4장)와 계획 정비안의 실행방안(제5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안)을 설명한다. 먼저 로드맵의 시간적 범위는 최장 2030년까지 설정하였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시점은 2027년으로 볼 수 있다. 2030년은 제1차 국가계획 및 유역계획의 완료와 제2차 계획 수립 준비 기간이 겹치는 시점이고, 2026년 무렵은물관리위원회 2기의 활동이 완료에 가까운 시점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법령과 계획 정비의 각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이며, 국가·유역계획의 수정 완료는 2025년~2026년 무렵이므로, 이번 정비 로드맵안의 신속한 추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2022년과 2023년이 황금기(golden time)라고 볼 수 있다.

제1절 법령 정비 추진 로드맵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부분의 법령 정비는 2022년 동안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가축분뇨법 등의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물관리기본법은 개정 완료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칭)도시물순환법 등과 같은 신규 입법도 2023년에 준비하여 2025년까지 추진 완료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량-수질 통합 법제화는 법령의 명칭, 4대강 수계법과의 통합 여부, 산업폐수 관련 법적 사무 정비 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준비하여 2025년까지 제정(개정) 완료로 제시하였다.

사실 이번 추진 로드맵에서는 최장 2026년까지 긴 호흡으로 법령 정비를 제시하였지만, 2022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조직·예산(재정) 체계가 개편된다면, 일부 혹은 전체 법령 정비의 속도는 물관리위원회 직후보다, 본 연구의 예측보다, 매우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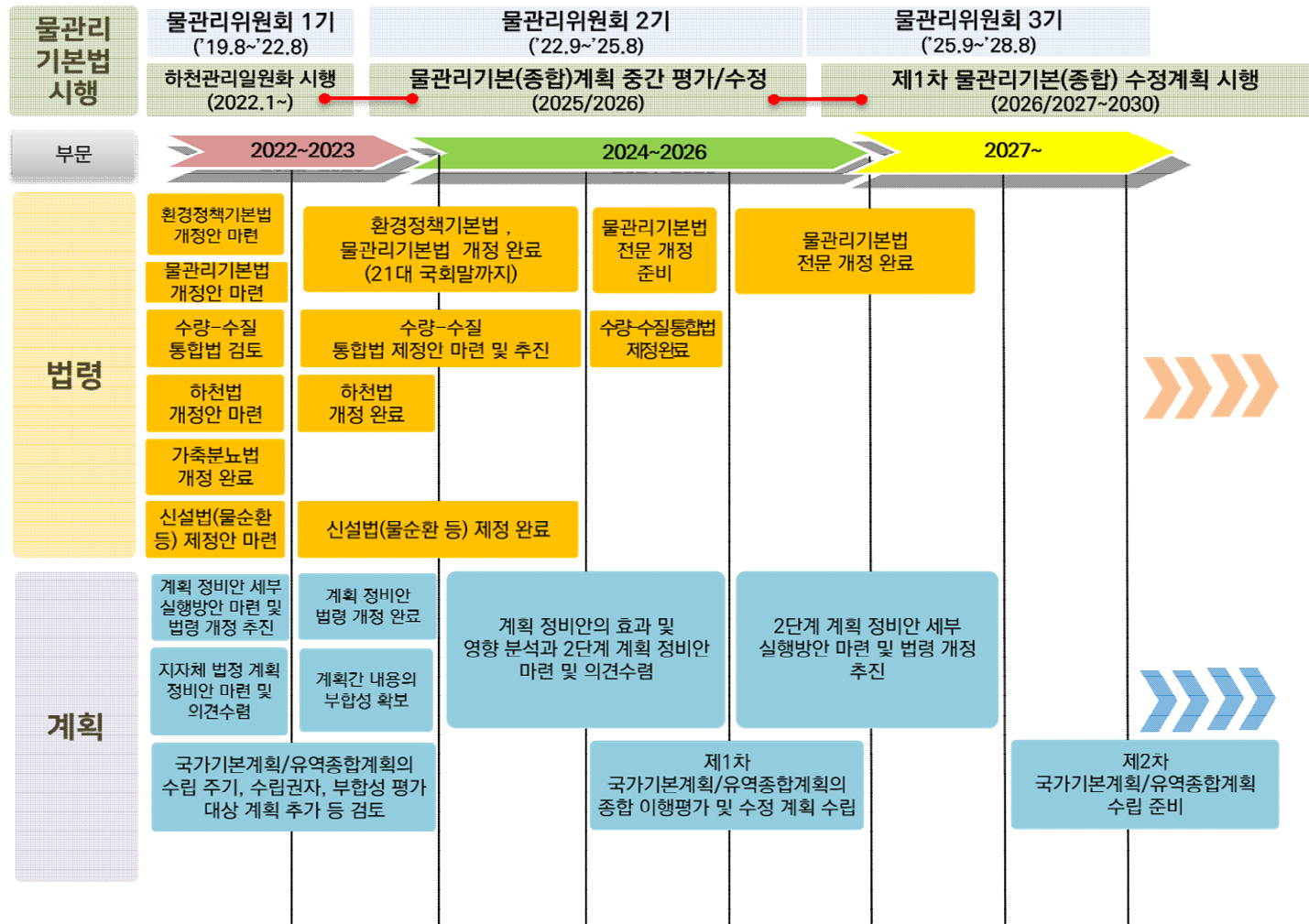
제2절 계획 정비 추진 로드맵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획 정비안의 실행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그 이유로 이번 계획 정비안은 환경부 소관 계획 중심의 정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기타 계획들과 타 부처의 물 관련 계획들의 정비를 위해서는 2단계를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2022년에 계획정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금회 1단계 정비안에 따른 지자체 법정 계획 정비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변경해 온 법정계획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지원단이 부합성 심의 업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계획 정비가 없으면, 연평균 250건의 부합성 심의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해야 하며, 지자체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부합성 심의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성이 커져갈 수 있으므로 지자체 법정 계획의 정비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단계 정비안(환경부 소관 계획) 완성을 위한 법령 정비도 2023년까지 설정하였다. 물관리일원화 후 혹은 물관리위원회 1기 출범 후 1단계 정비안을 마련하기까지 약 짧게는 2년 3개월, 길게는 3년 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2단계 계획 정비안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다 짧게 잡았다. 이 시기가 되면 계획 정비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보다 보편적으로 인식될 것이며, 국민적 정책적 수요와 시의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2개 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여전히 남아 있는 계획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잔재하여 있고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될 수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1〉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의 추진 로드맵(안)

제3절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주제인 법령 정비와 계획 정비는 모두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의 개정 또는 신설법안의 가결로만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수십 개의 각자 다른 역사와 목적을 가진 물 관련 법령들이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 및 계획 정비라는 기치 아래 일거에 개정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법령 및 계획 수립 내용은 정부 사무의 나이테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통합하고 일시에 개정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개별 법령과 계획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막연히 지체되면 통합물관리의 성과는 요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 및 계획 정비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온전한 법령 및 계획 정비안을 전제하지 못하여 구체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한계와 실행방안 도출까지 연구가 이르지 않으면 통합물관리라는 키워드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의 중복에 지나지 않게 되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착수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가 종합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법령 정비 측면에서는 물관리기본법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에 대한 방안과 계획 정비에 따른 가장 큰 변화가 될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의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도출의 과제이다. 특히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은 계획 정비안에 따르면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두 법이 유역 내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에 대한 모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두 법의 여러 형태의 통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하천법의 개정과 물환경보전법 일부의 통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연구를 집중하고 환경부의 주요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과 농림부의 일부 법령(농어촌정비법, 농어촌공사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물관리 타 부처와 기관들, 즉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등의 법령의 정비도 본 연구를 토대로 추가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기능개선이 선행되어야 보다 유의미한 결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첫단추’를 꿰는 방향성이 연구 결과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물재해(물안전) 및 상하수도 부문의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 기능 조정과 이에 관한 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중재는 물관리일원화와 하천관리일원

화 후에도 커다란 연구 주제로 남아 있다.

계획 정비 부문의 가장 큰 연구 한계점은 이번 정비안은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들을 대상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 부처가 수립하는 물 관련 계획들의 통합적 정비는 향후 과제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자체의 법정 계획에 대한 정비 방안과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에 미치는 영향은 서둘러 검토되어야 할 연구 주제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신설 계획에 대해 연구 범위와 기간 상 심층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물순환관리계획,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물 관리(통합)조사계획, 국가가축분뇨기본계획의 4가지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법안 신설/개정 및 계획 내용 구성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국가하천종합계획의 신설과 내용구성에 대해서도 하천관리의 특수성과 하천법 및 계획의 여러 기능을 잘 숙고하여 심층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타부처 및 지자체 계획과의 관계 재정립 및 정비에 대한 내용 역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2년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조직·예산(재정) 체계가 개편되어 일부 혹은 전체 법령과 계획 정비의 속도가 물관리일원화 직후 보다, 본 연구의 예측보다, 매우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 정책은, 정치적 여건에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라는 관점에서 이번 연구의 추진 로드맵에서는 최장 2026년까지 긴 호흡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로드맵(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위원회,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기상청, 산림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산림과학원 등의 중앙기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산업계, 유역주민, 학생, 청소년, 언론 등 물관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모두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이 협력, 조정, 참여라는 통합물관리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물관리의 위상이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 참 / 고 / 문 / 헌 /

- 관계부처 합동(202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 국토연구원(202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 김익재 외(2017),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익재 외(2019),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홍균(2020),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사법」, 54호, pp. 587-617.
- 김홍균(2021),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환경법연구」, 43(1), pp. 205-239.
- 박종원(2021), “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43(1), pp. 271-325
- 심민석(2021),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연구”, 「입법학연구」, 18(1), pp. 149-177.
- 여은태(2018), “프랑스 물관리법제에 관한 소고”, 「사회융합연구」, 2(2), pp. 3-12
- 이영근·박성제·류시생(2011), “2011년 일본 국토교통성 조직개편의 의의”, 「물과 미래: 한국수자원학회지」, 44(10), pp. 87-92.
- 이영근(2021), “水循環基本法 제정 이후 일본 물관리행정의 변화와 최근의 동향”
- 이종욱·이승오(2018), “능동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선진사례 조사: 호주의 머레이-달링 유역”, 「물과 미래: 한국수자원학회지」, 51(7), pp. 56-64.
- 이종욱·박태선·이승연·이승오(2020),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한국방재안전학회」, 13(4), pp. 1-12.
- 전경운(2020), “수리권의 종류와 수리권 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경희법학」, 55(3), pp. 183-227.
- 정정길(2002), “행정과 정책연구의 시차적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pp. 1-19.
- 한국수자원공사(2018), 「네덜란드의 지역 물관리 모델, case-brief」,
- 한국수자원공사(2019),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위한 제언」.
-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부(2021.10.),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방안”.
- Australia Commonwealth Environmental Water Office(2013), 「MERI Framework」

- Claydon, G.(2019), “Review of the Murray-Darling Basin Joint Governance Arrangements”
- Courtecuisse, A.(2019), 「Fees & subsidies, the pillars of the French Water Agencies – A short overview of the system implemented in 1964」,
-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das Bundesamt für Justiz(2013), 「Wasserhaushaltsgesetz」.
- Dutch Water Authorities(2017), 「The Dutch Water Authority Model」,
-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2017),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Germany」.
- Kingdom of the Netherlands(2016), 「Staatsblad 431」.
- MDBA(2020), “Basin Plan Annual Report 2018-19”
- MDBA(2011), “The Living Murray Story, One of Australia’s Largest River Restoration Projects”
-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2010), 「Water Act」.
- Murray-Darling Basin Ministerial Council(2017), “Implementing the Basin Plan”
- OECD(2014), 「Water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Fit for the Future?,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 Pilarczyk(2007), 「Flood Protection and Management in the Netherlands」.
- Umweltbundesamt(2018),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Germany”
- WMO(2006), 「Integrated flood management model」.

온라인자료

※ 본 과제에서 활용한 온라인 자료는 국내, 국외(일본, 미국·EU순)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자료를 활용한 경우 본문에 검색어, 검색일을 명시하였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법령별 본문 명시.

외교부 홈페이지(2016.12.20.) “(조약 제2330호) 한-유네스코 수자원관리 국제센터 설립협정”,
검색일: 2021.10.28.

유네스코 물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11.15.
<https://unesco-iwssm.org/>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법령별 본문 명시.
- 한국상하수도협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wwapr>), 검색일: 2021.05.29.
- 환경방송(2021.3.24.), ‘안호영 의원, “하천수위 변화로 입은 피해 ’환경분쟁조정’ 대상” 본회의 통과’, 검색일: 2021.5.29.
- 내각관방물순환정책본부 사무국, “内閣官房水循環政策本部”, 검색일: 2021.03.24.
(https://www.cas.go.jp/jp/seisaku/mizu_junkan/organization/index.html)
- 내각관방물순환정책본부 회의 공개자료, 内閣官房物循環政策本部, 검색일: 2021.03.24.
(https://www.kantei.go.jp/jp/singi/mizu_junkan/dai1/siryous2.pdf),
-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水循環基本法”, p.6. 검색일: 2021.01.25.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0900000-Kenkoukyoku/0000133383.pdf>),
- e-gov홈페이지, “水循環基本法”, 검색일: 2021.03.30.,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6AC1000000016>
- Australia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2007), “Sustainable diversion limits”, 검색일: 2020.04.21.,<https://www.mdba.gov.au/basin-plan/sustainable-diversion-limits>
- MDBA(2021.5.9.), “The Murray-Darling Basin at a glance”, 검색일: 2021.6.10.,
<https://www.bluemountainsgazette.com.au/story/7244189/the-murray-mdba>
- MDBA(2021.11.16.), “Committees and decision making”, 검색일: 2021.11.25.
<https://www.mdba.gov.au/about-us/governance-water-management-murray-darling-basin/committees-decision-making>
- Ministere De La Transition Ecologique(2021.1.22.), “Gestion de l’eau en France”, 검색일: 2021.4.6., <https://www.ecologie.gouv.fr/gestion-leau-en-france>

부록

- 부록 1. 물관리일원화 후 부처별 법령 정비 세부 현황
-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부록 3. 물 관련 법정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부록 1

물관리일원화 후 부처별 법령 정비 세부 현황

▶▶▶▶▶

1. 물관리위원회

가.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물관리기본법 [법률 제17841호, 2021. 1. 5., 일부개정]
〈신 설〉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환경부

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p>
〈신 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p>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② (생략)</p> <p>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p> <p>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나. ~ 마. (생략)</p> <p>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p> <p>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p> <p>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p> <p>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신설〉</p> <p>6. ~ 8. (생략)</p>	<p>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p> <p>가. 생물다양성·생태계·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p> <p>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p> <p>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p> <p>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p>	<p>〈삭제〉</p>

<p>다.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8조의2(시·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p>

	<p>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 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9조의2(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p>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도 환경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군·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군·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생태 관련 실태조사·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2. ~ 9.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 략)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 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 9. (생략) ③ ~ ⑦ (생략)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다. 수도법

수도법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수도법 [법률 제1717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략)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 를 말한다.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현행과 같음)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

	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략)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 에 관한 사항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 에 관한 사항
9. ~ 15. (생략)	9. ~ 15. (현행과 같음)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교체 계획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신설〉	19. 수도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략)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p>〈신 설〉</p>	<p>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신 설〉	<p>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p>

	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도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신 설〉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 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 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

<p>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6. ~ 24. (생략)</p>	<p>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6. ~ 2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신설〉</p> <p>4.·5. (생략)</p>	<p>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p> <p>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p> <p>4.·5. (현행과 같음)</p>
<p>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 11. (생략)</p>	<p>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p> <p>6. ~ 11. (현행과 같음)</p>
<p>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신 설〉</p> <p>2. ~ 4. (생 략)</p>	<p>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p> <p>1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6. (생 략)</p> <p>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 다. (생 략)</p> <p>〈신 설〉</p> <p>8.9. (생 략)</p> <p>⑤ ~ ⑦ (생 략)</p>	<p>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p> <p>8.9.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라. 하수도법

하수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하수도법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p> <p>①·② (생 략)</p> <p>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p> <p>2. (생 략)</p>	<p>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p> <p>2. (현행과 같음)</p>

3. 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p>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p>	<p>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p>

<p>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p>	<p>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p>	<p>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p>

<p>어야 한다.</p> <p>③ ~ ⑦ (생 략)</p>	<p>한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p> <p>1. ~ 27. (생 략)</p> <p>② (생 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p>	<p>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p> <p>1. ~ 2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p>

<p>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제24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4조(지도·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5조(행정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p>	<p>제25조(행정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p>

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 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7호, 2019. 6. 11., 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65호, 2021. 2. 17., 일부개정]
<p>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p>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p>하는 지역</p> <p>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p> <p>6. (생략)</p> <p>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p> <p>②·③ (생략)</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p>	<p>지역</p> <p>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p> <p>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생략)</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p>	<p>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p>

<p>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1. ~ 4. (생략)</p>	<p>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생략)</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 7.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p>	<p>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p>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5. (생략)	제16조(행정처분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2. (생략)	제1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마-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5호, 2019. 6. 12., 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05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 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관리의 기본방침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p>5. 입지선정기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p>	<p>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p>

	<p>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 설〉	<p>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 설〉	<p>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p>
<p>제7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p>	<p>제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p>

<p>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에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p> <p>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에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p>
<p>제8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p>	<p>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p>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p>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p> <p>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p> <p>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p> <p>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p>제9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p>	<p>제9조의2(댐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p>

<p>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p>	<p>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 건설에 관한 조사·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p>	<p>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절차, 제3</p>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p>〈신 설〉</p>	<p>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12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p>	<p>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인·허가</p>

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
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
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
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
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
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
묘의 개장허가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p>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는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p>	<p>의 설치승인 및 신고</p> <p>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p>〈신 설〉</p>	<p>제13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p>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p>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신 설〉	<p>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p>

	<p>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p>
<p>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에 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는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p>	<p>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p>

<p>하여야 한다.</p>	<p>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p>
<p>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 ③ (생략)</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에 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p> <p>⑤ (생략)</p>	<p>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에 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 ④ (생략)</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생략)</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생략) <p>③·④ (생략)</p>	<p>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현행과 같음)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p>	<p>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p>

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생 략)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③ (생 략)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15조제2항 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1.2. (생 략)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魚粉)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 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제18조 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애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8조 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애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사. 하천법

하천법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하천법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 8.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 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

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생략)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 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리한다. ② (생략)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 이 관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이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이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생략)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 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 4. (생 략)

⑥ ~ ⑨ (생 략)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②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⑧ ~ ⑪ (생략)</p>	<p>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⑧ ~ ⑪ (현행과 같음)</p>
<p>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 21. (생략)</p> <p>②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p>	<p>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 2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p>

<p>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 3. (생 략)</p> <p>⑤ (생 략)</p> <p>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생 략)</p> <p>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p> <p>⑥·⑦ (생 략)</p> <p>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p> <p>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p> <p>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p>	<p>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p> <p>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p>

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p>답시킬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p> <p>③ (생략)</p>	<p>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4조(비용보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p>	<p>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p>
<p>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72조(하천관리원) ①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72조(하천관리원) ①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p>	<p>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p>

<p>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p>	<p>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p>
<p>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83조(하천표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83조(하천표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 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 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p>	<p>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p>
<p>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생략)</p> <p>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 ⑦ (생략)</p>	<p>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협회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p> <p>7.8. (생 략)</p> <p>④ (생 략)</p>	<p>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p> <p>7.8.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제9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아.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814호(2020.12.31.)(시행 2022.1.1.)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p>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① ~ ③ (생 략)</p> <p>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p>	<p>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p>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자. 4대강수계법

자-1)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자-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

<p>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현행과 같음)</p>
--	---

자-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p>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p>	<p>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p>
<p>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p> <p>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p> <p>2. ~ 5. (생략)</p> <p>④ ~ ⑩ (생략)</p>	<p>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p> <p>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p> <p>2.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⑩ (현행과 같음)</p>

자-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p>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p>	<p>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p>
<p>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p> <p>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p> <p>2. ~ 5. (생략)</p> <p>④ ~ ⑩ (생략)</p>	<p>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p> <p>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p> <p>2.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⑩ (현행과 같음)</p>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생략) 2.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4. (생략)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4. (현행과 같음)

카. 지하수법

지하수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지하수법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타.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5846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7985호, 2021. 4. 1.,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가.나. (생략)</p> <p><신 설></p> <p>2. ~ 5. (생략)</p>	<p>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p> <p>2. ~ 5. (현행과 같음)</p>

파.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5098호, 2017. 11. 28., 타법개정]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7181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2. (생략)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14. ~ 25. (생략) ②·③ (생략)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 2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하.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7180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 ③ (생략)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단서 신설>

가. ~ 다. (생략)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5. (생략)

5의2. 공사가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나. (생략)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10. (생략)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삭제>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5. (현행과 같음)

5의2.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생략)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계약)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수자원개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계약)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p>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p>	<p>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 16. (생략)</p> <p>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p> <p>18. (생략)</p> <p>② (생략)</p>	<p>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 1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1조의2(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p>	<p>〈삭제〉</p>

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73호(2020.9.29.)(시행 2020.10.1.)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댐 및 그 상류의 물환경 관리사업을 추가하고 하수도 분야 관련 사항은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댐 상류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를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정하는 한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공공하수도와 관련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관련 규정에서 하수도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73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한다.
<p>제14조(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지역의 범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광역상수원의 상류 하천 및 그 1차 지류(支流)의 인근 지역 2. 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다]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로 한정한다) 2.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1. ~ 11. (생략)</p> <p>12.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만 해당한다)</p> <p>13. (생략)</p> <p>③ (생략)</p>	<p>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p> <p>1. ~ 1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p>	<p>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p>
<p>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협의해야 한다.</p> <p>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제35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5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p>	<p>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p>

3. 행정안전부

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③ (생략)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략)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

나.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② (생략)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허가는 환경부장관 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4. 국토교통부

가.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관리법 [법률 제16145호, 2018.12.31., 제정]	기반시설관리법 [법률 제17237호, 2020.4.7., 일부개정]
제2조(정의) 1.~5.(생략)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1.~5.(생략)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관리주체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설> <신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군·구인 경우 해당 시·군·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② (생략)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 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⑦ (생략)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 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p>1. ~ 4. (생 략)</p> <p>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제23조(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③ 성능개선 총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p> <p>④ (생 략)</p> <p>⑤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p>	<p>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용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3조(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성능개선 총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p>
<p>제25조(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25조(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기반시설관리법 [법률 제17237호, 2020.4.7., 일부개정]</p>	<p>기반시설관리법 [법률 제18564호, 2021.12.7., 일부개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 ~ 다. (생 략)</p> <p>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p>

마. (생략)

〈신설〉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⑤·⑥ (생략)

마.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학회별 의견수렴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으며 질의응답 회의록을 문장으로 재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1. 한국수자원학회 전문가 면담 조사

■ 전문가 면담조사 개요

- 회 의 명 :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련 법령 및 계획정비 실행방안” 전문가 면담조사
 - 대전대학교 ○○○ 교수, (주)법과 기술 ○○○ 대표
- 일시·장소 : 2021년 4월 27일(화) 13:30~15:30, 온라인 화상회의

■ 주요 의견

(1)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 제1조(목적)와 제2조(기본이념)부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물관리기본법 제1장 총칙 정리가 필요함
 - 특히, 제2조(기본이념)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에서 동·식물 등에 관한 문구와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에서 물관리 범위가 애매함
- 물관리기본법은 일본 물순환기본법을 준용한 것 같음. 그러나 일본 물순환기본법은 실행성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실행성 갖추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함
- 물관리기본법은 기존 법령들과 체계, 분야 등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기존 법령과 중복성을 피해서 포괄적인 의미로라도 체계, 분야(농업용수, 물재해)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본에 충실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야 하며, 물관리기본법이 물 분야의 최상위법이어야 함. 수량과 수질 합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음
- 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역할, 지위 불분명 및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기능과 역할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 물관리위원회 구성, 역할, 지위 등 정리 필요함. 특히 심의, 자문,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모호하므로 정리가 필요함

(2) 하천법,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 하천법은 이미 기능을 잘하고 있고, 유역법을 상위에 신설하거나 하천법을 흡수 및 통합하려면 정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법령 정비의 필요성, 한계점 등) 법익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음
- 하천법 통폐합으로 인해 아쉬운 것 많음. 특히 수자원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짐. 하천은 시설 계획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홍수 대응 방안 등 치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통합되거나 폐지되면 시설계획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즉, 하천법 내 주요 기능 유지 필요하나, 유역청과 국토청 등 조직 정비 필요함
- 하천은 국토의 일부분으로서 국토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국토계획법 등에서도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음
-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관리하던 하천을 환경부가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환경부 관리로 인해 수질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는 필요함
- 유역청 및 국토청 등 조직 정비의 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함

(3) 물재해 분야 관련 의견

-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그리고 홍수통제소를 통한 대응 정도에 그치므로 재난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맞다고 생각함
- 가뭄도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함
- 물재해의 범위는 재난안전법에 있는 풍수해에서 수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함
- 타 부처와의 소통은 필수이며, 특히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 소통은 중요함.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현행은 자문위원회 위상이므로 물재해 관리를 위한 주요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과 통합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만, 수자원법은 기본적으로 하천법 등과 중복성이 있어 정비는 해야 하나, 통합 및 폐합 등은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기타 의견

- 현행물관리기본법에서 수자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 해수, 하수처리수 방류수 등에 관한 용어 정의가 물관리기본법에 필요함
- 또한 하천 자연성 회복, 통합물관리, 생태용수 등의 용어도 물관리기본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물관리기본원칙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2. 한국방재학회 전문가 면담 조사

■ 전문가 면담조사 개요

- 회 의 명 :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련 법령 및 계획정비 실행방안” 전문가 면담조사
 - 영남대학교 ○○○ 교수, 동신대학교 ○○○ 교수
- 일시·장소 : 2021년 4월 28일(수) 10:00~12:00, 온라인 화상회의

■ 주요 의견

(1)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에서 물관리와 관련된 세부법, 하위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때 용어적 표현이 매우 중요함. 즉 세부법, 하위법과의 연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 제1조(목적)와 제2조(기본이념)부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제2조(기본이념)에 이수과 치수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모든 기본법의 특성일 수 있겠지만 현재 물관리기본법은 선언적·추상적이라고 생각함. 대표적으로 제18조(기후변화 대응)와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가 있음
 - 예를 들어 제18조(기후변화 대응)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참고하여 기후변화 내용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만약 기본법에 기후변화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이라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제18조(기후변화 대응)에 수재해 관련한 내용도 다루어져야 함
 - 물이용 등 개발과 관련한 내용 하천법, 수자원법 등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에서 물이용 등 개발과 연계된 조항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물관리위원회는 최상위 위원회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실무적인 부분은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함
 - 물관리위원회 기본원칙, 역할 등에 따라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이수 및 치수) 구성이 필요함
- 물관리위원회는 최상위 의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거시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맞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도록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2) 하천법,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 수자원법에서 하천법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개발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종 승인은 물관리위원회까지 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이 중요함
- 유역물관리 관련 통합 법령 제정도 가능은 하겠으나, 하천법 내용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유역물관리 관련 통합법령을 제정하게 된다면 이수/치수, 내수/외수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적 역할 및 조직 마련이 필요함
- 환경부는 안전을 근본으로 생각해야 하며, 치수 안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라 향후 지자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이며, 수질-생태-치수 업무 협조를 위한 실무진 협의체 등이 필요함

(3) 물재해 분야 관련 의견

- 물관리기본법에서 물재해 관련 가뭄, 염해, 홍수 등 가능한 많은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해수면상승까지 다루어야 하는것은 잘 모르겠음
 - 해수면 상승에서도 배수까지는 포함 가능하나 바닷물까지 다루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음
- 물관리 측면에서 재해관리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물관리기본법 상에서 물재해를 어떻게 다룰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재해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타 법령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재해관리가 큰 장으로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가뭄, 홍수 등 재해별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함

- 기후변화, LID 등과 관련하여 방재는 융합적 분야이기 때문에 재해를 통합 및 조정하는 역할은물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함
- 타 부처 물재해 분야 부합성 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0년 8월의 홍수 사례처럼 커다란 재해의 경우에는 조사, 분쟁, 조정 등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중재 역할까지는 괜찮으나 부합성 심의/계획 내용은 과도하다고 생각함

(4) 기타 의견

- 개별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물관리기본법부터 체계적으로 물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것이 맞음(Top-down).

3. 대한상하수도학회 전문가 면담 조사

■ 전문가 면담조사 개요

- 회 의 명 :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련 법령 및 계획정비 실행방안” 전문가 면담조사
- 중앙대학교 ○○○ 교수, 연세대학교 ○○○ 교수
- 일시·장소 : 2021년 5월 11일(수) 14:00~16:00, 온라인 화상회의

■ 주요 의견

(1)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에서 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방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기후변화/탄소중립에 관한 구체적 실현방안이 기본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원칙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가 물 관련 계획들에 대한 이행 점검과 실행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이 개정되면 좋겠음. 앞으로 물관리 시설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큰 문제인데 물관리 시설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수명연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재원구조를 어떻게 해서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기본법에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음

- 프랑스 헌법 및 관련 법에서 안전한 수도 공급에 관한 권리나 철학같은 것이 기본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게 비상임위원회로 구성되서 운영되는 조직일텐데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임. 유역에 특화된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의견이 정리가 되고 계획이 정리가 되고 나와 있는 기능들이 국가위로 넘겨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음. 유역의 물관리의 상세한 내용은 유역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함. 거꾸로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계획과 연동시켜서 이행을 안했을 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은 국가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역위원회와 국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에 대해 공론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 할 때임. 지금이 물 관련 위원회 기능 정비가 가장 최선의 시기라고 생각함. 유역위원회도 경쟁을 시켜야 함.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누가 잘하나. 잘하는 위원회는 국고보조를 더 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함.

(2) 하천법,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 환경부와 국토부 간에 분절되어 하천 사무가 통합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하천의 방재기능, 이수기능을 어떻게 기존 상하수도 서비스 부분과 연계시켜서 기존 물순환 관점으로 갈 것인가? 라는 물순환, 상하수도 서비스 방향과 철학이 필요함
- 유역관리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을 합쳐서 농업용수, 상하수도, 지하수 등 현재 너무 많은 법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상하수도 분야 관련 의견

- 현재 상하수도의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므로 환경부가 상하수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함. 오히려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게 할 것이냐는 인해 행안부가 더 큰 관심이 있음
- 예를 들어 환경부가 국고지원 정책을 비판하는데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을 더 주고, 못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임

4. 한국물환경학회 전문가 면담조사

■ 전문가 면담조사 개요

- 회 의 명 :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련 법령 및 계획정비 실행방안” 전문가 면담조사
 - 명지대학교 ○○○ 교수, 공주대학교 ○○○ 교수
- 일시·장소 : 2021년 5월 12일(수) 15:00~17:00, 온라인 화상회의

■ 주요 의견

1.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 수자원 정의 구체화 필요: 농업용 저수지, 해수, 하수처리수 방류수 등을 포함하여 정의 필요
 - 그리고 ‘물환경’, ‘오염원’, ‘수생태계’ 등 물환경 관리분야의 핵심적인 용어에 대한 반영이 필요
- 물관리 기본원칙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으나 원칙의 내용 및 적용 범위가 매우 상이하므로 원칙의 정리가 필요함(기본원칙, 적용/운용원칙 등으로 구분)
 - 제11조(유역별 관리) 또는 제14조(물의 배분): “유역별 물자립(수원다변화 노력 필요)”을 우선시 요구하는 내용, 제19조(물관리 정책참여): “주민참여 물관리”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함. 제11조(유역별 관리): 물 관련 사업의 비용효율적 수행을 위한 “유역진단제”의 도입 근거도 필요
- 물관리기본법에 소하천-하구까지 이어지는 하천 물환경 개선 내용이 없음. 그리고 물관리 기본법에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정의 및 강의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물환경관리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
 - 물환경 관련 정의 포함 필요: 자연성 회복, 생태용수, 유역진단, 수변구역 등
 - 상류 소하천에서부터 하류 하구언까지 수변구역 개념 도입 필요
-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기능을 명확화해야 함. 예를 들어 유역 간 물분쟁, 유역 내 수계별 물분쟁 등 유역의 규모와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함(예, 충주호에서 미호천으로의 물 이동은 한강유역에서 금강유역으로의 물이동이지만, 행정권역으로는 같은 충북이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검토 대상 계획을 확대해야 함(특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의 물관련 계획). 또한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현재로서는 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사무국 직원 및 예산 등이 환경부에 종속되어 있음). 따라서 독립성 확보 규정이 명확히 보완되어야 함(사무국 독립, 특히 유역위원회는 사무국 관련 규정도 부재)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능 명확화 필요(유역위 의견과 국가위 의견이 상이할 때 조정 메커니즘 등)
 - 유역간 갈등조정의 효력에 대한 규정 부재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갈등 조정기관과의 역할분담 필요
 -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정 안전에 대한 명확화, 특히 위원장의 상정 권한에 대한 범위 명확화 필요
- 물과 관련되는 “보전지역(습지보전지역, 경관생태관찰지역 등)”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며, 하천의 횡적 및 종적 연결성 관련 내용이 위원회 기능으로 필요함.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국가 및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 기능을 가져와야 유역 기반 수자원 계획이 가능하며, 수계관리위원회는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존치 필요

2. 하천법,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과 같이 유역관리와 필요한 연계된 법령은 유역단위관리를 위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 유역별 통합계획이 현재 수행되는 각종 이행계획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선에서 통합적 전략계획과 부문별 이행계획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 종합적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지, 다른 어떤 계획이 어느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유역진단제를 통한 비용효율적 사업추진도 가능함. 다만, 환경부 내 업무영역 구분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초래 / 기재부의 비용효율성에 근거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음
- 수자원, 물환경, 재해와 관련하여 통합하는 하천관리 사무가 필요함
- 유역-하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통합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대강 수계법을 타 법과 통합하는 것은 고민 필요

- 타 법에 의하여 수행되면서 지방사무로 이관된 하천 관련 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어떻게 하천 관리 일원화에 연결할지 고민 필요
-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관리시설의 연계 및 통합조정원칙은 포함하되 운영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명시함이 필요

3. 물환경 분야 관련 의견

- 물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하기에 물환경과 연계되는 법은 통합되는 것이 기본원칙임. 또한 물관리기본법에 물환경 및 통합오염원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매우 미흡(물관리기본법에서는 오염원 관련 하위계획의 부합성 검토만 하고 있음)
 - 물환경 관련 법령이나 계획의 통합이 어려운 경우 물관리기본법에 물환경 관련 법령의 업무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 필요
 - 오염물질 및 물은 매체(대기-토양-지하수-하천-해양)로 연결되기에 매체별 연결성을 가진 정책 필요
- 물환경, 상하수도, 수자원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기본계획(물관리기본계획) 아래 분야별 실행계획을 배치, 이 과정에서 실행계획도 기존의 물환경, 상하수도, 수자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물환경, 물이용, 물재해 등 물의 기본적인 관리 분야별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부문별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부분임
- 물환경의 오염원 관리 분야는 기본적으로 점오염관리 관련 법(산업폐수, 하(오)수, 축산폐수 등)을 통합하고, 유역관리 수단을 통합하는 법(유역물관리법) 등으로 물환경 분야의 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의견

- 토양지하수법,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보전법(유역 기인 오염물질의 영향), 자연환경보전법(물과 관련되는 보전지역 등) 등 물과 관련되는 추가법령에 대하여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물관리기본법과 연계방안 검토 필요

5. 한국농공학회 전문가 면담조사

■ 전문가 면담조사 개요

- 회 의 명 :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련 법령 및 계획정비 실행방안” 전문가 면담조사
 - 서울대학교 ○○○ 교수, 전북대학교 ○○○ 교수
- 일시·장소 : 2021년 5월 28일(금) 10:00~12:00, 온라인 화상회의

■ 주요 의견

1.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의견

- 물관리기본법 내 농업용수 등 특정용수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물관리기본법은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특정용수를 언급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본법 구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 및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본 법령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하천법 등 타 법령을 통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체적으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댐건설법)’에 따라 농업용수의 운영·관리 체계가 현재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운영·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물 관련 법의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령, 우선 ‘농어촌정비법’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물관리위원회는 현재 초기 단계로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위원회 내 농업용수 관련 전문가가 적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함
- 본 법령 중 물관리위원회 관련(기능 및 역할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현재의 물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 특정 주제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최소 분야별 전문가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하여 구성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2. 하천법, 수자원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유역-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 유역관리를 통합법령은 현재 수자원 관련 다양한 법령들이 정비되고 통합된 형태로 진행된

후, 그리고 현재의 국가·유역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 단계적으로 유역물관리를 위한 법령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음

-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라 하천법(허가제) 하에서 기존 하천에서의 농업용수 취수(농민의 개별적 양수 등)가 법령에 위배 될 수 있음. 즉 농민들의 관행적 취수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 관련 부처 및 농민 의견수렴을 통한 하천 허가제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면 좋을 것 같음
- 수자원법 상 농업용수 관련 계측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다만, 댐건설법과 같이 농업용 저수지와 같이 관개시설에서의 조사는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바, 농업용수와 관련된 용수로 및 지천 등에 대한 수량 조사가 농식품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일관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 방향으로 보임

3. 농업용수 분야 관련 의견

- 농업용수 관련 법령 정비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농업용수 관련 법령은 농업의 생산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각 담당 부처별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농촌 및 농업에서의 생산성은 수질관리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업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비점오염원 관련 용어 정의 및 농식품부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여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음
 - 농어촌용수 공급량 등 실태조사를 위해 ‘농어촌정비법(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등)’ 등 관련 조항에 농어촌용수 조사를 가능케 하여 물관리기본법 목적에 맞는 자료 확보 및 공유가 되어야 함
 - 현행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은 타 계획과 달리 주기적인 계획의 수립(10년 등) 등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자원법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농업용수 관련 법령 정비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준비가 필요함. 현재 농업용수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그 수가 많으며 공간적 측면에서 관리에 한계가 있음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및 인력으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어촌공사의 태동과 함께 수리권 등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용수의 이용 주체인 농민의 공감을 통한 통합물관리는 어려운 실정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한 농업용수 통합물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통합물관리 전문가 포럼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으며 질의응답 회의록을 문장으로 재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 통합물관리 전문가 포럼 개요

- ※ (일 시) 2021.11.26. (금). 14:00~17:00
- ※ (장 소) 더 화이트베일 에메랄드홀 2층 (서울 서초구)
- ※ (참석자) 학회별 전문가 대표

□ 발표자: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정비 추진방향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 참석자

- (좌장) 송미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 (토론) 총 11인 (가나다순)

강호정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습지학회
김동구	물통합정책관	환경부
김병식	강원대학교 교수	한국방재학회
김영오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	대한상하수도학회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신재은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윤광식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농공학회
이재우	고려대학교 교수	대한환경공학회

■ 토론 주요 내용

○ 강호정,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습지학회)

- 우리나라의 습지는 생태(식생중심)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수리·수문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지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함. 특히 환경부 입장에서는 습지가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습지는 탄소흡수원의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물관리기본계획에 탄소중립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Carbon footprint에 집중하다보면 최적의 수자원관리방법과 탄소중립의 방법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현재 정책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에 집중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 기존 물관리 부처에서 수립한 법령, 계획용어(개념) 등이 매우 다른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물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음. 이에 향후 공간적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점 차이로 인한 불일치한다는 점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 용어 등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 김병식, 강원대학교 교수 (한국방재학회)

- 수량과 수질 통합 위주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추진에서 수재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행정안전부 소관 계획이 부합성 심의 대상인 점인 대해서 회의적임
- 가장 큰 문제는 분야별 법정계획 수립 전 용어의 일치와 통일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상·하위 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르면 재난분야는 장기에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됨
- 최근 우리나라 재난의 90%를 수재해가 차지하는데 이·치수 파트가 애매모호해짐. 일원화로 인해 환경부로 수재해가 오게 될 경우 수장기의 치수 파트에 대한 행안부의 고려가 필요함
- 기상법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함. 재난에서 문제가 되는 물관리일원화 법정정비에 있어서 홍수 예고 관련 법률, 호우특보에 관한 법률도 다시 집어봐야 할 것임. 다만 단기로 봐야할지, 장기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김영오,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 계획 정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본 경험이 있는 산업계 의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할 것임
- 소관부처별 수직적 계획 추진체계를 아·치수·환경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꼬임을 잘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임. 어떤 계획이든 계획과 연계된 사업과 일자리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다면적 검토가 필요함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통합(안)과 관련하여 물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인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비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공간적인 범위에서 소규모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합쳐지는 계획들의 성격을 잘 살려야함
- 물순환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합이 가지는 취약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시공간적인 단위에서는 실시간 대응, 작은 지역에서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음. 통합과 민첩성에서 균형을 이루어야함. 통합에 집중하다 보면 시공간적 단위의 법·계획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질 수 있음

○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 현재 수립되고 있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물환경, 생태계, 물이용, 거버넌스 분야로 나누어 수립됨에 따라 세부 추진 과제들(약 150개 정도)이 있음. 이 중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과제도 있으나 일부는 없음. 이러한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정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임. 예를 들어 국가가 재이용률을 높이고 싶어하지만 현재 법률 간에 상충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음
-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제내외지 통합, 물의 편중, 오염원의 집중, 종횡적 연결성과 관련)를 파악해서 법과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제안드리는 바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유역에서 하고자 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지표들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법령인가 계획인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함. 즉, 문제해결형 법령·계획 정비를 제안하며,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가축분뇨 부분을 진취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비점오염원 관련하여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과 비점오염관리계획을 묶어서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 물순환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 물순환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물순환까지 포함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유역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 필요함
- 법령·계획정비를 국가·전략계획 중심으로 가면 실행계획과의 면밀한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하위 실행계획의 수행이 없는 국가계획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에 국한될 것임

○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 (한국지하수도양환경학회)

- 물관리일원화가 되는 과정에서 실행계획이 과연 실제로 수립될 수 있는지는 회의적임
-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써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람
- 조사 행위의 통합(주체, 부처가 다른 현재 상황에서)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통합 방법이 필요함
- 국가수자원의 10%를 차지하는 지하수 관련, 실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의 주체는 개인임. 국가가 이 부분을 다뤄주길 바람. 취수원 다변화는 필요한 시점이나 지하수는 대체수자원이라는 관점이 주도적인 부분이 아쉬움
- 중앙 또는 지방 집권적인 물관리의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중앙집권적으로 가고 있는 국내 통합물관리 추진에서 가지는 취약점은 소외되는 분야, 부분이 생긴다는 것임. 현재 지하수 분야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 (대한상하수도학회)

- (종합) 법 개정의 방향으로 잡은 것이 중복된 것을 통합, 정책의 일관성 증가, 효과의 확장성(미래대응)인데, 각 요소에 대하여 제시한 정비방안의 기대효과를 다뤄주길 바람 (예를 들어 개정안이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 제시)
- 모든 제도의 변화는 시간이 걸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투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문제, 불안보문제, 시장, 국민생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람
- (학회 입장)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던 유역하수정비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할 때, 자료조사 등 문제발생 우려. 현재 체제는 유지하고,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한 투자를 먼저 고려해주길 바람. 그 이후에도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국가오염원 정비는 필요함. 이 부분은 김이형교수와 같은 생각임

○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 물환경보전법에 있는 수생태를 통합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국가 수생태복원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야 함. 수생태복원 계획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 물관리조사계획 관련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것이 조사 주체, 계획,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인지, 법적 방향인지 의문 조사를 어떻게 누가 어디에 한 것인지에 관한 거라면 현재 내용의 콘텐츠가 적절해보이지는 않음
- 물관리기본법이 모든 물관리 법의 최상위법이라는 근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없음(이름은 기본법이나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법적근거, 장치는 현재까지 없음). 심의 기능과 관련하여 기능을 넘어서 자료를 요구,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권한 등 즉 부합성 심의에 대한 강력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
- 또한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이며 수립주체임. 현재 법령은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약한 법적 구속력). 물관리기본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 신재은,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 보수적 접근으로 보이나 실제로 통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럼에도 새로이 수립되었기에 유역차원의 관리계획과 같은 위상에 있던 것을 상위개념으로 끌어올리고 통·폐합한다는 점은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시도였다는 생각임
- 또한 중요한 키워드가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며,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임
- 오염원관리, 물순환관리계획이 유역단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함
-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기본/유역종합계획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실행되는 지역이나 공간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임
- 공간차원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함.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양된 예산이 제시된 계획안이 어떻게 실현가능할지 고려해보길 바람(특별회계 마련 고려)
- 제시안을 구현할 방법, 실질적인 실효성 방법,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과 이 정비 계획안이 실효성 있게 연계될지에 대한 점을 우려가 있음. 실효성 있게 연계될 과정을 마련해주길 바람

○ 윤광식,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농공학회)

-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해보길 바람. 호주나 일본의 사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 우리 정책

- 에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보길 바람(농업용수 위상, 물 값, 거버넌스 등)
-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길 바랐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 아쉬움(농업용수 효율화 방안, 농업용수 산정방법 등)
 - 농업용수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호주의 거버넌스 사례를 참고해보길 바람. 충분한 의견이 농업용수 분야에 적용되길 바람

○ 이재우, 고려대학교 교수 (대한환경공학회)

- 통합물관리와 관련되어 여러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이런 부분을 하위법령 하위계획에서 다루어야함
- 기본법을 향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보다도 조정과 중재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물관리기본법의 총괄목표가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순환’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물순환을 위하여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한데 이러한 개념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함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2개의 법률(계획)의 대한 역할이 구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유역물관리 관련, 4대강 유역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동시에 유역종합계획은 물재해, 물이용, 물환경, 기타로 이루어져있는데 기타로 이루어져있는 부분의 명확성 확보 바람

○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 포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법령에 대한 제개정은 신중한 고려/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생활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임
- 조사계획 관련, 조사 주제, 기법, 주기, 장소를 정하는 것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 조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다보니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음. 환경부의 의도는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임
- 국내법에 근거한 위원회 중에는 행정부처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도 있고, 정부 정책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있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책조정 위원회임. 이 부분 고려하여 포럼위원이 말씀해주신 부분 고려 필요하나 강력한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 필요
- 통폐합으로 인한 빈 곳(소외된 곳)에 대한 우려 관련, 계획과 집행 측면도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계획 간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했음. 계획과 집행의 연계

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 마련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음

○ |정리·폐회|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통합물관리의 취지는 첫째,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왔던 하천, 수도 같은 것을 유역별로 관리하자는 것이며, 둘째, 그간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등 분산된 업무를 가능한 한 한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령정비는 소관부처에서 하는 일이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임. 해당과제의 현재의 법령체계 안에서 계획을 조정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령정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임. 타 부처 소관의 고유 업무를 논의없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음. 그러나 물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부합성 심의라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 습지와 관련된 의견은 수렴하겠음.
- 물순환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을 다루고자 하는 것임
- 재난관리 관련, 긴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임. 학계와의 협의도 해나가겠음. 방향을 잡고 세부사항을 정할 것임
- 기대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어려운 부분이나 고민하도록 하겠음
- 국가종합하천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하천중심의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에 포함된 저수지, 댐 등 여러 수역을 포함하는 하천의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도임
-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개선방향 마련 중이며, 관련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음
- 하천관리 관련, 국가하천은 이제 환경부가 관리하겠지만 여전히 지방하천 관리 문제는 우려되는 부분임.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법, 계획적 근간 만들어 나갈 것. 위원회의 역할 관련, 현재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법률의 개정은 소관부처에서 다루는 문제인 것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이 역할을 위원회가 해내 갈 것임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 지역연구원 전문가 포럼



“부록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으며 질의응답 회의록을 문장으로 재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 지역연구원 전문가 포럼 개요

- ※ (일 시) 2021.11.29.(월). 14:00~16:00
-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 청사 내 3층 세미나실
- ※ (참석자) 지역연구원 물관리 전문가
- ※ (기 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면자문 추가 수렴

□ 발표자: 물 관련 법령 및 계획정비 추진방향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 참석자

- (사회) 국토연구원 조만석 부연구위원
- (토론) 총 5인

○○○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	지역개발연구부장	전북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부산연구원
○○○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강원연구원

- (서면자문) 총 9인

○○○	연구위원	충북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인천연구원
○○○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	청정도시연구부장	제주연구원
○○○	생태환경연구실장	경기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울산연구원
○○○	오염총량분석팀장	경남연구원
○○○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	책임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

■ 토론 주요 내용: |온라인 토론|

○ 서울연구원 ○○○ 연구위원

- 통합물관리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 두 축의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충점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예를 들어, 유역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예산 및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안으로 이해되나, 반대로 신설 계획도 너무 많아 부합성 평가 절차도 가중되고 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움
- 또한 물 자치(自治)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데, 국가 단위 계획이 많이 신설되고 국가계획 위주로 통합되는 것을 볼 때 물 자치 요소는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전북연구원 ○○○ 지역개발연구부장

- 법령 통합과 계획 통합의 원칙과 분야별(수량, 수질, 수생태) 계획 체계로부터 통합안을 도출하는 프레임과 같은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설득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러한 설명 필요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물환경기본계획을 통합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양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편중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부산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발표한 것은 상위 계획 위주의 통합안으로 이해되는데 실제 현장과 지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계획 단위로, 이에 대한 통합과 정비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 Bottom-up 관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됨
-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물관리 업무인 가뭄, 홍수,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유역계획과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도 앞으로 설명과 보강이 필요할 것임. 지자체 관점에서는 특히 의무 계획, 특정 계획, 임의 계획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
- 현재 구상하는 유역종합계획의 내용 범위가 너무 커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지 의문이 들며, 국가물순환관리계획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타이틀 상 유사성이 크므로 이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고민 필요

○ 강원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법령 및 계획 정비의 최종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여 이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계획 통합은 필요하지만 중복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닐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세부 내용 상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 바람
- 물관리에 연관된 여러 부처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반영이 필요할 것이며 계획정비 이후 통합물관리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담아주기를 바람

○ 충남연구원 ○○○ 연구위원

- 충남은 충남도 자체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 때도 방대한 물관리 제반 계획 중 실행력이 담보되는 코어 지역과 핫스팟 계획에 집중하는 형태로 접근하였음을 참고 바람
- 호주 역시 우리나라 전체 유역보다 넓은 유역을 1개 종합계획으로 접근하는 대신 스팟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는 점도 참고 가능
- 계획 간 수직적 정비와 함께 수평적 정비도 고려하면 더욱 완성도 있는 계획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동의하며, 통합조사계획 신설도 동의함
-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통합계획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바람
- 조금 더 전향적인 계획 정비 방안에 대한 내용도 기대함

■ 토론 주요 내용: |서면자문|

○ 충북연구원 ○○○ 연구위원

- 큰 틀에서 국가-유역 체계 구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하천종합계획, 국가물순환관리계획,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물관리조사계획, 댐관리기본계획 등을 제안하기 전에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함
- 전국수도종합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일반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하는 방안인지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일반수도(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그대로 살려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의 명명 검토의 경우, 추후 논의가 되겠지만 도시 물순환관리계획으

로 명칭할 경우 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성격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전국 명명을 권유함

○ 인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기본원칙 중 하나인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 종합계획, 관리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등의 명칭에 부합하는 계획 성격과 위상·위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명칭정리가 필요함
- 물기술산업진흥기본계획의 위상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하위에 위치시켜 4대강 유역별로 수립하고, 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도 신설하여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유역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여러 지자체에 걸친 유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특정 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단순히 행정단위별로 수립되는 경우라면 상위 계획에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예.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 대구경북연구원 ○○○ 연구위원

- 타 부처 물관련계획(재난관련), 물관리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포괄적 계획과도 연계성 구축이 필요함
- 물관리통합조사계획의 경우 물관리기본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제 실행이 되어야 할 지자체(광역, 기초 등), 이행기반(조직, 예산, 부서 간 거버넌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실행력이 반감되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물관리 통합조사계획 수립에 크게 공감하고, 환경부 외에도 행안부(가뭄, 홍수 등 재난 대응차원) 등에서의 조사부분도 포함하여 연계가 필요함
- 특정기관이 조사하고 자료를 독점하는 문제 해소가 필요함(충분한 자료의 개방과 소통 필요)
- 계획 수립 후 이행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보완하는 부분이 크게 강조되어야 함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매우 좋은 사례로 판단됨(지속적 예산투자와 전문화 등이 되어야 좋은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이고 계획이행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임)
- 이행평가를 통해 계획수립 책임성, 효율성 제고 기대

○ 제주연구원 ○○○ 청정도시연구부장

- 대부분 국가계획이나 유역단위 계획을 통합하는 계획인데 유역단위 계획이 통합되고 지

자체별 통합계획이 수립될 경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로서 계획안 내용이물관리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나 방향이 맞는 것으로 사료됨
- 오염원 관리에서 오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오염총량 관리계획이 통합되지 않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오염원 관리에 총량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경기연구원 ○○○ 생태환경연구실장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나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물환경계획 등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함
- 다만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후 신속하게 수정계획(2026~2027년)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으나 차라리 2027년부터 제2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2030년 이전에 계획수립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제1차 계획은 기존 계획이 이미 수립된 이후 변칙적으로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정계획을 해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을 국가물순환관리계획과 통합했으면 함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의 내용에 투수면적관리, 강우유출수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비점오염원관리 대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비점오염원 외의 오염원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에서 다룰 수 있어서 국가오염원관리 종합계획은 삭제가 바람직함. 차라리 오염원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축산농가, 중소 규모 공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다루는 국가소규모오염원관리계획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에 물 관련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등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 명시가 필요함

○ 울산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위원들 의견대로 계획 정비안 도면 내용을 계획 수립주체, 소관법, 성격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리가 필요함
- 2018년 이후 물관리 정책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2021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심의 의결의 취지에 부합되는 물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의 물 관련 법정계획의 정비의 대상과 기간, 수립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도 적절하게 수록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중앙정부의 법정계획 외에 지방정부의 법정계획 수립은 아직까지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수자원관리와 하천관리, 지하수관리 등 여전히 계획수립과 추진부서가 이원화된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 부처와의 일원화된 업무와 정책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관한 추진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물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법적 위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한 사항으로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물순환관리계획, 국가오염원관리종합계획, 물관리조사계획, 댐관리기본계획 등의 신설은 도시의 물순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보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바람직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목록 중 환경부 15개 사항 중 계획의 성격에 따라 유역위원장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립추체를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지 또 가능한 사상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경남연구원 ○○○ 오염총량분석팀장

-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전략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통합하는 것은 통합물관리 원칙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1개유역-1개계획은 타당한 방향이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 통합하는 것은 종합계획 위상과 범위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신설 국가계획(국가가축분뇨관리계획, 물관리 조사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 하천정비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위상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기본계획보다는 종합계획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안)은 물순환분야에 대한 전략계획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전략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통합 정비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개 유역에 대한 모든 물관리 범위를 종합하므로 위상 정립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전세종연구원 ○○○ 책임연구위원

-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강화,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의 구축은 지향적 목적으로는 제시할 수 있으나 실현방법에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다양한 실현방법이 정비·제시되는 법령 및 계획에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기존 목적 및 방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기존 법령, 계획들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지향적 목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아직까지 법령 및 계획은 국가하천 위주이고, 소하천의 관리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안의 구분은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이 있어 촘촘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법정계획이지만 실제 수립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사례가 있음). 또한 많은 물관련 법정계획이 많은 부처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부처별로 목적(우선순위)이 불일치하고 관련 데이터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음(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부처 간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물관리 종합계획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계획들의 목적 및 내용도 재수정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물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되었음에도, 아직 치수 및 이수 위주가 목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음)
- 정비안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해당 부처에의 조율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물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물관리 기본법의 지향적 목적을 달성하고 빈틈없고 촘촘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 및 계획의 통폐합이 필요함

○ 광주전남연구원 ○○○ 책임연구위원

- 현행 물관리 법령·계획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및 지자체 물관리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경우 댐건설장기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치수종합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기존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 명시가 필요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긴 하지만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통합에 의한 개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물환경보전법 제22조 1항에서는 수계영향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으며, 2항에서는 수계영향권역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물 환경보전법 제26조에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통합과정에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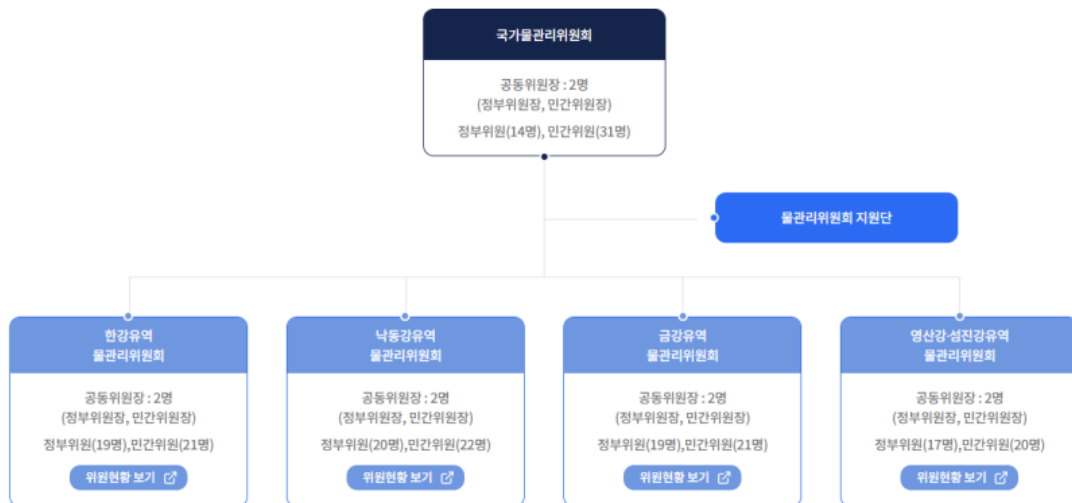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기본계획,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물순환, 농업용수 등의 내용이 추가됨. 따라서 ‘통합’이 아닌 ‘통합 후 확대 개편’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물순환관리계획이 신설된다면 지자체물순환관리계획은 유역종합계획에서도 다루겠지만, 국가물순환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성격의 지자체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물관리 통합조사계획 신설 시, 4대강 수계법(영산강수계법 기준 제33조, 시행령 35조)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물론 환경기초조사사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조사계획 마련이 필요함

부록 3 물 관련 법정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

1. 국가물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의결, 협의, 조정)

- 물관리위원회 구성: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 관계 기관장인 정부위원 14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31명으로 구성
- 위원회 아래 3개 분과위원회 설치 (계획, 정책, 물분쟁조정)



○ 제1차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2019.08.27.)

- 참석위원: 위원장 등 37명 (소집)
- 주요내용
 - (심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안)
 - (보고)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 (보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방향
- 결과: 심의안건 원안 의결 및 보고안건 보고

○ 제2차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05.18.~5.25.)

- 참석위원: 위원장 등 37명 (서면)

- 주요내용
 - (심의)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보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경과 및 주요내용
- 결과: 심의안건 원안 의결 및 보고안건 보고
- 제3차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2021.01.18.)
 - 참석위원: 위원장 등 37명 (대면·영상회의 병행)
 - 주요내용: (심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 결과: 원안 의결
- 제4차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2021.02.22.~2.24.)
 - 참석위원: 위원장 등 38명 (서면)
 - 주요내용
 - (심의) 금강, 영산강 보해체·상시개방에 대한 물분쟁 조정
 - 결과: 원안 가결
- 제5차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2021.06.08.)
 - 참석위원: 위원장 등 37명 (대면·영상회의 병행)
 - 주요내용: (심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결과: 원안 의결

2. 유역물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의결, 협의, 조정)

-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19.11.21.)
 - 참석위원: 위원장 등 25명 (소집)
 - 주요내용
 - 간사위원 지명,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지명
 - (보고)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결과: 위원 지명 및 운영계획 보고
- 제2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07.24.~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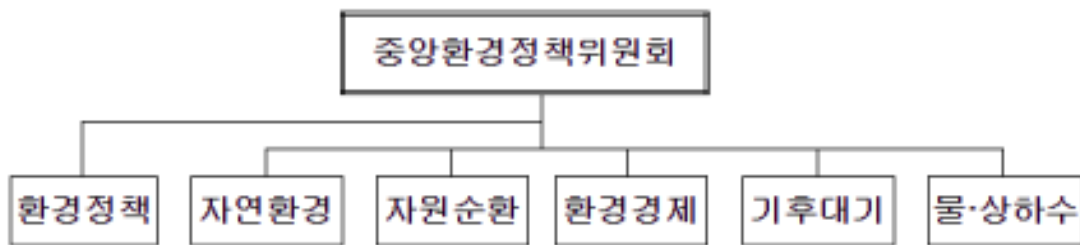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2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결과: 운영계획 보고
- 제3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10.22.~10.29.)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2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 결과: 보고안건 보고
- 제4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1.02.09.~02.19.)
- 참석위원: 위원장 등 35명 (서면)
 - 주요내용
 - (심의) 기후변화, 재해 등에 대비한 보 운영 여건 마련(안)
 - (보고)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추진방안
 - 결과: 심의안건 원안 의결 및 보고안건 보고
- 제1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19.11.26.)
- 참석위원: 위원장 등 25명 (소집)
 - 주요내용
 - 간사위원 지명,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지명
 - (보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결과: 위원 지명 및 운영계획 보고
- 제2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07.29.~08.04.)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4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결과: 운영계획 보고
- 제3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10.22.~10.29.)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4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낙동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 결과: 추진계획 보고
- 제4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1.02.09.~02.19.)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3명 (서면)
 - 주요내용: (심의) 낙동강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안)
 - 결과: 가결
- 제5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1.04.21.~04.28.)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3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수질개선대책)
 - 결과: 보고안건 보고
- 제6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1.06.24.)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3명 (대면·영상회의 병행)
 - 주요내용: (보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 결과: 심의안건 원안 의결 및 보고안건 보고
-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19.11.18.)
 - 참석위원: 위원장 등 24명 (소집)
 - 주요내용
 - 간사위원 지명,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지명
 - (보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결과: 위원 지명 및 운영계획 보고
- 제2차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07.23.~07.30)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2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추진방안
 - 결과: 보고안건 보고
- 제3차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09.25.)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2명 (소집)

- 주요내용: (심의) 금강 3개보 처리방안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 심의·의결
- 결과: 제출문(안) 수정 및 심의·의결
- 제4차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10.21.~10.28)
 - 참석위원: 위원장 등 42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 결과: 보고안건 보고
- 제1차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19.12.18.)
 - 참석위원: 위원장 등 20명 (소집)
 - 주요내용
 - 간사위원 지명,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지명
 - (보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결과: 위원 지명 및 운영계획 보고
- 제2차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05.26.)
 - 참석위원: 위원장 등 21명 (소집)
 - 주요내용
 - (보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보고) 영산강·섬진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수립계획
 - 결과: 보고안건 보고
- 제3차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09.28.)
 - 참석위원: 위원장 등 26명 (소집)
 - 주요내용: (심의)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결 제출문
 - 결과: 심의안건 원안 의결
- 제4차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2020.10.22.~10.29.)
 - 참석위원: 위원장 등 39명 (서면)
 - 주요내용: (보고)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 결과: 보고안건 보고

3.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현재 제8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출범 (1차 전체회의, 2020.6.24.)
 - 민간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
 -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 총 121명으로 구성
-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출범 (2018.2.1.)
 - 구성: 총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환경부장관 자문기능의 환경정책 분과 및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



- 분과별 분과위원장(6명)과 위원 총 142명으로 구성 (임기 2년)
 - (분과위원장) 환경정책(최재천), 자연환경(원용진), 자원순환(김재영), 환경경제(이영희), 기후대기(조용성), 물·상하수(권수열)
 - (구성) 학계 56명, 시민단체 44명, 공공기관 26명, 경제·기타 16명
- 기능: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각종 환경정책 수립 시 심의·자문
- 제7기 운영 현황 (2019.1.30. 기준)
 - (전체 모임, 2회) 위촉식 및 2018 업무계획 토크쇼(2018.2), 환경 R&D 중장기 발전방향 토론회(2018.5)
 - (분과별, 18회) 자연환경 3회, 자원순환 5회, 환경경제 7회, 기후대기 1회, 물·상하수도 2회 분과 모임을 통해 해당 정책 의견 수렴, 심의
- 2016년 제2차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물환경분과 회의 (2016.11.11.)
 - 참석인원: 중앙환경정책위 물환경분과위원 10인, 물환경정책국장, 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 사무관 등 8인

- 주요 논의사항
 - 양분관리제 추진방안
 -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기('16~'20) 추진계획
 - 조류관리제도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기후대기분과 회의 (2016.12.23.)
 - 참석인원: 20명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기후대기정책관, 기후대기정책과장, 기후변화협력과장, 대기관리과장,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청정대기기획팀장 및 국 주무계장·담당자 2명
 - 기후대기분과 위원 11명
 - 주요 회의내용
 - 2017년도 기후대기정책관실 주요 업무계획 방향 논의/토론
- '18년 제1차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물·상하수분과 회의 (2018.3.27.)
 - 참석인원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국장, 물환경정책과장, 유역총량과장, 수생태보전과장, 수질관리과장, (상하수도정책관실) 정책관, 수도정책과장, 생활하수과장, 토양지하수과장 등 13명
 - 중앙환경정책위 물·상하수분과위원(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12명
 - 주요 회의내용
 - '18년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 주요 업무계획 발표
 - 주요 정책 제언 및 분과위 운영방안 논의
- '20~'21년 기준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회 (2019.7.25.)
 - 참석인원: 총 26명(통합환경심사위 12, TWG 선임 2, 본부 2, 과학원 10)
 - 회의안건: 4개 업종 기준서 심의/의결(펄프종이, 전자부품, 반도체, 섬유·염색)
 - 회의결과: 원안가결(4개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심의(안))
- '19년 하반기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경제 분과위 회의 (2019.12.9.)
 - 참석인원: 환경경제정책관, 환경연구개발과장, 통합허가제도과장, 중앙환경정책위 환경경제분과위원, 전문가 등

- 주요 회의내용: 환경경제 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과제1) 녹색산업 혁신성장 전략, (과제2) 환경 R&D 관리 개선 추진, (과제3) 통합 허가 전환 가속화 추진계획

4-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설치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
- 설치목적: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 기능: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도봉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도봉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설치일자: 1998.4.8.
- 위원장 및 위원수: 구청장, 17명
- 2017년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의 (2017.5.24.)
 - 참석인원: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13명
 - 회의안건: 1.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촉장 재교부, 2.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3. 환경정책 주요 업무계획 자문 및 도봉환경교실 주요 업무 보고 등
- 2018년 환경정책위원회 서면회의 (2018.12.21.)
 - 심의기간: 2018.12.11.~12.21.(10일간)
 - 참석위원: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9명
 - 심의(자문)안건: 1. 꼬리명주나비 등 도봉구 깃대종 구민홍보 및 보전방안, 2.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구민참여 확대 방안, 3.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도봉 조성방안 등
- 2019년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의 (2019.5.23.)

- 참석인원: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14명
- 회의안건: 1. 신규 및 연임위원 위촉장 수여, 2.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환경교실) 위탁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재계약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4-2. 경기도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구성: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4인), 시의원(2인) 등 당연직(6인), 교수 및 전문가(8인), 시민단체(2인) 등 위촉직 10인으로 구성, 2년 임기
- 주요기능: 미세먼지, 방치폐기물 처리, 소각장 증설 등 화성시 환경분야 주요현안을 비롯해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하여 자문·심의
- 제1기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2019.10.10.)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설치일자: 2021.1.26. (인천 자치구 중 첫 사례)
- 구성: 남동구 환경교통국장, 주민대표,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환경업체, 법률자문 등 15명 외부위원을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
- 주요기능: 남동구의 주요 환경보전 계획과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도시조성,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 1차 정기회의(2021.1.26.) 안건
 1. 남부권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문제점 및 향후 대책
 2.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성 검토 및 향후 대책
 3. 부서별 사업 추진 관련 환경 현안 사항 등

5.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조정)

- 제1차 한강 중권역물환경관리위원회 회의 (2006.12.27.)
 - 구성: 원주지방환경청장(위원장), 원주지방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 관련 시·도 및 물 관련 기관 관계자, 지역전문가(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
 - 주요안건: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에 따른 한강 상류 및 동해안 유역의 물환경 관리 정책 방향 등 논의
- 금강 중권역물환경관리위원회 회의 (2014.5.16.~6.3.)
 - 참석인원: 금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위원 16인(서면심의)
 - 심의안건: 영동천 등 9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안)
 - 영동천, 초강, 보청천 등 3개 중권역(계획기간 `14~`15)
 - 대청댐상류, 대청댐,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삽교천 등 6개 중권역(계획기간 `13~`15)
 - 심의결과: 영동천 등 9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안) 모두 원안 가결
- 2014년 한강 중권역물환경관리위원회 회의 (2014.12.31.~2015.1.9.)
 - 참석인원: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위원 15인(서면심의)
 - 심의안건: 홍천강 등 6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연동계획(안)
 - 권역명: 양양남대천, 춘천댐, 평화의댐, 금강산댐, 홍천강, 삼척오십천
 - 심의결과: 총 15명 위원 중 13명 의견 제출, 13명이 안건에 찬성하여 원안 가결
- 제9차 한강 중권역물환경관리위원회 회의 (2017.12.13.)
 - 참석인원: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위원 14인(총 15인 중 인천시 불참)
 - 심의안건: 총 7건(한강서울 등 4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17~`21)(안) 상정·확정
 - 심의결과: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탄강, 임진강하류, 팔당댐, 경안천, 남한강하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안) 모두 원안 가결
- 한강 중권역물환경관리위원회 회의 (2019.12.10.)
 - 참석인원: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위원 13인
 - (참석) 원주지방환경청장, 강원도 수질보전과장,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한강물환경연

구소 소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물환경센터장, 상지대학교 신윤근 교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석호 연구위원

- (서면) 충청북도 수질관리과장, 한국교통대학교 장인수 교수, 경북대학교 송시훈 교수, 연세대 원주캠퍼스 정태영 교수,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연구위원

- 심의안건: 삼척오십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안)
- 심의결과: 총 14명 위원 중 12명 조건부 가결(2명은 의결서 미제출)

6. 수계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협의, 조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조직 형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특수법인)으로 설립
- 조직구성



○ 기구 구성 및 역할

기구	인원	역할	비고
수계관리위원회	10인: 환경부차관(위원장),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6개 시·도(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수계관리 현안사항의 심의·의결	법 제37조 법률상 기능 협의·조정
수계관리 실무위원회	13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위원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 남부지방산림청장, 6개 시·도 환경국장, 농어촌공사·수공·산업단지공사 이사	위원회 상정안건의 실무적 검토·조정	위원회 규정 제6조
자문위원회	28인 이내: 6개 광역시·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산업계·환경관련 전문가 각1명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환경전문가 1명 이상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연구조사 및 자문	위원회 규정 제4조
사무국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일부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법 제37조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자료: 낙동강유역환경청(<https://www.me.go.kr/ndg/web/index.do?menuId=3415>)

○ 위원회 개최 실적

- 2021년 1월 기준 수계관리위원회는 73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등 174건 처리

구분	수계위		실무위		자문위	
	개최횟수	처리건수	개최횟수	처리건수	개최횟수	처리건수
합계	73	174	117	359	28	49
'02~'18	67	162	100	310	25	43
'19	3	6	10	23	2	4
'20	3	6	7	26	1	2

○ 제12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서면) 개최 결과

- 심의기간: 2020.12.14.~12.23.
- 심의위원: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10인)
- 심의안건

-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 매각(안) (실무위 위임)
- 2. 국유재산(매수토지) 사용허가(안) (수계위 상정)
- 3. 일반수도사업자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안) (실무위 위임)
- 4.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일부개정(안) (실무위 위임)
- 5.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율 현실화(안) (실무위 위임)
- 6. 2019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보고)
- 심의결과: 1~5번 안건 원안 가결

○ 제8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서면) 개최 결과

- 심의기간: 2020.12.16.~12.28.
- 심의위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심의안건: (제138호)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심의결과: 가결

○ 2020년 제3회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심의기간 및 방법: 2020.12.16.~12.28., 서면심의
- 심의위원: 환경부 차관(위원장) 등 10명
- 심의안건: 2021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동의 10)

○ 제73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심의기간: 2020.12.16.~12.29.
- 심의위원: 환경부 차관(위원장) 등 10명
- 심의안건
 - 1. 제173호 2021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2. 제174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 심의결과: 2건 원안가결

○ 2021년 제1회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심의기간 및 방법: 2021.02.18.~02.26., 서면심의
- 심의위원: 환경부 차관(위원장) 등 10명

- 심의안건: 2020회계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동의 9)
- 제118회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심의기간: 2021.02.09.~02.24.
 - 심의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위원장) 등 13명
 - 심의안건
 - 1. 2020회계연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2. 2021년 주민지원사업계획(안)
 - 3. 공익사업에 따른 매수토지 유상관리 전환(안)
 - 심의결과: 3건 원안가결
- 제74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심의기간: 2021.02.26.~03.10.
 - 심의위원: 환경부 차관(위원장) 등 10명
 - 심의안건: 제175호 2020회계연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동의 10)

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의결, 조정)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심의 결과자료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나 결재 공문만 일부 공개되어 있을 뿐 세부내용은 비공개 처리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개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심의기간: 2017.12.11.~12.22 (12일간)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안건
 - 1. (제2017-05호) 낙동강 하천구역 일부 변경(절강리)
 - 2. (제2017-06호) 형산강 하천구역 일부 변경(오야리)
 - 3. (제2017-07호) 형산강 하천구역 일부 변경(국당리)
 - 4. (제2017-08호) 밀양강 하천구역 일부 변경(용평동)

- 5. (제2017-09호) 황강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일부 변경(성산리)
- 6. (제2017-10호) 황강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효자2지구)
-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고막원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탐진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 2건에 대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4분과) 안건 심의 요청 (2018.4.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심의결과
 - 1. 고막원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 가결
 - 2. 탐진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 가결
- 2018년 제1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제2분과) 심의 계획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심의안건
 - 1. 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단양시가지 하천구역 제척)에 관한 사항
 - 2.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춘천 상중도 하천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10조, 제25조에 따라 “미호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변경(안)”에 대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3분과) 안건 심의 요청 (2018.4.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심의번호 제2018-1호(미호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변경(안))의 심의 결과: 가결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개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심의기간: 2018.4.20.~4.30 (11일간)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안건
 - 1. (제2018-01호) 낙동강 하천구역(징리) 일부 변경
 - 2. (제2018-02호) 낙동강 하천(홍수관리)구역(월하리) 일부 변경
 - 3. (제2018-03호) 낙동강 하천구역(반월리) 일부 변경
 - 4. (제2018-04호)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일부 변경(대구, 경산, 영천)
 - 5. (제2018-05호) 남강 하천구역(대포리) 일부 변경
 - 6. (제2018-06호) 남강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내리) 일부 변경
 - 7. (제2018-07호) 서낙동강수계 하천구역(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일부 변경

8-1. 서울특별시 수자원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설치근거: 하천법 제87조
- 구성 및 임기: 총 30명(위원장: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위원: 외부인사 등) / 2년
- 주요기능 및 역할
 - 하천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하천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2018년 제1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 (2018.5.17.~18.)
 - 참석인원: 1차 6명, 2차 6명
 - 회의안건
 - 1. 양재천 하천관리사무소 신축사업
 - 2. 신원천 안골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 3. 은평뉴타운 내 신설하천(폭포동천) 지방하천 지정
 - 4. 홍제천 하천구역 변경
 - 5. 오류천 하천구역 변경
 - 6.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 7.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여의천 교량 4개소)
 - 8. 정릉천 정릉파출소뒷교 재설치
 - 9.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간 교량신설
 - 심의결과: 1,5,8,9번 안전에 대해 조건부 가결, 2,3,4,7번 안전에 대해 가결, 6번 안전에 대해 재심의 결정
- 2018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 (2018.11.21.)
 - 참석인원: 6명

- 회의안건

- 1.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 2. 고덕천 횡단교량 설치(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3. 하천기본계획 변경(정릉천 정릉파출소뒷교 재설치)
- 4. 정릉천(성북구) 정릉터널앞 교통광장 정비
- 5. 목동천(노원구) 재활용센터 건립
- 6. 홍제천(마포구) 세월교 설치사업

- 심의결과: 1,2,4번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 3번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5번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 6번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

8-2.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설치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34조 /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총25명(외부인사 21명, 도의원 2명, 도소속공무원 2명)

- 임기: 외부인사 2년(연임가능), 도의원 임기 내 당연직 현 직위 재직기간

○ 기능 및 심의대상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수자원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자원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 수자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되는 수자원으로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회의

- 회의개최: 수시

- 회의진행: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2019년 제1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2019.6.11.)
 - 참석인원: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17명
 - 회의안건
 - 1. 양택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변경 결정(안)
 - 2. 상적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3. 황구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4. 신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3번 안건에 대하여 원안 결정, 4번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 결정
- 2019년 제2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2019.10.11.)
 - 참석인원: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14명
 - 회의안건
 - 1. 석현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변경 결정(안)
 - 2. 비암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3. 중대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4. 고산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5. 진위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번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 2번 안건에 대해 조건부 결정, 3~5번 안건에 대해 원안 결정
- 2019년 제3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2019.11.14.)
 - 참석인원: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14명
 - 회의안건
 - 1. 조종천 등 11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
 - 2. 여물천 등 13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 2번 안건에 대해 조건부 결정
- 2019년 제4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2019.12.19.)
 - 참석인원: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13명

- 회의안건

- 1. 양주 신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
- 2. 양평 문호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3. 평택 대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4. 용인 매산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번 안건 원안 결정, 2,3,4번 안건 조건부 결정

○ 2020년 제2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2020.7.14.)

- 참석인원: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13명

- 회의안건

- 1. 장안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
- 2.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3. 고산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4. 안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3번 안건에 대해 조건부 결정, 2번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 4번 안건에 대해 원안 결정

○ 2020년 제3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2020.11.19.)

- 참석인원: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13명

- 회의안건

- 1. 탄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2. 탄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
- 3. 복하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4. 홍천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5. 부용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번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 2,3번 안건에 대해 원안 결정, 4번 안건에 대해 조건부 결정, 5번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 재심의 결정

8-3. 대전광역시 수자원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설치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주요기능
 - 수자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수자원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자원관리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심의
- 설치일자: 1989.6.27.
- 운영현황

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개최횟수		0	1	1	0	0
운영예산	예산액(원)	0	4,800,000	4,800,000	0	0
	집행액(원)	0	900,000	1,300,000	0	0

- 2020년 제1회 대전광역시 수자원관리위원회 (2020.11.26.~12.9.)
 - 참석인원: 서면회의
 - 회의안건: 탄동천, 덕진·산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 회의내용
 - 1. 지방하천(탄동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
 - 2. 하천구역 결정-지방하천(덕진, 신곡천)의 (변경) 지정
 - 3. 하천기본계획(변경)
 - 4. 하천구역 결정

8-4. 경상남도 수자원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2017년 제1회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2017.3.27.~3.31.)
 - 참석인원: 서면심의(위원 25명 중 24명 심의)
 - 심의안건: 사등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L=1.68km)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원안가결, 심의의견에 대하여 보완·수정 후 하천기본계획 등 고시
- 2017년 제2회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2017.4.5.~4.11.)
 - 참석인원: 서면심의(위원 25명 중 24명 심의)
 - 심의안건: 남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L=1.41km)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원안가결, 심의의견에 대하여 보완·수정 후 하천기본계획 등 고시
- 2017년 제3회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2017.7.3.~7.7.)
 - 참석인원: 서면심의(위원 25명 중 21명 심의)
 - 심의안건: 토평천 하천구역 변경(폐지)(9,996m²), 오호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변경)(L=0.38km)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원안가결, 심의의견에 대하여 보완·수정 후 하천기본계획 등 고시
- 2019년 기준 총 9회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제9회 2019.12.17.)
 - 창원시, 진주시 등 14개 시·군 130개 지방하천(787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변경 등을 심의 결정
 - 2019년 기준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9. 하천유역관리협의회 (법률상 기능: 지역주민 의견반영)

- 동천·유곡천 하천유역관리협의회 (2019.10.16.~10.25.)
 - 참석인원: 서면진행, 위원 총 15명(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중 13명 회신
 - 심의안건: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방향(안)
 - 심의결과: 가결(동의 6, 조건부동의 6, 부동의 1, 미회신 2)
- 제1차 공지천 하천유역관리협의회 (2020.4.7.)
 - 참석인원: 서면진행
 - 목적: 공지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 안건: 특정하천(공지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 용역사(동부엔지니어링(주))에서 위원별 직접 방문 설명

- 고현천 하천유역관리협의회 (2020.7.21.~8.3.)
 - 참석인원: 서면진행, 위원 총 13명(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중 11명 회신
 - 심의안건: 고현천 유역 홍수량 산정 및 치수계획 검토
- 3차 동천·유곡천 하천유역관리협의회 (2020.8.20.~9.3.)
 - 참석인원: 서면진행, 위원 총 15명(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중 13명 회신
 - 심의안건: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방향(안)
 - 심의결과: 가결(동의 5, 조건부동의 7, 부동의 1, 미회신 2)
- 고현천 하천유역관리협의회 (2020.9.25.~10.13.)
 - 참석인원: 서면진행, 위원 총 13명(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중 10명 회신
 - 심의안건: 고현천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및 치수계획 검토
 - 심의결과: 가결(동의 4, 조건부동의 6, 미회신 3)
- 온천천·덕천천 하천유역관리협의회 (2020.10.20.~10.29.)
 - 참석인원: 서면진행, 위원 총 15명(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중 11명 회신
 - 심의안건: 온천천·덕천천 유역 치수계획 검토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심의결과: 가결(동의 11, 미회신 4)

10. 하천수조정협의회 (법률상 기능: 심의)

-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 허가를 하지 않거나, 하천수조정협의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량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천수의 실태를 파악한 1981년 이후 하천수 가용량이 부족하게 관리되어 왔으나, 하천수조정협의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량을 조정한 사례 전무 (2015.7, 권익위 실태조사)
 - 하천관리청이 허가량 조정을 위한 심의를 상정하지 않을 경우 하천수조정협의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허가량 조정 기능은 유명무실, 규정의 실효성 미흡

- 일부 수요자가 과다한 허가량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허가량을 조정한 사례는 없음
- 2015년 제1회 한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 (2015.4.9.)
- 참석인원: 총 20명 중 16명 참석(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
 - 심의안건
 - 1. 하천수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2. 갈수예보 추진에 관한 사항
 - 심의결과
 - 1번 안건(원안의결: 가결(10), 부결(0), 조건부가결(6)): 물사용자, 관련 지자체가 참여토록 추진 필요, 조정협의회 구성을 사용량 허가조정과 갈수시 조정으로 구분하여 구성·운영 필요
 - 2번 안건(원안의결: 가결(12), 부결(0), 조건부가결(4)): 허가량 조정에 대한 것을 우선 추진하고, 갈수조정은 추진하되 해당 지자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 위주로 구성 필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판단기준 조정 필요(댐용수 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 기준 고려)
- 2015년 제2회 한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 (2015.8.20.)
- 참석인원: 총 20명 중 15명 참석(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
 - 심의안건
 - 1. 가뭄대응 단계별 취수제한 기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2.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 심의결과
 - 1번 안건(원안의결: 가결(14), 부결(0), 조건부가결(1)): 조건부가결 의견으로 절수홍보를 통한 자연적인 취수량 조절은 수공 등에서 기 조치 중인 사항으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응 협조 요청
 - 2번 안건(원안의결: 가결(12), 부결(0), 조건부가결(3)): 유동적인 취수제한 등의 조건부가결 의견은 조정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상황에 따른 취수 제한을 결정 및 시행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률상 기능: 조정, 중재, 재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요기능

- 1억원 초과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 위원장(나정균 위원장) 외 조정위원 29명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7.~2020년까지 총 5,355건을 접수하여 4,557건을 처리(재정, 조정, 합의)하였으며, 610건은 자진 철회 등으로 종결되었고 163건은 처리 중임⁷⁰⁾

구 분	접 수 현 황			처 리 현 황				알선 종료	자진 철회 등	처리중 (이월)
	계	접수	전년 이월	계	재정 (裁定)	조정 (調停)	합의			
합 계	-	5,355	-	4,557	3,131	100	1,326	25	610	-
'20	449	271	178	244	176	2	66	-	42	163
'19	460	267	193	256	215	6	35	2	24	178
'18	484	303	181	238	210	1	27	-	53	193
'17	369	256	113	160	139	3	18	-	28	181
'16	298	192	106	162	127	8	27	-	23	113
'15	344	212	132	211	170	7	34	2	25	106
'14	401	260	141	237	186	11	40	3	29	132
'13	346	233	113	191	164	5	22	7	7	141
'12	389	248	141	255	170	2	83	2	19	113
'11	353	245	108	184	167	7	10	4	24	141
'10	315	220	95	176	117	2	57	3	28	108
'09	415	242	173	283	233	4	46	2	35	95
'08	391	301	90	209	149	-	60	-	9	173
'07	275	196	79	172	126	3	43	-	13	90
'06	276	202	74	165	83	2	80	-	32	79
'05	266	166	100	174	100	4	70	-	18	74
'04	372	195	177	223	101	1	121	-	49	100
'03	550	350	200	292	87	-	205	-	81	177
'02	493	440	53	263	118	2	143	-	30	200
'01	185	154	31	122	68	7	47	-	10	53
'00	101	71	30	60	39	3	18	-	10	31
'99이전	368	331	37	280	186	20	74	-	21	67

○ 처리된 4,557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3,840건(84.3%), 대기오염 227건(5%), 수질오염 102건(2.2%), 일조 284건(6.2%), 기타 104건(2.3%)임

구 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	기타
		공사장	교통 등				
계 (%)	4,557 (100)	3,840 (84.3)		227 (5)	102 (2.2)	284 (6.2)	104 (2.3)
‘20	244	185(76%)	10(4%)	3(1%)	4(2%)	30(12%)	12(5%)
‘19	256	179(70%)	18(7%)	6(2%)	-	40(16%)	13(5%)
‘18	238	195(82%)	12((5%)	2(1%)	5(2%)	16(7%)	8(3%)
‘17	160	125(78%)	11(7%)	3(2%)	1(1%)	18(11%)	2(1%)
‘16	162	112(69%)	10(6%)	10(6%)	2(1%)	25(16%)	3(2%)
‘15	211	158(75%)	19(9%)	10(5%)	2(1%)	13(6%)	9(4%)
‘14	237	166(70%)	37(16%)	5(2%)	4(2%)	18(8%)	7(3%)
‘13	191	130(68%)	24(12%)	12(6%)	3(2%)	19(10%)	3(2%)
‘12	255	203(80%)	11(4%)	14(5%)	6(2%)	17(7%)	4(2%)
‘11	184	140(76%)	23(12%)	7(4%)	3(2%)	6(3%)	5(3%)
‘10	176	130(74%)	20(11%)	3(2%)	6(3%)	12(6%)	5(4%)
‘09	283	241		13	2	21	6
‘08	209	173		8	3	22	3
‘07	172	142		7	3	15	5
‘06	165	150		8	3	1	3
‘05	174	151		11	5	6	1
‘04	223	206		8	3	5	1
‘03	292	264		19	8	-	1
‘02	263	229		26	4	-	4
‘01	122	103		11	7	-	1
‘00	60	49		7	4	-	-
‘99이전	280	214		34	24	-	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 결정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임실군)

- 분쟁사건 개요

- 운암면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2018.8~2020.5) 현장인근, 닭(육계)을 사육하는 신청인이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닭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 피신청인을 상대로 38,075천원을 배상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

- 분쟁 당사자

- 신청인: 안수용(벤엘농장, 임실군 운암면 국사봉로 753-65)
- 피신청인: 임실군, 주)리치

- 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0.5.28. 14:0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판정(환경부 6-3동)
- 위원: 나정균 위원장 4인

- 결정내용

- 배상책임: 임실군, 주)리치(시공사) 공동으로 배상
- 배상액: 금3,356,620원(각1,678,310원)

- 배상액 지급

- 지급액: 신청인에게 임실군 부담액 1,678,310원을 지급
- 예산과목: 안전관리과, 재난재해대응체계구축, 재해예방복구체계구축, 급경사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명시이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SKC(주) 수원공장 소음 관련) (경기도 수원시 환경정책과)

- 분쟁사건 개요

- 수원 SK스카이뷰아파트(장안구 이목동 24)에 거주하는 김상수 등 2,120명이 인접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2014.10월부터 신청일(2017.10월)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며, SKC(주)와 수원시를 상대로 2,893,242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 분쟁사건 경과

- `12.05.27: 수원SK스카이뷰 사용승인 및 입주시작
- `14년도: 민원 7,119건 접수
- `14.3월~15.4월: 환경협의체 운영(시-SKC(주)-아파트)
- `17.10.1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7.12.15: 심사관 현지조사
- `18.04.10: 전문가 현지조사
- `18.06.07: 사건중지(SK(주)에서 아파트측 대표 2명에 대해 민사소송)
- `20.10.15: 대법원 최종판결(SK(주)측 승소)
- `21.01.28: 사건재개 및 재정회의
- `21.02.04: 조정(안) 합의를 위한 회의
- `21.02.15: 조정(안) 및 수락서 송달(접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공장의 소음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상생에 협력하기 위한 환경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 2) SK(주)는 현 소음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설비 교체 시 저소음 장비 적용을 우선 검토한다
 - 3) 수원시는 SK스카이뷰 아파트의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1항의 환경협의체에 공유한다
 - 4) SK(주)는 신청인 대표회의에 금3천만원을 기부한다
- 조정(안) 수락 여부: 수락
 - 해당지역 소음 민원에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환경협의체 운영 여부 검토 및 주기적 모니터링 추진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소각장 설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소각장 설치)와 관련 고발열량 폐기물 반입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용량부족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증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의정부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 사업의 시급성, 입지여건, 주변환경영향, 폐기물처리의 안정성, 시설용량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소각장 부지는 소각용량 220톤 설치에 부적합 부지로 검토되어, 소각장 이전증설(자일동 환경자원

센터 내 설치)이 도출되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2019년)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을 최대 배출허용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환경(평가)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라 인접지자체 협의를 하였으나, 양주 및 포천시에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입지 선정을 요청함
- 이에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률상 기능: 조정, 중재, 재정)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12) (계양구 작전동 445-2번지 일원 (주)서해종합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건강·정신적 피해 분쟁신청 사건)

- 분쟁사건 개요
 - 계양구 아나지로 247번길 23 삼미하우스 3, 11, 13, 14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 등 35명이 계양구 작전동 445-2번지 일원 (주)서해종합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건강,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보상금 6,62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
- 신청인: 심명숙 등 35명
 - 피해장소: 계양구 아나지로 247번길 23 삼미하우스 3, 11, 13, 14동(효성동)
- 피신청인
 - 건축주: 한국자산신탁(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 시공사: (주)서해종합건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서초동)
- 분쟁사건 경과
 - `18.03.20: 공사시작
 - `18.03.27~`20.03.20: 공사 관련 민원제기 및 민원처리(총 41회)
 - `19.07: 협상 제안서 제시

- `19.08~`19.11: 피신청인과 협상 논의(3회)
- `19.12: 피신청인의 최종협의를 제시 및 결렬
- `20.03.11: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20.10.08: 현지조사
- `20.10.16: 전문가 조사(건강분야)
- `20.10.23: 전문가 현지조사(소음·진동분야)
- `20.11.01: 전문가 현지조사(건축물분야)
- `20.12.01: 재정회의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목차
 - 1. 사건의 개요
 - 2. 당사자 주장
 - 3. 사실조사 결과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5. 인과관계 검토
 - 6. 배상수준 검토
 - 7. 재정(안)
- 주문
 - 피신청인 시공사 (주)서해종합건설은 신청인 신명숙 등 25명에게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금 6,679,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위원수: 위원장 포함 20인
 -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
 - 구성: 법조인 9명, 교수 7명, 전문가 2명, 당연직 2명
-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진행순서
 - 성원확인 및 개회

- 위원 전원출석 여부를 확인 및 위원장 개회 선언
 - 심사보고
 - 심사관의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
 - 조정위원회 위원의 심사관에 질문 및 답변
 - 당사자 심문 및 진술
 - 당사자 입정
 - 재정위원회 당사자 심문 및 질문 답변
 - 당사자 퇴정
 - 의결 및 폐회
 - 위원회 재정 의결
 - 위원장 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서울환조20-3-65)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회의개요: 2021.2.4, 서울시청
 - 안건개요: *****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 배상으로 10,40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석자: 재정위원(5명), 신청인(불참석), 피신청인(3명)
 - 검토사항
1. 소음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72dB(A)로 평가되어 상업지역 수인한도인 70dB(A)를 최대 16dB(A)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2. 진동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사례 및 사용장비의 진동 값을 고려해 볼 때, 생활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며,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먼지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재산상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피신청의 공사소음 등으로 신청인의 거주이전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월세, 관리비용에 대한 보상요구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점 등으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문

- 피신청인 ***** 은 공동하여 신청인 ***** 에게 총 1,003,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正本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서울환조20-3-66)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회의개요: 2021.2.24., 서울시청

- 안건개요: *****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3,00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석자: 재정위원(5명), 신청인(1명), 피신청인(1명)

- 검토사항

1. 소음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

- 신청인 아파트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72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최대 7dB(A)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2. 먼지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문

- 피신청인 ***** 는 신청인 ***** 에게 합계금 143,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正本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서울환조20-3-68)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회의개요: 2021.2.24., 서울시청
- 안건개요: ***** 건설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배상으로 20,79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석자: 재정위원(5명), 신청인(1명), 피신청인(1명)
- 검토사항: 건물균열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의 건물들에 발생된 결함들은 지하층 조적벽체 수평·수직균열, 벽체 및 바닥 누수, 지하층 바닥마감 균열 등인데, 이는 건물노후화 및 건조수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발파공사시 0.386cm/sec로, 노후화된 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56cm/sec(=0.7*0.8cm/sec) 이하이므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13.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설치근거: 소하천정비법 개정(12.3.21)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2.9.18)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법령 주요내용(법령 제26조): 소하천의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경계 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구성: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1인(국장급 공무원) 및 부위원장(과장급 공무원)

원) 1인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설치 운영 중인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활용해 20인 이내 구성)

- 임기: 3년

13-1. 부산광역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21년 부산광역시 제1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21.02.26.)

- 심의기간: 2021.02.20.~02.24.
- 심의인원: 광역소하천관리위원 9명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전내용
2021-1	기장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안)	내리천, 독자골천, 산수곡천	4.7km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 심의결과: 원안심의 8명, 조건부심의 1명
- 조치의견: 기장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승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하며, 조건부 및 재심의 의결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제안자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추가설명을 요청하고자 함

○ 2020년 부산광역시 제1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20.08.11.)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심의기간: 2020.08.18.~09.07.
- 심의인원: 광역소하천관리위원 10명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전내용
20-1-1	해운대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윤봉천, 내곡천	1.90km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20-1-2	기장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안)	도덕골천, 큰골천, 곽암천, 우담천	4.92km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심의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등
- 심의결과: 원안심의 8명, 조건부심의 1명, 재심의 1명
- 조치의견: 해운대구, 기장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승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하며, 조건부 및 재심의 의결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제안자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추가설명을 요청하고자 함

○ 2019년 부산광역시 제1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19.10.14.)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심의일시: 2019.10.07.(월), 14:00~15:20, 22층 회의실
- 심의인원: 광역소하천관리위원 9명
- 심의방법: 위원회 개최

안건 번호	안건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건내용
2019 -1	기장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안) 심의·승인	선암천, 소장천, 징상천, 내덕천	-km	신규수립

- 심의내용: 기장군 내 가축 매몰지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첨가, 사전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 협역 및 반영, 기존 강우사상을 적용한 모형 검증 추가, 추후 유사계획 발주 시 유량, 유사량 모형 검증 포함, 소하천 정비계획 이후 기장군 소하천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조치의견: 기장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승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13-2. 경상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20년 제3회 경상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20.12.01.)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심의기간: 2020.12.03.~12.30.
- 심의인원: 위원 19명(위원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전내용
-	의령군 예동 소하천정비종합 계획(변경)	예동천	0.97km	예동소하천 구간 및 구역 변경

- 심의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의 적정성 검토,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적정성,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소하천 재해예방,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 계획의 적정성 검토

○ 2020년 제2회 경상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20.11.17.)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심의기간: 2020.05.~09.
- 심의인원: 위원 19명(위원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전내용
-	창원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3차	불모산천 등 13개소	8.918km	-
-	하동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백혜천 등 199개소	211.75km	-

- 심의내용: 하천 특성 및 지역을 고려한 하천정비계획 수립, 재해 유형별 조사와 이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하천생태 및 식생 우수구간 환경 영향 최소화하여 사업 시행, 현황과 장래 개발계획 등을 포괄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신설되는 보 및 낙차공의 경우 콘크리트보다 자연형 다단 거석 낙차공으로 검토, 차·이수 및 환경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정비방향 수립 등
- 심의결과: 원안심의 9명, 조건부심의 10명(창원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원안심의 7명, 조건부심의 12명(하동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2020년 제1회 경상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20.03.04.)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심의기간: 2020.02.03.~02.25.
- 심의인원: 위원 19명(위원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건 번호	안건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건내용
-	양산 외송천, 사배1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외송소하천, 사배1소하천	1.32km	예동소하천 구간 및 구역 변경

- 심의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의 적정성 검토,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체계적인 개발 미관리 적정성,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소하천 재해예방,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 계획의 적정성 검토

13-3. 세종특별자치시 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20년 제1회 소하천관리위원회

- 심의기간: 2020.07.27.(월) ~ 2020.07.31.(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인원: 16명
- 심의내용: 초오개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일부변경) 수립(안) 심의
-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 심의의결

14.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설치근거: 소하천정비법 개정(12.3.21)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2.9.18)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법령 주요내용(법령 제26조): 소하천의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관리청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구성: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1인(국장급 공무원) 및 부위원장(과장급 공무원) 1인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설치 운영중인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활용해 20인 이내 구성)
- 임기: 3년

14-1. 충청북도 보은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20년 충청북도 보은군 제3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20.12.14.)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5항
- 심의기간: 2020.12.07.~12.10.
- 심의인원: 10명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번호	안전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전내용
제1호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변경계획(안)	오정천, 오동천, 소여천, 능암천, 느리골천, 가고천, 대원천, 도원천	-	구간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변경

- 심의내용: 제1호 안전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수한면

오정리 오정천 등 8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시공에 맞게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를 변경 및 결정

- 심의결과: 원안가결 10명

14-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20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20.10.12.)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제19조 등
- 심의기간: 2020.10.13.~10.26.
- 심의인원: 위원 19명(위원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전내용
-	관내 소하천 3개소 소하천정비종합 계획 수립(안)	내리천, 독자골천, 산수곡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등

- 심의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3. 강원도 태백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18년 강원도 태백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2018.06.11.)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기간: 2018.06.15.
- 심의인원: 위원 8명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대상 소하천(개소)	과업연장	안전내용
-	태백시 소하천정비종합계 획 수립(안)	절골1천, 매산골천, 송이재천, 바람불이천, 당골천, 창죽천, 젓골천, 흙다리 골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재수립)

15.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설치근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구성: 동법 제4조에 근거하여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행정안전부차관)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법상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2017.11.28.)
 - 추진근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심의기간: 2017.11.29.~12.05.
 - 심의인원: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보고	-
안전 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자 교육시행계획 승인	-

16.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설치근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시·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 위원회 구성
 - 시·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16-1.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19년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개최 (2019.06.13.)
 - 추진근거: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심의기간: 2019.06.20.(목), 14:00~16:00
 - 심의장소: 원삼면사무소(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88-1)
 - 심의인원: 7명(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의원 5명)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용인 후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사전 설계검토 (제방增高 0.85m, 여수로 재설치 등)

- 심의내용: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 저수지·댐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2. 울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2015년 울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개최 (2015.10.14)

-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하천법 제26조의1
- 심의기간: 2015.10.14.(수), 10:30~13:30
- 심의장소: 국제회의실(본관4층)
- 심의인원: 7명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저수지 안전관리 현황 및 회야댐 비상대처계획(EAP) 적정성 검토	회야댐 비상대처계획(EAP) 적정성 검토 심의

- 심의내용: 관내 주요댐 홍수 대비 비상배수문 설치 검토, 저수지 및 댐 지진 대비 내진 설계 반영 여부 검토, 회야댐 비상대처계획 보완

17. 국토정책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설치근거: 국토기본법 제26조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항

- 국토정책위원회: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구성: 동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 국토정책위원회 의뢰 (2017.07.21.)

- 추진근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 심의안건: 고흥 우주랜드 개발계획 변경(안)
- 제안사유: 국가우주산업 핵심인 나로 우주센터 등 우주과학관련시설의 배후지원을 위한 숙박과 소규모 전시·체험시설이 어우러진 휴양·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내 관광기반 확보를 통해 기존 우주과학관련시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해안 선벨트권 발전 도모하고자 하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1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06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위원회 구성
 - 구성: 동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 2017년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17.04.14.)
 - 심의일시: 2017.04.13.
 - 심의장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번호	안건명	안건내용
안건 1	기장군 전력공급설비	동부산 전력지사 관리사무동 신축 (형질변경,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안건 2	범어사	범어사(명학당) 신축 (형질변경,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심의내용: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4차)- 기장군 전력공급설비, 범어사
-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신축건물은 전자파차단 건축자재 최대한 사용할 것, 주차장 및 녹지 확충 설치할 것, 인근 시가지 전자파 피해 검토 및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19. 지방(시·도)도시계획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3조 및 제114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정(인구 10만 이하 15명 이상, 인구10~50만 이하 15~20명, 인구 50만 이상 20~25명)
- 2016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19.01.26.)
 - 심의기간: 2016.01.29.(금) 14:00
 - 심의장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3층)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개발행위 허가(허가규모 초과) 심의(안)	광산구 비아동 주택건설사업
안전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	남구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안전 3	광주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근린공원) 결정 (변경)(안)	북구 삼각동 전기공급설비(송전탑, 지중선로), 중외근린공원
안전 4	광주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북구 각화동 서희스타힐스 주택건설사업 송전선로 이설

○ 2016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19.02.25.)

- 심의기간: 2016.03.03.(목) 14:00
- 심의장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3층)
- 심의인원: 26명(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광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남구 빚고을 농촌테마공원 조성
안전 2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안전 3	광주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

○ 2016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19.02.25.)

- 심의기간: 2016.04.07.(목) 14:00
- 심의장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소회의실(3층)
- 심의인원: 26명(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자문(안)	북구 본촌동 현대 힐스테이트 신축공사
안전 2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자문(안)	광산구 도산동 2차 우방 아이유셀 신축공사
안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	남구 도시첨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20.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자문)

-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 위원회 구성
 - 구성: 동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2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검토)

-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
- 위원회 구성
 - 구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원장(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
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21-1.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검토)

○ 2021년 제3회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2021.04.09.)

-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심의기간: 2021.04.14.~04.20.(5일간)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 위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 심의인원: 8명(토질기초 3명, 토목시공 3명, 수자원 2명)

안전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2021-3-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재협의)	(당초)산업물류용지 → (변경)주택 및 상업시설용지

21-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검토)

○ 2021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2021.04.08.)

-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4조
- 심의기간: 2021.04.12.~04.23.
- 위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 심의인원: 6명(시민안전실장 1명, 토질 및 기초 2명, 구조 1명, 수자원 1명, 방재 1명)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1	장군면 대교리 147-5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
2	연서면 와촌리 172번지 일원 대지조성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3	장군면금암리산44-14 (246-1)번지 일원 대지조성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 심의내용: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등,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2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국가안전관리기 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 심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의 조정·심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 위원회 구성
 - 구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 또한,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됨
-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2015.03.30.)
 - 심의기간: 2015.03.30.
 - 담당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확정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안전관리 혁신과제 중점 추진,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안착 등을 통해 국민안전 담보

23.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검토, 조정)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구성: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23-1.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검토, 조정)

- 2020년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 (2020.03.27.)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 심의기간: 2020.03.23.(월) ~ 3.26.(목)
 - 심의인원: 21명(화성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
 - 심의방법: 개인별 서면심의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안전 1	2020년도 화성시 재난관리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시사항의 충족여부, 재난관리실태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공시사항의 간결·명료·효율적 작성 여부, 도표 및 그래프를 활용한 시민이해도 제고 여부

- 심의결과: 원안가결(가결 14인, 미회신 7인)

23-2.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검토, 조정)

○ 2019년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 (2019.12.20.)

- 추진근거: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
- 심의기간: 2019.12.19.(목) 14:00
- 위치: 상주면, 설천면
- 심의인원: 13명 중 8명 참석(남해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안전 번호	안전명	안전내용
제7호	제18회 상주 해돋이 & 물메기, 제4회 설천 참굴 축제 안전관리계획	안전을 위한 대인대물 보상한도 상향 및 특약 검토, 화재대비 사전 소화기 교육 실시 및 현장 점검 등

- 심의결과: 원안가결

24. 지역위원회 (법률상 기능: 심의, 조정)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지역위원회 심의사항

- 지역위원회: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